

정책보고서 2022-00

발 간 등 록 번 호
00-0000000-000000-00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류정희

이상정·김지연·정익중·정소희·주하나



■ 연구진

| | | |
|-------|-----|-------------------|
| 연구책임자 | 류정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 공동연구진 | 이상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 | 김지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 정익중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정소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 | 주하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제출문

교육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22. 4.11.)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 | |
|---|-----------|
| 제1장 서론 | 14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4 |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기대효과 | 17 |
| 제3절 연구 방법 | 20 |
| 제2장 위기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규모 추계 | 26 |
| 제1절 위기 아동·청소년의 개념 정의 | 26 |
| 제2절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추계의 필요성 | 35 |
| 제3절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추계와 시사점 | 38 |
| 제4절 소결 | 48 |
| 제3장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체계 현황과 개선방향 | 54 |
| 제1절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분절성 및 문제점 | 54 |
| 제2절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청소년 실태 | 64 |
| 제3절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과 원칙 | 81 |
| 제4장 위기 아동·청소년의 통합적인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 88 |
| 제1절 국내의 위기 아동·청소년 통계생산 및 관리현황과 분절성 | 88 |
| 제2절 위기 아동·청소년 중심의 통합적인 통계관리의 해외사례 | 96 |
| 제3절 소결 | 118 |

제5장 위기 아동·청소년 자원과 보호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체계의 구축 …… 122

| | |
|--|-----|
| 제1절 위기 아동·청소년 서비스의 학교, 지역사회 간 분절 현황 …………… | 122 |
| 제2절 위기 아동·청소년 자원과 보호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법과 제도개선 방안 검토 | 166 |
| 제3절 소결 …………… | 181 |

제6장 보호소년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구축 …… 188

| | |
|---|-----|
| 제1절 보호와 지원의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소년 현황과 실태 …………… | 188 |
| 제2절 국외사례: 보호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 | 199 |
| 제3절 보호소년에 대한 복지적 자원과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자원체계의 확장: 법과 제도개선방안 검토 | 225 |
| 제4절 소결 …………… | 241 |

제7장 위기청소년과 위기청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 …………… 250

| | |
|---|-----|
| 제1절 위기청소년과 위기청년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 현황 …………… | 250 |
| 제2절 위기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의 국외사례 분석 …………… | 258 |
| 제3절 위기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원칙과 방향 …………… | 272 |
| 제4절 소결 …………… | 278 |

제8장 결론 및 제언 …………… 284

참고문헌 …………… 300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
|---|-----|
| 〈표 1-1〉 FGI 개최 계획(안) | 21 |
| 〈표 2-1〉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별 분절성 | 27 |
| 〈표 2-2〉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의 아동복지법상 규정 | 29 |
| 〈표 2-3〉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의 위기청소년 규정 | 29 |
| 〈표 2-4〉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학교밖 청소년 규정 | 30 |
| 〈표 2-5〉 소년법 상의 위기청소년(소년)의 정의 | 30 |
| 〈표 2-6〉 소년보호처분 | 32 |
| 〈표 2-7〉 위기 아동·청소년의 세부 유형 | 33 |
| 〈표 2-8〉 위리아동청소년 규모 추계 선행연구 | 36 |
| 〈표 2-9〉 시설이용자 수 기준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추계 결과 (보호 아동·청소년) | 38 |
| 〈표 2-10〉 위기유형 범주별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추계 결과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 42 |
| 〈표 2-11〉 서비스 유형에 따른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추계 결과 (보호 아동청소년) | 45 |
| 〈표 2-12〉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추계 결과 총괄 | 46 |
| 〈표 2-13〉 위기 유형별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비율 | 47 |
| 〈표 3-1〉 위리아동 보호체계의 구성 | 58 |
| 〈표 3-2〉 위기청소년 보호체계의 구성 | 59 |
| 〈표 3-3〉 자립지원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62 |
| 〈표 3-4〉 자립지원청년 소득지원을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63 |
| 〈표 3-5〉 소년법상 소년의 분류 | 64 |
| 〈표 4-1〉 통합대상 아동정보 시스템 | 89 |
| 〈표 4-2〉 정보통합구축 대상기관 | 92 |
| 〈표 4-3〉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과 아동통합시스템의 연계 현황 | 92 |
| 〈표 4-4〉 부처별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시스템 통합연계체계 | 93 |
| 〈표 4-5〉 영국의 아동복지통계 관련 법 | 99 |
| 〈표 4-6〉 2009년 4월 1일에서 2010년 3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 중 5세 생일 이전에 아동서비스의 다양한 단계에 도달한 아동의 수와 비율 | 104 |
| 〈표 4-7〉 영국 CIN 센서스의 데이터 구분 및 구성 데이터 | 108 |
| 〈표 4-8〉 영국 SSDA903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항목 | 115 |
| 〈표 5-1〉 부처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운영 현황 | 131 |
| 〈표 5-2〉 온종일돌봄 이용자 현황(2020) 및 목표(2022) | 133 |
| 〈표 5-3〉 위기 아동·청소년 사이버 상담 주요 현황 | 141 |

| | |
|---|-----|
| 〈표 5-4〉 위기 아동·청소년 각 부처별 주요 정책 | 143 |
| 〈표 5-5〉 가정형 위(Wee)센터의 서비스 지원 내용 | 146 |
| 〈표 5-6〉 위(Wee) 기관들의 구축현황 | 149 |
| 〈표 5-7〉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내용 | 152 |
| 〈표 5-8〉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현황 | 156 |
| 〈표 5-9〉 도시 규모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특성 및 보완점 | 157 |
| 〈표 5-10〉 교육복지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 대상자 및 지원 사업 비교 | 165 |
| 〈표 6-1〉 소년범죄 범죄 유형 | 190 |
| 〈표 6-2〉 연령별 소년범죄 발생 현황 | 191 |
| 〈표 6-3〉 보호처분 대상 소년의 연령별 현황 | 191 |
| 〈표 6-4〉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 현황 | 192 |
| 〈표 6-5〉 미성년범죄자 보호처분 상황 | 192 |
| 〈표 6-6〉 미성년범죄자 재범종류 및 기간(동종) | 193 |
| 〈표 6-7〉 미성년범죄자 재범종류 및 기간(이종) | 193 |
| 〈표 6-8〉 피해자 연령별 현황(남자) | 194 |
| 〈표 6-9〉 피해자 연령별 현황(여자) | 194 |
| 〈표 6-10〉 경찰의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 195 |
| 〈표 6-11〉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 종류 | 195 |
| 〈표 6-12〉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발견, 지원현황(2020년 기준) | 196 |
| 〈표 6-13〉 경찰의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지원현황(2020년 기준) | 196 |
| 〈표 6-14〉 경찰의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단속 현황(최근 3년) | 196 |
| 〈표 6-15〉 아동학대 신고 건수(112신고시스템) | 197 |
| 〈표 6-16〉 법 개정에 따른 '아동 등' 용어 정의 변화 | 197 |
| 〈표 6-17〉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및 처리 현황 | 198 |
| 〈표 6-18〉 일본의 소년 보호처분의 종류 | 211 |
| 〈표 6-19〉 일본의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유형과 현황 | 212 |
| 〈표 6-20〉 경찰 「소년업무규칙」 개정(안) | 228 |
| 〈표 6-21〉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 229 |
| 〈표 6-2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 229 |
| 〈표 6-23〉 경찰 선도심사위원회 분과별 구성 및 기능 | 233 |
| 〈표 6-24〉 경찰의 소년법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현황(최근 5년) | 234 |



| | |
|---|-----|
| 〈표 6-25〉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대상과 보호지원 내용 | 236 |
| 〈표 6-26〉 범죄피해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주요 내용 | 243 |
| 〈표 7-1〉 자립수당·자립지원수당 개요 | 254 |
| 〈표 7-2〉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자녀 1인, 월 지급액 기준) | 256 |
| 〈표 7-3〉 청소년·청년부모 가구 규모 | 257 |
| 〈표 7-4〉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 | 260 |
| 〈표 7-5〉 도교도 아동·청년계획 개요 | 262 |
| 〈표 7-6〉 도교도 아동·청년계획 주요 내용 | 263 |
| 〈표 7-7〉 도교도 아동·청년지원협의회 구성단체 | 264 |
| 〈표 7-8〉 사회법전 제8권 조문 | 266 |
| 〈표 8-1〉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별 분절성 | 285 |
| 〈표 8-2〉 아동청소년 대상 관련 법률 | 288 |



| | |
|---|-----|
| [그림 1-1] 10-20대 자살률의 변동추이(2001-2020) | 15 |
| [그림 1-2] 연구의 목적 | 16 |
| [그림 1-3] 현행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분절성 | 18 |
| [그림 2-1] 위기아동청소년의 범주 및 관계성 | 34 |
| [그림 2-2] 보호아동과 보호대상아동의 범위 | 37 |
| [그림 3-1]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 56 |
| [그림 3-2] 부처별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 57 |
| [그림 3-3] 소년사건 처리 절차 | 65 |
| [그림 3-4] 경찰의 경미 소년범 처리 절차도 | 66 |
| [그림 3-5] 한국과 일본의 소년범 처리 절차 비교 | 67 |
| [그림 3-6] 소년소녀가정 통계의 한계 | 79 |
| [그림 3-7] 위기아동·청소년 통합보호체계 재구조화(안) | 84 |
| [그림 4-1] 희망이음 시스템의 연계통합 | 89 |
| [그림 4-2]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방향 | 90 |
| [그림 4-3]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 91 |
| [그림 4-4] 위기아동청소년 정보연계방안 | 94 |
| [그림 4-5] 영국 전국 학생 데이터셋(CIN, CLA, 학교 센서스)과 CIN 인구(법적 정의 기반) 간 중첩구조 | 103 |
| [그림 4-6] 영국 CIN 2021-2022 센서스의 데이터 구조 | 108 |
| [그림 4-7] 영국 COLLECT 포털 상 'Source Page' | 110 |
| [그림 4-8] 영국 CLA 데이터 산출 로직 예시(2020/2021) | 113 |
| [그림 4-9] 영국 SSDA903 데이터 수동 입력 화면 | 117 |
| [그림 5-1] 우리나라 방과 후 돌봄 전달체계 | 123 |
| [그림 5-2] 온종일돌봄 체계 | 132 |
| [그림 5-3] 종사상 지위에 따른 보육 및 돌봄 체계 분리 이용 현황 | 137 |
| [그림 5-4] 위(Wee)센터 이용관련 진행 절차 | 145 |
| [그림 5-5] 병원형 위(Wee)센터 이용 관련 진행 절차 | 148 |
| [그림 5-6] 청소년안전망 시스템 개념도 | 150 |
| [그림 5-7]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역할 모형 | 160 |
| [그림 6-1] 소년범죄 발생 비율 추이 | 189 |
| [그림 6-2] 영국의 소년사범 중간처우시설 협업체계 | 210 |
| [그림 6-3] 일본 소년사법절차 | 2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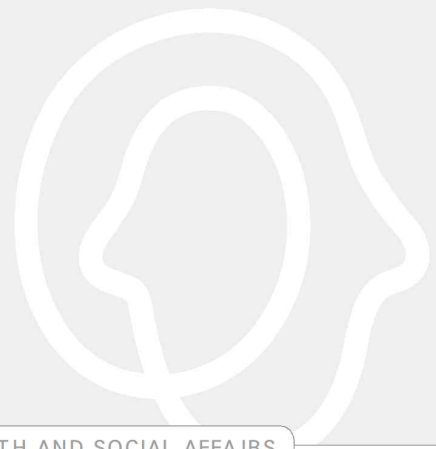


| | |
|---|-----|
| [그림 6-4] 독일 소년사법 절차 및 교육처분 유형 | 214 |
| [그림 6-5] 미국 소년사법절차도 | 216 |
| [그림 6-6] 영국 소년사법 다이버전 협업구조 | 222 |
| [그림 6-7] 영국 소년사법 및 형사절차와 다이버전 | 223 |
| [그림 6-8] 영국 소년사법 다이버전 연계 절차 | 223 |
| [그림 6-9] 경미 소년범 처리 절차도 | 232 |
| [그림 6-10] 회복적 경찰활동 시범운영 사례 | 234 |
| [그림 6-11] 경찰단계의 다이버전과 지자체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연계(안) | 237 |
| [그림 6-12] 검찰 및 법원단계의 다이버전과 지자체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연계(안) | 238 |
| [그림 6-13]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개입 절차(안) | 241 |
| [그림 7-1]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 250 |
| [그림 7-2]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 개요도 | 261 |
| [그림 7-3] 독일 만 27세 미만 아동·청소년·청년 복지정책 전달체계 | 268 |
| [그림 7-4] 독일 만 27세 미만 아동·청소년·청년 복지정책 전달체계 | 269 |
| [그림 8-1] 미성년 연령규정 개선방안에 따른 구조도 | 286 |
| [그림 8-2] 공급주체에 따른 위기가동청소년 정의의 다양성 | 286 |
| [그림 8-3] 위기가동청소년의 범주 | 287 |
| [그림 8-4] 위기가동청소년 개념정의 재정립에 따른 구조도 | 288 |
| [그림 8-5] 아동청소년 정책 및 전달체계 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성 | 291 |
| [그림 8-6] 아동청소년 서비스제공기관의 영역별 구분 | 292 |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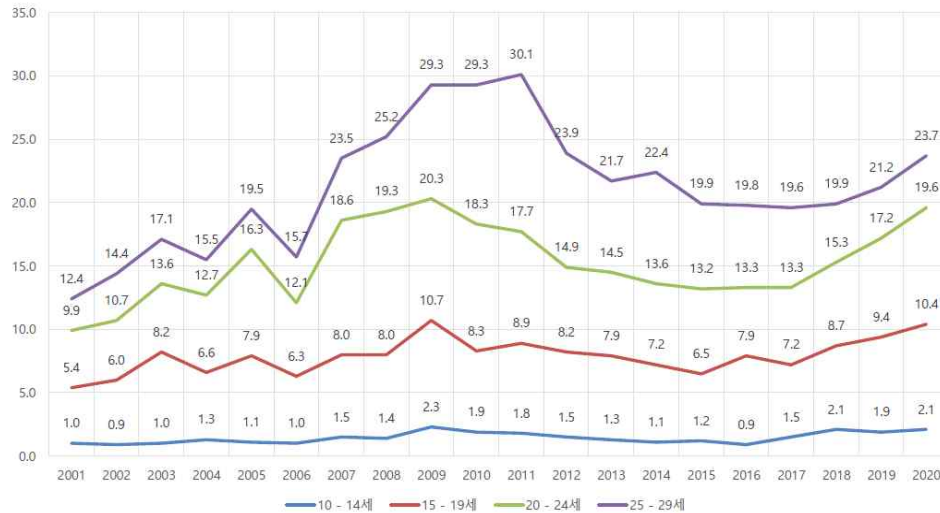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위기아동·청소년의 지원과 보호를 위한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위기아동 및 청소년의 규모는 가정외의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 및 위기청소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67만명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인구대비 약 6.84%에 해당함 (김현진 외, 2018). 원가정 내에서 다양한 발달위기에 직면한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으며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라 빈곤, 고립, 방임·학대, 가족갈등 등 아동·청소년의 위기로인은 더욱 커지는 반면, 친구, 학교를 통한 사회적 관계 등의 보호요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 현저히 약화되고 있음.
 - 이러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건강의 악화 및 자살율의 증가 등 위기의 징후가 심화되고 있으며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정책의 강화를 통한 아동·청소년 안전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그림 1-1] 10-20대 자살률의 변동추이(2001-2020)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조성진, (2022). 내부발표자료

□ 현행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체계의 분절성과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체계는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으며, 아동청소년 보호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의 강화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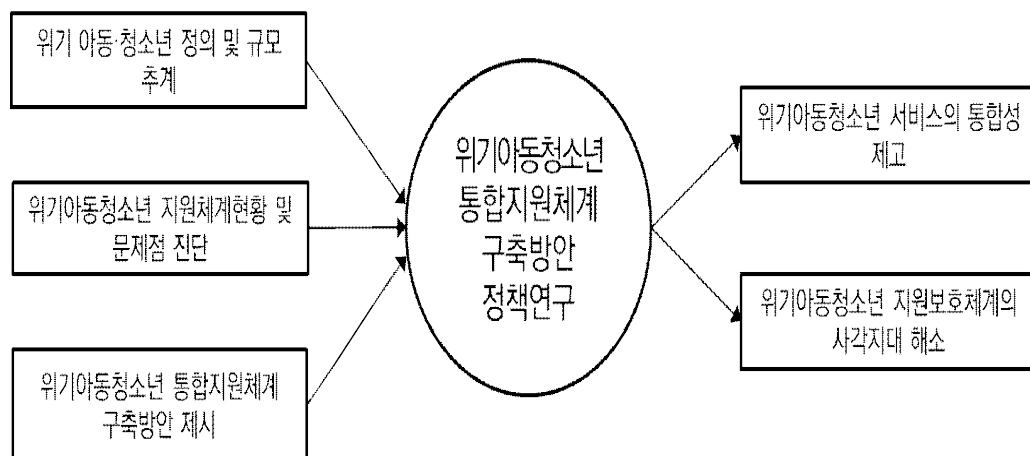
-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보건복지부), 2020년 포용국가청소년정책(여성가족부)을 발표하고 지역사회(시군구)를 중심으로 하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체계의 공공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음.
-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 보호체계의 분절성 및 연계의 부재는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구조적인 방치라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위기아동보호체계와 위기청소년지원체계는 동일한 연령과 위기수준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와 같은 체계 간 보호서비스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문제는 아동의 기본권인 보호권 및 생존권 보장의 격차와 맞닿아 있음.

- 예컨대, 아동양육시설의 보호대상인 아동은 기초수급대상자가 되어 생계권,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중장기 쉼터에서 보호받는 위기청소년의 경우 쉼터가 보장기관이 아닌 이유로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또한, 가정과 학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동·청소년은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의 불연속성과 단절을 경험하게 됨.

□ 이에, 위기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위기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정책과 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통합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함.

[그림 1-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기대효과

1. 연구의 내용

□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위기 아동·청소년 개념 정립 및 정책대상 규모추계

- 위기아동·청소년의 개념정의를 통해 이분화되었던 대상을 통합적으로 개념화하고 대략적인 규모를 추정함.
- 위기아동·청소년(Children and Youths at Risk)은 빈곤, 부모의 양육과 돌봄부재, 가출 및 노숙, 년원 등의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청소년, 학대 및 방임, 보건 및 건강 상의 문제, 장애를 포함한 특수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OECD, 2007)으로,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 및 보호를 필요로 함.
- 위기아동 및 청소년의 규모는 위기아동·청소년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처별로 보호대상 아동(보건복지부), 위기청소년(여성가족부), 소년사범 등 별도의 대상으로 추계해 왔음.
- 보다 통합적인 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으나 다양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규모추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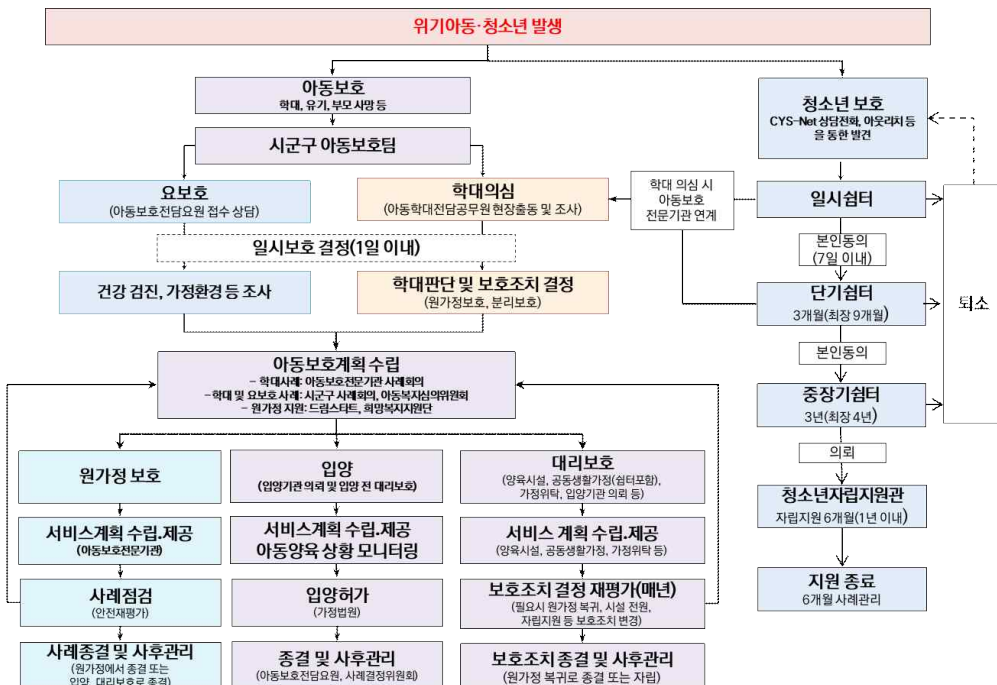
○ 부처별·사업별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체계 현황 및 문제진단

- **(분절적인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현황)** 위기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그 주무부처에 따라 아동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학교 안의 학생은 교육부 등으로 대상의 분절성, 지원 및 보호체계의 분절성이 주된 문제로 존재함.
- 공급자 중심의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서비스체계의 분절성은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 및 보호서비스의 절차, 내용, 보장의 수준의 차이와 격차를 초래했으며, 가정 및 학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동·청소년들을 위

한 지원과 보호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불가

- 지원체계의 불연속성에 따른 서비스의 단절,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 발생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 지원체계의 재구조화 및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그림 1-3] 현행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분절성



자료: 류정희, 이상정, 김지연, 김지민. (2021).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방안 연구. 교육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쟁점제시

- 1) 위기아동청소년의 통합적인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 2) 위기아동청소년 지원과 보호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체계의 구축
- 3) 보호소년과 위기청소년 보호체계의 구축
- 4) 위기청소년과 위기청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

-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청소년 현황

- 소년사법 청소년, 노숙·거리청소년, 경계성 지능장애, 주의력결핍과잉 행동 장애 등 미등록 장애아동청소년, 가족부양 청소년(Young Carer), 고립은둔청소년, 청소년 부모, 수용자자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 홀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 등의 생활실태 및 현황 분석

○ 위기아동청소년의 통합적인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 국내의 위기아동청소년 통계생산 및 관리현황과 분절성
 - ‘아동통합정보시스템’과 ‘위기청소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현황을 통해 본 위기아동청소년 대상 통합적 정보관리 및 공유체계 진단
- 위기아동청소년 중심의 통합적인 통계관리의 해외사례: 영국
 - 영국의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의 경우, 방임·학대 및 폭력 등의 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관련 보호기관 간 공유가 가능
- 통합적인 위기아동청소년 통계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위기아동청소년 지원과 보호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체계의 구축

- 학교, 지역 사회 간 위기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 제공 현황과 분절성
- 학교, 지역 사회 간 위기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현황과 분절성
- 지역사회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제공현황과 분절성

○ 보호소년과 위기청소년 보호체계의 구축

- 보호와 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은 보호소년 현황과 실태
- 국외사례: 보호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구축
- 보호소년에 대한 복지적 지원과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지원체계의 확장

○ 위기청소년과 위기청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

- 위기청소년과 위기청년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 현황
- 위기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의 국외사례 분석

- 위기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원칙과 방향
- 통합적 위기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검토
 - 위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이용자 중심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체계의 통합성의 제고
 - 통합적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 재구조화 방안

2. 연구의 기대효과

- 통합적인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체계의 구축과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보장
 - 위기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은 그동안 부처별로 분절되어 제공되어 왔던 위기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서비스의 단절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아동·청소년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전반을 포함한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위기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체계별 지원서비스의 격차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리보장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체계의 통합적인 재편을 통한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다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조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3절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위기아동·청소년의 개념 및 실태파악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체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문헌 분석
 - 국외의 위기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사례분석

□ 행정자료 분석

- 위기아동·청소년 범주별 행정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위기아동·청소년 규모 추정
- 영국의 위기아동청소년(Children in Need, Children Looked After) 현황 분석

□ 전문가 및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관련 공공 및 민간의 현장 실무자, 정부부처 정책 입안자 및 학계전문가 대상의 통합적인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자문회의 실시

□ 전문가 Focus Group Interviews (FGI) 실시

- 통합적인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구축방안의 구체적인 모색단계에서 현장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견수렴

〈표 1-1〉 FGI 개최 계획(안)

| 영역 | 주제 | 참석(예정) 자문위원 |
|---------|---|--|
| 소년사법 | -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운영실태 파악 및 생활관 종사자 및 입주 청소년 애로사항 청취 | - 박은주 관장 등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 종사자 4인 - 입주 청소년 5인 |
| 청소년 자립 | - 미국 및 영국 미성년 청소년의 자립(emancipation) | - 마한얼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
| 규모 추계 | -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추계 관련 논의 | - 황여정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상균 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
| 소년사법 | - 보호(위탁)소년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보호체계의 확장 가능성 모색 | - 김혁 교수(부경대 법학과) - 박인숙 변호사(민변) - 송현중 조사사무관(인천가정법원) |
| 가정밖 청소년 | - 위기청소년 보호체계의 사각지대 해소와 통합적 아동· | -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 박선영 교수(한세대 경찰행정학과)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지혜 정책이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이준기 관장(대구청소년자립지원관) |
| 청소년 (한)부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미진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지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배보은 대표(킹메이커) |
| 성착취 청소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인선 박사(협동조합 함께하는 연구) |
| 장애아동청소년 |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준혁 교수(인하대) - 명노현 팀장(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
| 시설 및 재가 보호아동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우 박사(경남종합사회복지관) - 장선옥 교수(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
| 영케어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선유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소미 부장(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통합사업부) - 신혜영 팀장(함께 만드는 세상) - 김영호 팀장(청년 이음센터) |
| FGI 전 영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안 검토 및 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GI 각 영역 전문가 중 선별 |



제2장

위기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규모 추계

제1절 위기 아동·청소년의 개념 정의

제2절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추계의 필요성

제3절 위기 아동·청소년의 규모추계와 시사점

제4절 소결

제2장 위기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규모 추계

- 이 장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위기\청소년의 범주와 개념을 정의하고 규모를 추계하고 있음.
- 청소년과 아동의 법적 연령이 중복되며 이러한 중복된 연령 기준에 근거하여 주무 부처의 업무가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기 때문에¹⁾,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 마련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관점에서 위기청소년뿐만 아니라 위기아동을 연구의 세부 대상으로 함께 설정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위기 아동 및 청소년을 포괄하는 국내 선행연구와 데이터를 검토함으로써 세부 연구 대상인 위기 아동·청소년을 정의하고, 규모를 추산하기로 함.

제1절 위기 아동·청소년의 개념 정의

1. 위기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위기의 범주 설정

-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 구분과 혼란
 - ‘아동’의 기준 연령은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양특례법 등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되며, ‘청소년’의 기준 연령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연령 기준에 근거하여 아동 대상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대상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아동청소년의 주요 생활 공

간에 따라 학령기 위기 아동이 학교 내에 존재할 때에는 교육부의 주요 대상이 되나 학교밖에 존재할 때에는 여성가족부의 주요 대상이 됨.

- 이러한 연령구분의 혼란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령별 분절성은 지원 및 보호 서비스 공급주체 및 부처별 적용기준의 임의성에 기초하고 있음.
- 연령구분의 혼란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령별 분절성은 지원 및 보호서비스 공급주체 및 부처별 적용기준의 임의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된 민법상의 성년규정은 이러한 혼란의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어 왔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18세를 기준으로 성년을 정하고 있는 반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이 19세로 아동복지법과의 불일치 문제 야기
-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연령 중복 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 10대 후반과 20대 초반까지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상의 중복 문제 확대됨.
 - 만 18세는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민법상의 성년규정이 18세이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김기현, 2020)

〈표 2-1〉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별 분절성

| 용어 | 연령범위 | 근거법률 | 주관부처 |
|-------|--------------|--|-------|
| 아동 | 만 18세 미만 |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양특례법 등 | 보건복지부 |
| 미성년 | 만 19세 미만 | 민법 | 법무부 |
| 아동청소년 | 만 19세 미만 |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보호법 | 여성가족부 |
| 청소년 | 만 9세~ 만 24세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 여성가족부 |
| 소년 | 만 19세 미만 | 소년법 | 법무부 |
| 청년 | 만 19세~ 만 34세 | 청년기본법 | 국무조정실 |

□ 위기 아동·청소년의 개념 정의의 필요성

- 현재 아동청소년보호체계가 보호하고 있는 “보호아동청소년”은 누구인가?
 - 사회적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을 얼마나 포괄하고 있는가?

-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 중 아동청소년보호체계에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누구인가?
-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위기아동의 법적 정의

- 위기아동에 대한 법적 정의는 부재하며 「아동복지법」 상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 정의를 혼용하여 사용됨.
-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의 개념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기초한 법적 개념이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1)보호자의 부재, 2) 학대 등 부적절한 양육, 3) 양육 능력 부재의 상황에 놓인 아동을 의미.
- 이와 같이 법적으로 규정된 상황은 친생부모 및 원가정을 통한 아동 양육 및 보호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보호의 의미는 엄밀하게는 가정외보호(out-of-home care), 즉 사회적 보호(social care)로 명시될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법상으로는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아동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지금 실제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중)아동”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부터 출발한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아동 사이의 개념적 혼란 초래됨.
- 아동복지법상의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의 규정은 아동보호 및 지원 서비스의 대상자 발굴 및 선정 중심의 공급자 행정편의적 차원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가 크게 존재

〈표 2-2〉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의 아동복지법상 규정

| |
|---|
|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p> <p>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p> <p>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p>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p> <p>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p> |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6. 30.). 아동복지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935&efYd=20210630&ancYnChk=0#0000>에서 2022. 7. 12. 인출.

○ 위기청소년의 법적 정의

- 위기청소년에 대한 법적 정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상 ‘위기청소년’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하위그룹으로 가정밖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표 2-3〉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의 위기청소년 규정

| |
|---|
|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p> <p>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p> <p>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p> <p>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p> |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6. 30.). 청소년 복지지원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에서 2022. 7. 12. 인출.

- 이와는 별도로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밖청소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밖청소년 규정과는 개념 상의 차이가 존재.

〈표 2-4〉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학교밖 청소년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6. 30.).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B%B0%96%EC%B2%AD%EC%86%8C%EB%85%84%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에서 2022. 7. 12. 인출.

○ 소년의 법적 정의

- 위기아동청소년은 법무부의 소년법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년법 제 4조에 따라 위기아동청소년은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분류될 수 있음.

〈표 2-5〉 소년법 상의 위기청소년(소년)의 정의

제2조 (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6. 30.). 소년법 <https://law.go.kr/%EB%B2%95%EB%A0%B9/%EC%86%8C%EB%85%84%EB%B2%95>에서 2022. 7. 12. 인출.

- 청소년비행의 우려가 있거나 비행을 행한 청소년은 제 1호~제 10호에 이르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음.
 -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함)를 위탁하는 것을 의미
 - 2호 처분은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수강명령
 - 3호 처분은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사회봉사명령
 - 4호 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로,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하여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보호처분.
 - 5호 처분은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로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
 -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
 - 7호 처분은 소년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
 -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
 - 9호 처분은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최장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
 - 10호 처분은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 소년의 최장 보호기간은 최장 2년

〈표 2-6〉 소년보호처분

| 구분 | 보호처분의 종류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대상 연령 |
|----|---|--------------------|--------|
| 1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 2 | 수감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 3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 4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 5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 6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 7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 8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 9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 10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자료: 전자민원센터(2022). 보호처분 요약표. https://help.scourt.go.kr/nm/min_19/min_19_5/index.html

□ 위기 아동·청소년의 개념에 대한 학술적 정의와 세부유형 분류

○ 위기청소년의 정의

- OECD(2007)는 위기청소년을 “빈곤, 부모의 양육 및 지도감독 부재, 가출 및 노숙, 소년원 등 구금시설에 있는 청소년, 학대 및 방임, HIV/AIDS 등 보건 및 건강상의 문제, 장애를 포함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special educational needs)가 있는 청소년” 등 사회적·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정의하였음(OECD, 2007; 김현진 외, 2018: 황여정&이정민, 2020).
- 황순길 외(2016)의 연구는 위기청소년을 “개인적, 가족적, 교육적,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으로서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은 물론 학교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청소년”으로 지칭하였음.

○ 위기청소년의 세부 유형 구분

- 위기 아동·청소년의 세부 유형을 범주화하는 선행연구에서는 보호체계 내

포함 여부, 위기 요인 등에 따라 위기 아동·청소년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일부 연구에서는 ‘관심·취약 아동·청소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같이 광의의 위기 아동·청소년의 개념을 함께 제시함.

- 광의의 위기 아동·청소년에는 빈곤/이혼/저소득 조손·한부모 가구의 아동·청소년, 장애 아동·청소년, 장애 부모/수감자 부모의 자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폭력 등 범죄피해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정신건강 문제 또는 중독 문제를 겪는 아동·청소년이 포함됨.

〈표 2-7〉 위기 아동·청소년의 세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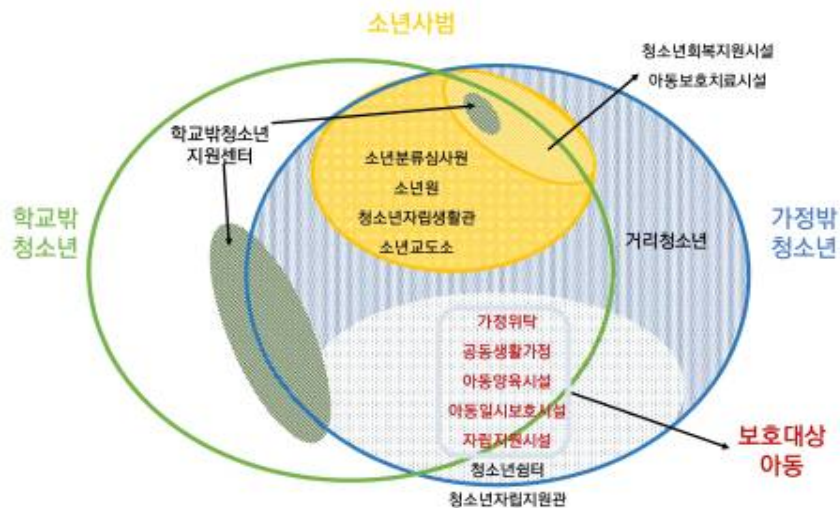
| 자료 | 유형 구분 | 내용 |
|-----------------|--------------|--|
| 박세경 외 (2014) | 위기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보호대상아동’ 유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보호대상: 시설보호 아동, 그룹홈 거주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청소년 쉼터 아동, 소년법(강력법 제외) 2. 재가보호대상: 가정위탁 아동, 학대피해 아동, 국내입양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관심·취약아동’ 유형: 학교폭력 피해아동, 이혼가정 아동, 빈곤아동, 저소득한부모, 조손 가구 아동 |
| 김지연 외 (2015) | 위기아동 및 위기청소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아동’ 유형: 시설보호, 그룹홈, 가정보호,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입양 - ‘위기 청소년’ 유형: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가정 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쉼터, 소년법 (강력법 제외) - ‘관심·취약 아동·청소년’ 유형: 학교폭력 피해, 이혼 가구, 빈곤 가구, 저소득 한부모, 조손 가구, 학교 밖 청소년 |
| 황순길 외 (2016) | 위기청소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취약 청소년’ 유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복지법상 위기·취약 청소년으로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양육시설, 가정위탁 시설’에 해당하는 청소년 2.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쉼터’에 해당하는 청소년 3.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해당하는 청소년 4. ‘일시보호소, 대안학교’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5. 소년법상 비행청소년으로 ‘소년원, 보호관찰 시설’에 해당하는 청소년 |
| 류정희 외 (2018) | 위기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대상 아동’ 유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생유형별 요보호아동(명): 기아, 미혼모아동, 미아, 비행가출 부랑아, 학대/부모빈곤·실직/부모사망/부모질병/부모이혼 등 2. 시설보호아동(명): 아동복지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3. 가정보호아동(명): 가정위탁, 국내입양, 소년소녀가정 내 아동(0~17세) 4. 학대아동(건): 아동학대 판정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조사진행 중 사례 - ‘지원대상 아동’ 유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수급아동(명) (0~19세) 2. 한부모가족(수) (지원법대상) 3. 다문화가족(명) (0~18세) 4. 장애아동인구수(명) (0~19세) |
| 류정희, 김지연 (2019) | 위기 아동·청소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 학대피해, 학교폭력·가정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밖청소년(가출·노숙·대리보호), 학교밖청소년(학업중단), 청소년미혼모, 경찰·검찰·법원단계의 비행청소년(소년법), 니트(NEET), 우울·자살시도 등 심리·정서·정신건강 문제 등 |
| 황여정, 이정민 | 위기청소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적 요인: 빈곤, 가정폭력·학대·피해 및 보호대상, 가출 - 교육적 요인: 학교 부적응 및 학교 밖, 학교폭력 가 피해 |

| | |
|--------|--|
| (20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요인: 약물 이용 및 중독,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게임과몰입/도발 경험, 심리·정서문제 경험(우울, 자살, 자해) - 사회적 요인: 범죄(비행·일탈) 가해, (성)범죄 피해, 이주배경 |
|--------|--|

자료: 박세경, 강혜규, 류정희, 이주연, 노충래, 이상균, ... 황옥경. (2014). 아동보호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지연, 좌동훈, 박세경, 한미경. (2015).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순길, 김동민, 강태훈, 손재환, 김화연, 김지혜. (2016).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류정희, 함영진, 이상정, 김지연, 김가희, 김지민, 권영지. (2018). 사회보장제도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전달체계 심층분석」 핵심평가.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김지연. (2019) 위기아동청소년 통합적 보호체계 개선방안. 사회관계장관회의 이슈페이퍼.,
 황여정, 이정민. (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부처 합동. (2021.09.08.).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
 류정희, 이상정, 이주연, 권지성, 김진석, 이현주. (2021). 보호대상아동 발생경로와 원가정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처럼 위기아동청소년의 범주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적 접근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원서비스의 수요자인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서비스이용의 통합성과 연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위기아동청소년 개념 재정립, 범주 및 개념 간의 관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그림 2-1] 위기아동청소년의 범주 및 관계성



제2절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추계의 필요성

□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추계의 필요성

-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수준의 적절성, 예산 및 인력지원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위기 아동·청소년의 정확한 규모를 추계해야 함.
- 우리나라의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규모 추계는 2014년 박세경 외의 연구, 2015년 김지연의 연구에서 시도되었으나 범주별 중복율 등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저위기와 고위기 유형 등 위기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 박세경 외(2014)의 연구는 아동보호체계 보호대상 범주로 '우선보호대상아동'과 '관심·취약아동'을 구분하여 합산하였고(약 90만), 각 개별위기 사례 간 중복은 고려하지 않았음. 중복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규모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발달위기의 노출 경험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계층, 연령의 발달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대 추정의 가능성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함. 다만, 이러한 보호대상 포괄 범위 확장은 현실적인 자원 여건 등의 문제에 있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심·취약아동의 경우 보사연(2013) 「2013년 지자체 조사결과」와 복지부(2013) 「아동통합서비스지원강화를 위한 사업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참고해 아동보호체계의 적정 보호대상 표적화 비율 30%를 적용하였음. 그 결과 관심·취약아동은 약 237천여 명으로 추계하였으며, 최종 보호대상의 범위는 총 약 35만 5천여 명의 규모로 표적화하였음.
 - 김지연 외(2015)의 연구는 박세경 외(2014)의 틀을 청소년 범주로 확장한 것으로,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을 '요보호아동/위기청소년'과 '관심·취약 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해 합산하였고(약 166만) 박세경 외(2014)의 위기아동·청소년 틀에서 '학대피해아동' 제외하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학교밖청소년' 유형을 추가하는 등 유형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각 진입관문을 통해 파악되는 대상자 간 중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에서 한계가 있었음.

〈표 2-8〉 위기아동청소년 규모 추계 선행연구

박세경 외(2014)

〈표 5-6〉 아동안전보장체계로의 전환에 따르는 아동보호체계 보호대상 범주의 확정(안)

| 위기아동 유형 | 규모 | 구분 | 현행 Gateway |
|------------------|----------|----------------|--|
| 시설보호 아동 | 15,916 | 시설 보호 대상 | 양육시설 *읍면동 및 시군구청 (사후)보고 |
| 그룹홈 거주 아동 | 2,498 | | 그룹홈* 읍면동 및 시군구청 보고 |
| 정착력 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 133 | | 장립소, 보호시설,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헤마라기 아동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
| 정착력 피해 보호시설 아동 | 197 | | 장립소, 경찰서, 청소년 정서재활센터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쉼터 아동 | 640 | | 청소년 긴급전화 1388, 경찰서, 청소년 CYS-Net, 쉼터 |
| 소년별(강박병 제외) | 68,236 | | 경찰서, 소년법원, 소년원분실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 |
| 가정위탁 아동 | 14,584 | 재가 보호 대상 | 가정위탁지원센터 *읍면동 및 시군구청 (사후)보고 |
| 학대피해 아동 | 6,774 | |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신고 112 |
| 국내입양 아동 | 922 | | 입양기관* 읍면동 및 시군구청 보고 |
| 소년소녀가장 아동 | 796 | | 읍면동 및 시군구청 |
| 요보호 아동 | 6,926 | | 아동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읍면동 및 시군구청 (사후)보고 |
| 우선 보호대상 아동 | 110,636 | | (현재 아동대비 1.26%)·요보호아동(6,926명 제외) |
| 학교폭력 피해아동 | 62,000 | 빈곤 아동 | 학교, 경찰서, 병원, 117 신고 상담센터, Wee 센터, 교육복지부과우선사업 |
| 이혼가정 아동 | 100,312 | |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일부), 사회복지관 등 |
| 빈곤아동 | 304,672 | |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희망복지지원단 |
|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구 아동 | 324,200 |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관심취약 아동 | 791,184명 | | (현재 아동대비 8.49%) |
| 전체 요보호 아동 | 901,820명 | | (현재 아동대비 9.75%) |

김지연 외(2015)

표 2-36 보호대상 규모와 서비스 진입관문(Gate-way)

| 위기유형 | 규모(추정) | 현행 Gate-way | |
|------------------|------------------------|---|-----------------------------|
| 요보호아동 | 시설보호 ¹⁾ | 2,900 | *읍면동 및 시군구청 (사후)보고 |
| | 그룹홈 | 506 | *읍면동 및 시군구청 보고 |
| | 가정보호 ²⁾ | 2,094 | *읍면동 및 시군구청 보고 |
| | 가정위탁 | 1,688 | 가정위탁지원센터 *읍면동 및 시군구청 (사후)보고 |
| | 소년소녀가장 | 13 | *읍면동 및 시군구청 |
| | 임양 | 393 | 임양기관 *읍면동 및 시군구청 보고 |
| 소개 | 4,994 ³⁾ | *읍면동 및 시군구청 보고 | |
|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 전용쉼터 | 35 ⁴⁾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서 지역별 보호시설로 연계 | |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1,490 ⁵⁾ | 상담소, 경찰서,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 |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1,589 ⁶⁾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
| 청소년쉼터 | 584,510 ⁷⁾ | 청소년 긴급전화 1388, 경찰서, 청소년 CYS-Net, 쉼터 | |
| 소년별(강박병제외) | 76,164 ⁸⁾ | 경찰서, 소년법원, 소년원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 | |
| 요보호아동, 위기청소년 | 668,772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비 6.84% | |
| 학교폭력 피해 | 48,000 ⁹⁾ | 학교, 경찰서, 병원, 117신고센터, Wee센터, 교육복지부과우선사업 | |
| 이혼가정 | 88,249 ¹⁰⁾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빈곤가구 | 205,212 ¹¹⁾ |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희망복지지원단 | |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구 | 370,152 ¹²⁾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 학교 밖 청소년 | 280,000 ¹³⁾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
| 관심취약 아동·청소년 | 991,613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비 10.14% | |
| 보호대상아동·청소년 | 1,660,385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비 16.99% | |

자료: 박세경, 강혜규, 류정희, 이주연, 노충래, 이상균, ... 황옥경. (2014). 아동보호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지연, 좌동훈, 박세경, 한미경. (2015).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본 연구의 추계작업 또한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정확성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한계가 존재함.

○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2가지 방식으로 위기 아동·청소년의 범주를 구분하여 기존의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서비스의 제공주체에 따른 위기아동 및 청소년의 분절적인 범주화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현재 지원 및 보호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과 잠재적인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 사이의 차이를 통해 사각지대 및 지원과 보호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특성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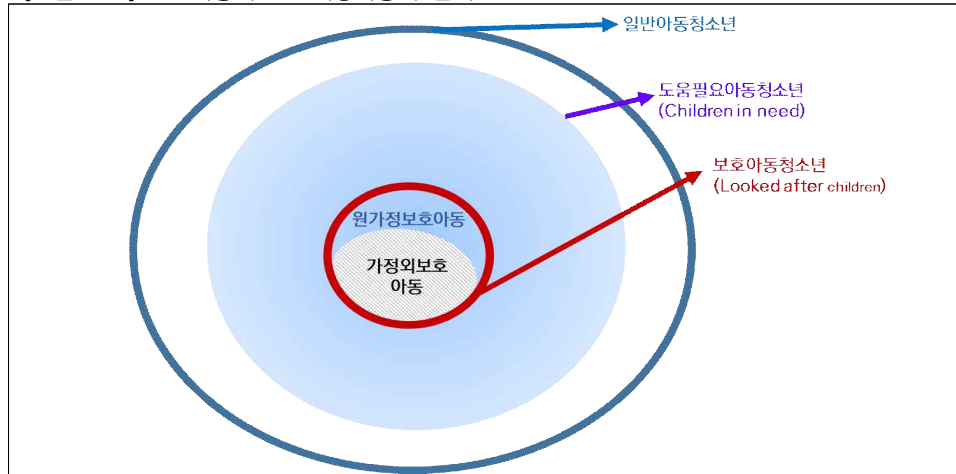
1) Children looked after(보호아동청소년)

- 현재 다양한 종류의 위기 아동·청소년 서비스 또는 급여의 수급을 받는 위기 아동·청소년

2) Children in Need(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대상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아동의 위기 유형을 구분

[그림 2-2] 보호아동과 보호대상아동의 범위



자료: 류정희 외. (2022). “보호대상아동” 개념의 재검토: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의 아동. 보건복지포럼, 8월 통권 제310호, pp.55-6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절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추계와 시사점

1.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추계 결과

□ 시설이용자 수 기준 추계 (보호 아동·청소년)

〈표 2-9〉 시설이용자 수 기준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추계 결과 (보호 아동·청소년)

| 소관 부처 | 시설/서비스명 | 서비스 유형 | 위기 유형1) | 규모(명) | 연령 | 자료 연도2) | 보고 대상 기간3) | 자료원 |
|---------------|---------------------------|-----------|--------------------|--------|------|------------|---------------|---|
| 보건 복지 부 | 양육시설 | 생활 | 보호대 상아동 (시설) | 10,351 | 0~24 | 2020 | 연말 현원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아동양육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 |
| | 일시보호시설 | 생활 | | 315 | | 2020 | 연말 현원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아동일시보호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 |
| | 자립지원시설 | 생활 | | 253 | | 2020 | 연말 현원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아동자립지원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 |
|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생활 | | 2,904 | | 2020 | 연말 현원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아동공동생활가정 수 및 보호아동 현황 |
| | 기타 시설 | 생활 | | 83 | 0~17 | 2021 | 신규 입소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
| | 미신고시설 ⁴⁾ | 생활 | 보호대 상아동 (가정) | - | - | - | - | - |
| | 소년소녀가정 | - | | 6 | 0~20 | 2020 | 연말 현원 | -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
| | 입양 ⁵⁾ | 생활 | | 492 | 0~17 | 2020 | 연간 실인원 | |
| | 대리양육가정 | 생활 | | 6,542 | 0~24 | 2020 | 연간 실인원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위탁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현황 |
| | 친인척위탁가정 | 생활 | | 2,447 | | 2020 | 연간 실인원 | |
| | 일반위탁가정 | 생활 | | 934 | | 2020 | 연간 실인원 | |
| | 입양전 위탁 | 생활 | | 151 | 0~17 | 2021 | 신규 입소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
| | 아동학대사례 판단 아동 중 원가정보호/가정복귀 | 이용 | 학대피 해아동 | 19,403 | 0~17 | 2020 | 연간 실인원 |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

| 소관 부처 | 시설/서비스명 | 서비스 유형 | 위기 유형1) | 규모(명) | 연령 | 자료 연도2) | 보고 대상 기간3) | 자료원 |
|---------------|--|-----------|----------------|--------|---------------|------------|---------------|--|
| | 조치된 아동 ⁶⁾ | | | | | | | |
| |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⁷⁾ | 이용 | 취약계 층 아동 | 72,818 | 0~12 | 2020 | 연간으로 추정 | - 보건복지부. 제14회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유 공자 포상 및 사업 보고대회 개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와 보 도자료 |
| | 장애아동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 이용 | | 16,585 | 0~17 | 2021 | 연말 현원 | - 복지로. 복지통계. 「장애아동수당 장애유형별 성별 수급자수」 |
| 교육 부 | Wee 클래스 ⁴⁾ | 이용 | 취약 위기 학생 | - | - | - | - | - |
| | Wee 센터 ⁴⁾ | 이용 | | - | - | - | - | - |
| | Wee 스쿨 ⁴⁾ | 이용 | | - | - | - | - | - |
| | 가정형 Wee 센터 ⁴⁾ | 생활 | | - | - | - | - | - |
| | 병원형 Wee 센터 ⁴⁾ | 이용 | | - | - | - | - | - |
|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서울희망교실 참여 학생 중 교육취약학생) ⁸⁾ | 이용 | | 48,040 | 9~17 (초중고) | 2020 | - | - 서울시교육청, 2021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매뉴얼 |
| 여성 가족 부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생활 | 폭력 피해 | 186 | 0~24 | 2021 | 연말 현원 |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2022.04.). 2021년도 성폭력 피 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 |
| | 성폭력피해자 상담소 | 이용 | | 5,907 | 0~18 | 2021 | 연간으로 추정 | |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생활 | | 8 | 0~19 | 2020 | 신규 입소 | |
| |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 | 이용 | | 2,820 | 0~18 | 2020 | 연간으로 추정 | |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 이용 | 사례 관리 | 35,733 | 9~24 | 2020 | 연간 실인원 |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2021.04.). 2020년 이용자 (입소자) 현황; 황여정 외(2022)에서 재인용 ⁹⁾ |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 드림) | 이용 | 학교밖 청소년 | 40,399 | 9~24 | 2020 | | |
| | 청소년 쉼터 | 생활 | 가정밖 청소년 | 20,401 | 9~24 | 2020 | | |
| | 청소년자립지원관 | 생활 | 가정밖 청소년 | 1,015 | 19~24 | 2020 | | |
| | 청소년 한부모 수급 가구 수 ¹⁰⁾ | 이용 | 청소년 (한)부모 | 3,213 | 9~24 | 2020 | 연말 현원 | - 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
| |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⁴⁾ | 이용 | 저소득 한부모 | - | - | - | - | - |
| | 일시지원 복지시설 (명) | 생활 | | 228 | 0~17 | 2022 | 연간으로 |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40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소관 부처 | 시설/서비스명 | 서비스 유형 | 위기 유형1) | 규모(명) | 연령 | 자료 연도2) | 보고 대상 기간3) | 자료원 | |
|----------|--|-----------|-------------------------|------------|--------|------------|--|--|---|
| | 모자가족복지시설 (세대) | 생활 | 가족 자녀 ¹¹⁾ | 970 | 0~21 | 2022 | 추정 | 연간 실인원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2021.04.). 2020년 이용자(입 소자) 현황: 황여정 외(2022)에서 재인용 | |
| | 부자가족복지시설 (세대) | 생활 | | 40 | 0~21 | 2022 | | | |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명/세대) | 생활 | | 891 | 0~3 | 2022 | | | |
| | 국립인터넷드림마을 | 생활 | 심리 정서 위기 | 312 | 13~19 | 2020 | | | |
| | 국립청소년디딤센터 | 생활 | | 411 | 9~18 | 2020 | | | |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처분 1호 대상) | 생활 | 보호처분 소년 | 408 | 10~18 | 2020 | | | |
| 복지 부 | 보호치료시설 (보호처분 6호 대상) | 생활 | | 436 | 0~24 | 2020 | 연말 현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아동보호치료시설 수 및 보호 아동 현황(시설 유형별) | | |
| 법무 부 | 청소년자립생활관 ¹²⁾ (소년구급시설출원생 대상) | 생활 | | 보호처분 소년 | 130 | 16~24 | - | 정원 | - 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 |
| | 소년원 (보호처분 7~10호 대상) | 생활 | | | 1,637 | 10~18 | 2020 | 신규 입소 | - 법무부 제출자료. (2021. 04.). 2020년 이용자(입소자) 현황; 황여정 외(2022)에서 재인용 |
| | 소년분류심사원 (보호처분 이전) | 생활 | | | 4,297 | 10~18 | 2020 | | |
| | 보호관찰소 | 생활 | | | 10,914 | 10~18 | 2020 | 연간으로 추정 | - 법무부 제출자료. (2021. 04.). 2020년 이용자(입소자) 현황; 황여정 외(2022)에서 재인용 |
| | 소년교도소 ¹³⁾ | 생활 | 범죄 소년 | | 115 | 14~18 | 2020 | 신규 또는 현원 | -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 윤종우. (2020.10.26.). 한국 소년교도소의 발전 방향. 교정복 지연구, 68: 27-67. |
| | 범죄피해자보호센터 ⁴⁾ | 이용 | 폭력 피해 | - | - | - | - | - | |
| 계 | | | | 311,795 | | | | | |

주 1) 이용 분류 간 이용자의 오버랩이 있을 수 있지만, 중복을 확인이 실질적으로 불가하므로 중복 고려하지 않았음.

주 2) 각 분류별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최근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주 3) 자료 수집 시, 필요 데이터가 미생산되는 등 데이터의 한계 있었음.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수집하였으며, 해당 데이터들의 보고 대상 기간별 우선순위는 연간
이용 실 인원(한번이라도 이용한 경우 중복되지 않는 한 누적하여 포함), 해당연도 신규 유입 인원, 연말 현재 인원(시점 기준 현재 인원, 이 경우 대부분 매년 12월말 현재 현황
기준), 정원 순으로 자료에 포함하였음.

주 4) 현재 제공되는 데이터 없음.

주 5)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자료의 입양(2020년 기준 88명) 수는 「입양특례법」에 의해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법상의 입양(사인 간 입양)은 미포함됨. 따라서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자료를 사용하였음.

주 6) 추정식 =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아동 수(22,431명) ×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건 수 중 원가정보호 및 가정복귀 조치된 사건 비율(86.5%)]

주 7) 2020년 기준 총 수혜자 수는 160,501명이지만, 초기상담만을 받은 수혜자(87,683명)를 제외한 사례관리 아동 수만을 활용함.

주 8) 전국 수혜 대상자 수는 조회되지 않으며, 현재 조회가능한 유일한 데이터인 서울시 데이터를 활용함.

주 9) 재인용 자료원인 황여정 외(2022)의 보고서에 각 원자료의 연령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각 시설(기관)의 대상 연령을 기준으로 보았음.

주 10) 데이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를 연도말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며, 청소년모자가구(2,845가구)와 청소년부자가구(368가구)를 더한 데이터임. 각 수급 가구별로 최소 1명 이상의 아동이 있다는 전제하에 해당 자료 가구 수를 명수로 활용하였음.

주 11) 현재 명수를 명확하게 제공하는 데이터는 없으나, 그중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료로는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서 제공하는 연말일 기준 '세대 수' 정원이 있음. 각 세대에 1명 이상의 한부모 가족 만 20세 미만 자녀가 있다는 가정하에 정원 세대 수를 명수로 활용하였음.

주 12) 실인원 파악한 자료 없으므로 전국 8개 생활관의 정원 수 합계를 사용함.

주 13) 교정통계연보상 소년수형자(115명) 데이터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신규 인원으로 보여 사용 여부를 고민하였으나, 윤종우(2020)에서 제시하는 2020년 10월 기준 김천교도소 현원이 116명인 것으로 보아, 교정통계연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였음.

42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위기유형 범주별 추계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표 2-10〉 위기유형 범주별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추계 결과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 구분 | 위기 유형 ¹⁾ | 세부 위기 유형 | 규모(명) | 연령 | 자료 연도 ²⁾ | 보고 대상 기간 ³⁾ | 자료원 |
|----|-----------------------------|---|---------|-------|---------------------|------------------------|---|
| 개인 | 장애 | - | 138,078 | 0~24 | 2021 | 연간 | -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
| | 흡연 | 월 20일 이상 상습적 흡연 | 101,136 | 초1-고3 | 2019 | - |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
| | 음주 | 지난 1개월 간 위험 음주경험이 있는 자 | 210,107 | 초1-고3 | 2019 | - | |
| | 약물 | 유해약물 평생 유경험자 | 13,417 | 초1-고3 | 2019 | - | |
| | 인터넷스마트 폰 과의존 | 위험사용자군 | 28,671 | 초4-고3 | 2020 | - |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08.25.) |
| | 게임 | 과몰입군 | 18,705 | 초1-고3 | 2019 | - | - 한국콘텐츠진흥원(2019) |
| | 도박 | 돈내기 게임 문제군 | 34,393 | 중1-고2 | 2018 | - |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2018.12.) |
| | 자해 및 자살 | 최근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적 있는 자 | 360,063 | 중1-고3 | 2019 | - |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
| 가족 | 취약계층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106,510 | 7~17 | 2020 | 연말기준 현원 | - 보건복지부, 「2020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
| | 학대피해 | 학대 신고 접수 건 수 | 42,251 | 0~17 | 2020 | 연간 |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
| |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구 ⁴⁾ | 한부모가족 수급을 받는 모자가구, 부자가구, 조손가구, 청소년모자가구, 청소년부자가구 수 | 294,410 | 0~17 | 2020 | 연말기준 현원 | - 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
| | 다문화가정 ⁵⁾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자녀 | 15,013 | 0~18 | 2020 (2018) | 11/1기 준 현원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 여성가족부. (2019.03.).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56 |
| | 영케어러 | - | 약 | ~24 | 2022 | 현원으로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

| 구분 | 위기 유형 ¹⁾ | 세부 위기 유형 | 규모(명) | 연령 | 자료 연도 ²⁾ | 보고 대상 기간 ³⁾ | 자료원 |
|----|--------------------------------|--|------------------------------|------|---------------------|------------------------|---|
| | | | 180,000 | | | 추정 | |
| | 청소년 (한)부모 ⁶⁾ | - | 15,752 | ~24 | 2020 | 연간 | - 통계청(1997~2020).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분석; 이상정, 류정희, 변수정, 하태정.(2022). 청소년부모 정책 소의 실태 및 정책 개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재인용. |
| | 수용자의 미성년자녀 ⁷⁾ | - | 54,051 | 0~18 | 2017 | 연간 | - 국가인권위원회(2017.06).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
| | 가정박 청소년 ⁸⁾ | 최소 김희진 외(2018)를 따른 추정치 최대 여가부(2018)를 따른 추정치 | 최소 45,498 최대 99,777 | 9~17 | 2020 | 현원 | -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교육부. (2020). 2020년 교육통계연보. 전국 초(초4 이상)·중·고등학생 현황 |
| 교육 | 학교밖 청소년 (최대) ⁹⁾ | 윤철경 외(2018)를 따른 추정치 | 최대 500,941 | 7~18 | 2020 | - | - 행정안전부. (2020.12.31.) 주민등록 인구 통계: 연령별 인구 현황 -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학년 및 연령별 학생수, 졸업 후 상황, 학생 변동 상황 - 통계청 인구동향과(2009~2020). 국제인구이동통계: 내외국 인/성/연령별 국제이동(월간, 연간) |
| | 학교밖 청소년 (최소) ¹⁰⁾ | 하형석(2020.06.19.)을 따른 추정치 | 최소 약 171,000 | 6~17 | 2020 | - |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 등) -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학년 및 연령별 학생수 |
| 사회 | 학교폭력 가해 ¹¹⁾ | - | 15,480 | 9~17 | 2021 | 연간으로 추정 | - 교육부. (2021).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
| | 학교폭력 피해 ¹²⁾ | - | 42,570 | 9~17 | 2021 | 연간으로 추정 | - 교육부. (2021).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
| | 범죄피해 ¹³⁾ | 강력범죄, 폭력범죄 등 20세 이하 피해 (건수) | 28,344 | 0~20 | 2020 | 연간 | -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
| 계 | | | 최소 1,915,449 최대 2,299,669 | | | | |

주 1) 이용 분류 간 이용자의 오버랩이 있을 수 있지만, 중복을 확인이 실질적으로 불가하므로 중복 고려하지 않았음.

주 2) 각 분류별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최근 데이터이거나 가장 최근에 아니더라도 연구진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데이터임(예: 수용자 자녀)

주 3) 자료 수집 시, 필요 데이터가 미생산되는 등 데이터의 한계 있었음.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수집하였으며, 해당 데이터들의 보고 대상 기간별 우선순위는 연간 이용 실 인원(한번이라도 이용한 경우 중복되지 않는 한 누적하여 포함), 해당연도 신규 유입 인원, 연말 현재 인원(시점 기준 현재 인원, 이 경우 대부분 매년 12월말 현재 현황

44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기준), 정원 순으로 자료에 포함하였음.

- 주 4)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2020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보고서에 가구당 평균 아동수가 제시되지는 않아 수급가구(184,006가구)의 자녀 수를 추산할 수 없음. 다만, 만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대상 조사인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저소득 지원 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1.6명(p.46) 이므로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수와 평균 자녀수를 곱한 수치를 활용하였음.
- 주 5) 추정식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가 제공하는 "다문화가구 자녀(만19세미만 미성년) 수(263,379명)" ×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결과, "다문화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5.7%)"]
- 주 6) 추정식 =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 수(7,876가구)' × 2]
- 주 7) 국가인권위원회(2017.11.) 보고서 상 추정방법 = 연간 교정시설 입소자 수(약 14만명) × 조사 결과 미성년자녀가 있는 수용자 비율(25.4%) × 조사결과 미성년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수용자의 자녀수 평균(1.52명). 해당 보고서의 수치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활용한 이유는 해당 조사에서는 자녀수 연간 인원 산출을 위하여 "연간 교정시설 입소자 약 14만명" 수치를 활용하고 있는데, 해당 수치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현재 수치를 찾을 수 없었음. 관련하여 현재 확인 가능한 연간 입소 인원 통계로는 법무부 2021 교정통계연보가 있는데, 1일 평균 수용인원(53,873명), 연간 '신규' 입소 인원(51,874명), 연간 출소 인원(51,817명), 연도 말 수형자 인원(34,749명)을 제공하고 있으나 재입소자 수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사에서 활용한 업데이트된 연간 교정시설 총 입소자 수를 구할 수 없었음.
- 주 8) '최소' 추정식 =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초4~고3 재학생 중 최근 일 년간 가출을 2회 이상했거나 가장 최근 가출 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 (1.14%) × 2020년 해당 학년 학생 수(3,991,089명)]
 '최대' 추정식 =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초4~고3 재학생의 가출경험률(2.5%) × 2020년 해당 학년 학생 수(3,991,089명)]
- 주 9) 추정식 = 학령인구 [2020.12.31.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상 학령(만7~18세) 인구(5,642,890명) + 2009년~2020년 간 누적된 학령기에 해당하는 외국인 입국자 수(25,863명)] - 학생 수 [2020.04.01. 기준 교육통계 상 학생 수(5,177,320명) - 2020년 4월~12월 간 순 학업 중단자 수(12,011명) + 고등학교 조기졸업자 수(2,503명)]. 다만, 주민등록인구통계의 기준은 연말일인데 반해, 교육통계연보의 기준일은 4월 1일이므로 당해연도 4~12월에 발생하는 학업중단자 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9개월간 학업중단자 수를 제함. 또한, 연령상 학령기에 해당하나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학교박청소년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8년 만 14세 이하, 2019년 만 15세 이하, 2020년 만 16세 이하 고3학생 중 졸업자 수 구하여 더해줌. 이상 학생 관련 통계 산출 시에는 기간학제와 방계학제 모두 포함하였음.
- 주 10) 하형석(2020.06.19.)에서 학교박청소년 추계 방법으로서 가장 타당하다고 제시한 간접추정 방법 중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한 부분집합방식을 활용하였으며, 2020년 장래인구추계 및 2020년 교육통계연보 데이터 사용함. 추정식 = [장래인구추계의 초중고 학령(6-17세) 인구(5478천명 = 2,724천명+1,364천명+1,390천명) - 교육통계연보 상 6-17세 초중고학생인구 수 (5307천명)]
- 주 11) 김지연 외(2015)가 "학교폭력 피해" 추계치 자료원으로 활용한 교육부의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함. 해당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대상 전수조사로서 실제 피해자 수를 추정 가능함. 추정식 = [조사 시점 전체 재학생 수 추정치(3,870,000명) × 전체 가해 응답률(0.4%)]
- 주 12) 김지연 외(2015)가 "학교폭력 피해" 추계치 자료원으로 활용한 교육부의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함. 해당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대상 전수조사로서 실제 피해자 수를 추정 가능함. 추정식 = [조사 시점 전체 재학생 수 추정치(3,870,000명) × 전체 피해 응답률(1.1%)]
- 주 13) 강력범죄(살인기수는 제외. 그외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 및 강제추행 등, 방화), 폭력범죄(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폭력행위등, 공갈, 손괴) 성폭속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음란물소지))를 포함함. 다만, 해당 자료는 범죄 발생건수에 근거하여 집계된 정보(즉, 총 피해 수와 총 발생건수 동일함)이므로 최소 피해자 수에 해당함. 즉, 피해자 인원은 발생건수 기준 대표피해자 1명의 정보를 기초로 집계되며, 신체피해자의 경우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인원을 대상으로 함. 다시 말해, 실제 피해자 수는 집계된 피해 수보다 많을 수 있음.

〈표 2-11〉 서비스 유형에 따른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추계 결과 (보호 아동청소년)

| 소관부처 | 시설/서비스명 | 서비스유형 | 위기 유형 | 규모(명) | 연령 |
|-------|-----------------------------------|-------|--------------|---------|-------|
| 보건복지부 | 소년소녀가정 | 이용 | 보호대상아동 (가정) | 6 | 0~20 |
| | 학대피해아동 중 원가정보호/가정복귀 조치된 아동 | | 학대피해아동 | 19,403 | 0~17 |
| |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 | 취약계층 아동 | 72,818 | 0~12 |
| | 장애아동(장애아동수당수급자수) | | 장애 아동 | 16,585 | 0~17 |
| 교육부 | Wee 클래스 | | 취약 위기 학생 | - | - |
| | Wee 센터 | | | - | - |
| | Wee 스쿨 | | | - | - |
| | 병원형 Wee 센터 | | | - | - |
|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서울희망교실 참여학생 중 교육취약학생) | | | 48,040 | 9~17 |
| 여성가족부 | 성폭력피해자 상담소 | | 폭력피해 | 5,907 | 0~18 |
| |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 | | | 2,820 | 0~18 |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동반자) | | 사례관리 | 35,733 | 9~24 |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 | 학교밖 청소년 | 40,399 | 9~24 |
| | 청소년 한부모 수급 가구 수 | | 청소년 (한)부모 | 3,213 | 9~24 |
| |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 - | - |
| | | | 범죄피해자보호센터 | 폭력피해 | - |
| 소계 | 서비스 수급 위기아동청소년 | | | 244,924 | |
| 보건복지부 | 양육시설 | 생활 | 보호대상아동 (시설) | 10,351 | 0~24 |
| | 일시보호시설 | | | 315 | 0~24 |
| | 자립지원시설 | | | 253 | 0~24 |
|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 | 2,904 | 0~24 |
| | 기타 시설 | | | 83 | 0~17 |
| | 입양 | | 보호대상아동 (가정) | 492 | 0~17 |
| | 대리양육가정 | | | 6,542 | 0~24 |
| | 친인척위탁가정 | | | 2,447 | |
| | 일반위탁가정 | | | 934 | |
| | 입양전 위탁 | | | 151 | 0~17 |
| 교육부 | 가정형 Wee 센터 | | 취약 위기 학생 | - | - |
| 여성가족부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 폭력피해 | 186 | 0~24 |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 | 8 | 0~19 |
| | 청소년 쉼터 | | 가정밖 청소년 | 20,401 | 9~24 |
| | 청소년자립지원관 | | | 1,015 | 19~24 |
| | 일시지원 복지시설 (명)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 228 | 0~17 |
| | 모자가족복지시설 (세대) | | | 970 | 0~21 |
| | 부자가족복지시설 (세대) | | | 40 | 0~21 |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명/세대) | | | 891 | 0~3 |
| | 국립인터넷드림마을 | | 심리 정서 위기 | 312 | 13~19 |
| | 국립청소년디딤센터 | | | 411 | 9~18 |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보호처분 1호 대상) | | 보호처분소년 | 408 | 10~18 |
| 보건복지부 | 보호치료시설(보호처분 6호 대상) | | | 436 | 0~24 |
| 법무부 | 청소년자립생활관(소년구급시설출원생 대상) | | | 130 | 16~24 |

| | | | | |
|----|--------------------|------|---------|-------|
| | 소년원(보호처분 7~10호 대상) | | 1,637 | 10~18 |
| | 소년분류심사원(보호처분 이전) | | 4,297 | 10~18 |
| | 보호관찰소 | | 10,914 | 10~18 |
| | 소년교도소 | 범죄소년 | 115 | 14~18 |
| 소계 | 가정의 보호 위기아동청소년 | | 66,871 | |
| 총계 | 전체 위기아동청소년 | | 311,795 | |

자료: 위 <표2-4>를 참고하여 저자작성

2.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추계의 시사점

□ 규모 추계 결과, 대략 전체 1,200만 명의 아동·청소년 중 15.9%~19.1%가 위기 아동·청소년

○ 위기 유형 간 중복률을 50%, 70% 기준으로 설정하면 위기 아동·청소년은 124만 명에서 69만 명 수준으로 전체 아동·청소년의 5.7~9.6% 정도로 추계됨.

<표 2-12>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추계 결과 총괄

| 구분 | | 아동·청소년 수(명) | 비율 |
|-------------------------|------------------|-------------|-------|
| 0~24세 아동·청소년 인구(2020기준) | | 12,013,082 | 100% |
| 위기아동·청소년 | 최소 | 1,915,449 | 15.9% |
| | 최대 | 2,299,669 | 19.1% |
| | 최대치 기준 위기중복률 50% | 1,149,835 | 9.6% |
| | 최대치 기준 위기중복률 70% | 689,901 | 5.7% |

자료: 저자 작성

○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는 가정 내 지원 서비스(이용시설)와 가정 외 보호 서비스(생활시설)로 구분되며 이를 현재 이용 및 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수를 기초로 집계하였음.

- 여기에서 시설이용 아동·청소년의 중복률은 고려하지 않고 시설 이용자 수를 최대치로 추계한 결과, 가정외보호 서비스를 받는 위기 아동·청소년은 66,871명, 지원 서비스를 받는 위기 아동·청소년은 244,924명으로 나타났다.
- 지원보호 서비스를 받는 위기 아동·청소년은 311,795명으로 전체 아동·청소년 대비 2.6%를 차지함.

- 위기 유형별로 추계된 위기 아동·청소년 191만명 기준 16.3%만이 위기지원 및 보호서비스를 받고 있었으며, 최대 추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아동·청소년의 13.6%만이 지원보호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대추계치 기준 위기중복률 50%를 적용시 전체 위기 아동·청소년의 27.1%, 전체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치의 위기 중복률 70% 적용시 45.2%의 아동·청소년이 위기지원을 받음.

〈표 2-13〉 위기 유형별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비율

| 구분 | 아동·청소년 수 (명) | 가정외보호 위기 아동·청소년 | 서비스수급 위기 아동·청소년 | 위기 아동·청소년 전체 |
|--------------------|-----------------|-----------------------|-----------------------|--------------------|
| 0~24세 인구(2020기준) | 12,013,082 | 66871 0.6% | 244924 2.0% | 311795 2.6% |
| 위기유형별 위리아동청소년 규모 | | | | |
| 최소추계 | 1,915,449 | 3.5% | 12.8% | 16.3% |
| 최대추계 | 2,299,669 | 2.9% | 10.7% | 13.6% |
| 최대추계치 기준 위기중복률 50% | 1,149,835 | 5.8% | 21.3% | 27.1% |
| 최대추계치 기준 위기중복률 70% | 689,901 | 9.7% | 35.5% | 45.2% |

자료: 저자 작성

○ 즉, 실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대비 서비스 수혜율은 최저치가 13.6%, 최고치는 45.2%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아동·청소년복지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 및 부처 간 중복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다부처 간 통합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아동·청소년의 생활공간, 위기 유형 등에 따라 부처 간 다양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분절성 파편성은 심각한 수준이며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확대되고 있음.

○ 부처 간 통합지원은 현재의 아동·청소년 전달체계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으로, 통합지원체계구축 등 중앙의 강력한 조정기능 부여가 필요함.

제4절 소결

□ 위기아동청소년 규모 추계의 필요성

-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수준의 적절성, 예산 및 인력지원을 위한 근거자료의 부재
- 근거기반의 통합적인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필수정보 확보 필요

□ 위기아동청소년의 규모추계의 어려움

- 위기아동과 위기청소년을 통합한 규모추계는 박세경 외(2014), 김지연 외(2015)의 연구에서 시도
- 위기범주별중복율등의 기준 불명확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한계
- 공급자중심의 시설이용자 수 데이터만 활용가능

□ 추계방법

- 위기아동청소년의 범주를 현재 사회적 지원 및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Looked after children)의 규모 추계
 - 원가정 보호와 가정외보호를 모두 포괄
- 위기아동청소년의 욕구와 필요를 중심으로 사회적 돌봄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규모추계
- (한계) 복수의 서비스시설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의 수를 파악불가, 중복이용률은고려하지 않음.
- 욕구범주별 아동청소년의 규모추계에서 중복율은 30%, 40%, 50% 기준을 적용
- 아동청소년의 대상연령규모의 차이를 보정하지 않음

□ 추계결과(2020년 기준)

- 현재 사회적 지원 및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Looked after children)의 규모 추계 결과 가정외보호 아동은 시설생활아동청소년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 66.871명으로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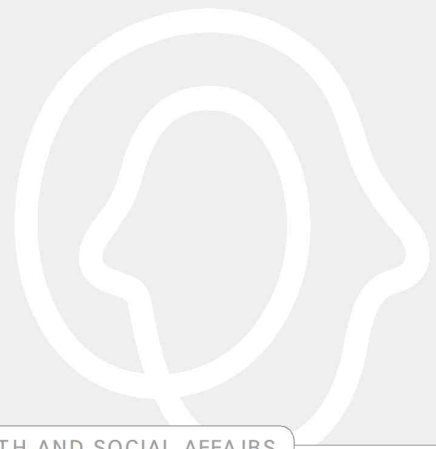
- 이러한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추계의 제약을 전제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의 가정형 WEE센터의 정보 미포함
 - 양육시설, 그룹홈 등 보호대상아동(보건복지부)중 학대피해아동의 수는 학대피해 아동통계 중 가정외보호조치아동의 수와 불일치하나 높은 중복율로 별도 집계에서 제외
 - 복지부의 보호대상아동은 연장보호로 만 24세까지 연령확대
- 원가정보호 아동은 아동청소년보호지원서비스이용아동을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 244,924명
 - 교육부의 WEE센터 정보 미포함
 - 중복 서비스이용율 미고려
 - 2020년 기준 사회적 지원 및 보호를 받은 적이 있는 보호아동청소년은 전체 아동청소년 수 대비 2.6%
- 위기아동청소년의 욕구와 필요를 중심으로 사회적 지원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도움필요아동청소년)의 규모추계
 - 아동의 위기유형별 지원욕구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규모추정 결과 전체 아동청소년의 16%-19.2%가 도움필요
 - 30%-50% 위기범주별중복율적용하면 도움필요 아동청소년은 최소 96만~최대161만으로 전체의 8.0%~13.4%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 중 원가정 및 가정외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13.5%~16.2%

□ 위기아동청소년 규모추계의 시사점

- 제공기관별 위기아동청소년 정보취합의 파편성으로 인한 중복과 누락 발생
- 보호대상아동통계와 학대피해아동통계 상이
- 학교밖청소년과가정밖청소년의 중복경험 파악 불가

○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 규모와 실태에 대한 파악 미비

- 노숙청소년, 거리청소년 등 청소년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밖청소년
- 경계성지능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미등록 장애아동청소년
- 가족부양청소년
- 고립은둔청소년
- 청소년 부모
- 수용자 자녀
- 이주배경 청소년



제3장

위기 아동 · 청소년의 지원 및 보호체계 현황과 문제진단

제1절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분절성 및 문제점
제2절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청소년

제3장

위기 아동·청소년의 지원 및 보호체계 현황과 문제 진단

제1절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분절성 및 문제점

□ 아동·청소년 지원체계의 기능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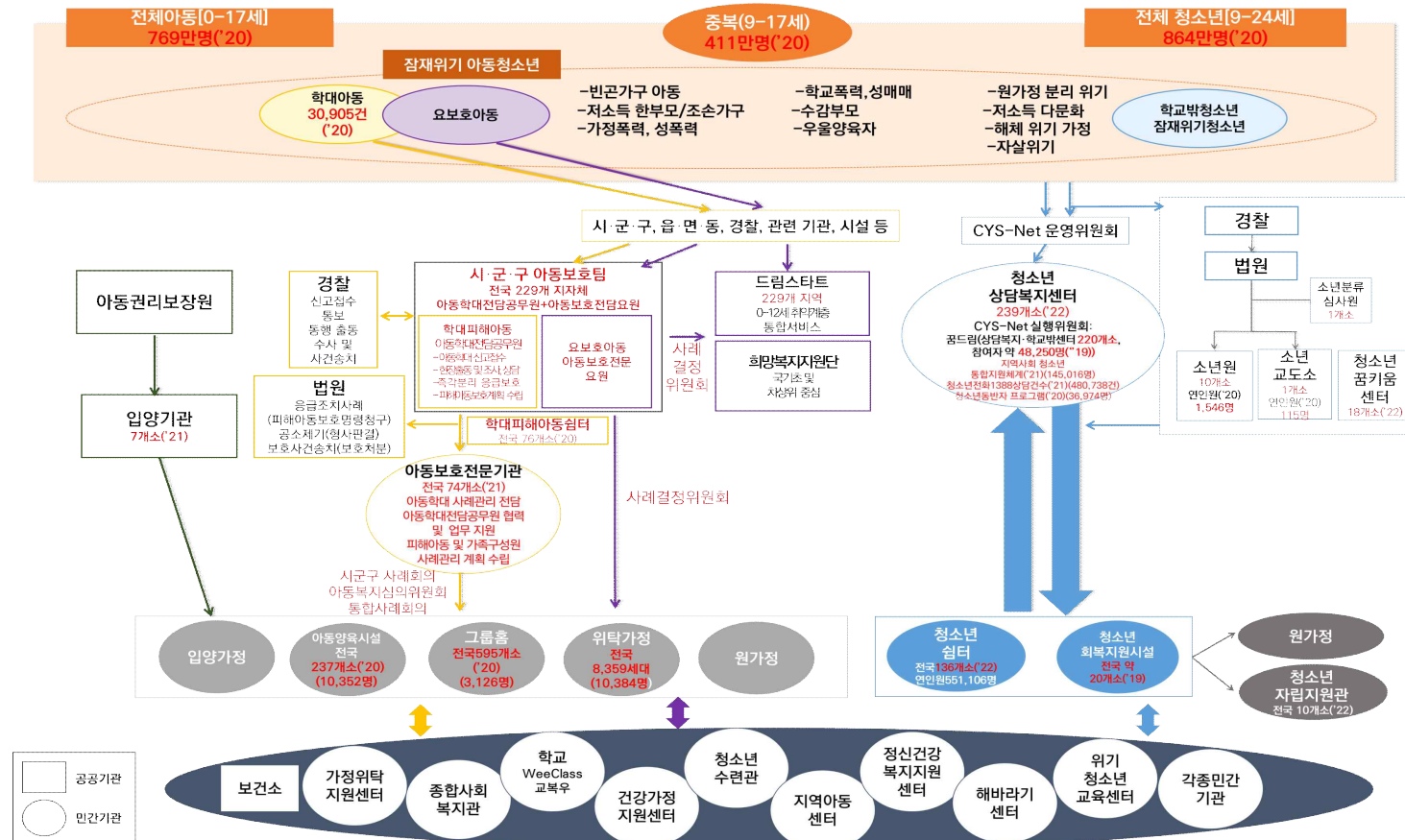
- 아동·청소년보호체계는 아동발달의 단계에서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편적인 아동청소년안전망을 의미함
- 아동청소년을 위협할 수 있는 보호의 위기
 - 영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으나 유기, 방임, 학대와 아동이 속한 가정의 물질적, 경제적, 관계적 위기 등이 주요한 원인
 -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의 유형과 연령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정 내의 안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욕구와 필요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보호서비스는 최저보장의 기본선을 기초로 해야 함.

□ 아동·청소년 지원과 보호의 분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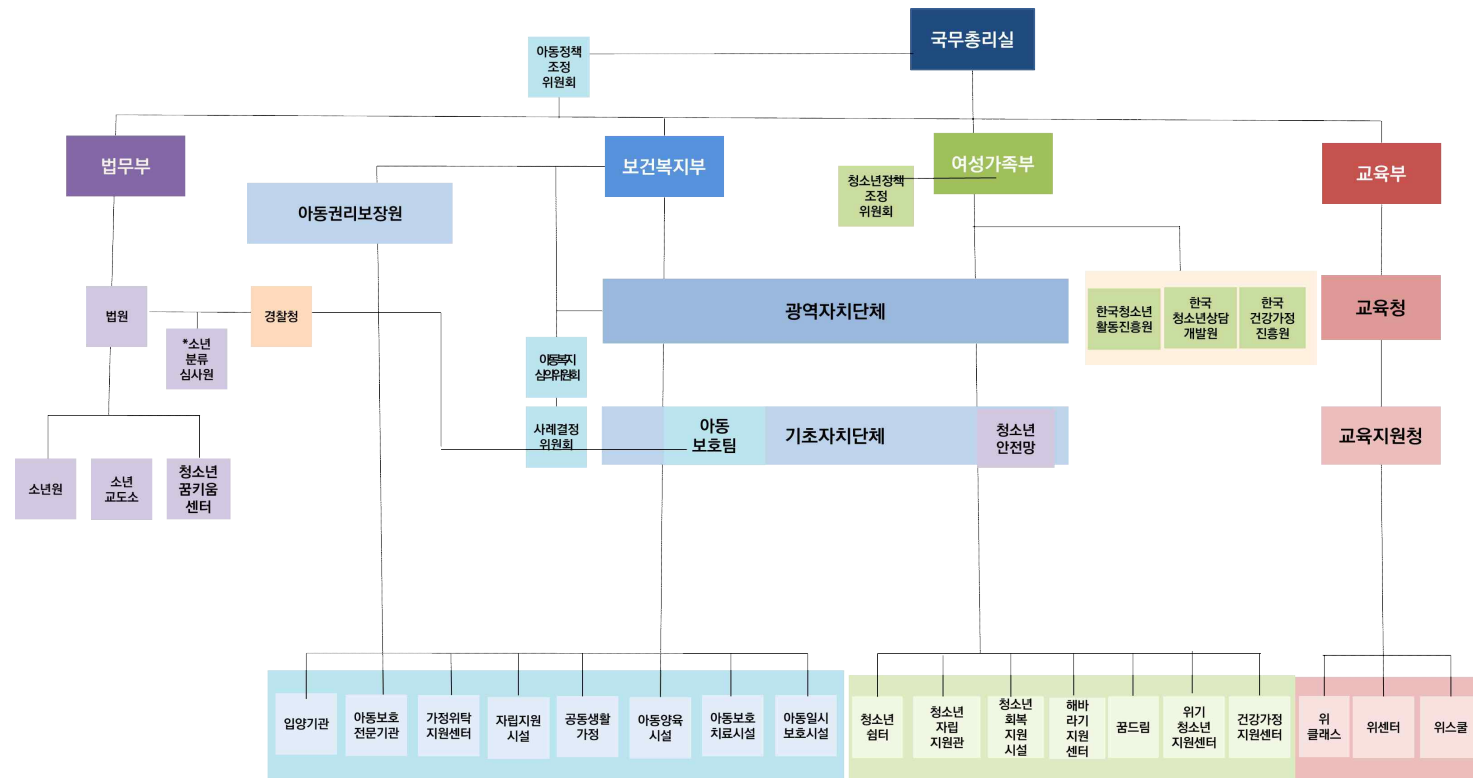
- 동일한 사회적 보호의 욕구가 있는 위기아동·청소년들은 그 주무부처에 따라서 달리 정의되며 접근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정책대상인 만 18세 미만 위기취약아동의 경우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되며 이들에게 입양, 가정위탁과 같은 가정형 보호 또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양육시설로 구분되는 시설형 보호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반면, 여성가족부의 정책대상이 되는 만 9~24세 사이의 위기청소년은 보호대상 청소년보다는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되고 있음.

- 법무부의 정책대상이 되는 보호소년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이들은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범소년, 죄를 범한 범죄소년으로 구성됨. 많은 경우 이들은 가정밖 또는 학교밖의 위기청소년과 중복되며 위기청소년의 범주에서 접근하여 지원과 보호의 대상에 포괄될 필요가 있음.

[그림 3-1]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그림 3-2] 부처별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 공급자 중심의 분절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문제점

○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서비스의 불연속성

-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법무부 등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별로 아동청소년의 서비스는 단절되고 동일한 욕구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는 지원 및 보호서비스 및 사례관리의 제공주체에 따라 달라지며, 아동청소년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가 가정, 학교의 경계를 넘나들 때 마다 연속적으로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소득수준별, 위기수준별 및 보호유형별로 아동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사례관리 및 지원서비스는 체계에 따라 단절되어 제공됨.

〈표 3-1〉 위리아동 보호체계의 구성

| 구분 | | | 소관 부처 | 기관명 | 이용 유형 | 대상 (청소년연령) | 대상 (세부) |
|----------------------------|---------------------------------|----------------------|----------|-------------------------------------|----------|--------------------------------|---|
| 아 동 보 호 체 계 | 가 정 외 보 호 아 동 | 보호 (생활중심- 시설형) | 복지부 | 아동양육 시설 | 거주형 | 만 18세 미만 (보호연장 시 24세) |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학대받은아동 -보호자의학대로아동보호전문기 관에신고되어해당기관이시·도지 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호 조치를 의뢰한 아동(특히, 아동에 게 문제행동이 있어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서 아동의 시설입소를 의뢰하면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반드시 입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 -보호자의질병,가출등으로가정내 에서보호하기어려운아동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 | | 보호 (생활중심- 가정형) | 복지부 | 가정위탁 (가정위 탁지원센 터, 위탁가정) | 거주형 | 만 18세 미만 (보호연장 시 24세) |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으 로 보호 조치된 아동 (18세 이상 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 | | | | | | | |
|--------|--|----------------------|-----|-------------------------------|-----|-------------------------|--|
| | | | | | | | 1)부모의질병,가출,실직,수감,사망등으로보호가필요한아동 2)아동학대및방임등분리보호가필요한아동 3)독립적인가구를구성하면서생활하고있는미성년의소년소녀가정세대 |
| | | 보호 (생활중심-가정형+시설형) | 복지부 | 공동생활가정 (일반그룹홈,학대피해아동쉼터) | 거주형 | 만 18세 미만 (보호연장시 24세) | - 보호대상아동 |
| 자립준비청년 | | 보호 (치료훈련중심) | 복지부 | 자립지원시설 (자립생활관,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 거주형 | 만 18세 보호종료 후 최대 5년 | -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중인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등보호종료자로서만24세이하인기초생활수급자등 |

〈표 3-2〉 위기청소년 보호체계의 구성

| 구분 | | | 소관부처 | 기관명 | 이용유형 | 대상 (청소년연령) | 대상 (세부) |
|-------------|------------------|-------|-----------------|-------------|------|---------------|---|
| 청소년 보호체계 | 가정의 보호 청소년 | 가정 밖 | 여성가족부 | 청소년쉼터-일시쉼터 | 거주형 | 만 9세~24세 이하 | - 가출, 거리배회, 노숙 청소년 |
| | | 가정 밖 | 여성가족부 | 청소년쉼터-단기쉼터 | 거주형 | 만 9세~24세 이하 | - 가정 밖 청소년 |
| | | 가정 밖 | 여성가족부 | 청소년쉼터-중장기쉼터 | 거주형 | 만 9세~24세 이하 |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 |
| | 자립 준비 청년 | 가정 밖 | 여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관 | 거주형 | 만 19세~24세 이하 | -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 |
| | | 소년 보호 | 여성가족부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거주형 | 만 9세~24세 이하 |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 (1호 처분 소년) |
| | | 소년 보호 | 법무부 (소년보호협회) | 청소년자립생활관 | 거주형 | 만 12세~22세 이하 | - 무의탁 소년원 출원생과 보호관찰대상자 등 요보호청소년 |
| | | | | | | | |

○ 위기아동청소년 지원과 보호의 격차

-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법무부 등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별로 지원 및 보호서비스 간의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아동보호체계의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을 포함하는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로 규정되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는 보장시설의 보호대상 아동은 맞춤형 급여체계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의 청소년복지시설은 보장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음.
- 이처럼 가정 밖 청소년은 보장시설 아동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생계보장과 의료보장에서 배제됨으로써 생존권, 건강권의 측면에서 차별받고 있음 (류정희, 이상정, 박선영, 전민경, 2020).
- 보호아동청소년 대상 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의 측면에서 아동보호시설의 경우 공간 및 시설 환경, 종사자 배치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시설은 간호사, 영양사 등 청소년의 신체·정신적 건강에 관한 전문 인력 배치 기준이 없으며 건강 진단, 급식 관련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 자립준비 청년(구, 보호종료아동, 가정밖청소년)들 사이의 부처별 불균등지원의 문제 심각
 - 보호대상 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 간의 보호서비스 전반의 격차와 유사
 - 2019년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 역시 청소년보호체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쉼터 퇴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음. 2021년부터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원내용이 보호종료아동과 격차 발생

- 개별 법률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 또는 서비스 기관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보편적인 자립지원서비스 수혜가 가능하도록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

〈표 3-3〉 자립지원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지원체계 | 지원명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 아동보호 체계 | 자립지원시설 입소 지원 (직접지원) |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취업중인 아동(우선)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취업준비 중인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해당사유 이용자 확대 독려) - 자립준비청년으로 24세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자립준비청년에게 일정기간 숙소를 제공하여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지원(상담지원, 자립지원, 정서지원, 생활지원 등) |
| | LH건설 임대주택 지원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종료 예정자 및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 |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갱신조건 충족 시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
| | 청년,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지원 |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종료예정이거나 종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2년 단위 계약,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가능) |
| | 희망디딤돌 센터 | -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 1인실 원룸 형태의 개별 주거공간을 지원하고, 개인별 역량에 맞춘 1:1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
| 청소년 지원체계 | 쉼터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지원 | - 청소년쉼터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이고,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인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 - 24세에 쉼터를 퇴소한 경우 29세까지 입소신 청 가능(각 쉼터 소장이 신청가능 대상자에게 지원사항 안내 및 신청의사 확인하여 신청) | - 임대주택 지원(매입임대, 전세임대, 건설임대), - 단, 임대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 - 입주자부담분 일부 발생 (월100만원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최소 1년 간의 사후관리진행 - 그러나 연간 지원물량이 100호 수준에 불과함(류정희 외, 2021) |
| | 숙박형 자립지원관(생활 관) 운영(직접지원) | -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예정)청소년 중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19~24세 우선지원) | - 숙박형 자립지원관(생활관) 입소 지원 (1년이내 지원, 최장 2년 원칙, 종결 후 6개월 이상의 사후관리) - 숙박 등 생활지원과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 |
| | 임대주택 지원 연계 (연계지원) | -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예정)청소년 중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19~24세 우선지원) | - 안정적 주거 확보 가능하도록 임대주택 지원 연계 |
| 소년보호 체계 | 청소년 자립생활관 입주(직접지원) | - 무의탁 소년원 출원생과 보호관찰대상자 등 요보호청소년 (만23세가 될 때 퇴거) | - 6개월~24개월까지 거주 가능 |
| | 희망드림 주거지원제도 | - 생활태도가 모범적인 무의탁 출원생 - 자립생활관퇴소생중주거불안하여지원이필요한학생 | - 일정기간 임대보증금 지원 |

〈표 3-4〉 자립지원청년 소득지원을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지원체계 | 지원명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 아동보호 체계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지급 원칙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8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 권고 ('22년) ※'23년은 1,0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자립정착금: 1인당 500~1,500만원 지원 (지자체별 상이) |
|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수당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 된 자)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매월 3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자립수당 지급은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
| | 아동발달지원계좌 (CDA)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 보호대상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아동이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시 국가(지자체)가 월10만원 내에서 1:2 매칭금 지원 |
| | 그 외 소득관련 자립지원연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비용) | |
| | 교육 지원: 대학등록금 지원(일부시·도) | - 일부 시도에서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 - 대학등록금 실비 또는 150~350만원 선 지원 (지자체별 상이) |
| 청소년 지원체계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퇴소일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매월 30만원 현금지급 (본인 명의 계좌 이체) -국비및지방비(50:50) -자립지원수당 해당 기간동안 지역 내 청소년자립지원관(또는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을 통한 사례관리진행 |
| | 자립활동 실비 지원 (직접지원) | -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예정) 청소년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19~24세 우선지원) | -학위취득, 취업준비활동 등 청소년의 자립준비 비용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대한 실비지원 성격 -개소당 20백만원 내에서 시설사정 및 청소년 특성에 맞게 집행 |
| | 자립지원수당 지원 연계 (연계지원) | -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예정)청소년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19~24세 우선지원) | - 자립지원수당 지원 연계 |
| 소년보호 체계 | 아기사랑 | - 출원생 중 저소득 가정 내 자녀를 낳아 키우는 가정 (50가정) | - 매월 분유, 기저귀, 이유식 등 월 10만원 상당 지원 (1년간) |

제 2절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청소년 실태

1. 소년사법 청소년

- 소년사법체계의 큰 틀은 소년법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소년법상 소년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을 일컫는 것으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모두 받을 수 있음.
-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경찰단계에서 법원단계로 바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처리되고 있음.
- 우범소년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음주, 소란, 유해환경에 접하는 소년을 일컫음.

〈표 3-5〉 소년법상 소년의 분류

| 소년법 | 정의 | 비고 |
|------|--|-----------------|
| 범죄소년 |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 형사사건 또는 보호사건 대상 |
| 촉법소년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 보호사건 대상 |
| 우범소년 |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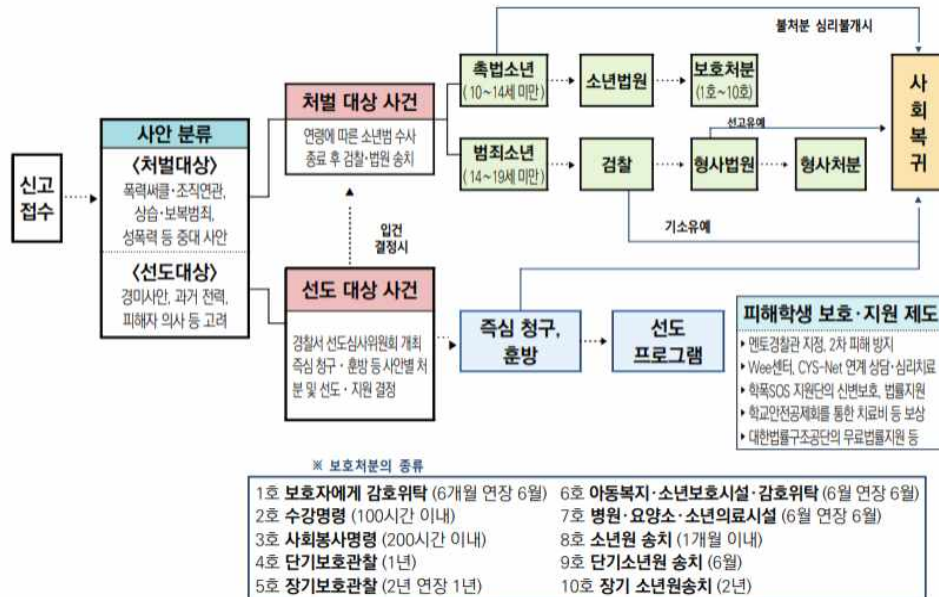
자료: 소년법 제 4조. <https://law.go.kr/%EB%B2%95%EB%A0%B9/%EC%86%8C%EB%85%84%EB%B2%95>에서 2022.8.15. 인출.

- 19세 미만 소년사법 청소년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2020년 소년 범죄자는 총 64,480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3.9%를 차지함(여성가족부, 2021).
- 소년보호사건의 사건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음.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에서 선도하거나 직접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음. 또한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 소년부

로 송치됨.

-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형사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으나,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게 됨.
- 한편, 보호자 학교 또는 복리시설의 장이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하였을 때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음(법무부 홈페이지, 2022).

[그림 3-3] 소년사건 처리 절차



자료: 김현진 외(2018).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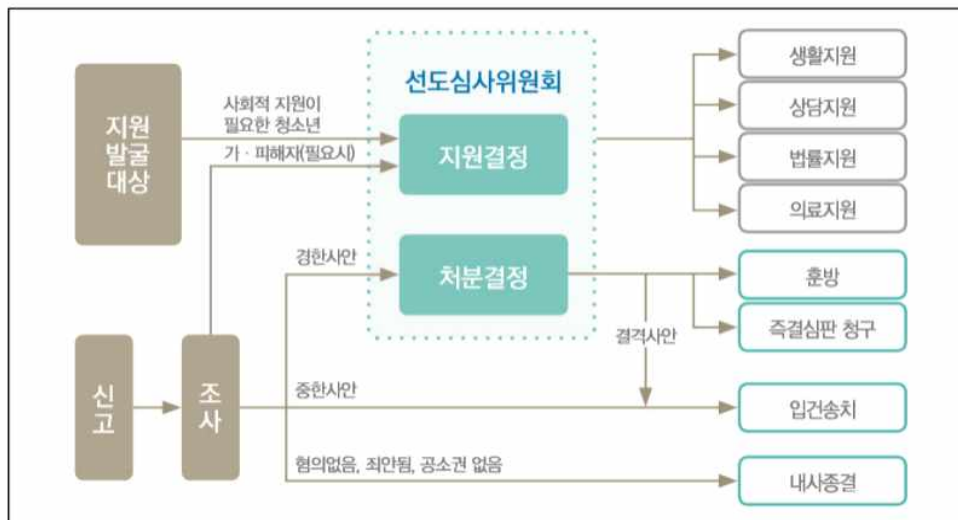
□ 소년사법청소년은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보호의 대상으로서 존재함. 보호처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공식적인 소년사법제도를 통해 성인 범죄자와는 다른 처우를 부여한다고 할지라도 범죄자가 된 아동·청소년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낙인은 여전히 그들을 범죄 위기 상황에 노출시키며 재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이를 위한 대안으로 공식적 사법절차가 야기하는 사회적 낙인 및 범죄유발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처리를 대신하는 다른 형태의 절차인 ‘소년범 다이

버전'이 주목받고 있음(김현진 외, 2018).

- 특히 소년사법청소년의 초기 유입 통로인 경찰에서는 소년사법 청소년의 낙인효과를 피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사랑의 교실, 자체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 비공식적 제재를 부과하여 그들의 사회적 낙인 효과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감소시키고 있음(김현진 외, 2018).

[그림 3-4] 경찰의 경미 소년범 처리 절차도



출처: 경찰청, 2017 경찰백서, 143쪽.

자료: 김현진 외(2018).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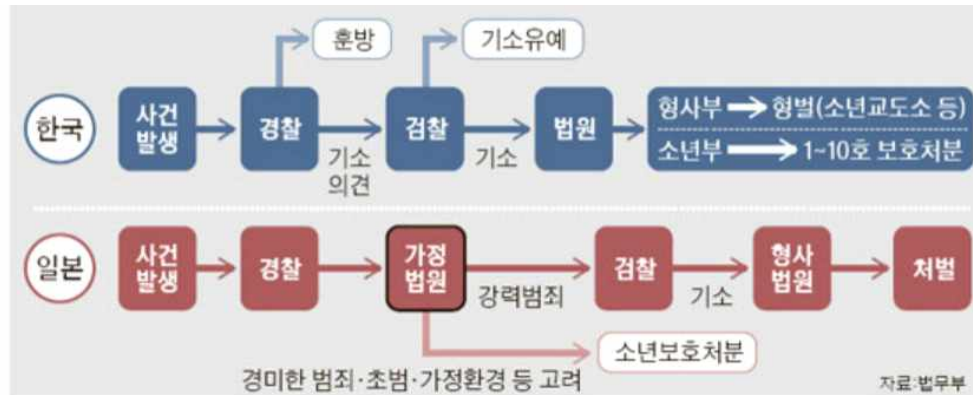
□ 한편, 보호대상으로서 소년사법청소년의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소년범 사건 처리 절차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모든 소년범(만 14~19세)에 대하여 경찰의 기초조사를 거쳐 가정법원으로 넘기고 있으며, 단순 절도 등 경미한 소년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됨. 가정법원은 범죄의 경중, 가정 환경, 심리상태,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소년범의 사건을 분류하며, 경미 소년 범에게는 사회봉사·교육명령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 전과 기록을 남지 않게 하고 있음.

- 그러나, 살인·강도·폭력 등 강력범죄자는 검찰에 넘기고 있으며, 검찰은 이들을 형사법원에 기소함. 위 절차를 준수하면 경찰과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소년법을 풀어주게 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음(중앙일보, 2014).
- 즉, 일본의 경우 경찰, 가정법원 차원에서 소년범죄의 경중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해 강력범죄소년의 경우에는 사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경미 소년법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교육과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초범에 경미한 범죄라도 소년법에 따른 나이를 고려하여 14세 이상이면 무조건 검찰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한 번 기소되면 경찰→검찰→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그림 3-5] 한국과 일본의 소년법 처리 절차 비교



자료: 중앙일보(2014. 07. 09.). 소년 전담 법원 신설 ... 맞춤형 교화 프로그램 만들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15200917>에서 2022. 08. 15. 인출.

- 소년사법청소년들은 가정, 개인, 학교, 사회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위기발생 원인에 의해 교칙을 위반하거나 비행문화에 가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학교 및 보호체계 밖으로 이탈하여 학업을 포기하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을 수 있음.
- 따라서 이들의 위기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각 부처 간 협력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조치 및 지원을 통해 비행이나 범죄 등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선

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으며, 소년사법청소년들에게는 학교나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할 것임.

2. 노숙청소년, 거리청소년 등 청소년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밖청소년

- 노숙청소년, 거리청소년 등 청소년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밖청소년은 보호체계 외 보호대상 청소년으로, 부모의 돌봄과 국가의 지원을 모두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며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리·노숙청소년 등을 의미함(류정희 외, 2021).
- 2020년 가출 경험 학생은 11만 5,741명이며, 학업중단 청소년이 제외된 조사라는 점에서 실제 가출 청소년 규모 자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됨(허민숙, 2021). 특히,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25%가 가출 이후 노숙한 경험이 있고, 청소년쉼터 입소 전 노숙 등 주거지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한 기간이 평균 35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김지연 외, 2019).
- 이는 특정 시점의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가정 밖 청소년의 4명 중 1명은 가출 이후 노숙을 경험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가출, 노숙청소년, 거리청소년 등 가정 밖 청소년은 구체적 규모 추산이 불가능한 상황임.
- 가정 밖 홈리스 아동·청소년들은 집을 나오는 순간 곳곳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음.
- 여성청소년의 가출 이후 거리 생활은 여성청소년의 성적 안전도에 큰 위험을 초래하며 성매매로의 유입을 가속화하는 조건으로 작용(육혜련, 2017).
- 또한 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노숙 청소년들의 경우, 사망, 약물중독, 자살, 범죄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Vilsack et al., 2015; Murphy, 2016).

- 그러나 홈리스 지원을 위한 근거법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18세 이상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 내용이 중·장년층 노숙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아동 및 20대 청소년 홈리스는 노숙인 지원에서도 배제된 상황임.
- 돌아갈 곳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노숙청소년, 거리청소년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홈리스’ 상태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 법률에 근거한 지원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함.

3. 경계성지능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미등록 장애아동청소년

- 경계성 지적기능(BIF: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Children) 아동 및 청소년은 ‘느린 학습자’로 불리며 지능검사 결과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1과 -2 사이인 IQ 71이상 84이하 사이에 속하는 범주로 분류된 아동·청소년을 의미함.
- 경계선지적기능아동은 13.6%의 범주에 해당하며 이는 지적 장애 전체 집단(2.3%)의 약 6배에 해당하고 가족 구성원의 지능 및 교육수준, 정서적 요인, 개인사적 요인, 빈곤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고됨.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 아동 및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함, 과잉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함.
- 상당수의 ADHD 아동·청소년은 성인기에도 증상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들어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보호시설 등에서 경계성지능장애, ADHD 등을 경험하며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나 장애아동의 범주에 대한 범위 규정의 한계로 인해 부재한 상황임(류정희 외, 2021).

- 이들은 장애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IV-TR)에 의하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발달장애군’으로 임상적 도움을 필요로 하며 학대 및 보호위기에 취약한 그룹으로 전문적인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원가족에게 보호받을 수 없어 보호대상아동·청소년으로서 대규모 양육시설 및 보호시설에 입소했을 때 경계성 지적 기능 아동·청소년들은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며 비장애아동·청소년과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존재함.
-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내 미등록장애아동·청소년의 정확한 규모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에 대한 문제행동 실태조사(한국아동복지협회, 2018)’에 의하면 최근 입소아동의 70% 정도가 학대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폭력·자해, 우울, ADHD, 경계선지능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임성은 외, 2019, p.104, 재인용).
- 또한 충북 청주시의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268명 중 경계선지능 진단 아동 16.1%, 경계선지능 의심아동은 21%로 10명 약 4명 정도가 경계선지능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임성은 외, 2019, p.105, 재인용).
-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아동경계성 지능장애-심하지 않은 장애-심한 장애에 이르기까지 일반에서 장애에 이르는 스펙트럼 상 다양한 편차가 존재함(류정희 외, 2021).
- 그러나 지능지수가 71~84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의 경우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보호종료 후에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장애판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
- 또한, 영유아기의 경우, 장애판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장애판정을 받지 않은 비장애 아동 중에서도 경계성 장애 등의 경증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다수의 아동

을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지원할 필요성 높아지고 있음.

4. 가족부양청소년

- 가족부양청소년은 ‘영케어러(Young Carer)’라고 불리며 부모, 형제 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무보수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의미함. 이들은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숨겨진 집단(hidden army)’으로 불리기도 함(Leu, Agnes et al., 2022).
- 가족부양청소년은 만성적인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가족에 대해 장기간의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화된 돌봄수고는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더 나아가 이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관련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캐나다 가족부양청소년들의 학교 결석율은 10.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Stamatopoulos & Vivian, 2018). 또한 학교에 재학 중인 영국 가족돌봄청소년들의 56%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 수행에 지장을 받으며, 학업을 끝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음(Sempik & Becker, 2014).
- 잦은 결석, 낮은 학업 성취도와 같이 가족 돌봄 수행에 의한 학습기회나 사회적 기회의 박탈과 제약은 향후 고용상태 및 자립능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은 가족부양청소년을 필요아동(Child In Need)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욕구사정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Children’s Act, 1975). 또한 호주, 아일랜드, 캐나다, 일본 등의 경우에도 이들을 케어러(Carer)로서 인정하며 지원 기관, 관련 법령, 협회 등을 두고 있으며 규모와 수요 파악을 통해 수당 및 보조금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복지를 위한 공공 개입 확대 방안의 논의가 시작 단계에 있는 상황이나(관계부처합동, 2022), 가족부양청소년의 규

모와 개입 현황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들의 규모는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2022년 기준, 약 1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22).

○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이들을 향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예: 서울 서대문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2022) 여전히 복지 및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음.

□ 영케어러 지원 제도의 핵심은 영케어러가 아동·청소년 본연의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있음.

○ 돌봄과 보살핌을 받으며 충분한 성장과 발달의 기회를 갖는 것, 자립하기 전 교육·훈련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 심리적·정서적 안정, 신체적 안전 속에서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 지원의 핵심.

5. 고립은둔청소년

□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은 ‘니트(NEET)’ 상태나 일본어 히키코모리의 번역어로서 ‘은둔형 외톨이’를 의미하는 등 개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상태는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로, 정규교육 과정을 마쳤으나 일이나 훈련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지칭함.

○ 한편, 은둔형 외톨이는 ‘집 안에만 칩거한 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장기간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의미함.

□ 이러한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은 일이나 직업으로부터 배제됨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음.

○ 최근 한국사회의 청년들은 학업-직업세계로 자연스레 이어지던 이행단계의 단절로 장기간 유희·무직 상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일·가치·관계에서도 성취와 만족감을 획득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상당수가 비자발적인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윤철경·서보람, 2020).

- 특히 사회의 첫 진입시기인 청년기를 고립과 단절로 보낼 경우, 국내 청년의 생애 전반에 걸쳐 고립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미 사회와의 연결고리 약화로 발생하는 고독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김성아 외(2022)의 연구에서는 은둔 청년 및 니트 청년의 규모를 추정하였음. 이들의 특성상 사회적 접촉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규모 추산에 제한이 있으나, 은둔 청년의 경우 19~34세에 해당하는 전체 청년 인구의 3.1%를 차지하는 약 338,961명, 니트청년의 경우 청년 인구의 19.4%를 차지하는 약 1,969,009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 고립은둔청년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음. 현재 민간재단(예: 청년재단,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사업) 및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을 향한 포괄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주광역시의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2019년 10월에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음. 이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들을 향한 지원을 본격화하고자 하였음.
-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가진 청년, 수용적이지 않은 가정환경이나 폭력 피해 경험, 경제적인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 상황에 노출되어 오면서 니트(NEET) 상태나 은둔형 외톨이 등과 같은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이들이 사회적 고립 상황에 이르지 않고 본인의 역량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지지체계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함.

6. 청소년 부모

- 청소년 부모는 ‘청소년’이면서 ‘임신, 출산’을 경험한 집단으로서, 청소년에게 부모의 지위를 기대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대표적인 ‘일탈집단’으로 자리매김됨(김은지, 2021).
- 이들은 청소년이라는 연령범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기존 ‘위기청소년’과는 범주가 상이한 긴급한 출산, 양육욕구를 가진 집단으로 가족정책의 우선적인 대상이며, ‘한부모’ 지원정책의 범주 내에서 지원되고 있음.
- 2020년 기준, 24세 이하 출산은 10,530건이며, 이 중 청소년한부모로 수급을 받는 가구는 3,213가구, 청소년미혼부·모는 1,714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 이는 청소년한부모가구에는 청소년미혼부·모 뿐 아니라 이혼한 청소년부·모 가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청소년미혼부모 보다 청소년한부모수급가구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음(배보은, 2022).
- 청소년미혼모에 대한 지원정책은 주로 미혼모 생활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많은 경우 가족의 지원을 벗어난 상태에서 출산과 초기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청소년부모에게 시설은 중요한 정책자원 중 하나임.
- 그러나 시설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제한적이며, 특히 2011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입양기관이 운영하던 미혼모자시설의 운영이 금지되는 등 이들을 향한 시설을 통한 지원은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이미정 외, 2011).
- 청소년부모에 대한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의 지원 정책은 학교 교육 및 직업 교육 지원, 보호 및 자립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은주희 & 임고운, 2019).
- 해외의 경우, 청소년 부모를 혼인 및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이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의 범주 안에서 바라보며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청소년부모의 출산연령이 아닌 임신연령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위의 제약이 보다 많은 미성년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배보은, 2022). 이 때문에 청소년부모의 임신은 초기부터 안전한 임신·출산·주거·생계·양육에 대한 선택과 준비된 출산을 위해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현재 청소년부모가 임신 중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임신 중 의료비사용이 가능한 국민행복카드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산모건강관리를 통해 받는 산전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지원 등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 또한 실제로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주거와 생계지원은 시설입소 외 지원이 거의 부재한 상황으로, 이마저도 청소년 한부모만 이용가능하며 청소년 부모는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임.
 - 여전히 청소년부모를 ‘한부모가족’의 범주 안에서 제한적으로 보는 가운데, 특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은주희 & 임고운, 2019).

7. 수용자 자녀

- 수용자 자녀는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하나 체포나 법정구속된 부모가 아동자녀의 보호조치를 미처 수행하지 못하고 수용될 경우, 이들의 자녀를 파악해 보호조치하는 절차는 현재까지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류정희 외, 2021).
- 수용자 자녀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4월 30일 기준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밝힌 수용자는 총 6,654명이며, 이들의 자녀 수는 10,353명임(법무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0).
- 수용자의 자녀들은 주로 부모 및 조부모, 친인척, 지인에 의해 양육되고 있으며, 위탁시설에 보내지거나 혼자 생활하는 경우도 있음(법무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0).

□ 수용자 자녀는 부모의 수감으로 실생활에서 여러 부정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수감은 가족해체, 경제적 곤란, 가족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악화, 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초래하며 자녀의 학습부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됨.

○ 부모의 수감은 가족해체, 정신건강 문제, 저조한 학업성취, 경제적 빈곤 등을 초래할 수 있음(신연희, 2016; Foster et al., 2009).

○ 부모의 수감이 세대전이 되어 수용자 자녀들이 일반 또래 집단에 비해 사법기관에 연루될 우려가 높다는 보고 존재(J Evans, 2015).

□ 수용자 자녀는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양육자의 상실과 함께 방치, 방임될 가능성이 높으나, 공공 아동보호체계에서 이를 파악하기 힘들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수감자 발생 시 미성년자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적절하게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법무부, 2020)

-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 재판, 교정, 범죄예방 등 부모의 체포부터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성년자녀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 1) 체포 및 구속·구인단계에서 수용자자녀의 보호와 아동보호체계 연계
- 2) 수용단계에서 수용자자녀의 양육 및 접견, 부모관계 회복 지원
- 3) 수용자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중·장기 계획 수립

- 또한,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자녀를 마주하는 관련 종사자에 대해 아동권리교육과 훈련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수용자자녀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를 권고함.

8.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은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

난민 등 무국적·미등록 아동·청소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전국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규모는 학령기 다문화아동의 규모로 짐작해 볼 수 있음. 다문화학생 규모는 2020년 기준 14만 7,378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한국교육개발원, 2020, p. 6).

○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의 규모는 2020년 기준 3만 3,752명(누적값)으로 이 중 10~18세 청소년의 수는 952명으로 보고되었음(남북하나재단, 2021).

○ 난민아동·청소년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2019년도 난민아동 누적 신청건을 기준으로 할 때 2,942건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난민인권센터, 2019).

□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아동·청소년, 난민 등 무국적미등록 아동·청소년은 문화 적응, 학업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와 문화의 적응, 부모의 양육관련 어려움, 학습 및 학업에서의 어려움, 탈북 시의 어려웠던 기억 및 부모의 경제활동 어려움(북한이탈주민) 등의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좌동훈, 이민영, 지소연, 2016; 최윤정 외, 2019).

- 또한 북한이탈가정 부모의 이주 스트레스가 아동가해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나(류원정, 2020),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이들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즉, 예방적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대상아동·청소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상 광의의 보호대상아동인 취약아동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아동과 난민 등 외국인 가정의 아동,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취약아동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보건복지부, 2021a, p.5).

○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북한이탈주민 아동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드림스타트같은 지역아동센터 등의 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난민 등 무국적·미등록 아동·청소년은 아동보호체계상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미흡한 상황임.

- 난민아동·청소년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에 포함되더라도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아동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 김지연 등(2015)은 이러한 무국적·미등록 아동·청소년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대상아동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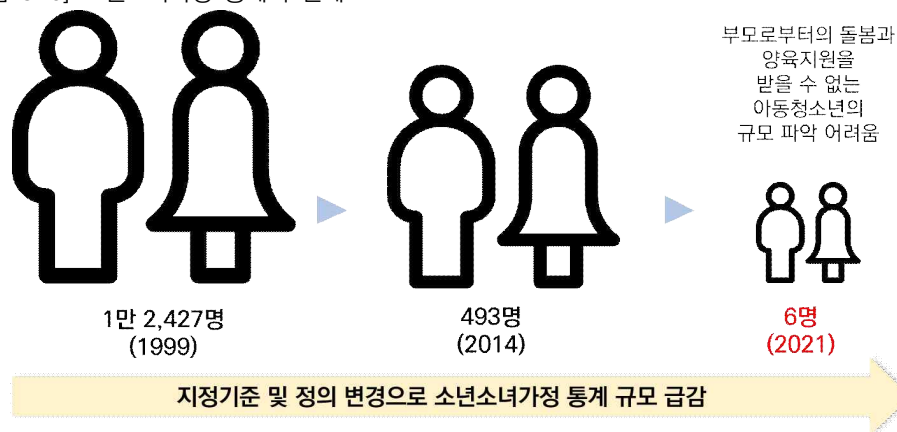
9. 소년소녀가장 등 홀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

- 소년소녀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세대”를 의미함(통계청, 소년소녀가정현황보고, 2007).
- 소년소녀가정 등의 홀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이들의 지원을 위한 정확한 규모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나 통계 추산의 문제점과 한계가 존재하여 그 규모를 신뢰할 수 없는 실정임.
- 소년소녀가정현황 통계는 통계청 승인통계이나 실질적인 공표통계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는 수치로, 실질적으로 수용자자녀, 가족돌봄청소년 등 부모로부터의 돌봄과 양육지원을 받을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를 포괄하지 못함.
 - 소년소녀가정현황보고 통계의 작성은 1988년 통계청 승인에 의해 ‘소년소녀가장세대현황보고’로 작성되기 시작하여 2000년 지원대상 명칭이 ‘소년소녀가정현황보고’로 변경되었으나 통계 명칭은 7년이나 지난 시점인 2007년 변경됨(통계청, 2007).
- 1996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소년소녀가장을 위탁가정이나 양육시설에 수용하는 등 소년소녀가장을 가능한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으며, 이에 2000년 이후 정부는 ‘소년소녀가장’을 ‘소년소녀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년소녀가장의 지정기준 등 집계범위를 변경함.

- 이전까지는 부모와 동거 중이라도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소년소녀 가장으로 지정했으나 이를 대상에서 제외시킴(굿뉴스, 2022.05.03.)

○ 이에 따라 1999년 1만 2427명에 달했던 소년소녀가정은 2021년 12월 기준 전국 6명으로 감소(보건복지부, 2022)하였으며 본 통계는 실제로 부양과 돌봄 능력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아동의 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함.

[그림 3-6] 소년소녀가정 통계의 한계



자료: 연구진 작성

□ 통계의 한계로 인해 이들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미성년의 행위능력을 확장하는 방안을 통해 성년이 가까워오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의 다각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제20대, 제21대 국회 윤후덕 의원 발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3조 (개별법에서 행위능력제한의 예외를 규정한 경우)

-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 윤후덕 의원은 모든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통합적으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함.
- 이 법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라고 정하고 있는 한편(제2조 제3호),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게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의 신청·수령, 수령한 지원 관련 급여의 처분, 기타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고(제

23조 제1항), 개별지원자(개인별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원이 종료 될 때까지 전담하여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는 이의신청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을 대리하지만, 의사능력이 있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하였음(제3항).

□ 또한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경우에도 친권해방, 성년해방 등을 통해 미성년자의 자립지원 권리를 보장하고, 행위능력을 확장시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마한열, 2022).

○ 미국의 친권해방(Emancipation)

- 성년이 되면 친권에서 해방됨. 그러나 연령상 성년에 이르지 않더라도 친권에서 해방하는 요건을 정한 주들이 있음.
- 캘리포니아: 혼인하거나, 군대에 입대하거나, 법원에서 친권해방을 선고받으면 성년으로 의제됨. 법원에서 친권해방 선고를 받으려면 (1) 14세 이상이고, (2) 부모 또는 후견인과 동거하지 않으며 그들이 함께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3) 스스로 재정관리를 하고, (4) 합법적인 수익이 있고 (5)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해야 함.
- 미주리주: 다음 요건을 갖추면 미성년자가 주거계약을 할 수 있음. (1) 16~17세, (2) 홈리스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3) 자조적, (4) 부모나 후견인이 표현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해야 함.

○ 프랑스의 성년해방

- 법률규정에 의한 성년해방: 미성년자이나 가족의 창립자인 경우
- 사법 결정에 의한 성년해방: 16세 이상인 청소년에 대하여 부모 또는 친족회의 청구로 법관이 선고하는 경우임. 부모가 청구한다는 점에서, 부모가 허락한 영업의 범위에서는 성년과 동일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영업의 허락’(민법 제8조)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

○ 영국의 미성년자 권리

- 미성년자의 거주권 보장 판결 사례: 16세 임신 상태의 노숙 미성년자와 임

대인(지역 주택 당국)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지역 주택 당국의 주장에 대해 임대인은 수탁자로서 신탁이 종료할 때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미성년자는 수익자로 거주권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례 존재(Alexander-David v Hammersmith & Fulham LBC [2009] EWCA Civ 259).

- 또한 지방정부는 16~17세의 홈리스 청소년의 숙소를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 16세 이후에는 부모나 부모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청소년을 위 숙소에서 퇴거시킬 수 없음.
- 16~17세의 청소년도 일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아동수당을 직접 수령할 수 있음.

제 3절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과 원칙²⁾

1.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보호서비스의 연속성, 통합성 강화

- 아동·청소년보호체계를 새롭게 재편하거나 재구조화하는 일은 광범위한 사회적으로 합의를 기초로 중장기적 전망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큰 과제임.
- 아동·청소년의 단일하고 통합적인 체계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보호서비스의 연속성과 통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현재 존재하는 경계를 잇는 연계와 협력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음.

2) 제 3절의 1-4는 류정희(2021).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의 연속성과 통합성 강화 방안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6월, 통권 제 296호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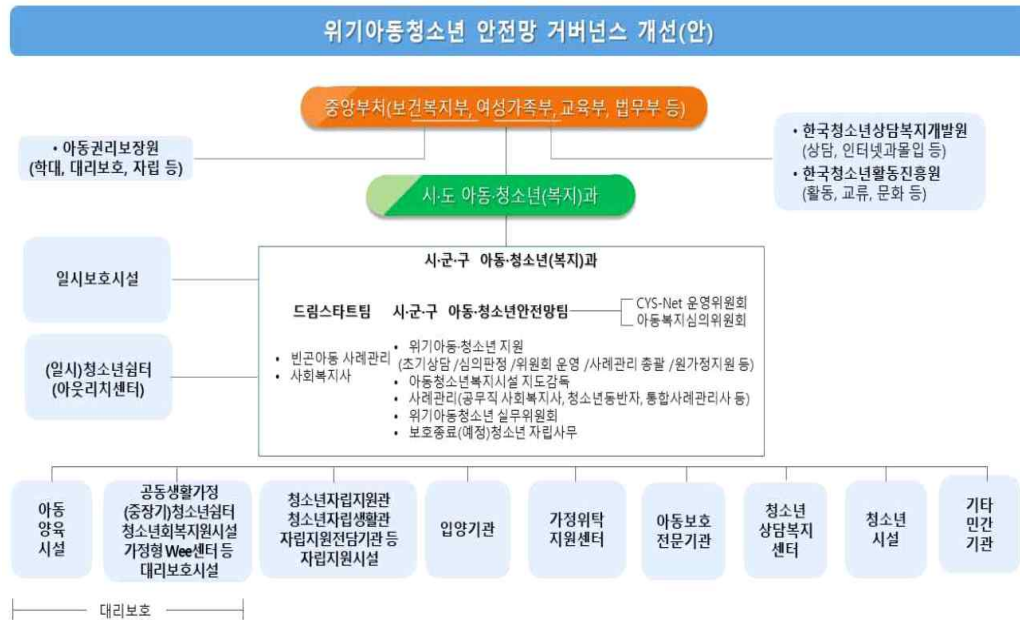
2.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보호서비스 제공의 표준화된 기본선 수립

- 개인적 가정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아동·청소년은 동일하게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며 동일한 생존과 발달, 보호의 필요와 욕구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진입부터 보호 중 서비스, 보호종료와 자립지원에 이르기까지 차별성이 존재함.
- 국가는 위기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보호의 공적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기본적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에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비차별의 원칙에 기초하여 제공해야 함.
- 아동·청소년으로 분리된 보호체계와 보호서비스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청소년 보호시설의 보장시설로의 전환에 대한 적극적 검토.
 - 보장시설은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은 보장시설
 - 반면, 청소년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저수준의 생계 및 의료욕구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보호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려면 시설범주를 동일하게 보장시설로 맞추고 보호서비스의 최저 기본선을 동일한 수준에서 확보하는 것이 시급.
 - 이는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보호종료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을 청소년쉼터 퇴소 아동·청소년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체계 또는 서비스 기관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보편적인 자립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함.

3.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적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아동·청소년 중심”의 기본원칙을 가지고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의 연속성, 통합성, 형평성을 강화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개편과 재구조화를 위한 중장기로드맵을 필요로 함
- 보호절차의 게이트웨이를 아동의 연령대와 발달단계에 관계없이 단일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발굴, 의뢰부터 사후관리, 자립지원에 이르는 아동·청소년 보호의 전 과정에서 공공의 전달체계를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의 통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안은 현재의 아동보호팀과 청소년안전망의 기능을 연계 통합 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
 - 예컨대, 아동일시보호시설과 청소년쉼터는 단기 보호라는 측면에서 역할이 유사하며,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생활관과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아동 또는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
 - 또한,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거주치료시설이라는 점에서 유사(류정희, 김지연, 2019).
-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함께 일하는” 온전한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
 -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체는 지금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보다 강력하고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담당.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과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아동정책조정기구를 구성,
 - 이러한 조정기구는 강제력과 합법성을 부여하고 예산편성 및 조정에 대한 권한을 확보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통합보호체계를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야 함.

[그림 3-7] 위기가동·청소년 통합보호체계 재구조화(안)



자료: 류정희, 김지연. (2019). 위기가동·청소년 보호체계 개선방안.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가동·청소년 보호체계 개선방안. 2019년 제1차 사회정책포럼 자료집. 세종: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 15.



제4장

위기 아동·청소년의 통합적인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제1절 국내의 위기 아동·청소년 통계생산 및 관리현황과 분절성

제2절 위기 아동·청소년 중심의 통합적인 통계관리의 해외사례

제3절 소결

제 4 장

위기 아동·청소년의 통합적인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 본 장에서는 위기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통합적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의 위기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통계 생산 및 관리의 현황과 더불어 분절성 등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에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를 검토한 뒤, 다양한 위기 유형에 맞춘 통합적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함.

제1절 국내의 위기 아동·청소년 통계생산 및 관리현황과 분절성

- 아동 통계생산 및 관리의 분절성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과정 (2020.4~2022.12)
 - 분산된 아동 관련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 연계하여 아동중심의 정보관리하기 위하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제인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희망이음) 내에 통합아동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해왔음.
 - 희망이음은 아동-노인-장애인-보건-자활 등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던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시스템
 - 과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구축을 통해 복지급여 정보의 통합 관리는 가능해졌으나 사회서비스정보는 여전히 대상별, 사업별로 분절적인 시스템으로 관리되어 왔음
 - 그 결과, 수요자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이력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서비스 정보관리체계를 희망이음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림 4-1] 희망이음 시스템의 연계통합

| 아동 | 노인 | 장애인 | 보건 | 자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정보시스템 - 국가아동학대 - 가정위탁지원 - 아동자립지원 - 디딤씨앗통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학대정보 - 노인맞춤돌봄 - 응급안전안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지원정보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정보 시스템 |

자료: 보건복지부(2022). 2022 희망이음 설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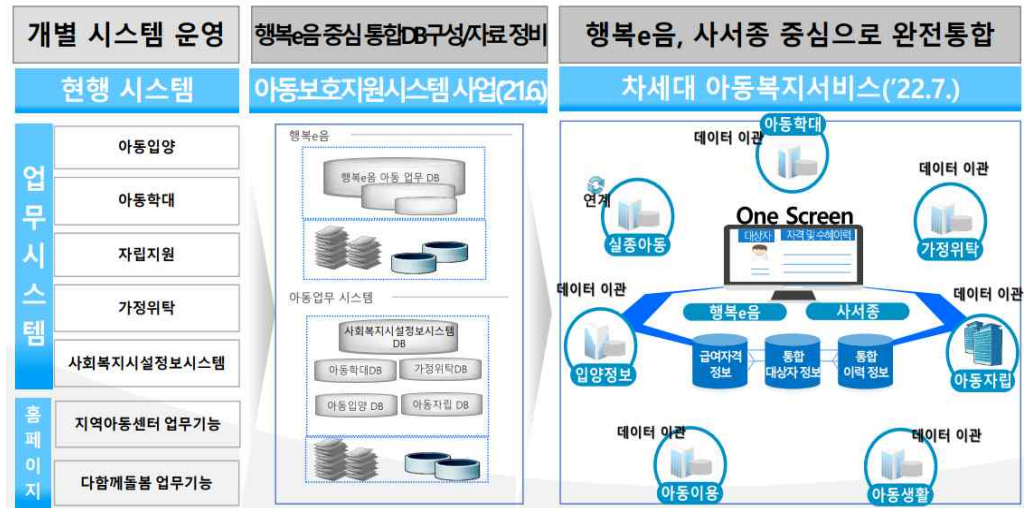
○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아동 개인을 중심으로 급여, 서비스, 상담 등의 이력을 관리하는 마이크로 데이터 구축은 기존에 분절적으로 나뉘어져 별도로 구축되어왔던 9개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으로 연계 및 통합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표 4-1〉 통합대상 아동정보 시스템

| 번호 | 시스템명 | 소관부서 | 운영기관 | 통합/연계 |
|----|-------------|---------|-----------|-------|
| 1 | 입양정보관리시스템 | 아동복지정책과 | 아동권리보장원 | 통합 |
| 2 | 국가아동학대시스템 | 아동학대대응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통합 |
| 3 | 가정위탁지원시스템 | 아동권리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통합 |
| 4 | 아동자립지원시스템 | 아동권리과 | 아동권리보장원 | 통합 |
| 5 | 지역아동센터시스템 | 인구정책총괄과 | 아동권리보장원 | 통합 |
| 6 | 다함께돌봄센터시스템 | 인구정책총괄과 | 아동권리보장원 | 통합 |
| 7 | 디딤씨앗통장시스템 | 아동권리과 | 아동권리보장원 | 통합 |
| 8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 아동학대대응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연계 |
| 9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보육정책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연계 |

[그림 4-2]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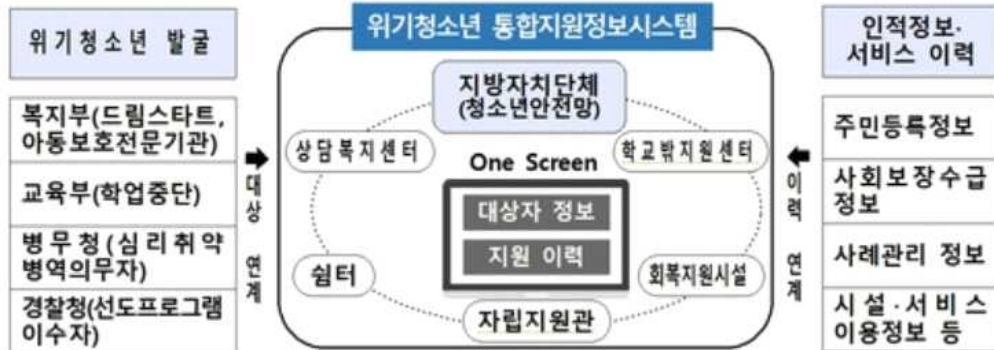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22). 2022 희망이음 설명자료.

□ 위기청소년 정보의 분절성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위기청소년 지원이 사업별, 부처별로 운영, 정보 및 서비스의 연계 부족으로 인한 지원의 통합성 및 효과성에서 제약 존재
- 위기청소년의 발견에서 보호종료, 자립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2019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사회위기청소년 지원강화방안’ 마련 및 발표되었으며(2019.05.17.), 이를 계기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마련 및 법제적 정비가 이루어졌음.
 - 정보시스템 구축 위한 예산 160억(2021-2023) 반영
 - 정보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마련(2021.3)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정보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추진

[그림 4-3]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자료: 보건복지부(2022). 2022 희망이음 설명자료.

- 청소년 안전망시스템의 단계별 구축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음.
 - 1단계는 통합사례관리의 통합으로 통합사례관리, 타기관 정보연계, 단위시스템의 통합
 - 2단계는 통합서비스포털, 통계 및 정책의사결정 지원, 행정업무 지원으로 구성
- 위기청소년의 복합적인 위기유형 및 위기로에 따라 위기청소년 서비스 지원기관의 서비스를 통합지원하기 위해 통합구축단계와 연계구축단계 나누어 진행되었음.
 - 정보통합구축 대상기관은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으로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및 사업별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통합을 목적으로 함.

〈표 4-2〉 정보통합구축 대상기관

| 번호 | 구분 | |
|----|--------------|---------------|
| | 기관 | 시스템 |
| 1 | 지자체(청소년안전망) | CYS-Net 종합정보망 |
| 2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 3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
| 4 | 청소년쉼터 | 꿈드림 정보망 |
| 5 | 청소년자립지원관 | 행정지원시스템 |
| 6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행정지원시스템 |
| 7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개별화(사례)관리시스템 |
| 8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 개별화(사례)관리시스템 |
| 9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위탁관리시스템 |
| 10 | 내일이룸학교 | 실적관리시스템 |
| 11 | 청소년상담전화 | CYS-Net 종합정보망 |
| 12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업무지원시스템 |
| 13 | 사이버 문자 | 기플렛 |

- 정보연계구축 대상기관은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복지부), 학업중단청소년(교육부), 경찰청(선도프로그램이수자) 등 여가부외의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소관부처 및 기관을 포괄

○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과 아동통합시스템의 연계 현황

〈표 4-3〉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과 아동통합시스템의 연계 현황

| 정보 내용 | 주요 연계 항목 |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저소득 한부모, 청소년특별지원 등 대상자의 자격 정보 | 수급여부, 보장결정일자 |
| 민간 시설의 프로그램, 입소 등 대상자의 민간 서비스 수혜 이력 정보 | 제공주체명, 제공서비스명, 제공기간, 진행상태,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
| 대상자의 상담·사례관리 이력 정보 | 사례관리 사업명, 진행상태, 담당기관, 담당자 |
| 지역사회 복지자원 정보 | 자원 제공주체정보, 제공서비스 정보 |
| 서비스 의뢰 정보 | 의뢰 기관, 의뢰 서비스, 대상자 정보, 의뢰 사유, 의뢰 처리 결과 |

- 개인정보 동의 또는 확보가 어려운 청소년 대상 정보의 연계 통합을 위한 증장
기적 대안 마련 필요
- 청소년쉼터 등 단기 입소시설 청소년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인식별 정보확보의 어려움이 발생
 - 타부처 연계구축은 청소년 동의 및 주민등록 번호 정보 필수
 - 최근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경제적 지원제공 서
비스의 확대에 의해 서비스신청을 위해 개인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청
소년 사례수의 증가 추세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 향후 타부처 연계 및 지원 차원의 서비스 욕구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부처 차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확보방안의 마련이 필요
- 행안부, 대법원, 교육부 등 유관부처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시스템과 통합연계
체계 수립하여 아동청소년 본인 및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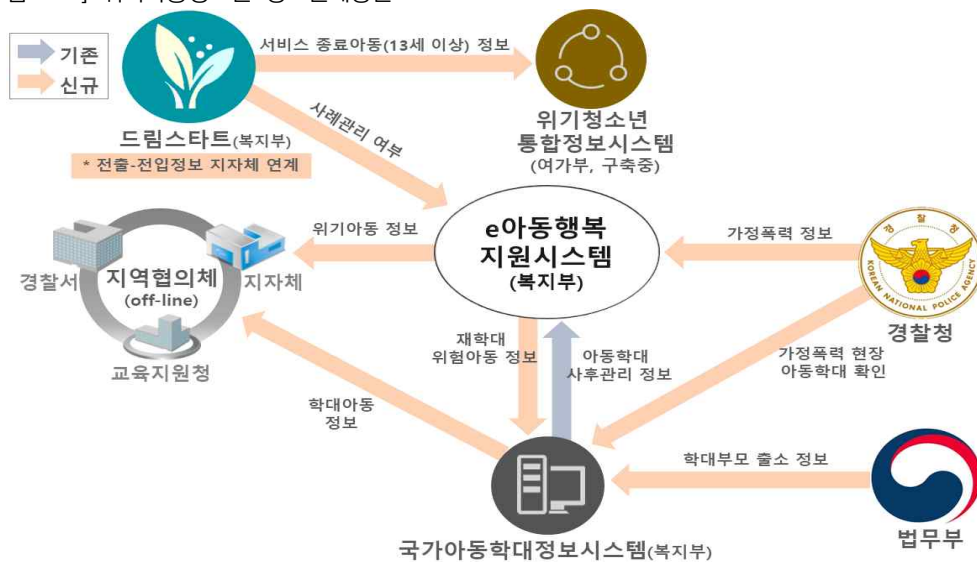
〈표 4-4〉 부처별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시스템 통합연계체계

| 번호 | 부처 | 대상 정보 | 연계 시스템 | 추진 현황 |
|----|-----------|--|------------------------------|---------------------|
| 1 | 복지부 | 사회보장급여정보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차상위, 한부모) | 차세대 사회정보시스템 | 협의 완료, 세부항목 설계 중 |
| 2 | | 청소년특별지원 | | |
| 3 | | 이력 정보 공유(민간 서비스 이력, 상담 사례 관리 이력) | 차세대 사회서비스종합 정보시스템 | |
| 4 | | 서비스/사례관리 의뢰(연계)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포함 | | |
| 5 | | 서비스 자원 공유 | | |
| 6 | 교육부 |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 |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
| 7 | 병무청 | 심리취약한 병역의무자 | 병무행정시스템 | |
| 8 | 경찰청 | ‘사랑의 교실’ 이수자, 가정박청소년, 학교박청소년 등 | 시스템 없음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에 입력 | |
| 9 | 행안부 | 대상 청소년 및 가족 주민등록정보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 |
| 10 | 법원 행정처 | 가족관계등록정보 | 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 교육부의 교육행정시스템(NEIS)과 위기아동청소년 통합DB의 연계

- 현재 교육부와 위기아동청소년 통합DB의 연계작업은 2023년 2월 오픈 예정인 교육부의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위기청소년통합정보시스템 간의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의 공유에 국한되어 있음
 - 현재 교육부의 학업중단 위기학생지원시스템은 학교와 교육청 간의 연계를 통해 학업중단학생의 맞춤형 기관지원 및 숙려제현황 파악을 위해 구축되었음.
- 학업중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대위기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아동정보의 공유 등 학교와 지역 간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방안이 2020년 제 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학대방지대책」(관계부처합동, 2020) 발표되었음

[그림 4-4] 위기아동청소년 정보연계방안



- 나이스(NEIS)는 교육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현장의 업무환경개선을 위해 교육부를 비롯, 전국 1만여 개 초·중등학교, 17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이 이용하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2023년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으로 고도화될 예정인 총 사업비 3,0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사업은 유아교육 정보시스템 전면 도입과 함께 17개 시도 교육청과 전국의 모든 개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활용 가능.
- 향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복지부 및 여가부의 위기아동청소년 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위기아동청소년의 예방 및 대응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 필요

제2절 위기 아동·청소년 중심의 통합적인 통계관리의 해외사례

□ 영국의 아동보호체계 개요

○ 영국의 아동보호 역사는 1889년 아동법(The Children Act 1889) 및 아동 헌장(children's Charter) 제정에서 출발

- 여러 차례의 아동법 수정을 거친 뒤 1945년, 데니스 오닐 사망사건으로 각 지방정부에 아동위원회(Children's Committee)와 아동 사무관(Children's Officer)이 배치되었음.
- 1974년, 또 다른 아동학대 사망사건인 마리아 코웰 사건이 발생하자 각 지방정부에 '지역아동보호위원회(ACPC: 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s)'가 설치되었음(Batty, D., 2005. 5. 18).
- 2000년, 빅토리아 클림비 아동의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2003년 '모든 아동은 중요하다(Every Child Matter)'는 노서가 발간되어 아동보호체계의 개편
 - 2004년 아동법(The Children Act 2004)에 의해 지방정부를 관리하는 아동감독관(Director of Children's Services)과 정부와 의회로부터 독립된 아동위원장(Children's Commissioner)이 임명되었고, ACPC를 대체할 각 지방정부 산하 아동보호 단일 기관인 지방아동안전보장이사회(LSCB: 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가 설치되었음(Children Act 2004, c. 31).
- 이후 『아동안전보호지침(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를 통해 영국의 아동보호체계는 더욱 강화되었음.
 - 2006년 지침은 아동보호와 관련 있는 학교, 의료인, 경찰,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의 기관, 개인, 전문가의 책임 및 역할을 설명하여 주체 간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지방정부마다 설치된 지방아동안전보장이사회에 아동복지증진에 대한 핵심 역할을 부여하여 지방정부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조(HM Government, 2006).
 - 2013년 지침까지는 이러한 기초를 유지하되 책임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기존 체계 내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였음(Virtual College, 2013.11.10.).

- 2017년 아동 및 사회복지법(Children and Social Work Act 2017) 제정, 2018년 지침의 변경 이루어짐.
 - 가장 큰 변화는 지방아동안전보장이사회(LSCB)의 역할과 책임을 지방정부, 경찰서장, 임상 위임 그룹(Clinical Commissioning Groups)으로 구성된 보호 연합체제(Safeguarding Partners)로 이양.
 - 각 파트너는 동일한 의무를 공유하며, 중앙정부의 법적 제도에 실질적인 보호 서비스 방안과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운영.
 - 다만, 해당 지침에서는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People in positions of trust)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 아동보호에 관여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HM Government, 2018), 단일화 되고 중앙화된 조직에서 나아가 다체계적이고 융통성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

○ 영국의 아동보호체계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담당.

- 영국 교육부는 영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의 잉글랜드(England) 지역 아동의 복지 및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 교육 및 아동에 대한 공식 통계를 생산 및 발표.
- 통계의 세부 분류체계 내에 아동 사회복지(Children's social care), 학교와 학생(Pupils and schools), 교사 및 학교 직원(Teachers and school workforce), 학생의 고용/견습(Further education),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Finance and Funding),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등이 포함됨(GOV.UK homepage, n.d.).
- 이 중 아동 사회복지 분류에서 제공하는 Children in need(도움이 필요한 아동, 보호대상아동: CIN), Children looked after(보호아동: CLA) 통계를 기초로 영국의 위기 아동 및 청소년의 규모를 추산
- 2021년 기준, 영국의 보호대상아동은 388,490명(GOV.UK homepage, 2021.10.28.a), 보호아동은 80,850명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보호대

상아동 발생 수는 5,053명, 그 중 보호 조치된 아동은 4,120명으로 큰 차이를 보임.

- 영국과 우리나라의 아동인구는 각각 약 1천 2백만 명, 약 7백 5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아동 인구가 5백만 명가량 적지만, 아동인구 10,000명당 비율로 계산해보더라도 각각 321.2명, 6.8명으로 커다란 차이를 보임.

□ 본 절에서는 영국의 ‘보호대상아동(CIN)’, ‘보호아동(CLA)’ 데이터를 중심으로 영국 교육부가 다루는 아동 복지 통계의 개요, 작성 방법, 관련 시스템, 공표 서비스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함.

1. ‘보호대상아동(CIN)’과 ‘보호아동(CLA)’ 통계 개요³⁾

□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

- ‘보호대상아동(CIN)’과 ‘보호아동(CLA)’ 등 영국 교육부(DfE)가 작성하는 아동복지 통계는 1989년 아동법 제 83조(section 83 of the Children Act 1983) 연구 및 정보 보고서(Research and returns of information)를 근거로 수집된다.
- 수집된 데이터와 관련해서, 생활과 가족생활, 가정 및 통신을 존중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1998년 인권법 8조(Article 8 of Human Rights Act 1998) 등에 따라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관련 기관/조직/근로자는 모든 정보를 기밀로 취급해야 함. 하지만, 정보공유에 대한 두려움이 복지 증진 및 아동 안전 보호에 방해가 되어선 안 되기 때문에 효과적 보호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2018년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과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아동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공유 금지하지 않음. 즉, 관련 기관/조직에서는 정보 공유 방법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 업무 수행(performance of

3) GOV.UK homepage. (2021.10.28.a), GOV.UK homepage. (2022.04.05.), HM Government. (2018. 7.)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a task in the public interest)’이나 ‘공권력 행사(exercise of official authority)’ 등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복지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별도의 정보 공유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음.

- 이외에도 1983년, 2004년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3 and 2004), 2017년 아동 및 사회복지법(Children and Social Work Act 2017) 등으로 인해 아동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지역당국과 관련 파트너들의 의무가 부여되고 체계 구성됨.

〈표 4-5〉 영국의 아동복지통계 관련 법

| 법령(조항) | 주요 내용 및 역할 |
|---|--|
| 1989년 아동법 제 83조 (Section 83 of the Children Act 1983) | - 국무장관, 지역당국 등은 아동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취합할 수 있음. (e.g. safeguarding partners (within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16E(3) of the Children Act 2004) in relation to local authority areas in England) |
| 2018년 정보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2018)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 - 개인정보 공유 가능하게 함 (아동의 복지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음) |
| 1998년 인권법 (Human Rights Act 1998) | |
| 1983년, 2004년 아동법 제 17조 (Section 17 of the Children Act 1983 and 2004) | - 지역당국에게 ‘보호대상아동의 발견 지역과 관계 없이 보호대상아동에게 서비스 제공할 의무’ 부과 |
| 1983년, 2004년 아동법 제 47조 (Section 47 of the The Children Act 1983 and 2004) | - 지역당국에게 ‘학대 의심되는 경우 조사 착수 의무’ 부과 |
| 2004년 아동법 제 11조 (Section 11 of the Children Act 2004) | - 지역당국으로 하여금 개별적 의무를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해 위의 역할 수행하도록 함 |
| 2004년 아동법 제 10조 (Section 10 of the Children Act 2004) | - 지역당국은 아동보호 관련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 2017년 아동 및 사회복지법 (Children and Social Work Act 2017) | - 개별 의무를 가진 파트너 중 경찰, 임상 위임 그룹에도 지역당국과 동일한 의무(협력 계획 등) 부여함 |

출처: HM Government. (2018. 7.).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 통계 작성 목적 및 활용

- 지역당국을 위한 CIN 데이터 수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IN의 목적은 아동 사회돌봄 서비스(children’s social care services) 및 아동 보호 계획(CPPs: child protection plans)하에 있는 개별 아동의 경로뿐만 아니라 아동의 특성 및 욕구에(needs)에 따라 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적 및 분석하는 것임. 또한, 지역당국은 서비스 계획 및 의뢰 시 참고할 수 있고, 중앙정부가 정책 개

발 및 관리할 시에도 활용 가능

- 특히, CIN는 교육부의 행정 데이터셋인 국가 학생 데이터베이스(NPD: National Pupil Database)의 일부로, 공립 학교에 다니는 CIN 아동은 학생 매칭 ID(PMR: Pupil Matching Reference ID)로 학교 인구 조사(the School Census) 및 CLA 등 아동에 대한 다른 데이터셋과 연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른 정책 및 서비스의 효율성 평가 가능
 - PMR과 관련하여, PMR은 공립학교에 입학한 아동에게만 제공되므로 CIN 중 PMR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도 상당수임. 이러한 아동의 고유 식별은 CIN 모두에게 부여되는 지역당국 아동 ID를 통해 횡단면으로 가능한데, 아동이 지역 당국에 걸쳐 이사하거나 입양되는 경우 새로운 지역당국 아동 ID가 부여되므로 종단적으로 연결할 수 없음(Emmott, EH. et al., 2019).

2. ‘보호대상아동(CIN)’과 ‘보호아동(CLA)’ 통계의 작성

□ 정의⁴⁾

- 보호대상아동(CIN)의 법적 정의: 1989년 아동법 제17조에 근거, 아동의 건강 또는 발달이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돌봄서비스의 제공이 없는 경우 아동의 건강 또는 발달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아동인 경우 (Section 17(10), Children Act 1989)
 - (실질적 정의) 위의 법적 정의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도움 필요(in need)’ 상태에 대한 기준은 신중함을 요구하며 전문적인 해석과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회돌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음(Emmott, et al., 2019).
 - (세부 분류) 실제 데이터상에는 (1) 보호대상아동계획(Children in need plans) 또는 아동보호계획(Child protection plans)의 대상인/대상이었던 아동, (2) 보호아동(CLA), (3) 영케어러, (4)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5) 아

4) GOV.UK homepage. (2022.05.12.a)과 Emmott, et al (2019)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동 서비스에서 필요 사정을 위해 의뢰를 수락했지만 계속해서 '도움 필요하지 않음(not in need)'으로 평가되는 아동, (6) 출생 전 의뢰된 태아(unborn child) 및 (7) 18세 이상이지만 계속해서 아동 서비스로부터 보살핌, 숙박 시설 및/또는 지원을 받는 청소년을 포함

○ 보호아동(CLA)의 법적 정의: 1989년 아동법 제 20조, 21조에 근거, 24시간 이상의 연속된 기간 동안 숙소를 제공받았거나, 제4장 돌봄 및 관리(Care and Supervision)의 대상이거나, 배치 명령(Placement Order)의 대상인 경우

- 다만, 통계 목적의 CLA 정의는 법적 정의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몇 가지 예외가 있으며, 이러한 예외에 대해서는 지침을 제공함(Department for Education, 2021.03.)
- (세부 분류) CLA 데이터의 근간으로 사용되는 SSDA903에는 (1) 연중 언제든지 지역당국에서 돌보는 모든 아동, (2) 돌봄을 더이상 받지 않는 아동(최소 13주 이상 돌봄을 받았으나 현재 돌봄이 종료된 17세부터 21세까지의 나이에 속하는 아동으로, 14세 이후에 돌봄 받기 시작하여 16세에 도달하여 돌봄 종료한 경우) 포함

□ CIN과 CLA의 관계 및 세부 범위

○ 이러한 정의에 따라 [그림 4-1]과 같이 CLA는 CIN에 포함되는 형태로 측정됨. 즉, CIN Census는 건강 및 발달상 위기로 인해 지역 당국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의뢰(refer)된 아동 및 청소년 데이터를 수집하고(Emmott, et al., 2019) 보호대상 및 아동 보호 계획 대상 아동 데이터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CIN을 포괄하므로 CLA 데이터와 중복됨.

- 다시 말해, CIN은 영국 각 지역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사례 기록'에서 추출된 '사회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최종적 평가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 사정'을 위해 아동의 사회 돌봄에 의뢰되고 그 사정을 위한 의뢰가 승인된 모든 아동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CIN이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장자리에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포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함(Emmott, et al., 2019).

○ 더불어, 이론적으로는 의뢰(Referral)되어 CIN 센서스로 기록되는 아동이 법적 정의상 CIN과 일치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림 4-1]에서 ‘Child in Need under Children Act 1989’와 ‘Referrals to LA Children’s Services’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음.

- 이는 통계 목적상 CIN 센서스에 포함되는 아동 기준에 예외가 있기 때문임. 예컨대, 의뢰 후 지역당국으로부터 조기개입(Early Help)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CIN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지역당국의 장애아동명부에 등록된 장애아동은 아동법 CIN의 법적 정의 중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CIN센서스에 포함될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CIN의 목적은 사회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므로 지역당국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수혜를 받거나 필요하다고 평가된 장애아동의 경우에만 CIN에 포함됨.
- 입양의 경우에도, 보육원에서 입양된 아동은 무조건 CIN 센서스에 포함되지만 양부모(step-parent)나 친척에게 입양된 아이들은 입양 사실만으로 무조건 센서스에 포함되는 것이 아님.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이거나 입양 당시 파산위험이나 행동지원 등의 입양 후 서비스를 받는 입양 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CIN 센서스에 포함됨(Department for Education, 2020.10a).

[그림 4-5] 영국 전국 학생 데이터셋(CIN, CLA, 학교 센서스)과 CIN 인구(법적 정의 기반) 간 중첩구조



자료: Emmott, EH., Jay, MA., Woodman, J. (2019)

- <표 4-6>를 살펴보면 의뢰부터 평가사정, 보호대상아동(도움이 필요한 아동, CIN), 전략토의, 아동법 47조에 따른 평가 수행, 아동보호계획 대상, 감독명령, 돌봄명령, 보호아동(CLA)까지 이어지는 아동 돌봄 서비스의 일련의 절차와 단계별 아동에 대한 대략적인 비율 구성을 이해할 수 있음.

〈표 4-6〉 2009년 4월 1일에서 2010년 3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 중 5세 생일 이전에 아동서비스의 다양한 단계에 도달한 아동의 수와 비율

| | Percentage of all children born in 2009–10 [†] | Number of children | Number of LAs providing data [#] |
|---|---|--------------------|---|
| 1. Children referred | 22.5 | 115,735 | 111 |
| 2. Children assessed by children's services | 17.0 | 83,713 | 106 |
| 3. Children in need | 14.3 | 72,181 | 108 |
| <i>Primary need code on the first episode as a child in need</i> | | | |
| N1 Abuse or neglect | 7.8 | 38,365 | 102 |
| N2 Child's disability | 0.6 | 2,737 | 101 |
| N3 Parental disability or illness | 0.5 | 2,404 | 99 |
| N4 Family in acute stress | 1.8 | 8,775 | 102 |
| N5 Family dysfunction | 3.3 | 16,084 | 102 |
| N6 Socially unacceptable behaviour | 0.2 | 1,001 | 100 |
| N7 Low income | 0.1 | 80* | 24 |
| N8 Absent parenting | 0.1 | 52* | 21 |
| 4. Children subject of a strategy discussion | 6.2 | 29,895 | 104 |
| 5. Children subject of a section 47 enquiry | 5.4 | 27,794 | 111 |
| 6. Children subject of a child protection conference | 3.7 | 19,014 | 110 |
| 7. Children subject of a child protection plan | 3.5 | 17,823 | 111 |
| <i>Category of abuse as recorded when the first child protection plan commenced</i> | | | |
| a) Neglect | 1.6 | 7,721 | 105 |
| b) Physical abuse | 0.5 | 2,662 | 103 |
| c) Sexual abuse | 0.1 | 633 | 103 |
| d) Emotional abuse | 1.0 | 4,701 | 104 |
| e) Multiple/not recommended | 0.3 | 1,272 | 104 |
| 8. Children subject of a supervision order | 0.3 | 1,010 | 78 |
| 9. Children subject of a care order | 1.1 | 5,312 | 107 |
| 10. Children ever having been looked after [in care] | 1.7 | 8,929 | 111 |

[†]This is the percentage of children in the local authorities that provided data.
[#]This is the number of local authorities that provided data for this question.
 *There are many returns in this category with fewer than five children and the total is estimated.

출처: Bilson, A., & Martin, K. E. C. (2016). Referrals and Child Protection in England: One in Five Children Referred to Children's Services and One in Nineteen Investigated before the Age of Fiv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bcw054. doi:10.1093/bjsw/bcw054

○ CIN, CLA 데이터 세부계산법 및 관련 이슈

- 이론적으로 $CIN = CINO(\text{아동보호계획에 있는 아동(CPPO) 및 보호받는 중인 아동(CLA)을 제외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CPPO(\text{보호받는 중인 아동(CLA)을 제외한 아동보호계획에 있는 아동}) + CLA(\text{보호아동})$ 이지만, CIN과 CLA 데이터를 별도로 수집하여 발생하는 불일치 때문에 실제로는 모든 CLA가 CIN과 일치하지는 않음(GOV.UK homepage,

2022.05.12.b).

- 금번 센서스 기간의 3월 31일 CIN의 수 = (전년도 3월 31일의 CIN의 수 + 금번 센서스 기간 중 사례가 시작된 CIN의 수 - 금번 센서스 기간 중 사례가 종료된 CIN의 수)으로 계산되어야 하지만, 같지 않게 계산됨⁵⁾. 그 이유는 인구 조사는 매년 수행되는 스냅샷 데이터이므로 지역당국에서 전년도 데이터 수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지역당국이 이전 보고서에 누락된 아동을 최근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등 매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임.

가. 보호대상아동(CIN) 통계의 작성⁶⁾

□ 데이터 범위

- 데이터에는 사회돌봄서비스에 의뢰된 아동, 의뢰되었지만 추가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아동, 센서스 기간 동안 시작(open)된 사례(Cases), 서비스를 기다리는 아동, 법정 명령(statutory orders)의 대상이 되는 아동, 사회돌봄서비스 수급이 필요하다고 평가사정(assess)된 사적으로 양육되는 아동(privately fostered children), 사회돌봄서비스 수급이 필요하다고 평가사정(assess)된 장애아동, 보육시설에서 입양되는 아동, 이전에 돌봄 받은 아동(CLA) 중 후속 지원을 받는 아동 등이 포함됨.
- 최종 데이터셋에서는 매년 3월 31일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CIN on 31 March), 한 해 중 어느 때라도 도움이 필요한 아동(CIN at any point during the year),⁷⁾ 수행된 평가사정(assessment), 평가사정 시 일차적 욕구 및 사정을 통해 확인된 요소, 제 47조(학대 의심 시 지역당국의 조사착수 의무)에 따른 조사 및 초기 아동보호 회의, 아동보호계획의 대상이었던 아동 등의 수치 혹은 정보를 제공함.

5) 2021년 데이터로 예를 들자면, $388,490 \neq (389,260 + 355,260 - 321,170) = 423,350$

6) Department for Education. (2020.10.a). 참고하여 작성함.

7) 요보호 사유 시작 아동(Children starting an episode of need in the year)과 종료 아동(Children ending an episode of need in the year)을 포함하는 것으로, 연도 중 적어도 한 번 이상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의미

□ 자료 생성 배경

- CIN 센서스는 2000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2001년, 2003년, 2005년 수행되었다가 잠시 중단 후 2008년 다시 도입됨(Jay, M.A. et al., 2017). 현재의 CIN 센서스 형태는 2008년 10월에 도입되어 2009-2010년 시점 기간부터 측정되기 시작했고, 주간 또는 6개월간으로 제공하던 이전 센서스와는 다르게 연간 단위의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음(James Mahon, 2008).
- 잉글랜드 지역 아동사회돌봄서비스는 152개 지역당국 아동서비스(children's services)에서 제공함. 이러한 지역당국은 해당 지역의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할 법적 의무를 지는데, 1) 의뢰 아동을 사정하고, 2) 보호대상아동(CIN) 여부를 확인하고, 3) 보호대상아동(CIN)의 18세 생일까지(돌봄이 종료된 아동은 25세 생일까지) 적절한 사회적 돌봄 지원 제공함.
- 사례관리 과정의 일부로, 잉글랜드 모든 지역당국은 아동서비스에 의뢰된 모든 아동의 정보를 기록하고, '도움 필요(in need)'로 평가된 아동을 지속 추적해 지원함. 해당 사례 기록을 국가 차원의 비교를 위해 데이터를 매년 교육부에 제출하는데 이것이 CIN 센서스가 됨.
- 즉, CIN 센서스는 평가사정을 위해 지역당국 아동서비스에 의뢰된 모든 아동에 대한 종단(longitudinal) 사례 정보로 구성되며, 의뢰 후 사례가 'open' 상태로 유지되는 한 주요 서비스 결정 및 사건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해 기록됨.
 - 'open' 상태란 센서스 대상 기간(전년도 4/1~ 당년도 3/31) 동안 지역당국 아동서비스가 아동에게 지원을 제공했거나, 당년도 3월 31일 현재 향후 지원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례를 뜻함. 이에 따라, CIN에는 센서스 대상 기간 중 지원을 받지 않았던 사례도 포함됨.
 - 사례가 종료되지 않는 한 유지되는 종단자료이므로 시간에 따라 추적 가능
- 다만, 센서스에 지역당국 아동서비스에 사정을 위해 의뢰된 아동을 기록하려면 먼저 지역당국이 이를 승인해야 함. 승인 기준은 지역당국 별 서비스 구조의 차이와 '도움 필요(in need)' 기준의 차이로 인해 지역당국마다 다를 수 있음.

□ 작성 및 공표 주기

- 작성 주기: 연 1회 수집, 작성, 공표
- 센서스 대상 기간: 작년도 4월 1일~ 당해연도 3월 31일
- 데이터 제출 기간(지역당국 -> 교육부): 당해연도 4월 1일~ 7월 31일
- 공표 시기(교육부): 당해연도 하반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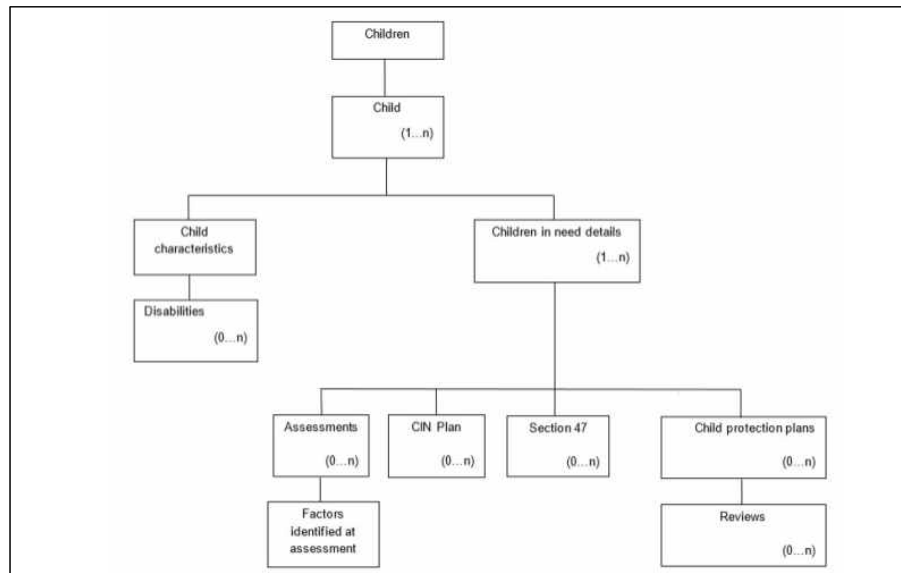
□ 자료 수집 과정

- 매년 센서스 연도(전해 4/1부터 당해 3/31까지) 시작 전, 교육부는 지침의 형식으로 데이터 사양의 초안을 작성해 지역당국에 제공하며, 지역당국은 이에 근거하여 일 년 동안 해당 특정 정보들을 수집함.
 - 교육부 아동서비스 통계팀(Children's Services Statistics Team) 소속 직원 약 10명이 CIN 센서스 수집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152개의 잉글랜드 지역당국 별로 최대 3명의 COLLECT 사용자가 허용됨.
- 지역당국 아동서비스는 센서스 연도가 끝나면 '사례 기록'으로부터 센서스 연도 중 어느 시점에서든 시작(open)된 모든 사례에 대해 교육부가 요청한 정보를 추출함.
- 교육부는 지역당국에게 데이터 수집 및 추출 방법, 데이터 검증 여부 및 방법을 구체화하지 않음. 즉, 수집 방법과 내부 검증 프로세스가 지역당국마다 다를 수 있음. 또한, 지역당국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당국에서 사용하는 개별 사례 관리 시스템(case management system/ 예: Liquidlogic⁸⁾)을 사용해 CIN 데이터를 수집함. 배정된 사례 관리자(예: 사회 복지사)는 각 사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입력함.
 - 아동 서비스를 위한 여러 사례 관리 시스템이 시장에 존재하므로 지역당국이 선택해 사용

8) <https://www.liquidlogic.co.uk/children/liquidlogic-childrens-social-care-system-lcs/>

- 지역당국이 수집해 정리한 CIN 센서스의 각 모듈별 사례의 수(n)는 다음의 [그림 4-2]와 같은 데이터 논리구조로 정리됨.

[그림 4-6] 영국 CIN 2021-2022 센서스의 데이터 구조



자료: Department for Education. (2020.10.a). p.16.

- 데이터 모듈은 아동 식별자(Children Identifiers), 아동 특성(Children Characteristics), CIN 세부사항(Children in need details), 아동보호계획(Child protection plans)으로 구성되며, 구성 데이터는 다음의 <표 4-3>과 같음.

<표 4-7> 영국 CIN 센서스의 데이터 구분 및 구성 데이터

| 구분 | 구성 데이터 |
|--|--|
| 아동 식별자 (Children Identifier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LA child ID' - 1.2. Unique pupil number (UPN) - 1.3. Pupils former unique pupil number - 1.4. UPN unknown reason (optional) - 1.5. Date of birth - 1.6. Expected date of birth - 1.7. Gender - 1.8. Date of death |
| 아동 특성 (Children Characteristic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Child ethnicity - 2.2. Type of disability |
| CIN 세부사항 (Children in need detail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 Referral date - 3.2. Referral no further action - 3.3. Source of referra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 Primary need code - 3.5. 'CIN' closure date - 3.6. Reason for closure - 3.7. Date of initial child protection conference (transfer in cases) - 3.8. Assessment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1. Assessment actual start date - 3.8.2. Assessment internal review point date (optional) - 3.8.3. Assessment authorisation date - 3.9. Factors at assessment (factors at end of assessment process) - 3.10. CIN Plan dates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0.1. CIN Plan start date - 3.10.2. CIN Plan end date - 3.11. Section 47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1.1. Section 47 enquiry actual start date - 3.11.2. Target date for initial child protection conference (optional) - 3.11.3. Date of initial child protection conference - 3.11.4. Initial child protection conference not required |
| 아동보호계획 (Child protection plan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 Child protection plan start date - 4.2. Initial category of abuse - 4.3. Latest category of abuse - 4.4. Number of previous child protection plans - 4.5. Plan review date - 4.6. Child protection plan end date |

자료: Department for Education. (2020.10.a). pp.17-18.

□ 교육부의 온라인 데이터 수집 포털 COLLECT 활용⁹⁾

○ COLLECT 포털은 '학습, 교육, 아동, 교사를 위한 온라인 수집(collections online for learning, education, children and teachers)'의 약자로, 학교, 지역당국, 교육부의 데이터 수집 처리를 위해 활용됨.

- 포털 주요 이점으로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및 진행 상황 보고 기능, 질의사항 발생 시 교육부와 동일한 정보 볼 수 있는 기능, 설치가 필요 없는 웹사이트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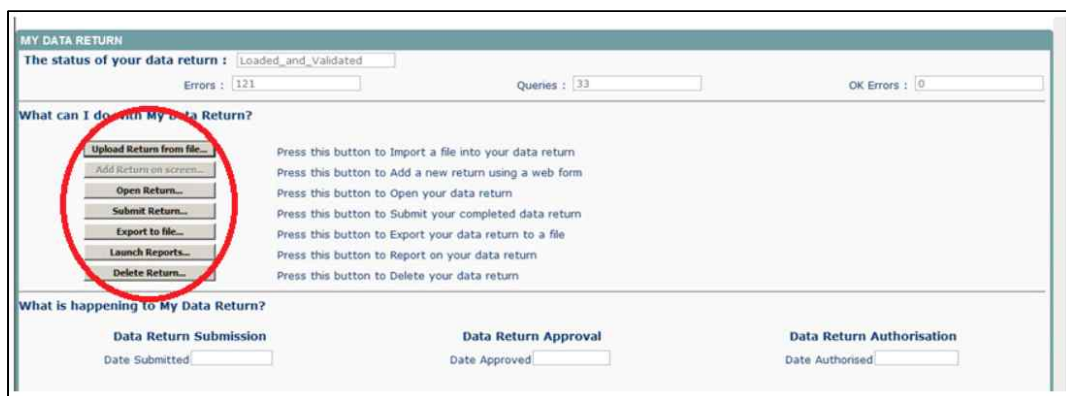
○ CIN 입력을 위한 COLLECT 포털은 2018년 12월 도입된 교육부 사이트¹⁰⁾ 로그인(DSI: DfE Sign-in)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음. DfE 로그인 및 COLLECT 포털에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센서스 수집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지역당국 연락처로 전달됨.

9) Department for Education. (2020.10.a)와 GOV.UK homepage. (2021.10.28.c)를 참고하여 작성함.

10) Department for Education Sign-in 주소는 다음과 같음.
https://interactions.signin.education.gov.uk//4cd3e083-fd8e-474d-bbe0-3447d8a50ba8/usernamepassword?clientid=help&redirect_uri=https://help.signin.education.gov.uk:443/auth/cb

- 데이터 입력을 위해 포털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COLLECT에 액세스하기 위해 먼저 DfE 로그인 계정을 만들어야 함.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면 COLLECT에 대한 액세스는 자신의 지역당국에 의해 직접 승인됨(각 지역당국에는 COLLECT에 대한 액세스를 승인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한 명 이상 있음). 액세스가 승인되면 사용자는 COLLECT를 통해 교육부에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음.
- 지역당국별 각 사례 관리 시스템에서 추출된 데이터는 [그림 4-3]과 같은 지역당국 COLLECT 포털상 'Source Page'의 'Upload Return from file' 버튼을 이용해 XML 파일 형태로 COLLECT에 업로드해 제출함.
- COLLECT 포털은 실시간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및 진행률 보고 기능을 제공하며, 수집에 참여한 사람들이 데이터 제출에 대한 일관된 최신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함.

[그림 4-7] 영국 COLLECT 포털 상 'Source Page'



자료: Department for Education. COLLECT Guide 2019 : COLLECT guide for local authorities. p. 8.

- 업로드 시 자동 유효성 검사가 데이터에 적용되어 누락된 데이터, 잘못된 데이터 등 기타 이상 내역을 식별함.
 - 예컨대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의뢰 날짜는 누락될 수 없으며, 추천 날짜를 기준으로 아동 또는 청소년이 25세 이상인 경우 쿼리가 자동으로 제거됨.
 - 데이터가 올바른 경우 설명을 포함한 쿼리에 주석을 달 수 있으며, 그 외의 오류는 제출 전에 지역당국 담당자가 수정 및/또는 검토해야 함.

- 이후 데이터의 모든 오류를 검증한 뒤에는 [그림 4-3]의 'Submit Return' 버튼을 이용해 데이터를 제출함. 승인된 데이터는 지역당국이 수정할 수 없음. 그러나 제출 후 자체 보유 '사례 기록'을 업데이트하며, 사례가 계속 진행 중인 경우 다음 센서스 연도에 제출할 수 있음.
- 교육부는 집계 정보를 확인하며, 문제가 있어 보이는 데이터에 관해 지역당국에 연락해 논의하며, 문제 확인 시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나. 보호아동(CLA) 통계의 작성

□ 자료 생성 배경

- 잉글랜드 지역에서 가정외돌봄(out-of-home care)을 받는 모든 아동에 대한 데이터¹¹⁾인 CLA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SSDA903 컬렉션은 1992년에 도입되었음. 1992년부터 1997년까지는 보호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했으나 1998년부터 2003년까지는 보호아동 중 3분의 1을 대상으로 했으며, 2004년에 다시 보호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음.
- 잉글랜드 지역의 보호아동 통계는 SSDA903 컬렉션에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교육부 총괄 하에 152개 지역당국 아동서비스(children's services)에 의해 수집됨.
- 데이터는 잉글랜드 지역의 가정외돌봄(out-of-home care)서비스 사용의 최근 동향 및 다른 행정데이터셋과의 연계를 통한 돌봄받은 아이들의 결과 모니터링, 정책 평가, 국가 간 비교 등에 활용됨(Mc Grath-Lone L et al., 2016)

□ 데이터의 특성 및 범위¹²⁾

- (데이터 범위) SSDA903 데이터에는 매년 3월 31일에 돌봄 받고있는 아동, 언

11) 가까운 친척이 아닌 성인에게 양육되는 아동인 사적으로 양육되는 아동(privately fostered children), 은 포함하지 않음(Mc Grath-Lone L et al., 2016)

12) GOV.UK homepage. (2021.11.18.)와 GOV.UK Homepage(2022.03.29.)를 참고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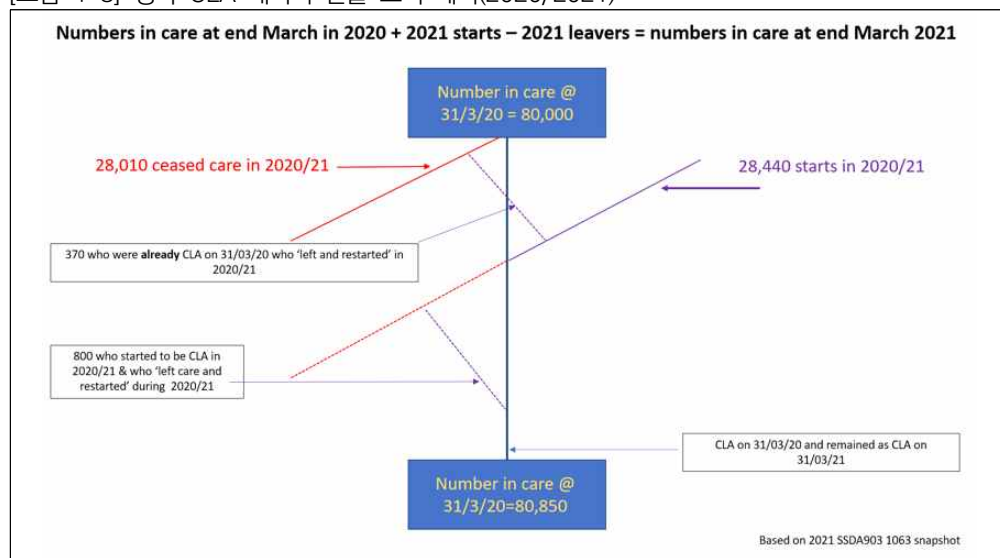
제나 돌봄 받는 아동, 돌봄 받기 시작한 아동, 돌봄이 종료된 아동, 입양되어 돌봄받는 아동, 17세부터 21세까지의 나이로 돌봄을 더이상 받지 않는 아동, 실종되거나 배치에서 이탈된 아동 등의 정보가 포함됨.

- (데이터의 특성 - 종단) SSDA903 데이터는 종단 데이터베이스로 각 지역당국에서 보고하는 연간 데이터는 각 아동에 대한 고유식별자에 의해 이전 연도(1992년 이후)에 동일 지역 당국에서 제공한 데이터와 연결 가능함.
 - 따라서, 지역당국은 변경사항이 있는 전 연도의 기록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매년 데이터베이스의 시계열 수치를 업데이트함.
 - 해당 데이터 컬렉션은 1992년부터 수집되었으나 2004년부터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를 수집했으므로 지역당국이 수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2004년 데이터부터임.¹³⁾
- (데이터의 특성 - 에피소드 중심) 각 돌봄 에피소드(every episode of care)를 하나의 기록(one record)으로 수집함.
 - (에피소드의 정의) 각 에피소드는 동일한 법적 지위(Legal status)로 동일한 배치(placement)에서, 동일한 배치 제공자(placement provider)와 함께 돌봄받는 기간을 나타냄.
 -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로는 1) 돌봄 명령(a care order), 2) 자발적 동의(voluntary agreement, 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역당국이 돌봄 제공), 3) 배치명령(placement order), 4) 아동 보호 이유로 구금, 5) 소년사법에 따라 구금 이 있음.
 - (에피소드 포함 정보) 에피소드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보(성별, 생년월일, 고유학생번호(unique pupil number))와 돌봄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에피소드에 대한 세부정보를 수집함.
 - (새로운 에피소드의 생성) 아동이 돌봄을 시작하거나, 법적 지위나 배치에 변화가 생기거나(새 에피소드를 생성하며 변경 날짜와 이유 기록), 법적 지위와 배치는 유지되지만 배치 제공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 에피소드를 시작해야 함.

13) 세부적인 데이터 수정 방법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자료 수집 과정'을 참고할 것

- (에피소드의 지속) 하나의 에피소드가 시작(open) 상태로 매년 지속되는 경우, 해당 기록은 매년 제출되어야 함.
- 종단 데이터베이스로서 이전 연도의 기록을 수정할 수 있고 에피소드 중심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법적지위에 대한 수정 또는 에피소드의 날짜 변경으로 인해 과거 연도의 3/31 기준 CLA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
 - 예컨대, ‘2020년 수집 기간 중 종료된 에피소드’로 기록되었던 한 아동의 에피소드가 2021년 수집 기간 중에 ‘2021년 기간 중 종료된 에피소드’로 기록(종단 날짜 변경) 수정된 경우, ‘2020/3/31 기준 CLA’ 수가 1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것임.
- 또한, ‘이전 연도 3/31에 이미 CLA였으나 돌봄서비스를 떠났다가 당해연도 수집 기간 중 다시 시작한 경우(‘당해연도 시작 CLA’ 데이터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해야 함)’, ‘당해연도 수집 기간 중 시작했으나 종료했다가 다시 시작한 경우(‘당해연도 시작 CLA’ 데이터에서 빠져있으므로 다시 더해야 함)’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당해연도 3/31 기준 CLA의 수’가 ‘전년도 3/31 기준 CLA + 당해연도 시작 CLA - 당해연도 종료 CLA’와 항상 같지는 않음(그림 4-4 참조).

[그림 4-8] 영국 CLA 데이터 산출 로직 예시(2020/2021)



주: 80,850명은 21/3/31 기준 CLA 수입.
 자료: GOV.UK Homepage. (2022.03.29.)

□ 작성 및 공표 주기

- 작성 주기: 연 1회 수집, 작성, 공표
- 데이터 수집 대상 기간: 작년도 4월 1일~ 당해연도 3월 31일
- 컬렉션 웹사이트 오픈일: 당해연도 4월 1일
- 데이터 업로드(입력) 기한: 당해연도 5월 31일
- 데이터 최종 제출(오류 점검 완료) 기한: 당해연도 6월 30일

□ 자료 수집 과정¹⁴⁾

- 매년 데이터 수집 대상 기간(전해 4/1부터 당해 3/31까지) 시작 전, 교육부는 지침을 작성해 지역당국에 제공하며, 지역당국은 이에 근거해 정보를 수집함.
 - 교육부 보호아동 통계팀(Looked-after children statistics team)이 CLA 자료 수집을 총괄함.
- SSDA903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는 머리말 정보(Header Information), 에피소드 정보(Episode Information), 리뷰 정보(Review Information), 보호자 없이 자립하고자 하는 아동(Unaccompanied Asylum-Seeking Children (UASC)) 등 총 10개 모듈로 구성되며, 구성 데이터는 다음의 <표 4-4>와 같음(Department for Education, 2021.03).
 - 데이터셋에는 생년월일, 성별 및 민족성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정보와 돌봄 이력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가 포함되지만, 아동의 성명은 포함되지 않음.
 - 대신, 아동고유ID(지역 기관별)와 국가 학생 데이터베이스(NPD: National Pupil Database)에 연결할 수 있는 가명화된 고유학생번호(UPN: Unique pupil number)를 수집함으로써, NPD에 연계를 가능하게 함. 단, UPN은 취학 연령의 아동 및 일부 기타 특정 그룹(예: 교육 욕구에 대한 진술이 있는 경우의 취학 연령 미만의 아동)에 대해 수집됨(Allnatt, G. et al., 2022).

14) GOV.UK homepage. (2021.10.07.)와 GOV.UK homepage. (2022.03.29.), Department for Education. (2021.03.).를 참고하여 작성함.

〈표 4-8〉 영국 SSDA903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항목

| 구분 | 구성 데이터 |
|--|---|
| 머릿말 정보 (Header Inform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Child identifier - 1.2 Gender - 1.3 Date of birth - 1.4 Ethnic origin code - 1.5 Unique pupil number (UPN) - 1.6 Motherhood status - 1.7 Date of birth of mother's child |
| 에피소드 정보 (Episode Inform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Date episode commenced - 2.2 Reason for new episode of care - 2.3 Legal status - 2.4 Category of need code - 2.5 Home postcode - 2.6 Placement postcode - 2.7 Placement unique reference number (URN) - 2.8 Placement type - 2.9 Placement provider - 2.10 Date episode ceased - 2.11 Reason episode ceased - 2.12 Reason for placement change |
| 리뷰 정보 (Review Inform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 Date of each statutory review - 3.2 Method of participation in each review |
| 보호자 없이 자립하고자 하는 아동 (Unaccompanied Asylum-Seeking Children (UA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 UASC status - 4.2 Date UASC status ceased |
| 입양 (Adoptions (AD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 Purpose of items collected relating to children adopted from care - 5.2 Children for whom these data items should be completed - 5.3 Validation - 5.4 Stages of an adoption - 5.5 How should a S84 order for a child adopted outside England be recorded? And what if they subsequently return to be looked-after in England? - 5.6 Special guardianship orders - 5.7 Dates - 5.8 Date of decision child should be placed for adoption - 5.9 Date of matching child and prospective adopters - 5.10 Whether child adopted by former foster carers - 5.11 Number of adopters - 5.12 Gender of adopters - 5.13 Legal status of adopters |
| 입양 결정 관련 정보 (Children who should/should no longer be placed for adop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 Date of decision that the child should be placed for adoption - 6.2 Date of decision that the child should no longer be placed for adoption - 6.3 Reason why the child should no longer be placed for adoption |
| 이전의 영구적 조치 중/후 돌봄으로 복귀 (Return to care afte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 Previous permanence option - 7.2 Local authority code where previous permanence option was arranged |

| | |
|--|---|
| or during previous permanent arrangement) | - 7.3 Date of order |
| 돌봄으로부터 이탈한 아동 (Children missing from care) | - 8.1 Missing - 8.2 Missing episode start date - 8.3 Missing episode end date |
| 3/31 기준 12개월동안 지속적으로 돌봄 받은 아동 관련 정보 (OC2 (To be collected for children continuously looked-after for 12 months on 31 March)) | - 9.1 Merging the OC2 return into the SSDA903 - 9.2 Children covered by this return - 9.3 Child convicted during the year - 9.4 Health surveillance checks up to date - 9.5 Immunisations up to date - 9.6 Teeth checked by a dentist - 9.7 Annual health assessment up to date - 9.8 Child identified as having a substance misuse problem - 9.9 Child received intervention for substance misuse problem - 9.10 Child offered intervention for substance misuse problem - 9.11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SDQ) score - 9.12 Reason for not submitting SDQ score |
| 돌봄을 떠난 사람에 대한 정보 (OC3 (Care leaver's information)) | - 10.1 Purpose of data items for children who have recently left care - 10.2 Young people for whom this information is required - 10.3 Local authority in touch - 10.4 Contact through a third party - 10.5 Main activity - 10.6 Accommodation - 10.7 Suitability |

자료: Department for Education. (2021.03). pp.32-35.

- SSDA903 데이터는 ‘CLA 신청서(CLA application)’를 통해 교육부에 제출되며, 신청서는 별도의 웹페이지에 4월 1일까지 게시됨. 신청서가 게시된 웹페이지의 위치와 로그인 절차에 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지역당국에게 안내한다고 지침상 명시되어 있음.
- 지역당국은 [그림 4-5]처럼 자료수집을 위한 웹사이트에 데이터를 직접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XML 파일 또는 CSV 파일 형식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CLA 신청서(application)’를 사용해 당해연도 5/31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함.
- 당해연도 데이터의 수정은 데이터를 수동 입력한 경우 수동으로 다시 입력해 수정할 수 있고, 파일을 업로드했던 경우에는 파일 삭제 및 재업로드를 통해 수정하면 됨. 다만, 당해연도 데이터가 아닌 과거 데이터(2003/2004 주기 데이터부터 이전연도 데이터까지)의 경우에는 교육부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파일 삭제 및 재업로드를 하거나 이메일로 파일을 송부하는 것이 아닌 보안전송시스템인 CLA수집시스템(Children Looked After

Collection system)을 통해 송부해야 함.

[그림 4-9] 영국 SSDA903 데이터 수동 입력 화면

Single Child Record for Child ID:

Header

Year: ID: UPN:

DOB: LA Code: Sex: Ethnicity: Uasc: Uasc Date:

<CHILDID> <LA_CODE> <SEX> <ETHNIC> <DOB> <UASC> <DUC> <UPN>

자료: Department for Education (2020.10.b)

○ 데이터 입력 후 유효성 검증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지며, 1단계의 모든 검증사항을 통과하지 못하면 검증 프로세스가 중지되므로 모두 해결해야만 2단계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음. 유효성 검증 시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유효하지 않은 코드
- 법적 지위와 배치의 불가능한 조합
- 불가능한 날짜 배열
- 아동에 대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상반되는 정보(특히 이전연도에 제출된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세부 정보)
- 데이터셋 내에서 모순되는 정보(예: 3/31 기준 이전 12개월 동안 돌봄받지 않은 아동이지만 OC2로 보고된 데이터)

○ 지역당국은 데이터 오류를 검증 및 수정하여 6월 30일 내로 데이터를 최종 제출한 뒤 교육부에 알려야 함.

제3절 소결

□ 위기아동청소년 정보연계체계 구축의 방향

- 아동청소년 중심의 통계생산 및 관리 체계의 구축은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의 연속성과 통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현재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부처별로 분리되어 위기아동통합정보시스템과 위기청소년통합정보시스템이 각각 구축되고 있는 상황
- 향후 위기아동·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망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위기아동청소년의 통합적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 위기아동청소년 개념 관련 서비스대상 중심의 개념을 하나의 통합된 범주로 개념화할 필요
-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부처 간 협의 및 조정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필수
- 아동청소년의 생활공간, 위기유형 등에 따라 부처 간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 아동청소년 규모에 대한 통합적인 파악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
- 아동통합DB(복지부)와 위기청소년통합DB(여가부)의 연계를 위해서는 위기청소년통합DB구축을 위해서 위기청소년의 주민등록ID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
- 교육부의 교육행정시스템인 나이스(NEIS)시스템과 위기아동청소년통합DB의 연계를 통한 위기아동청소년의 학교 및 지역사회를 통한 발굴 및 지원서비스의 연계성 강화방안 마련
- 법원, 경찰의 위기소년정보와 위기아동청소년통합DB의 연계가능성 논의 및 모색 필요



제5장

위기 아동 · 청소년 지원과 보호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체계의 구축

제1절 위기아동 · 청소년 서비스의 학교, 지역사회 간 분절 현황

제2절 위기 아동 · 청소년 지원과 보호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

회의 연계: 법과 제도개선 방안 검토

제3절 소결

제 5 장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과 보호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체계의 구축

제1절 위기 아동·청소년 서비스의 학교, 지역사회 간 분절 현황

1. 돌봄의 분절

□ 아동·청소년 돌봄 현황

○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돌봄은 크게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으로 나뉜.

- 학교돌봄은 초등학교 공간에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돌봄임.
- 마을돌봄은 지역사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으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돌봄 서비스를 운영 중임.

○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분절되어 제공됨에 따라 서비스의 효과성이 낮아지는 돌봄 분절의 문제가 발생(김민희 외, 2020).

- 각 부처별로 돌봄 서비스의 근거와 예산, 이용 대상자 등 운영기준이 다름.
- 돌봄 분절로 인해 학교와 지역사회 간 한정된 자원을 서로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긴급한 돌봄 공백 상황에 돌봄 서비스간의 분절로 인해 틈새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돌봄 분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 범정부적으로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운영 실행계획’을 수립, 다음과 같은 온종일돌봄체계를 만들어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고자 함.

[그림 5-1] 우리나라 방과 후 돌봄 전달체계



자료: 강지원 외(2021). 보육·돌봄 체계 중장기 개편방안 연구(p.46)에서 발췌.

○ 위와 같이 온종일돌봄체계를 통해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연계하여 돌봄 분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각 돌봄 서비스별 부처에 따른 여전히 돌봄 분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각 부처별 돌봄 서비스 예산과 운영 및 대상자 기준이 통일되지 못함.
-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간의 서비스 분절 문제 발생.
- 코로나 19와 같은 긴급한 상황의 돌봄공백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함.

○ 이렇게 제도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돌봄 분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학교돌봄 현황

○ 교육부¹⁵⁾

- 초등돌봄교실

- 「초·중등교육과정총론(교육부 고시)」를 기반으로 교육부가 추진함.
- 지원 대상: 아침돌봄(초등 전학년), 오후돌봄(초등 1~4학년 중 저소득 및 돌봄취약계층), 저녁돌봄(1~6학년 중 오후돌봄 및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 참여자), 방학 중 돌봄(9시~오후 1시).
- 이용 시간: 아침돌봄(수업 전), 오후돌봄(오후 1시~5시), 저녁돌봄(오후 5시~7시까지 연장 가능, 급식 제외), 방학 중 오전돌봄 제공.
- 서비스 내용: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창의·인성 프로그램 무상지원, 초등 3학년 이상일 경우, 자원봉사, 교육 기부, 독서, 운동프로그램의 방과 후 학교연계형돌봄교실 실시, 방학 중 돌봄, 급·간식 제공.
- 이용료 무료.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 「초·중등교육과정총론(교육부 고시)」를 기반으로 교육부가 추진함.
- 지원 대상: 초등 고학년(학교 여건에 따라 저학년도 가능) 중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담임 추천 대상자 등 돌봄취약계층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
- 이용 시간: 방과 후~17시 자율 귀가.
- 지원 내용: 틈새활동, 자율활동, 입실 및 퇴실 관리.
- 오후돌봄과의 차이점은 급·간식을 제공하지 않으며, 무상프로그램 또한 제공하지 않는 것임.

15)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2022). 초등돌봄교실. <https://icare.seoul.go.kr>로부터 2022. 7. 14. 인출.

서울시특별시교육청(2022b). 2022학년도 서울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참조.

- 오후 돌봄교실 여유 인원이 발생할 경우 오후돌봄 이용 가능.
- 문제점: 봉사자 활용,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전문인력이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급·간식제공이 되지 않고 있음. 틈새활동프로그램이 있기는 하나 전문적인 활동지원과 체계가 부족함.
- 이용료 무료.
- 방과후학교¹⁶⁾
 - 「초·중등교육과정총론(교육부 고시)」를 기반으로 교육부가 추진함.
 - 운영 시간: 방과 후 (여건에 따라 토요일, 휴업일, 방학 가능).
 - 지원 대상: 이용을 원하는 모든 초등학생(타 학교 학생도 가능).
 - 지원 내용: 학부모 수요에 맞는 숙제지도 또는 학습·문화·체육·놀이 등의 다양한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 활동 제공.
 - 이용료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
-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¹⁷⁾
 - 2006년부터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지원을 위해 교육부에서 운영.
 -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중앙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함.
 - 방과후 학교, 온종일돌봄체계 운영 전반 지원(성과분석, 운영 매뉴얼 제공, 전문인력 연수,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운영).
 -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온종일돌봄 정책 소개, 각 부처별 돌봄기관으로는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가 있으며, 이밖에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음. 돌봄안내 지도 운영.
- 초등돌봄교실, 방과후연계돌봄 문제점
 - 이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방과후돌봄을 이용하지 못하는 수치가 높음(56.3%),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도 43.1%로 높은 비

16) 서울특별시교육청(2022c). 2022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서울특별시교육청.

17) 교육부홈페이지(2022b).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https://www.afterschool.go.kr>로부터 2022.7.14. 인출.

율을 차지해 다른 돌봄시설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냄(강지원, 2020; 강지원 외, 2021).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돌봄공백에 취약하였으며, 비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취약한 돌봄공백 발생(김주리, 최혜진, 강지원, 2021).

- 방과후학교 문제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사이 비어있는 시간에 틈새 돌봄공백 발생, 틈새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방안은 아직 없는 상태임.

○ 보건복지부 ‘학교돌봄터’

- 학교돌봄터(이혜숙, 이영주, 2021)

- 근거법령: 보건복지부 훈령 제 168호
- 2021년 9월부터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으로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교육부와 연계하여 운영.
- 학교에서 교실, 운동장 등 시설 제공을 하고 운영 및 관리는 지자체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 지원 대상: 지역 내 초등학생(우선 이용 대상자 : 맞벌이 부부, 취약계층).
- 이용시간: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오후 1시~5시)을 기본으로 필요시 돌봄시간 연장 제공으로 방과 후부터 19~20시까지 운영.
- 지원 내용: 상시·일시·틈새돌봄 가능, 외부활동 후 재입실 가능
- 지자체, 학교 여건에 따른 급·간식과 프로그램 이용료는 차이가 있음.

- 학교돌봄터 한계점(김은정, 오신휘, 이희현 외, 2021)

- 신규 돌봄교실에만 적용이 가능하나 현재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학교 내 유휴시설 및 자원을 이미 최대한 활용 중이라 돌봄교실 확대가 어려움.
-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 및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의 형태로 돌봄전담사들이 이러한 민간위탁에 반대함.

□ 마을돌봄 현황

○ 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0조~52조, 54조~제75조에 근거,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됨.
-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과후돌봄 제공.
- 저소득·돌봄취약아동(소득, 가구특성, 연령기준 만족), 일반아동 대상(연령 기준 만족) 대상 운영,
- 일반아동 이용 40%, 돌봄취약아동의 이용 60%로 돌봄취약아동의 센터 이용을 더 우선시함.
- 이용시간: 학기 중 오후 2~7시, 방학 중 낮 12시~오후 5시 상시운영
- 지원 내용: 아동 보호, 급식제공,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제공.
- 이용료는 소득수준별 상이, 무상 또는 5만 원 내외

- 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복지법 제 44조 2(다함께돌봄센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추진.
-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아동(보건복지부, 2021a).
- 대상 선정은 원래 소득수준과 무관하나 지역 여건에 따라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초등학교 저학년의 입소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입소 우선순위: 부모가 맞벌이인 가정과 한부모 가정, 다자녀,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근로시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긴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기관 수에 비해 신청 아동수가 많아 입소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이혜숙, 이영주, 2021).
- 이용시간: 14~19시 포함 1일 8시간 상시운영. 방학 기간에는 9시~18시까지 운영함.

- 서비스 내용: 상시·일시·틈새 돌봄, 등·하원 지원, 간식지원, 문화·예술·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상담서비스 연계.
- 지역내 유휴시설 활용, 대단지 아파트 신축 시 의무설치 시설로 시설 개소가 증가하고 있음.
- 2021년 6월 말 기준 518개소 운영, 아동 13,061명 이용(보건복지부, 2021c). 2022년 7월 기준 739개소 운영 중¹⁸⁾.
- 이용료 월 10만 원 이하 일부 부담.

○ 여가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¹⁹⁾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청소년 기본법 제 48조의 2(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에 기반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임.
- 대상: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 (지역 수요에 따라 22년 10월부터 예비 4학년 참여 가능).
- 대상 선정 기준: 일반형의 경우 우선순위 지원대상(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장애가정 등) 및 기타지원대상이(학교 및 지역사회 추천) 참여 가능하며, 주말형의 경우 돌봄 및 체험활동이 필요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 지원 내용: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지원 및 캠프, 부모교육 등.
- 운영시간: 방과 후~ 21시, 일반형은 주 5일, 주말형은 주 6일 운영.
- 주로 청소년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의 여가부 산하 청소년 활동시설에서 운영함.
- 2021년 기준 332개소 운영, 참여 아동 13,145명.
- 이용료 무상

18)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2022). 다함께돌봄사업 내용. <https://www.dadol.or.kr>로부터 2022.7.14. 인출.

19) 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22d).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https://www.youth.go.kr/yaca/index.do>로부터 2022.7.14. 인출.

- 공동육아나눔터 맞벌이가구 자녀 돌봄시설 (꿈도담터)²⁰⁾
 - 아이돌봄지원법 제 19조 제 1항(공동육아나눔터)에 근거함. 여가부에서 설치 및 운영 전담.
 - 여가부가 신한금융그룹과 민관협력으로 초등돌봄 중심의 공동육아나눔터인 '꿈도담터' 설치.
 - 대상: 18세 미만 아동 및 부모로 대상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교실인 '꿈도담터'와 같은 돌봄 서비스는 초등학생을 위주로 운영.
 - 대상자 선정 기준: 맞벌이가구 우선모집(70%), 맞벌이 가구이나 고용 증명 어려운 주 15시간 이하 단기간 근로, 일용직, 파트타임 잡, 아르바이트 종사자는 근로확인서를 통해 신청 가능.
 - 대상자는 반드시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공동체 활동에 부모와 함께 참여해야 하며, 기타 공동체 활동을 전제로 함.
 - 지원 내용: 교구 및 장난감 지원, 아동 대상 프로그램 제공
 - 운영 형태: 주 40시간 이상 운영, 주중에는 일 4시간 이상 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 여건에 따라 오후~저녁 종일돌봄, 오전개방·오후돌봄, 혼합형으로 자유롭게 운영(급·간식은 지원 안함).
 - 전국 123개소 운영, 2022년 30곳 추가 설치 예정²¹⁾
- 아이돌봄 서비스²²⁾
 - 아이돌봄지원법을 근거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함.
 -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공백 가정의 경우 정부지원 가능)
 - 2022년 1월 기준 227개소.
 - 지원 서비스 : 시간제돌봄,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영아종일제 운영.

20) 여성가족부(2020). 2020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안내 참조.

21) 여성가족부(2022.05.09.). 초등 돌봄 특화형 공동육아나눔터 '꿈도담터' 30곳 추가 설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1421>로부터 2022.7.14. 인출.

2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22a). 아이돌봄 서비스. <https://www.idolbom.go.kr>로부터 2022. 7. 14. 인출.

- 서비스 금액 정부지원 : 양육공백에 해당되는 경우 수준별 정부지원금액을 통해 금액부담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양육공백 가정 : 취업, 한부모, 맞벌이, 장애인, 다자녀, 기타 양육부담 가정).

〈표 5-1〉 부처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운영 현황

| 구분 | 초등 돌봄교실 | 방과후 학교연계형 돌봄교실 | 방과후학교 | 학교돌봄터 | 지역 아동센터 | 다함께 돌봄센터 | 청소년방과 후아카데미 | 공동육아 나눔터 | 아이돌봄 서비스 |
|----------|--------------------------------|-----------------------------|-----------------------------|---------------------------------|------------------------------------|-----------------------------|---------------------------------|-----------------------------|-----------------------------------|
| 소관 부처 | 교육부 | 교육부 | 교육부 | 보건 복지부 | 보건 복지부 | 보건 복지부 | 여성 가족부 | 여성 가족부 | 여성 가족부 |
| 지원 근거 |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 보건 복지부 훈령 제168호 23) | 아동 복지법 | 아동 복지법 | 청소년 기본법 | 아이돌봄 지원법 | 아이돌봄 지원법 |
| 시행 시기 | 2004 | 2016 | 2006 | 2021 | 2004 | 2017 | 2005 | 2010 | 2007 |
| 지원 대상 | 초등 전학년 (초등 저학년 중심) | 초등 고학년 방과후 이용자 | 초등 전학년 | 초등 전학년 | 만 18세 미만 아동 | 만 6세 ~12세 초등학생 | 초등 4학년~ 중등 3학년 | 18세 미만 (12세 미만 중심) | 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 |
| 지원 가정 | 맞벌이, 돌봄 취약계층 우선 모집 | 맞벌이, 돌봄 취약계층 우선 모집 | 맞벌이, 돌봄 취약계층 우선 모집 | 맞벌이, 돌봄 취약계층 우선 모집 | 일반아동 40%, 취약계층 60% | 취약계층, 맞벌이 가정 우선 모집 | 취약계층 우선 모집 (주말: 모든 가정) | 맞벌이 가정 우선 모집 70% | 모든 가정 |
| 돌봄 형태 | 상시돌봄 | 틈새돌봄 | 상시돌봄 | 상시, 일시, 틈새돌봄 | 상시돌봄 | 상시, 일시, 틈새돌봄 | 상시돌봄 | 상시, 일시돌봄 | 시간제 돌봄 |
| 지원 형태 | 무상 (일부 자부담) | 무상 | 이용자부 담 또는 재정지원 | 무상 (급·간식비 자부담) | 무상 (소득수준 별 이용료 5만원 이내) | 일부 부담 (월 10만 원 이하) | 무상 | 무상 | 가정 위기 수준별 시간당 지원요금 상이 |

주: 김미정, 김동욱(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돌봄정책 점검 및 향후 과제(p.31)에서 발췌 및 수정.

이혜숙, 이영주(2021).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사업의 서울시 운영전략. 서울연구원(p.19)에서 발췌 및 수정.

자료: 교육부(2016). 2016년 초등 돌봄교실 운영방안 참조.

김은정, 오신휘, 이희현 외(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초등학령기 아동 돌봄체계 대응방안 연구 참조.

보건복지부(2021b). 학교돌봄터 사업 공고문 최종 참조.

보건복지부(2021a). 2021년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참조.

서울특별시교육청(2022c). 2022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참조.

서울특별시교육청(2022b). 2022 서울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참조.

23) 보건복지부 훈령 제168호. 「학교돌봄터 사업 공동추진단 설치·운영 규정」

□ 학교돌봄 마을돌봄 분절 해결을 위한 연계 현황

○ 온종일돌봄체계 구축²⁴⁾

-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2018년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 계획’ 수립.
 - 교육부에서 ‘다함께 온종일 돌봄추진 현장지원단’을 통해 방과후돌봄 서비스 기관관리 및 총괄을 담당함.
-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연계, 각 부처 간 지자체-교육청 간의 연계를 통해 돌봄 분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통합적인 초등돌봄체계 구축.
 - 상시돌봄 외에 일시돌봄과 이용자 시간에 맞춘 탄력적인 틈새돌봄을 통해 돌봄 공백의 해결.
 - 돌봄 사각지대를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에 대한 부담 축소.

[그림 5-2] 온종일돌봄 체계



자료: 이해숙, 이영주(2021).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사업의 서울시 운영전략(p.10). 서울연구원.

24) 관계부처합동(2018). ‘온종일돌봄 생태계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이희현 외(2021).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의 성과 및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참조.

- 방과 후 돌봄 기관 통합 조회 및 신청 서비스 제공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온종일 돌봄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시군구별 방과후돌봄 서비스 현황 확인 및 이용 신청 가능.
- 조회 가능 기관: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이용자 수 현황
 - 2020년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기관을 통해 총 42.1명의 아동이 이용함(하봉운 외, 2021).
 - ‘온종일 돌봄 구축 운영 및 실행계획’에 따라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통합하여 2022년까지 총 53만 명의 아동에게 확대하여 계획함.

〈표 5-2〉 온종일돌봄 이용자 현황(2020) 및 목표(2022)

| 구분 | 온종일돌봄 이용자 수 (2020) | | 2022년 목표 |
|-----------------|--------------------|---------|-------------|
| | 학교돌봄 | 마을돌봄 | |
| 온종일 돌봄 이용자 수 | 30.4만 명 | 11.7만 명 | 53만 명 |
| | 총 42.1만 명 | | |

자료: 하봉운 외(2021). 서울형 통합 초등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연구 수치 참조.
관계부처합동(2018).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 수치 참조.

- 온종일 돌봄체계 문제점: 교육부의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에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이 13~17시가 40.7%로 가장 높았으나 서비스 공급이 불충분함(강지원 외, 2021).

○ 온종일돌봄 수요조사²⁵⁾

- 교육부 주관, 시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초등학생들의 돌봄수요 파악.
- 시·도교육(지)청이 실시하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지)청에 교육부를 통해 전달, 시·군·구 드림스타트도 시·도교육(지)청을 통해 전달함.
- 조사대상: 전국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1~5학년) 학부모,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예비취학아동 학부모.
- 조사내용: 온종일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만족도, 이용자 가구유형, 돌봄 서비스 이용 거부 이유, 원하는 이용 시간, 원하는 이용 기관.
- 2022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²⁶⁾
 - 돌봄 수요: 초등 1학년(73.34%)로 가장 많았고 초등 저학년 학부모의 경우 모두 50% 이상 온종일돌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돌봄 필요 시간: 수업이 끝난 후~ 오후 5시까지가 68.66%로 가장 많음.
 - 희망 유형: 초등돌봄이 56.16%, 학교돌봄터가 20.99%로 학교돌봄이 총 77.16%로 대부분의 학부모가 학교돌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저학년 일수록 학교돌봄, 고학년일수록 마을돌봄을 원함.

□ 학교돌봄, 마을돌봄 연계의 한계점

○ 온종일 돌봄체계 한계점

- 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함.
-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돌봄 공백 발생.
 - 워킹맘들의 퇴사·이직 고민이 가장 많던 시기로 선택한 것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50.5%, 중복응답)’인 것으로 나타남(오현정, 황원경, 2019, p.12; 김은정, 오신휘, 이희현 외, 2021, p.26 재인용).

25) 교육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22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실시 안내’, <https://www.moe.go.kr>로부터 2022.7.15. 인출.

26) 교육플러스(2022.02.14.), ‘돌봄 원하는 학부모 48%,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터 77% 희망...대선후보 돌봄정책 '유사'’.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5>로부터 2022.7.15. 인출.

- 하지만 여전히 대상자 선정이 보편적이지 못하며,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공급으로 돌봄절벽이 해결되지 못함(김은정, 오신휘, 이희현 외, 2021).
- 온종일 돌봄체계를 통해 초등 저학년에 대한 공급은 증가하였으나, 지역 돌봄과의 연계로 두 기관을 중복으로 이용하는 대상자가 늘어나 이를 제외한 이용 아동은 오히려 줄어듦.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하여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이 돌봄에서 배제됨(강지원 외, 2021).
- 온종일 돌봄으로 인해 기존 초등돌봄을 3시~4시 30분까지 이용하던 아동이 마을돌봄시설로 넘어가며, 해당 시설의 정원 1명분을 차지하여 다른 이용자의 이용권을 빼앗는 상황이 발생함.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서비스 접근성 문제 발생.
 - 수요자 체감도 조사에서 정부24의 온종일 원스톱서비스의 활용도가 낮아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음(이희현 외, 2021).
 -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돌봄기관의 공급량을 확인하기에는 적합하나, 신청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실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이 떨어짐(강지원 외, 2021).
 -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외의 학교돌봄터나 방과 후 학교와는 신청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음(하봉운 외, 2021).
 - 온종일 원스톱서비스에서 시설은 있으나 운영하지 않는 시설로 인해 실제 이용량과 교육부자료와의 간극이 발생함(강지원 외, 2021).

○ 학교돌봄터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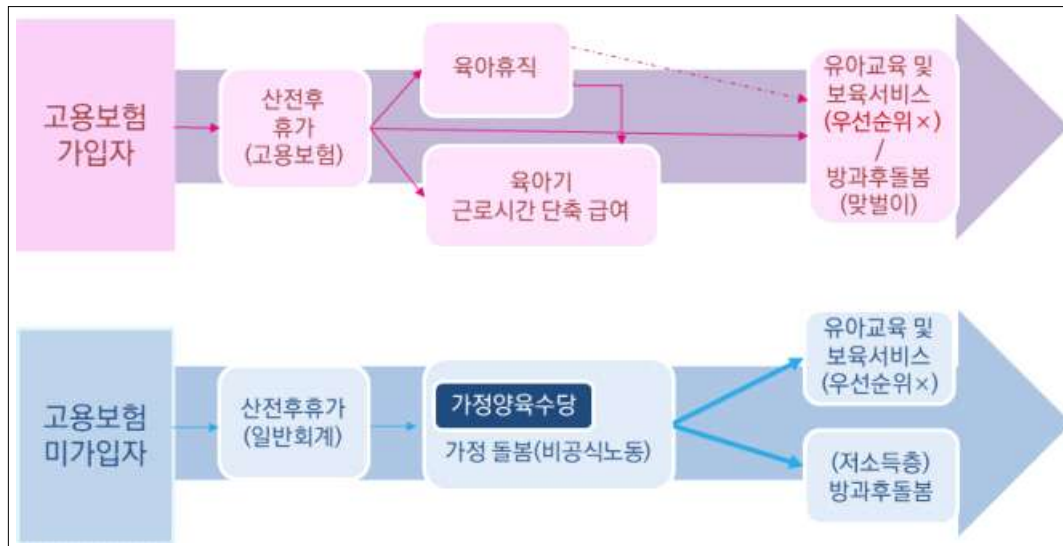
-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시설을 새로 개소하거나 확대하기보다 연계를 원하는 각 돌봄시설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빈 교실이 충분한 곳은 초등돌봄교실 확대가 가능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공급 확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강지원 외, 2021).

- 필요한 것: 시설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함.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모두 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못함(강지원 외, 2021; 김은정, 오신희, 이희현 외, 2021).

○ 다함께돌봄 한계점

- 보편성이 부족함.
 - 다함께돌봄사업은 기존 학교와 마을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동들을 기관 연계를 통해 보편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우선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20%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보편적이라고 볼 수 없음(최현임, 손가현, 2021).
 - 보편적인 돌봄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지자체 상황에 맞게 맞벌이, 다자녀, 초등학교 저학년과 같은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우선 순위가구 기준을 자체적으로 두고 있어 보편복지라고 보기 어려움(모아라, 이소현, 2021).
-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맞벌이부부 증빙 시스템으로 인한 대상자 사각지대 발생 문제가 있음(강지원 외, 2021).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맞벌이 가정은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 돌봄시설 이용이 어려움.
 - 이로 인해 학생, 구직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와 같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그림 5-3] 종사상 지위에 따른 보육 및 돌봄 체계 분리 이용 현황



자료: 강지원 외(2021). 보육·돌봄 체계 중장기 개편방안 연구(p.68)에서 발췌함.

- 대상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부족함.
 - 등교 전 돌봄, 공휴일 돌봄, 아픈 아이 돌봄과 같은 서비스 다양화가 필요함(모아라, 이소현, 2021).
 - 다함께돌봄정책의 경우 보호권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돌봄컨텐츠 제공에 한계가 있음(최현임, 손가현, 2021).
- 서비스 공급 부족함.
 -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지자체 보유 부지의 부족으로 센터 신설이 더딤(강지원 외, 2021).
- 지자체별 자원에 따른 서비스 격차가 큼.
 - 온종일 돌봄체계의 경우 대도시 지역의 초등학교는 유휴교실이 충분하지 않아 확보가 어려우며, 소도시의 경우 인구의 부족으로 유휴교실은 많으나 초등돌봄전담사 확보가 어려움(강지원 외, 2021).
 - 이를 줄이기 위해 수요가 적은 지자체에서도 일부 공적 영역으로의 전환을 통해 사각지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 필요(모아라, 이소현, 2021).

○ 돌봄 분절에서 전달체계의 문제점

- 교육부를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관련 기구를 설치하였으나 사업 담당 부처마다 별도로 운영하여, 교육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에 한계가 있음(이희현 외, 2021).
- 각 서비스 유형, 센터별 독자적 서비스 수급관리가 이루어져 지역 내에서 기관 간 돌봄수요 아동에 대한 정보,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협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장명림 외, 2020).
- 각 돌봄 기관별 수요에 따른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돌봄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학교와 마을돌봄의 분절된 운영 구조는 돌봄 환경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아동 돌봄의 수요를 채우지 못함(김은정, 오신휘, 이희현 외, 2021).
- 분절적 운영체제로 지역자원 효율적 활용, 긴급 돌봄수요에 적극대응이 어려움(김은정, 오신휘, 이희현 외, 2021).
- 지역단위 장기적 돌봄 서비스 공급계획 수립 문제 발생(김은정, 오신휘, 이희현 외, 2021).
- 정부24를 통해 온종일 돌봄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만 창구 하나에 모아 놓았을 뿐 통합관리가 안 되어 실제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과 신청자들의 신청이력 및 서비스 이용 정보가 돌봄기관 간 연계되지 않고 있음(강지원 외, 2021; 이희현 외, 2021; 하봉운 외, 2021).
- 각 부처별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부처 및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수월하지 않아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이 떨어짐(김민희 외, 2020).

○ 돌봄 문제 해결의 필요성

- 한정된 지역사회의 자원을 다각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 간 연계가 필요함(김민희 외, 2020).
-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협력해야 지역사회 아동들의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며,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 가능함(심정미, 채현

탁, 2015).

- 돌봄 서비스의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쏠림현상을 극복하고 비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중복을 피해 보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돌봄기관 간의 연계가 필요함(심정미, 채현탁, 2015).

○ 코로나로 인한 기존 제도의 한계와 돌봄 공백

- 코로나 19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각 부처별로 긴급돌봄을 진행하였으나, 돌봄 서비스 간 연계의 부족으로 인해 틈새돌봄 및 긴급돌봄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부족하였음(김민희 외, 2020).
- 특히 공적 돌봄기관부터 서비스가 중단되어 학교돌봄의 돌봄공백이 크게 발생함(강지원 외, 2021; 김송이, 황선영, 2021).
 - 초등학교가 휴업을 시행하며, 온종일돌봄체계의 70%에 해당하던 초등돌봄교실도 함께 휴업하게 되며 심각한 돌봄공백이 나타남
 - 또한, 학교 긴급돌봄의 경우 교육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학교 밖 돌봄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반면, 마을돌봄기관은 비교적 안정적 돌봄체제를 유지함(강지원 외, 2021)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상시적인 긴급돌봄을 운영, 온라인으로 전환된 학교 수업을 센터 내에서 진행하도록 컴퓨터와 태블릿을 확보, 각 가정에 매일 안부전화 및 도시락을 배달함.
- 다만, 마을돌봄의 경우 이용 인원의 제한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새로운 이용자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음(김은정, 오신휘, 이희현 외, 2021).
 - 지역아동센터는 상시돌봄만 제공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새로 등록시키는 것이 어려워 기존 시설이용 아동을 중심으로만 긴급돌봄을 제공했다는 한계점이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상시돌봄 외에 일시돌봄을 제공할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이용 인원 제한이 있으며, 제한된 자원으로 새로운 수요자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또한, 마을 긴급돌봄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진행되고 학교돌봄이나 여가부의 마을돌봄기관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는 연계되지 않음(김은정, 오신휘, 이희현 외, 2021).
- 마을돌봄은 학교돌봄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여 틈새돌봄을 통해 돌봄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하기에 긴급돌봄에 있어서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분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김송이, 황선영, 2021).
- 향후 감염병 위기에 있어서 휴교, 온라인 학습 전환 시 마을 돌봄은 인프라가 한정적이기에 학교를 중심으로 긴급돌봄 필요(김은정, 오신휘, 이희현 외, 2021).

2. 정신건강 지원 분절

□ 위기 아동·청소년의 현황

○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위기 요인 발생하고 있음.

-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

-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생존과 교육에서 어려움 발생함.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대인관계, 학업·진로, 가족 문제로 인한 청소년 사이버 상담이 늘고 있음(청소년사이버상담복지센터, 2021).
- 정신건강 관련 ‘우울 및 위축감’ 호소는 코로나 19 이후 51.2%, ‘강박 및 불안’은 23.9%로 전년도 대비 증가함.

- 학교폭력, 자해, 자살, 가출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위기 아동·청소년이 증가함(황여정, 이정민, 2021).

〈표 5-3〉 위기 아동·청소년 사이버 상담 주요 현황

(단위: %)

| | 정신건강 | | 대인관계 | 학업/진로 | | 가족 |
|-----------|-------|-------|------|-------------|----------|----------|
| | 우울/위축 | 강박/불안 | 친구관계 | 시험불안/학업스트레스 | 학교생활 부적응 | 부모-자녀 갈등 |
| 코로나 19 이전 | 48.5 | 19.9 | 60.4 | 21.0 | 16.2 | 76.0 |
| 코로나 19 이후 | 51.2 | 23.9 | 56.0 | 28.7 | 10.7 | 76.4 |

자료: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2021).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분기 온라인상담 경향분석 p.4 자료 발췌(2022.6.17. 인출).

○ 인구감소 추세에도 위기 아동·청소년 수가 증가함.

- 학대 피해 아동의 신고 사례가 2015년 19,214건, 2017년 34,169건으로 78% 증가함(류정희 외, 2018).
- 초·중·고교 재학생 430만 명 중에서 위험군(반사회성·공격성·우울, 가출·

학업중단·학교폭력) 추정 결과 재학생 수의 17.2% 해당함(류정희 외, 2018).

- 2017년 ‘청소년’ 인구는 9,254명에서 2020년에는 7.7% 감소한 8,542명으로 나타났는데, 학업을 중단한 ‘가정 밖 청소년’ 수는 2018년 50,057명에서 2020년 52,261명으로 늘어남(관계부처합동, 2021).

○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

- 아동·청소년 시기는 발달단계 측면에서 성인기의 발달단계와는 다른 예방적 차원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이 필요함(심서연 외, 2015).
-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공교육을 중단하더라도 다시 학업으로 회귀하는 가능성이 있기에 학업중단 전·후의 체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함(조혜정, 홍다영, 2017).

○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부처별 지원 추진체계

- 위기 아동·청소년의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분절된 각 전달체계의 협력이 중요함.
- 각각의 기관에서는 ‘연령’과 ‘주요생활’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류정희 외, 2018).

〈표 5-4〉 위기 아동·청소년 각 부처별 주요 정책

| 구분 | 연령 | 기관 | 업무내용 |
|------------|----------------------------|-------|---------------------------------------|
| 연령 기준 |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 및 보호 관련 정책 |
| | 만 9세 ~ 만 18세 또는 24세 | 여성가족부 | 청소년·청년 대상의 복지 및 보호 정책 |
| 주요생활 기준 | 만 6세에서 만 18세 미만 학교 내 존재 | 교육부 | 학교 내 위기 아동으로 규정, 교육 및 복지 정책 |
| | 만 6세에서 만 18세 미만 학교 밖 존재 | 여성가족부 | 학업중단의 학교 밖 위기 아동으로 규정, 청소년복지 정책 |

자료: 류정희 외(2018). 사회보장제도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전달체계 심층분석」 핵심평가 정책보고서(p. 4~5) 내용 정리.

□ 위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센터 현황

○ 위(Wee)프로젝트²⁷⁾

- 지원대상자: 위기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
- 추진체계: 학교-교육청-지역사회로 연결된 다중안전망 시스템
- 근거규정: 위(Wee) 프로젝트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 329호)

○ 위(Wee)클래스

- 운영 내용: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상담실에서 상담 및 교육 관련 내용을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생이 직접 신청하거나 학생의 보호자 및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음.
- 운영 시간: 학교 운영시간에 이용이 가능하며 수업시간일 경우에는 미리 상담을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긴급히 상담이 필요할 때는 담임 및 상담 선생님과 논의한 후 바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음.
- 서비스 내용: 상담, 교육, 연계
- 위(Wee)클래스 문제점

27) 위(Wee)센터 홈페이지(2022). 추진체계 및 기관 현황. <https://www.wee.go.kr>로부터 2022.6.17. 인출.

- 위(Wee)클래스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위기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나, 전문상담교사의 대다수가 신입교사이며, 업무처리도 혼자서 수행하는 일이 많아 동료교사에게 상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허난설 외, 2020).
- 상담에 대한 부족한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가정에서부터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간과되어, 학생들이 부적응 문제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상담의 어려움이 있음(이정민, 박현지, 2019).
- 학급의 모든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여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부적응과 힘들음을 겪는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전문가의 현장 배치 및 확대가 계속 요구됨(이정민, 박현지, 2019).

○ 위(Wee)센터

- 운영 내용: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망을 사용하여 심리평가와 상담 및 치유까지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안 학교에 위(Wee)클래스가 없거나, 위(Wee)클래스에서 상담받기 어렵거나, 위(Wee)클래스에서 연계한 학생이 직접 방문, 전화접수, 학교를 통한 공문으로 신청하여 이용함.
- 운영 시간: 평일은 오전 9시 ~ 오후 6시 운영하며, 토요일은 센터마다 운영 일정을 다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임.
- 서비스 내용
 - 개별적인 상담과 집단으로 진행되는 상담이 있으며 전화나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순회상담을 하기도 함.
 - 심리검사와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및 행사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연계하고 교육을 지원해 줌.
 - 각 지역이나 기관의 위(Wee)센터마다 학교폭력상담, 위기 지원 등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음.
- 진행 절차: 위(Wee)센터에 의뢰접수를 한 뒤, 접수면접을 통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상담하고, 이후에 전문적인 관리를 받음.

[그림 5-4] 위(Wee)센터 이용관련 진행 절차



자료: 위센터 홈페이지(2022b). 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cntnts_sn=23. 위(Wee) 추진체계 위(Wee)센터에서 관련 내용 발췌(2022. 6. 23. 인출).

- 위(Wee)센터의 문제점

- 기관의 규모나 동원 가능한 인력에 따라 지원받는 서비스가 지역의 센터마다 달라 보편적 서비스 지원이 어려움.
- 학교상담자의 위기 개입에 대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요구가 증가하는데 반해 학교상담자들의 역할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서 혼란을 경험하는 보고가 있음(권해수, 류진아, 2007).
- 위(Wee)센터 상담자는 위기 개입 지원에 특화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Wee)클래스 상담자와 역할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김지연 외, 2020).

○ 위(Wee)스쿨

- 운영 내용: 중기 및 장기 위탁 교육을 포함하여 상담과 치유가 절실한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인성·직업교육,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함.
- 서비스 이용: 소속 학교를 통해 공문으로 신청하며 협의 기간에 따라 짧으면 1개월에서 시작해서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음.
- 위(Wee)스쿨의 문제점
 - 정해진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위탁 생활을 하면서 해당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과 사회 부적응 문제가 얼마만큼 치유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음.

- 고위험 학생들의 장기 위탁 생활을 통해 사회 적응 교육을 받지만, 다시 학교 안으로 재진입이 가능한지 우려됨.
- 위(Wee)프로젝트가 클래스·센터·스쿨로 이어지면서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 그러나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위(Wee)센터에만 일이 집중적으로 몰리며 시설과 인력 부족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위(Wee)스쿨에 비해 위(Wee)클래스와 위(Wee)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인력은 총 5,784명으로 상담사 1명당 992명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상담을 받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이선우, 2019).

○ 가정형 위(Wee)센터

- 운영 내용: 장기결석, 등교 거부,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과 정서행동 문제, 은둔형, 범죄, 가출 등의 기숙형 보호가 필요한 학생, 그리고 가정폭력 및 학대·방임, 빈곤, 가정해체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보호와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여 가정과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음.
- 위탁 기간: 보통 3개월 정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연장도 가능함.
- 서비스 내용: 보호, 상담, 심리검사, 교육, 사후관리 등을 지원함.

〈표 5-5〉 가정형 위(Wee)센터의 서비스 지원 내용

| | |
|------|--|
| 보호 | 의식주, 개인위생 및 청소 등의 생활지도와 약물복용과 통원치료 등의 의료관리를 지원해 주고 있음. |
| 상담 | 입소상담과 보호자 및 담임, 교사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가정방문도 하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적응에 관한 내용으로 상담함. |
| 심리검사 | 종합평가와 심층평가의 심리검사를 지원함. |
| 교육 |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하거나 등교를 도와주고 체험활동 참여와 봉사의 경험도 제공하고 학부모교육도 진행함. |
| 사후관리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가정 복귀를 위한 연습을 하며 학교에 돌아갈 수 있는 준비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후 모임을 통해 적응 훈련 준비를 관리함. |

자료: 위센터 홈페이지(2022b). 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cntnts_sn=23. 위(Wee) 추진체계 가정형(Wee)센터에서 내용 정리(2022년 6월 23일 인출).

- 가정형 위(Wee)센터의 문제점

- 다른 위(Wee)프로젝트 사업이 주로 교육청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면, 가정형 위(Wee)센터는 민간에 위탁형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심리치료보다 주로 공동생활 및 위기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이정민, 남아영, 2019), 가정형 위(Wee)센터에서 적응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관계에만 집중되어 있음.
- 가정형 위(Wee)센터에 입소한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함.

○ 병원형 위(Wee)센터

- 운영 내용: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학교적응이 힘들고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와 간호사 및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는 사회복지사와 학교 교사 및 상담치료사, 그리고 청소년상담사·지도사로부터 상담하고 교육과 치료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운영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됨.
- 서비스 내용: 주 호소 문제에 대한 전문의·개인·양육자 상담을 진행하고, 기초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통해 학교 복귀를 위한 교과학습을 하며, 다양한 심리치료와 체험활동을 제공함.
- 이용 절차: 병원형 위(Wee)센터에 의뢰를 한 뒤, 접수와 면접을 통해 입교하고 위탁교육을 받으며 복교를 위한 학습 과정이 진행됨.

[그림 5-5] 병원형 위(Wee)센터 이용 관련 진행 절차



자료: 위센터 홈페이지(2022b). 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cntnts_sn=23. 위(Wee) 추진체계 병원형 위(Wee)센터에서 발췌(2022년 6월 23일 인출).

- 병원형 위(Wee)센터의 문제점

- 전문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인력의 비효율적인 업무 진행으로 인해 구성원의 소진이 예상됨.
- 기존의 위(Wee)센터와 연계의 모호함으로 인해 각 기관들의 유기적인 소통이 어려움(김효선, 배희분, 장덕호, 2019).

○ 위(Wee) 프로젝트 기관구축 현황

- 위(Wee)클래스와 센터 및 스쿨에서는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상담하고, 치유해주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2017년 대비해서 2021년 8월까지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

〈표 5-6〉 위(Wee) 기관들의 구축현황

| 구분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위(Wee)클래스(개) | | 6,624 | 6,965 | 7,230 | 7,631 | 8,059 |
| 위(Wee)센터(개소) | 일반형 | 195 | 191 | 190 | 204 | 206 |
| | 가정형 | 15 | 19 | 19 | 19 | 21 |
| | 병원형 | 5 | 5 | 5 | 9 | 10 |
| 위(Wee)스쿨(개교) | | 13 | 13 | 14 | 15 | 15 |

자료: 위센터 홈페이지(2022a). 기관 현황. 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cntnts_sn=22로부터 2022. 6. 28. 인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²⁸⁾

- 운영 내용

-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과 연계하여 학업중단과 가출 및 인터넷 과의존 등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보호와 교육, 의료 지원, 그리고 자립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함.
- 여성가족부 소속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복지개발원에서 각 도시와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로 지원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청소년복지법」) 제12조에 근거한 만 9세 ~ 만 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함(박진우, 허민숙, 2021).

- 운영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상담 전화는 24시간 운영함.

- 주요 서비스 내용

- 상담과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청소년 및 부모를 위한 상담과 복지를 지원함.
- 상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제공하고, 긴급한 상황을 대비한 구조 전화도 운영함.

28) 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22c). 정책정보: 위기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운영.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6.do로부터 2022. 6. 17. 인출.

한국청소년복지개발원 홈페이지(2022a). 청소년안전망 운영사업. https://www.kyci.or.kr/userSite/sub02_1.asp로부터 2022. 6. 17. 인출.

-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은 ‘위기 청소년 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 책무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9월부터 4개월의 시범 사업을 거쳐서 2020년 9개 지역, 2021년에는 15개 지역으로 시범 운영 중임(김지연, 2021).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문제점
 -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의 경우, 위기 청소년을 위한 보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서 책임 이행의 아쉬움 있음(김지연, 2021).
 - 청소년안전망 사업에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선별하는 방식이기 다르고, 해당하는 대상의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김지연, 2021).

○ 정신건강복지센터²⁹⁾

- 운영 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시행함(박진우, 허민숙, 2021).
 - 지역사회 내의 정신질환자에게 등록 및 사례관리와 재활 서비스 제공 및 교육과 훈련 등을 지원하며 타 기관과 연계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관리함.
 -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재활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을 수행함.
- 운영 장소: 각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용 가능함.
- 서비스 내용: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구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22b). 정신건강정책-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상담전화운영.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30401&PAGE=1&topTitle=로부터 2022. 6. 20. 인출.

〈표 5-7〉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내용

| | |
|----------------|--|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개선 사업 진행과 24시간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며, 자살위기 개입에 대한 체계를 운영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교육 지원을 하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검진하도록 하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사회안전망 구축,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정신보건 환경조성에 신경 쓰고 있음. |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통해 홍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상담 전화로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줌. • 보건복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자원봉사와 지역의 언론과 협력하고 긴급구조 등의 정신보건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22b). 정신건강정책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상담전화운영의 서비스.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304로부터 2022. 7. 1. 인출.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문제점

- 보건복지부에서 위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초기평가, 사례관리, 의료비 지원, 자살예방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비 지원 외에는 해당 사업이 지역주민 대상과 같이 시행되고 있어 차별성이 없음(박진우, 허민숙, 2021).
- 2019년 12월 기준 전국 241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센터는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등 4개소만 존재하여 전문 시설 확보가 시급함(박진우, 허민숙, 2021).
- 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 접근성을 위해 기관과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방법이 필요함.

□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지역사회 연계 현황의 문제점

○ 기관의 통합서비스 체계의 분절로 위기 아동·청소년에게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 각 부처별로 차별적인 지원으로 인해 위기 아동·청소년이 선별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음.
- 각 기관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연계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 보호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분절된 기관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

- 시스템 통합을 통해 누락되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 사각지대를 감소하는 것이 필요함.

○ 위기 아동·청소년의 담당부처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 각 부처별로 지원 가능한 서비스 연령의 차이가 있지만 일부는 중복되어 제공되고 있음.
- 부처별로 중복되는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인력과 경제적 낭비가 발생함.
- 한편으로는 정책지원에서 누락된 서비스 지원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청소년 증가하여 위기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방치되는 예도 있음.

○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인력·시설 부족.

- 코로나 19처럼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과 서비스의 제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이 있음.
-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시설이 제공되는 서비스 체계가 절실함.
- 기관의 사업이 중복적이며 다양하지 않고 '상담'에만 일몰된 접근으로 지원하고 있기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 확보가 필요함(문성호, 김혜리, 2012).

○ 학교의 정신건강 관리와 지역사회 연계의 소통 부재

-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영향을 주는 곳이기에 청소년에게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함(박성원, 안은선, 2021).
-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하면 상담을 통해 위(Wee)센터, 정신보건센터,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등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치료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인프라의 부족과 때로는 학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의 한계도 있어서 학교와 기관의 협력 부족이 나타나기도 함(진영란, 강미경, 이윤정, 2018).

-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꾸준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음. 자살 위험 있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 및 관리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우려와 관리 및 연계 시스템의 부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김호경, 신동희, 2015).
- 학교 안의 상담교사와 보건교사들의 협업이 힘든 점이나 제공받는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으며, 학교 안에서 정신건강관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진영란, 강미경, 이윤정, 2018).

3. 지역사회 서비스 분절

□ 학교급에 따른 학업중단(여성가족부, 2022b)

○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는 고등학교는 56.9%, 중학교는 27.3%였으며, 초등학교는 15.8% 순으로 고등학교 시기 학업중단 비율이 가장 높았음.

- 2015년 이후 학업중단 비율이 점차 증가함.
- 학업중단 이유는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해 의미가 없어서’가 37.2%였으며, 이는 가장 높은 비율임.
- 학업중단은 개인의 선택이나 이후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나이별, 발달 시기에 따른 서비스 개발 및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

○ 대도시, 중소도시 및 읍면 지역에 따라 학업중단 비율이 다름(백혜정, 송미경, 신정민, 2015).

-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농산어촌) 모두 학업중단 시기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고등학교 시기 학업중단 비율은 대도시는 70.5%, 중소도시 81.6%, 읍면지역(농산어촌) 83.4%임. 도시 규모에 따른 청소년의 인구를 감안했을 때, 대도시의 학업중단 청소년 인구는 많을 것으로 추측함. 하지만 중소도시, 읍면지역(농산어촌)의 인구 대비 학업중단 청소년 인구를 비교하면 중

소도시, 읍면지역(농산어촌)의 학업중단 청소년 발생 비율은 더 심각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학업중단 아동·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시설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 근거임(법제처, 2021).
 -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히 성장하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2022).
 - 2015년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시행함. 이 지원대책은 학교 밖 위기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 사례발굴, 진로지도, 지역사회 체계 구축하기 위한 기본 틀을 갖추었음(김희진, 백혜정, 2020).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담당함.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주된 업무.
 - 지역사회 자원 및 발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프로그램 정보제공 및 홍보, 우수사례 발굴, 인식 개선,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 2022a).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서비스대상자는 9~24세 학교 밖 청소년임(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 2022b).
 - 서비스대상자 연령(9~24세) 내에서 초·중학교에서 3개월 이상 결석한 자, 취학의무를 유예한 자,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 혹은 자퇴한 자, 고등학교를 미진학한 자, 잠재적인 학교 밖에 있는 대상자를 모두 포함함.
 - 꿈드림 현황.

- 전국 220개소로 고루 분포되어 있음(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2022b).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광역, 시, 도 지역에 위치함(김희진, 서고운, 김은정, 오신휘, 이희현 외, 2021).
- 도시 규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시설들이 고루 분포된 부분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5-8〉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현황

|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세종 |
|----|-----|----|----|----|----|----|----|----|----|----|----|----|----|----|----|----|----|----|
| 개소 | 220 | 26 | 17 | 9 | 9 | 6 | 3 | 5 | 31 | 12 | 13 | 16 | 10 | 23 | 15 | 21 | 3 | 1 |

자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2022b).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현황 참고.

□ 학교 밖 지원센터의 문제점

○ 그러나 도시 규모에 따라 인프라 설비, 문화시설, 청소년 이용 시설,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김희진 외, 2021 재인용; 조아미, 임정아, 2018).

-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을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의 특색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음.
- 대도시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으나,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인구가 많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고충이 있음. 중소도시 및 읍면 지역은 대도시와 비교하여 청소년 인구가 적으나 청소년 정책 및 관심도가 높은 편임. 특히 읍면지역은 교통시설이 불편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기관을 이용하는데 난관이 예상됨〈표 5-9 내용 요약〉.

〈표 5-9〉 도시 규모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특성 및 보완점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읍면지역 |
|-------------------|---|--|--|
| 지역 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 경제적 지원이 어려움. - 학교 밖 청소년의 관심도가 높음. -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으로 돌봄이 힘든 상황임. 이로 인해 비행과 학업중단이 나타남. -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의 인구가 많음. 이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수준이 낮음. - 청소년 정책의 활성화. - 원활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 청소년 인구 감소. -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이 높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서 학교 밖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 지역사회 네트워크 촉진. -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가 부족함. - 교통시설이 불편함. - 홍보가 어려움. |
| 학교 밖 청소년 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고충. - 위기상황 노출로 비행 행동이 증가함. - 이혼, 조부모, 한부모 가정 등 가정의 구조적 기능의 문제가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인 어려움. - 슬럼지역 안에서 집단행동이 증가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력, 불규칙적인 생활패턴을 보임. - 경제적 어려움. - 부모의 관심이 없음. |
| 지역사회 보완 사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예산지원이 요구됨. -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독립적인 공간과 시설이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 지원이 요구됨.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작업 장소가 확충되어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함. -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 - 지역사회의 재정후원이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전문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생활비 지원이 필요. - 취업 연계가 요구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준비, 지원공간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 -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선제 대응이 필요함. |

자료: 조아미, 임정아(2018) 자료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함(pp. 49-51, pp. 95-97, pp. 143-144).

○ 한편, 위기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적 지지체계 연계가 부족함.

- 위기 청소년 지원 기관의 이용자 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 아동·청소년이 어려움이 발생할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 경우’는 10명 중 9명,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경우’는 10명 중 1명이었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 친구나 선후배(72.2%), 부모님 혹은 보호자(64.1%), 청소년 기관, 시설 선생님(43.0%), 형제, 자매(33.9%), 학교 선생님(26.7%) 순으로 나타남(여성가족부, 2022a).
- 위기 아동·청소년이 어려움에 발생할 때, 공적인 지지체계보다 사적 영역에서의 지지체계를 더 의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발달단계에 따른 위기 아동·청소년의 욕구 해결 요구됨.

- 이와 함께 위기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는 진로준비, 일자리 및 자립 지원, 건강관리, 상담서비스, 활동/생활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여성가족부, 2022a). 이 중 7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진로준비, 일자리, 상담 분야임. 특히나 현재 위기 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45.9%)’, ‘진로 탐색(30.9%)’으로 가장 높았음(여성가족부, 2022a).
-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위기 아동·청소년 대상자가 더 많은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위기 아동·청소년이 원하는 서비스, 욕구의 심각성은 더 높을 것임.
- 성인 전환기를 맞이하는 위기 청소년은 진로나 직업, 생계 관련 고민이 있음.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는 학습 멘토, 문화행사 참여, 직업훈련, 취업 지원 등이었음(윤철경 외, 2019).
- 발달단계에 따라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욕구가 다름. 기존에 있던 위기 아동·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시설 내에서 욕구에 부합한 서비스 연계 및 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위기 아동·청소년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의 사각지대 발생.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업중단 시기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꿈드림에 연계됨. 사전에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가 어려운 현실임(여성가족부, 2022b).
- 의무교육 대상자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3월에 공포됨.
-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거하여 초등, 중등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 중등학교 아동·청소년은 학업중단 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됨. 이에 위기 아동·청소년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 그러나 고등학생은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니므로

법적인 규제로 학업중단 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정보 연계가 불가능함.

- 이에 학업중단을 고등학교 시기에 한 위기 청소년은 자발적으로 기관과 접촉하지 않는 이상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즉, 학교 급에 따른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분절됨.

□ 교육복지센터³⁰⁾

- 가정이 경제·문화적으로 어려운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2003년부터 시행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사업 대상학교가 아니므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2012년 서울시교육청이 비사업학교 지원방안으로 지역교육복지센터 설립,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전구훈 외, 2021).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지역교육복지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11조(지역교육복지센터)에 근거함.
 - 지원 대상: 가정 문제로 인한 경제·문화 취약계층 학생임.
 - 경제취약 학생: 법정 저소득층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기타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하)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정, 탈북청소년.³¹⁾
 - 그 외 교육취약 계층으로 학교장 추천, 기타 지역사회에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 학생.
 - 지원 내용: 교육 지원(학습지원, 부모교육·지원), 정서 지원(심리상담, 학교적응지원), 보건(의료지원), 문화(문화·여가체험활동), 네트워킹(지역사회연계)으로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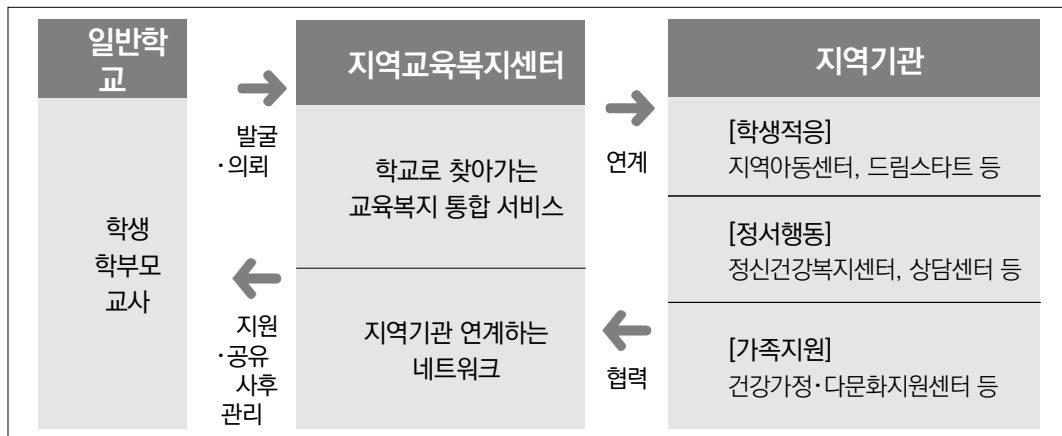
30) 서울시특별시교육청(2022a). 2022학년도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운영 매뉴얼. 서울시교육청.

31) 김재원(2021)의 연구 참조.

○ 교육복지센터 역할 및 체계

- 서울형 교육복지학교와 함께 교육복지통합지원팀 구축.
- 네트워크 거점기관: 서울형 교육복지학교와 함께 교육복지 통합지원팀 구축.
- 교육복지학교와 연계하여 교육복지대상자 지원,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담당자 연수 지원.

[그림 5-7]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역할 모형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2022a). 2022학년도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운영 매뉴얼(p.23)에서 그림 발췌.

○ 교육복지센터 운영 현황

- 서울시 전체 구(25개)에 전부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중(25개소).
- 서울시 학교와의 연계율: 1,314개교 중 77.5%인 1,019개교와 연계.
- 저소득 지원: 서울시(2022년 기준) 법정 저소득 학생 48,167명 중 17.9%에 해당하는 5,612명 지원 중임.
-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복지센터를 벤치마킹한 시범사업을 운영함(전구훈 외, 2021).
- 지원 대상: 경제 취약, 문화 취약, 적응 취약 학생 필수 30%임.

○ 교육복지센터 문제점

- 유관사업과의 대상 중복, 서비스 중복으로 인한 문제 발생.
 -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이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유사한 프로그램 중복 운영. 중복 지원문제 발생(문아람, 이윤환, 2018).
 - 한정된 자원 내에서 대상자 및 서비스 중복으로 인해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을 받고 탈락한 대상자는 지속적해서 탈락하는 대상자 및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문아람, 이윤환, 2018).
- 선별적, 한정적인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주정현, 2017).
 - 저소득,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선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제공 프로그램 문제
 - 진로, 가족지원 서비스 점검 필요(전구훈 외, 2021).
 - 수요자 특성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권성철, 2018).
 - 관계 기관과 유사한 서비스 제공, 교육복지센터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필요(문아람, 이윤환, 2018)
- 네트워크 문제(권성철, 2018).
 - 기관 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함.
 - 다른 지역센터와 담당자,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청 및 지역 돌봄기관들과 대상자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 서비스 중복문제 발생.
 - 학교의 폐쇄성으로 학교 내 교원과의 연계 및 지역사회의 학교 연계 모두 어려움(문아람, 이윤환, 2018).
 - 중앙부처인 교육부가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지 않아 각 시·군·구별 교육지원청에 따른 서비스 차이 발생, 지역 격차 발생(김선숙 외, 2020)
- 학교 및 대상자의 기관 접근성 문제
 - 서비스 접근이 대부분 담당자의 추천으로 발생, 서비스 대상자의 직접적인 기관 접근성이 낮음. 대상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상 학생의 보호자에게 복지기관에 대한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 필요(전구훈 외, 2021).

- 학교 관계자들이 교육복지센터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이로 인한 연계의 방해요인 및 분절 문제 발생(권성철, 2018).

□ 드림스타트센터³²⁾

-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동등한 출발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2007년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시·군·구에서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작됨. 2008년 ‘드림스타트’로 변경.
 - 아동복지법 제 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함.
 - 지원대상: 0세 자녀가 있는 임산부, 만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 만 13세 이상임에도 초등학교 재학 중일 경우 서비스 대상자 포함.
 - 우선지원 대상자 계층
 - 경제취약계층인 법정 저소득층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교육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및 학대피해아동, 그 외 교육취약 계층으로 학교장 추천, 기타 지역사회에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 학생.
 - 지원 내용: 신체건강, 인지 언어, 정서행동서비스, 부모 및 가족, 임산부 대상 교육, 아동통합사례관리 제공함.
-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현황³³⁾
 - 시군구 소속 전국 229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 드림스타트센터 문제점(문아람, 이윤환, 2018).
 - 타 부처 기관들과의 유사한 대상 및 서비스 제공으로 중복성 문제 발생.

3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20a). 드림스타트센터. <https://www.mohw.go.kr>로부터 2022.07.13. 인출.

33)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전국 드림스타트 현황. 보건복지부.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각 부처별 서비스가 분절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기준의 사각지대 문제 발생.
- 드림스타트 아동 중 절반이 학습지원, 건강검진, 정서영역에서 복수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중복지원 문제 발생, 사각지대 야기.
- 관련 기관과의 연계 부족으로 대상 아동이 받는 서비스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해 서비스 중복 및 누락 문제 발생.
- 특히 교육청이 드림스타트센터와의 연계에 관심이 없으며, 학교의 폐쇄적인 분위기로 인해 학교와의 연계가 가장 어려움(황옥경 외, 2013).
- 인력구조의 문제
 - 드림스타트 담당 공무원이 팀장의 역할이나, 보직 순환으로 인한 전문성 및 책임감 결여, 소통의 부재.
 - 통합사례관리사의 고용 불안정, 인당 평균 100여 명의 아동 사례관리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서비스 질 저하.
- 선별적이고 한정된 대상자 발굴
 - 만 12세 아동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청소년 시기에 대상자는 제외됨.
 - 선별적 시각의 대상자 선정: 잔여적이고 선별적인 접근으로 취약계층에게 관련 서비스가 치중되어 나타나 선별적인 서비스 제공 문제 발생함(유해숙, 이현숙, 2014).
 - 드림스타트 1개소 당 300명의 아동이 지정되도록 예산이 고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으로 후원자 개발이 어려워 대상자 추가 발굴 문제 발생.
- 서비스 간의 공백 발생, 서비스 연속성 문제
 - 방과 후 이용 프로그램 사이의 이동시간 및 틈새 돌봄공백으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가능성 문제(정선영, 송미령, 조유리, 2015).
 - 대상자의 상급학교 진학, 전학, 자퇴의 경우 관련 기관으로 대상자의 정보와 서비스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아 서비스 단절 발생함(유해숙, 이현숙, 2014).

- 홍보 및 서비스 접근성 문제(유해숙, 이현숙, 2014)
 - 학교 및 지역사회 관계자들의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연계가 되지 않고, 이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대상자들에게조차 내부 타 프로그램 정보전달이 부족함.
 - 센터 접근성이 안 좋으며,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고 공급이 한정되어 프로그램 접근성에도 문제가 야기됨.

□ 교육복지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 비교

○ 지원 대상 및 서비스 공통점 및 차이점³⁴⁾

- 교육복지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의 지원 대상자 나이, 대상 계층과 수준, 서비스 내용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
 - 대상자 나이의 경우 교육복지센터가 드림스타트센터에는 포함되지 않는 만13~18세의 대상자도 포함하여 서비스 연속성은 더 큼.
 - 두 센터 모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데, 공통으로 저소득층, 다문화 자녀, 그 외 교육취약 계층을 포함하며, 교육복지센터는 탈북청소년까지 더 넓은 범위의 대상 계층을 포함.
 - 지원 대상 수준은 두 센터 모두 대상자와 부모, 가족까지 지원됨.
 - 지원 서비스 내용의 경우 공통으로 부모교육·지원, 심리상담, 의료지원, 지역사회연계가 있으며, 교육복지센터는 추가로 학습지원과 학교적응을 지원하고 문화·여가 체험활동을 지원함. 드림스타트 센터는 통합적 사례관리와 가정방문을 지원함.

34) 김재원(2021)의 연구 참조.

〈표 5-10〉 교육복지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 대상자 및 지원 사업 비교

| 구분 | 교육복지센터 | 드림스타트센터 |
|---------|--|---|
| 대상자 나이 | 만 7세~18세 | 만 12세 이하 |
| 대상 취약계층 | 저소득층 다문화자녀 탈북청소년 그 외 교육취약계층 | 저소득층 다문화자녀 - 그 외 교육취약계층 |
| 대상 수준 | 대상자 부모/가족 지원 | 대상자 부모/가족 지원 |
| 서비스 내용 | 교육지원(학습지원, 부모교육·지원) 정서지원(심리상담, 학교적응지원) 보건(의료지원) 문화(문화·여가 체험활동) 네트워킹(지역사회연계) - | 교육지원(부모교육·지원) 정서지원(심리상담) 보건(의료지원) - 네트워킹(통합적사례관리, 지역사회연계) 기타(가정방문) |

주 : 김재원(2021). 청소년 교육복지 다각화 및 활성화 방안. p.20~22. 표 내용 발췌 및 재구성.

○ 교육복지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의 공통된 문제점

- 분절 문제 : 대상자와 서비스의 유사성을 가진 두 사업이 각기 다른 근거법령, 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전달체계, 재원 지원,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되어 서비스 분절의 문제 발생.
- 타 부처 관련 기관들의 유관사업들과 서비스 수준이 유사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아 한정된 지역사회 자원 사용의 효율성과 서비스 효과성이 저하됨(문아람, 이윤환, 2018; 유해숙, 이현숙, 2014).
- 저소득층과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이고 한정적인 대상자 기준으로 대상자 중복 및 쏠림현상으로 타 사업 탈락자 및 신규 대상자 참여 어려운 사각지대 발생(주정현, 2017; 유해숙, 이현숙, 2014).
- 네트워크 문제로 기간 관 연계가 되지 않아 대상자 정보 공유의 어려움, 학교 연계의 어려움, 서비스 중복 제공 확인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권성철, 2018; 문아람, 이윤환, 2018; 황옥경 외, 2013).
- 기관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 대상자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가 어렵고 학교와 다른 기관에서 교육복지센터 및 드림스타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문제가 파생됨(권성철, 2018; 유해숙, 이현숙,

2014; 전구훈 외, 2021).

- 대상자의 상급학교 진학, 전학, 자퇴의 경우 관련 기관으로 대상자 정보 및 서비스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고 정보 연계가 되지 않음으로 서비스 제공의 단절이 초래함(유해숙, 이현숙, 2014).

제2절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과 보호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법과 제도개선 방안 검토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구체화함(류정희 외, 2019).
-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 아동 지원체계 구축’, ‘통합성과 포괄성에 기반한 아동 보호체계 구축’,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공적체계 강화’를 포함한 추진목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함(류정희 외, 2019).
 -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 아동 지원체계’는 취약계층의 아동과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함.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서비스로의 전환을 이룸.
 - 부처별, 대상자에 따라 분절된 서비스 연계, 조정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의 중심의 예방적,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세움.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틀에 토대해 위기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에 초점을 맞춘 제도적 개선 방안 검토가 요구됨. 이에 본 고는 다음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1. 돌봄분절의 해결방안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개편
 - 온종일돌봄원스톱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상기관 확대 및 수요자 이용 중심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함(강지원 외, 2021; 이희현 외, 2021; 하봉운 외, 2021).
 -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대상기관 확대(이희현 외, 2021; 하봉운 외, 2021).

- 각 부처별 돌봄 신청 루트를 통합하여 손쉽게 돌봄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상기관 확대
 - 현재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한 돌봄 기관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곳임.
 - 학교돌봄터,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연계형 돌봄교실, 공동육아나눔터로 서비스 기관을 확대하여 상시, 일시, 틈새돌봄 서비스 신청 일원화를 통한 접근성 강화 및 효과적인 돌봄공백 대응 가능.
 - 돌봄기관에 원하는 시간대의 서비스가 없을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로 연결하여 시간제돌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접근성 강화.
- 돌봄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원스톱서비스와 돌봄기관간의 연계 강화.

○ 수요자 이용의 편리성 제고를 위한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개편

- 수요자의 이용 예측을 통한 서비스 매칭.
 - 부모의 고용형태(맞벌이, 프리랜서, 일시적 실직), 부모-자녀의 동선에 따른 돌봄기관 매칭시스템 개발이 필요함(이희현 외, 2021).

□ 돌봄기관 양적 확대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완화가 절실함.

- 돌봄기관 부족과 한정된 대상자 선정으로 이용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으며, 선별적인 대상자 선정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함(김근진 외, 2019; 김미정, 김동욱, 2021; 이해숙, 이영주, 2021; 김은정, 오신휘, 이희현 외, 2021).

○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인 공급확대가 필요함.

-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이 돌봄시설 의무설치 기준 법제화(이해숙, 이영주, 2021), 학교돌봄기관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함.
- 학교 및 지역사회 유휴교실, 공간 활용, 돌봄기관으로 전환해야 함(하봉운 외, 2021).

- 돌봄제공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 수급 확대해야 함(강지원 외, 2021; 장명립, 2019).

○ 대상자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해야 함.

- 학교 및 마을 돌봄기관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외하고 소득취약계층과 맞벌이 같은 돌봄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함.
- 맞벌이 가정 판단 기준 완화.
 - 맞벌이임에도 고용보험을 통한 맞벌이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특수고용, 일용직 등은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음(강지원 외, 2021).
 - 여가부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예외적으로 맞벌이를 고용보험가입자 외에 대학(원)생, 직업훈련생, 자영업, 근로 증빙이 어려운 15시간 이하 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맞벌이 가구 판단 기준을 완화함.
 - 더불어 맞벌이 가구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여 학생과 고용보험가입자 외에 직업훈련생, 자영업, 단기간근로자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증빙서류 제출기준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 선별적 서비스에서 벗어나 보편적 서비스로 대상자를 확대해야 함.
 - 선별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고소득 맞벌이 가정, 저소득 비맞벌이 가정이 돌봄공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김주리 외, 2021).
 - 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에 커짐에 따라, 기존 소득취약계층 및 돌봄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던 선별적인 돌봄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김은정, 장수정, 정영모 외, 2019; 최현임, 손가현, 2021).
 - 따라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로의 실질적인 확대가 요구됨(강지원 외, 2021; 최현임, 손가현, 2021).
-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 마련 문제점 완화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이용자들의 자부담 의지에 기반하여 수요자 이용료 부담 서비스를 확대해야 함(김은정, 오신희, 이희현 외, 2021; 김은정, 장수정, 정영모 외, 2019).

2. 정신건강 지원 분절의 해결방안

□ 각 부처별 분절된 서비스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락망을 가동해야 함.

- 통합된 정보시스템 제공의 필요성.
 - 현재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여러 기관과 연계·강화를 해야 함.
 -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제공되는 정신건강 선별검사의 분절화된 복지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다양한 위기 상황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연계가 필요함(류정희 외, 2018).
 - 체계 간 서비스의 형평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위기 아동·청소년의 예방과 발굴, 보호조치, 보호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부분에서 관리하는 공공 체계의 연계·통합 방안을 강구해야 함(이상정, 2021).
 - 아동·청소년 보호 기능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장기적인 통합을 생각해보면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욕구가 유사한 특징을 고려했을 때, 보건복지부의 아동 보호 업무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 업무의 통합이 불가피함(이상정, 2021).

○ 긴급상황 발생 시, 기관별 연계가 가능한 비상망을 구축해야 함.

- 코로나 19와 같은 긴급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 시, 위기 아동·청소년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함.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소득과 계층에 관계없이 동등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족친화정책을 추진해야 함(정익중, 2020).
- 비상망이 구축되면 위기 상황 발생했을 때 위기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어서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
 - 코로나 19 전·후로 심리·정서적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에게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체계·

인프라 확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함(김동훈, 2017).

- 코로나 19 이후 등교 제한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교육 취약생과 아동의 전 범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족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연계하고 협력해야 함(김선숙, 김진숙, 2020).

○ 위기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는 해외사례

- 영국의 CYP MHS(Children and Young People's Mental Health Service)는 정신건강 협력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공급하고 학교의 교내서비스를 보강하고 있음. 호주의 Headspace(국가청소년정신건강재단)에서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있음(박진우, 허민숙, 2021).
- 영국과 독일 및 호주에서는 다양한 위기 청소년들에게 국가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체계의 구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연령이나 담당 부처가 다르므로써 발생하는 건강서비스의 격차를 줄여 건강 영역과 보호 및 지원 서비스의 연속성과 지속성 확보를 하고 있음.
- 미국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중도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대한 접근을 우선적으로 하여 통합패키지를 제공을 바탕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백혜정 외, 2020).
- 미국 애리조나 북쪽에 위치한 정신건강기관(NARBHA)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소외되고 취약한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진료를 진행하는 정신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영국 정부는 보건의료(Health services)와 사회복지서비스(Social services)를 통합하여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는데 초점을 두어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김호경, 신동희, 2015).

□ 위기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학교의 역할

○ 학교에서 위기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노력

- 사전 예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 학교는 청소년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정신건강 서비스의 중요한 기반이 되며, 학생의 정신건강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음(하경희, 2017).
-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학교 교사는 정책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중·장기적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함(최은진 외, 2011).
-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체계적인 건강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자원이 학교 교육과정 중심으로 있으므로 스코틀랜드, 독일, 미국과 EU의 여러 나라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건강교육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성기선, 2019; 정현우, 2017; Bailey, 2006; CPPSE, 2013; O'Dea, 2005; UNESCO, 2014).

- 정신건강 사업을 수행하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

- 학교의 보건교사와 상담교사는 구조화된 매뉴얼에만 의지하여 문제에 개입하여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교육에 대한 자료나 연수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용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진영란, 강미경, 이윤정, 2018).
- 학교의 보건·상담교사가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 관리와 전문인력 배치 및 명확한 업무 분담과 기관 연계 및 전문 강사 확보를 위해서 지역사회에 협조를 꾸준히 요구하며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진영란, 강미경, 이윤정, 2018).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보호와 학교 재진입을 위한 제도 마련

-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주체적인 학교의 역할 필요

- 보호자에게서 이탈하여 가정 밖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해 개별화된 보호 서비스 제공을 하여 아동·청소년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보호체계 진입에서부터 자립 지원, 사후관리까지 연속적·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함(이상정, 2021).

-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에 재진입하기 위한 서비스 정책지원
 -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개소되어 있지만,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부족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어려우며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하여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백혜정, 송미경, 신정민, 2015).

3. 지역사회 서비스 분절의 해결방안

□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확대

○ 위기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때, 학교나 학교 밖에서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높아야 함.

- 학교 밖 청소년이 인지하는 ‘지역사회’는 1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한 거리 내를 말함.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하는 주된 서비스는 검정고시나 학습 멘토링, 직업훈련 등이었음(윤철경 외, 2019).
- 대도시의 경우 청소년 이용 시설의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음. 하지만 소규모 도시는 학교 밖 위기 아동·청소년이 사용 가능한 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임.

○ 중소도시,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 밖 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기존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함.
- ‘대도시 내 구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공유(윤철경 외, 2019)’처럼 도시 규모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 긴요함.
- 단, 중소도시, 읍면 지역은 대도시와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실제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주된 욕구인 진로, 직업체험 부분에서 서비스가 부족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함(김희진 외, 2021).

- 중소도시, 읍면 지역에서는 학교 밖 아동·청소년 대상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소규모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박승곤, 김수정, 2017) 소규모 지역별 진로, 학업, 심리 상담서비스 등에 심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여기에서 프로그램 제공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한정하지 않음(김희진 외, 2021).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로 중소도시, 읍면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예측함.

□ 학교급에 따른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학교급별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비중의 차이가 있음.

- 학교 밖 아동·청소년이 학업중단 시기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업중단을 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음(여성가족부, 2022c).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관되어 학교 밖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여성가족부, 2022b). 이는 학교중단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등학생은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리가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 학교 밖 아동·청소년은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고등학교 시기 학교 밖 청소년은 정보 접근성 취약으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됨.

○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현황 및 고민

- 학교 밖 청소년은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고민이 있음.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 진로에 관한 고민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5.0%, 2018년 35.0%에 이름(여성가족부, 2022c).
-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2015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며, 2019년 기준 약 39만 명 정도 예상함(여성가족부, 2022c; 허민숙, 2020).
- 실제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진로, 직업, 생계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남(윤철경 외, 2019).

○ 고등학교 시기 학교 밖 청소년 대상과 같은 사각지대 관리 필요.

- 학교 밖 아동·청소년 인구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학교 밖 아동·청소년 진로 및 직업 고민 비중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특히 성인 전환기를 앞둔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관리가 매우 절실한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 시기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와 법제 측면에서 함께 개선이 요구됨.
- 학교 측에서는 학교 밖 지원센터 이용 서비스 안내 등이 절실함.
- 법적인 측면에서는 고등학교 시기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개인정보가 학교 밖 지원센터와 같은 공적 영역으로 이관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함 (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3월에 공포된 내용).

□ 교육복지센터와 드림스타트의 교육복지서비스 연계(문아람, 이윤환, 2018)

-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교육복지센터를 운영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드림스타트를 운영 중임.
- 교육부가 드림스타트센터와의 연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드림스타트가 통합적 사례관리에 필요한 대상자 정보 및 교육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에 대해 알 수 있는 학교와의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황옥경 외, 2013).
 - 두 기관의 분절로 인해 비슷한 대상자, 비슷한 서비스 내용이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할분담이 되지 않고 있음(유해숙, 이현숙, 2014; 주정현, 2017).
- 두 기관이 연계하여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영국의 경우 아동학교가족부에서 교육과 복지서비스를 혼합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고 있음(박선영, 2009; 문아람, 이윤환, 2018 재인용).
- 이에 따라 학교 및 드림스타트와 연계하여 아동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기반으

로 통합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중앙부처 차원의 중점 기관이 필요함.

- 교육복지센터가 교육복지서비스 우선지원 사업 중점 기관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같은 교육부 소속 기관인 학교와 연계 강화가 가능함.
- 교육복지센터를 중점 기관으로 드림스타트와 연계하여 교육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분절의 문제 해결이 요구됨(김선숙 외, 2020).

○ 결론적으로 폐쇄적인 학교와 같은 중앙부처를 둔 교육복지센터의 역할 및 연계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교육복지서비스 중점 기관인 드림스타트 센터와 연계하여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교육복지센터가 교육복지통합서비스제공 중점 기관으로써, 드림스타트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회복하고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김선숙 외, 2020).

4. 법과 제도의 개선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역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활성화 구축이 요구됨.

-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단순 정보전달의 단편적 관리가 아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야 함.
 - 다양한 욕구의 부응에 필요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와 분절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긴요함(김용득, 2015).
 - 아동의 안전과 가족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분절된 현행 아동 보호체계의 통합을 이루어 이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동 보호체계를 검토해서 보완해야 함(류정희, 2018).
-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개발해야 함.
 - 정책적인 기능에서의 중복을 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책임성을 공유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중복과 누

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김예린, 2018).

- 각 기관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생하는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예방하고 분절화된 서비스 제공을 삼가며 대상자에게 집중이 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변화하고 있음(김현숙, 서윤, 2013).

○ 지역사회의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함.

- 학교의 인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연계 가능한 기관을 단순히 소개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여 위기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갖추어야 함.
- 청소년이 장시간 머물며 생활하는 학교 및 기관 등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검토해야 함(박진우, 허민숙, 2021).

□ 전문적인 인력의 발굴과 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

○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발굴해야 함.

- 전문인력의 확보와 역량 강화.
 - 학교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지원해야 함.
 - 전문 자격 시험을 통해 확보된 인력을 대상으로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외에 청소년상담사·지도사 등 다양한 전문가를 확보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시스템을 구성해야 함.
 - 학생들을 지지해주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도 방법의 개선과 예방적 차원의 보편적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함(박옥남, 2017).
- 일자리 보장을 통해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전문인력의 적합한 배치를 통해 업무 분담의 효율성 제고해야 함.

○ 사용 가능한 시설의 확충과 재정 확보가 필요함.

- 위기 아동·청소년에게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전체 시설 수가 사회적 수요에 비해 적으며 지역별·유형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지를 통해 청소년쉼터의 균형적인 설치를 위해 수요 파악을 체계적으로 해야 함(황진구, 김지연, 2020).
- 학교와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전문인력 발굴 및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필요
 - 학령인구의 변화와 경상성장률을 반영한 교부금 산정방식의 개선을 통해 재정을 확보해서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과 기타 교육까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발굴과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김학수, 202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협조 방안을 마련하여 부족한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함(민경준, 이일용, 2017).

□ 학교역할 강화 및 기관 연계

○ 지역 위기 아동 보호에 있어 학교의 지역사회 연계 중요성

- 학교와의 연계 없이는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 아동 보호가 어려움.
 -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필수적으로 학교와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와 원활한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개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정익중, 2012).
 - 학교에 지역사회의 모든 학령기 아동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아동의 입학, 전학, 퇴학, 자퇴와 같은 기본적 정보들 기관에 연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에서 진행 중인 서비스의 연속성과 효과성이 떨어짐(유해숙, 이현숙, 2014).
 -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아동들의 문제가 심각하고 다

양해집에 따라 위기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교내외 자원과의 협조가 중요하기에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임(임은미, 2014).

- 따라서 학교가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사각지대 없이 지역사회 내의 모든 위기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정익중, 2012; 유해숙, 이현숙, 2014; 임은미, 2014).

○ 지역 위기 아동 지원에 있어 학교 공간 활용이 중요함.

- 대상자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다른 기관으로 이동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비교적 지역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기관인 학교 안에서 서비스제공 공간 확보가 중요함(김민희 외, 2020).
-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 내 공간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원하고 있기에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야 함(김근진 외, 2019; 김민희 외, 2020).

○ 학교 폐쇄성 완화를 위한 학교 내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지원

- 학교의 폐쇄적인 특징으로 인해 학교와 지역사회 위기 아동 지원 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운 상황임(문아람, 이윤환, 2018; 임은미, 2014; 정익중, 2012; 황옥정 외, 2013).
- 학교 교장, 관계자들이 위기 아동에 대해 학교 외의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것을 멀리하고, 최대한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를 원함(임은미, 2014)
- 지자체-학교 협업모델의 개발에 있어서 교육지원청 소속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함. 이처럼 학교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태도가 중요함(김민희 외, 2020).
- 따라서,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 교장 및 관계자들이 위기 아동 지원 사업과 연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기관 연계를 위해 담당자 연수, 워크숍, 컨설팅을 제공하여 학교 내 담당자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권성철, 2018; 김민희 외, 2020; 정익중, 2012).

○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학교 역할의 다변화가 요구됨(강지원 외, 2021; 임선빈, 2015)

- 학교의 초기 역할은 ‘교육’이 명확했음.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육, 복지기관으로의 역할 확대가 요구됨. 현재 학교 내에서 초등돌봄과 교육복지같이 보육과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학교가 교육기관인가, 보육 및 복지기관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이미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 및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에 논의의 근거가 부족함. 학교의 역할에 대해 교육과 교육이 아닌 분야로 이분화하여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의 원활한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모동의서 역할 축소가 불가피함.

○ 부모동의서로 인해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어려움(임은미, 2014).

- 위기 아동 지원 및 외부 기관 연계를 위한 아동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에서 아동의 정보제공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야 함.
 - 아동이 스스로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원하더라도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연계, 지원이 어려워 학교 관계자가 부모를 설득해야 함.
 - 아동이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 기관에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때도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정여원 외, 2021).
- 특히, 위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에 있어서 부모의 심리적인 거부감으로 인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지역사회 병원 및 기관 연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정여원 외, 2021).
 - 아동의 위기가 부모로 인하여 발생했을 경우 부모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연계를 더 불편해함.
 - 이러한 과정이 학교 관계자의 업무 피로도를 과증시키고 있으며, 지역사

회 자원 연계에 대한 방해요인이 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아동이 위기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적 개입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아동의 위기 상황이 악화됨(정여원 외, 2021).

○ 부모들이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정여원 외, 2021).

- 본인의 자녀가 위기 학생이며, 현재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정보가 비밀유지가 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함.
- 특히,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소아 청소년 정신과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자료가 남아 향후 진로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거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
- 지역사회 전문기관의 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해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아동의 부모들이 서비스 비용 부담감을 느낌.

○ 각 기관에서 원활한 부모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비함.

- 학교 관계자가 직접 위기 아동에 대한 지원과 자원 연계가 필요함을 부모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자 함(임은미, 2014).
- 지역사회 센터 및 병원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심리적인 거부감을 줄이고 서비스 지원 및 연계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여 부모들의 동의를 끌어내고자 노력함(정여원 외, 2021).
- 하지만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 관계자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임은미, 2014; 정여원 외, 2021).

○ 따라서, 법적·제도적인 차원의 해결방안이 필요함(정여원 외, 2021).

- 부모들이 걱정하는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소득이나 위기 상황 정도에 따른 비용지원이 아닌, 보편적 차원의 비용지원과 긴급한 상황을 위한 긴급지원 예산이 필요함.
- 아동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위기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서

비스 제공에 대해 부모동의서의 역할을 축소하여, 위기 상황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함.

-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위기 아동·청소년들에 대해 본인이 서비스 지원 및 연계를 원할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위기 상황이 심각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문기관에 연계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배수현, 성희자, 2020; 정여원 외, 2021 재인용).

제3절 소결

□ 돌봄의 분절

○ 돌봄 분절 현황

- 현재 돌봄은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학교돌봄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마을돌봄으로 나뉘며, 각 부처별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 기관이 있음.
 - 학교돌봄으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연계형 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 기반의 학교돌봄터가 있음.
 - 마을돌봄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와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음.
- 학교돌봄과 마을돌봄간의 분절 해결을 위한 연계 현황
 - 각 부처별 돌봄 서비스 분절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온종일돌봄체계, 학교돌봄터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 분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
 - 각 부처 간 서비스 및 대상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돌봄 서비스의 연속성 및 한정된 지역사회 돌봄자원 활용의 효과성이 떨어짐.
 - 우선 지원 대상자가 대부분 경제취약, 맞벌이와 같은 돌봄취약 가정으로 대상자가 중복되어 일부 대상자에게 쏠림현상이 나타남.
 -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선별적인 대상자 선정 및 기관 서비

스별 대상자 중복의 문제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함.

○ 돌봄분절의 해결방안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개편방안
 - 각 부처별 돌봄 서비스 신청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및 서비스간의 연계성 강화.
 - 이를 위해, 현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학교돌봄터,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연계형 돌봄교실,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한 서비스 기관 확대.
- 돌봄기관 양적 확대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완화
 -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의 양적 확대를 위해 돌봄시설 의무설치 기준 법제화, 학교 및 지역사회 유휴공간 적극 활용, 인력 확대가 필요함.
 - 선별적인 대상자 선정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맞벌이 가정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보편적 서비스로의 확대를 위해 대상자 우선 선정 기준 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함.
 - 돌봄기관의 양적 증가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부담을 덜기 위해 돌봄 서비스 자부담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신건강 지원의 분절

○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현황

- 위(Wee)프로젝트
 - 위(Wee)프로젝트는 위기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로 연결된 다중 안전망을 통해 상담과 교육 및 연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기관에서 전문가의 개입 통해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위(Wee)클래스는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동료 교사에게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약한 경우가 있으며 교사가 모든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한계가 발생 되고 있음.
 - 위(Wee)센터는 One-Stop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위기 학생에 대해 개입을 하고 있으나, 기관의 규모나 인력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지

원이 다르며, 위(Wee)센터 상담사는 위기 개입에 대한 특화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의 상담사와 비슷한 업무를 진행하기도 함.

- 위(Wee)스쿨을 이용하는 학생은 위탁 생활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치유하고 사회 적응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시 학교로의 재진입이 가능한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 가정형 위(Wee)센터는 공동생활과 위기 개입에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어 센터에서 적응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관계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이 추가로 필요함.
 - 병원형 위(Wee)센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이 상담과 교육과 치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전문인력의 부족과 다른 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안전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의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고위험군에 대한 정의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 선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원의 아쉬움이 있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존의 다른 사업과 차별성이 없으며, 특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특화된 시설이 적어서 전문 시설 확보가 시급함.

○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과 지역사회의 분절

- 통합서비스체계의 분절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이 있어 위기 아동·청소년에게 연계 가능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기 아동·청소년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의 부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학생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학교에서의 정신건강 관리가 지역사회와 소통 부재로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 정신건강 지원 분절의 해결방안

- 각 부처별 분절된 기관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락망을 가동하여 분절된 기관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위기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함.
 - 국가의 재난이나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비상망을 갖추어 위기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축해야 함.
 - 위기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는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우리도 체계적인 정책과 법체계를 마련해야 함.
- 위기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학교의 역할
 - 사전적·예방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가 주도적으로 위기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전문인력 개발을 위해 교육과 연수를 제공하고, 재정 확보를 통해 시설을 확충하여 학교에서 주체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지역사회 서비스 분절

○ 지역사회 서비스 분절 현황

-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고등학교 시기 청소년의 학업중단 비율이 가장 높음.
- 도시 규모에 따라 학업중단 비율이 다름.
- 학교 밖 지원센터의 문제점
 - 위기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적 지지체계 연계가 부족함.
 - 위기 아동·청소년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의 사각지대 발생함.
- 교육복지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의 문제점
 - 각 센터는 서비스 이용 대상자, 서비스 유사성이 있음. 다만, 서로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주무 부처도 상이함. 각기 다른 사업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

되어 서비스 분절의 문제 발생함.

○ 지역사회 서비스 해결방안

-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확대
 - 위기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때, 학교나 학교 밖에서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높아야 함.
 - 중소도시,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 밖 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학교급에 따른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 마련 강구
 - 고등학교 시기 학교 밖 청소년 대상과 같은 사각지대 관리 필요.
 - 학교 측에서는 학교 밖 지원센터 안내와 이용 서비스 안내 등이 절실함.
 - 법적인 측면에서는 고등학교 시기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개인정보가 학교 밖 지원센터와 같은 공적 영역으로 이관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함.

□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역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단순 정보전달의 단편적 관리가 아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야 함. 이와 함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가 절실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전문인력 발굴 및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함.

○ 학교 역할 및 기관 연계 강화가 필요함.

- 학교 폐쇄성 완화를 위한 학교 내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지원이 요구됨.
- 시대에 맞춘 학교 역할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임.
-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의 원활한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모동의서 역할이 축소되어야 함.



제6장

보호소년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구축

제1절 보호와 지원의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소년 현황과 실태

제2절 국외사례: 보호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제3절 보호소년에 대한 복지적 지원과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의 확장: 법과 제도개선방안 검토

제4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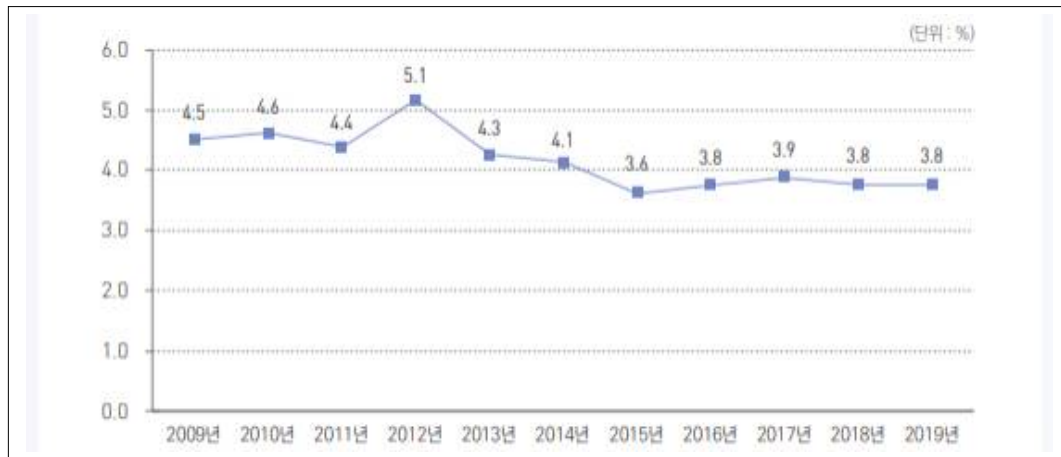
제 6 장

보호소년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구축

제1절 보호와 지원의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소년 현황과 실태

- ‘보호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의 대상’인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이들 소년 사법체계 내에 있는 소년을 포함하여 범죄피해 소년도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정책대상이므로 현황과 실태 파악을 토대로 통합적 지원을 모색해야 함.
-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동법 제1조), 동 법률에 근거한 보호의 대상을 범죄소년(14세~19세), 촉법소년(10~14세), 우범소년(10세 이상)으로 구분함.
 - 최근 10년 간 우리나라 전체 범죄 대비 소년 범죄의 발생 추이를 보면 2012년에 5.1%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여 2018년부터 3.8% 수준을 유지함. 이는 동일 연령대 아동·청소년 인구 대비 약 6만 6천 여 명 수준임 (대검찰청, 각 년도 범죄분석).

[그림 6-1] 소년범죄 발생 비율 추이



자료: 1) 대검찰청. (2009~2020). 각년도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2) 김리사. (2020).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과 시사점. p.2, 그림.

- 2011년 이후 소년범죄의 유형과 양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절도, 장물, 사기 등 ‘재산범죄’가 매년 약 4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폭행·상해 등 ‘강력(폭력)범죄’, 교통사범 및 저작권법 위반 등 ‘기타’ 순이며 강력(흉악)범죄는 약 5% 수준임.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매개로 한 사기, 횡령, 「저작권법」 위반 행위, SNS와 랜덤채팅어플 등을 경로로 하는 폭력, 성범죄 가피해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시, 거시환경의 개선 뿐 아니라 온라인 유해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함.

〈표 6-1〉 소년범죄 범죄 유형

| 연도 | 전체 범죄자 (명) | 소년 범죄자 ¹⁾ (명) | 소년범죄 유형별 구성비(%) | | | | |
|------|------------------|--------------------------------|-----------------|--------------------|----------------------------|----------------------------|------------------|
| | | | 구성비 (%) | 재산범죄 ²⁾ | 강력(폭력) 범죄 ³⁾ | 강력(흉악) 범죄 ⁴⁾ | 기타 ⁵⁾ |
| 2011 | 1,908,000 | 83,068 | 4.4 | 45.7 | 26.8 | 4.0 | 23.6 |
| 2012 | 2,118,000 | 107,490 | 5.1 | 44.3 | 30.5 | 2.9 | 22.3 |
| 2013 | 2,147,000 | 91,633 | 4.3 | 49.9 | 24.1 | 2.8 | 23.2 |
| 2014 | 1,880,000 | 77,594 | 4.1 | 46.7 | 24.9 | 4.1 | 24.2 |
| 2015 | 1,949,000 | 71,035 | 3.6 | 45.1 | 24.6 | 3.8 | 26.4 |
| 2016 | 2,020,000 | 76,000 | 3.8 | 43.5 | 25.6 | 4.4 | 26.4 |
| 2017 | 1,862,000 | 72,759 | 3.9 | 39.9 | 28.9 | 4.8 | 26.4 |
| 2018 | 1,749,000 | 66,142 | 3.8 | 40.1 | 29.8 | 5.3 | 24.8 |
| 2019 | 1,755,000 | 66,247 | 3.8 | 42.0 | 28.1 | 5.5 | 24.4 |

주: 1) '17년까지 10~18세 피의자, '18년부터는 14~18세 피의자

2)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등

3) 공갈, 폭행·상해 등

4)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5) 교통사범, 저작권법 위반, 기타

자료: 1) 대검찰청. (2009~2020). 각년도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2) 통계청 홈페이지. 「청소년통계」.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9790&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에서 2022년 6월 22일 인출.

- 같은 기간, 14세 이상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높아 16~18세 소년의 비율이 매년 전체 소년범죄자의 약 70%를 차지함. 반면 13세 이하 촉법소년은 2017년 기준 전체 소년범죄자 대비 약 0.1%(93명) 수준임.
- 「소년법」 상 보호처분(1호~10호)을 받은 소년은 2014년부터 연간 약 2만 4천 여 명인데, 이들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18세 미만 39.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6세 미만 28.8%, 19세 미만 17.4%, 14세 미만 14.2% 순임.

〈표 6-2〉 연령별 소년범죄 발생 현황

(단위: 명, %)

| 연도 | 계 | 촉범소년 | 14세 | 15세 | 16세 | 17세 | 18세 |
|------|--------------------|--------------|------------------|------------------|------------------|------------------|------------------|
| 2011 | 83,068 (100.0) | 360 (0.4) | 5,189 (6.2) | 17,084 (20.6) | 21,815 (26.3) | 19,936 (24.0) | 18,684 (22.5) |
| 2012 | 107,490 (100.0) | 856 (0.8) | 12,978 (12.1) | 21,009 (19.5) | 26,080 (24.3) | 24,140 (22.5) | 22,427 (20.9) |
| 2013 | 91,633 (100.0) | 471 (0.5) | 11,338 (12.4) | 16,645 (18.2) | 20,463 (22.3) | 21,208 (23.1) | 21,508 (23.5) |
| 2014 | 77,594 (100.0) | 37 (0.0) | 9,712 (12.5) | 14,041 (18.1) | 16,940 (21.8) | 17,517 (22.6) | 19,347 (24.9) |
| 2015 | 71,035 (100.0) | 64 (0.1) | 7 (0.0) | 14,387 (20.3) | 17,624 (24.8) | 18,231 (25.7) | 20,722 (29.2) |
| 2016 | 76,000 (100.0) | 84 (0.1) | 7,530 (9.9) | 13,789 (18.1) | 17,589 (23.1) | 17,607 (23.2) | 19,401 (25.5) |
| 2017 | 72,759 (100.0) | 93 (0.1) | 7,703 (10.6) | 12,376 (17.0) | 16,391 (22.5) | 17,358 (23.9) | 18,838 (25.9) |
| 2018 | 66,142 (100.0) | 0 (0.0) | 8,321 (12.6) | 11,595 (17.5) | 13,306 (20.1) | 15,513 (23.5) | 17,407 (26.3) |

주: 2018년 범죄자 연령 집계부터 14세 미만 피의자를 제외함.

자료: 김리사. (2020).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과 시사점. p.3, 표.

〈표 6-3〉 보호처분 대상 소년의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 연도 | 계 | 14세 미만 | 16세 미만 | 18세 미만 | 19세 미만 |
|------|-------------------|-----------------|------------------|------------------|-----------------|
| 2011 | 35,072 (100.0) | 3,924 (11.2) | 11,443 (32.6) | 14,861 (42.4) | 4,844 (13.8) |
| 2012 | 36,150 (100.0) | 5,071 (14.0) | 11,970 (33.1) | 14,613 (40.4) | 4,496 (12.5) |
| 2013 | 31,952 (100.0) | 4,334 (13.6) | 9,241 (28.9) | 13,434 (42.0) | 4,943 (15.5) |
| 2014 | 24,529 (100.0) | 2,894 (11.8) | 7,085 (28.9) | 10,013 (40.8) | 4,537 (18.5) |
| 2015 | 25,911 (100.0) | 3,016 (11.6) | 7,166 (27.7) | 10,925 (42.2) | 4,804 (18.5) |
| 2016 | 23,526 (100.0) | 2,858 (12.2) | 6,054 (25.7) | 10,434 (44.3) | 4,180 (17.8) |
| 2017 | 24,383 (100.0) | 3,365 (13.8) | 6,086 (25.0) | 10,467 (42.9) | 4,465 (18.3) |
| 2018 | 24,494 (100.0) | 3,483 (14.2) | 7,043 (28.8) | 9,701 (39.6) | 4,267 (17.4) |

자료: 김리사. (2020).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과 시사점. p.3, 표

- 한편, 경찰단계에서 파악되는 촉범소년의 규모를 보면, 2018년 기준 촉범 소년(10~13세)은 약 8천 7명 여 명인데 여기에는 우범사건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하지 않음. 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이 완료된 소년범 중

촉법소년은 2017년까지 매년 100명 미만의 규모임. 따라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 논의 이전에 소년범죄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를 개선하는 등 근거기반의 소년사법제도 추진이 요구됨.

-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청장이 바로 법원에 송치하므로 원칙상 범죄통계원 표 작성 대상이 아니지만 그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일부 포함되어 왔는데, 2018년부터 범죄자 연령 집계 시부터 제외하고 있음.
- 즉, 현재 소년보호사건 접수 현황 중 경찰서장 송치, 보호자 등에 의한 통고에는 촉법소년 뿐 아니라 우범사건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촉법소년 통계라 볼 수 없음.

〈표 6-4〉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 현황

(단위: 명, %)

| 구분 | 계 | 법원송치 | 검사송치 | 경찰서장송치 | 타소년부에서 이송 | 보호자등에 의한 통고 |
|------|-------------------|--------------|------------------|-----------------|----------------|--------------|
| 2018 | 33,301 (100.0) | 954 (2.9) | 22,578 (67.8) | 8,835 (25.0) | 1,027 (3.1) | 407 (1.2) |

자료: 경찰청. (2020). 경찰범죄통계.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3_2020.jsp에
서 2022.7.25.인출

- 2019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미성년범죄자는 64,152명으로 10명 중 6명은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보호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는 14.8%에 달함. 이는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에 따라 초범 비율은 감소하는데 비해 소년범죄 재범률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범 예방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표 6-5〉 미성년범죄자 보호처분 상황

(단위: 명, %)

| 계 | 없음 | 보호처분 횟수 | | | | 미상 |
|-------------------|------------------|------------------|----------------|----------------|-----------------|----------------|
| | | 소계 | 1회 | 2회 | 3회 | |
| 64,152 (100.0) | 40,205 (62.7) | 18,045 (28.1) | 5,732 (8.9) | 2,834 (4.4) | 9,479 (14.8) | 5,902 (9.2) |

자료: 경찰청. (2020). 경찰범죄통계.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3_2020.jsp에
서 2022.7.25.인출

-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미성년범죄자 가운데 재범자는 26,896명으로 이들 중 과반 이상(51.3%)이 동일한 죄종으로 재범을 하는데 이들 동종 재범 소년의 42.5%가 1년 이내에 재범을 하고 6개월 이내 재범 비율도 28%에 달함. 또한 다른 범죄로 재범을 한 경우도 13,082명에 달하며 1년 이내 재범자가 30.1%를 차지하여 재범 억제를 위해 '1년 이내'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

〈표 6-6〉 미성년범죄자 재범종류 및 기간(동종)

(단위: 명, %)

| 계 | 동종 | | | | | | | |
|-------------------|------------------|----------------|-----------------|----------------|-----------------|----------------|--------------|--------------|
| | 소계 | 1개월이내 | 3개월이내 | 6개월이내 |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3년초과 |
| 26,896 (100.0) | 13,787 (51.3) | 2,660 (9.9) | 2,769 (10.3) | 2,103 (7.8) | 3,902 (14.5) | 1,369 (5.1) | 741 (2.8) | 243 (0.9) |

자료: 경찰청. (2020). 경찰범죄통계.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3_2020.jsp에서 2022.7.25.인출

〈표 6-7〉 미성년범죄자 재범종류 및 기간(이종)

(단위: 명, %)

| 이종 | | | | | | | |
|------------------|----------------|----------------|----------------|-----------------|----------------|--------------|--------------|
| 소계 | 1개월이내 | 3개월이내 | 6개월이내 |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3년초과 |
| 13,082 (48.7) | 2,224 (8.3) | 2,410 (9.0) | 1,913 (7.1) | 3,947 (14.7) | 1,426 (5.3) | 795 (3.0) | 367 (1.4) |

자료: 경찰청. (2020). 경찰범죄통계.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3_2020.jsp에서 2022.7.25.인출

○ 현재 '소년 범죄피해자(범죄피해 소년)'의 개념과 연령을 별도로 규정한 법률이 없어 보호소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년법」을 적용할 경우 19세 미만의 소년 가운데 범죄피해자로 정의할 수 있으나 경찰범죄통계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현황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경찰범죄통계에서 20세 이하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은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로 제공하는데, 2019년 기준 전체 범죄피해자 가운데 20세 이하는 94,371명으로 약 5.9%의 비율을 차지함. 이 가운데 남자는 53,491명, 여자는 40,880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2,611명 더 많았

고 12세 이하 범죄피해자의 경우 남자는 7천 명, 여자는 5천 명을 초과함.

〈표 6-8〉 피해자 연령별 현황(남자)

(단위: 명, %)

| 계 | 남자 | | | | |
|----------------------|------------------|----------------|----------------|----------------|-----------------|
| | 소계 | 6세 이하 | 12세 이하 | 15세 이하 | 20세 이하 |
| 1,587,866 (100.0) | 739,995 (9.9) | 2,105 (0.1) | 5,135 (0.3) | 7,160 (0.5) | 39,091 (2.5) |

자료: 경찰청. (2020). 경찰범죄통계.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3_2020.jsp에
서 2022.7.25.인출

〈표 6-9〉 피해자 연령별 현황(여자)

(단위: 명, %)

| 계 | 여자 | | | | |
|----------------------|-------------------|----------------|----------------|----------------|-----------------|
| | 소계 | 6세 이하 | 12세 이하 | 15세 이하 | 20세 이하 |
| 1,587,866 (100.0) | 458,318 (28.9) | 1,584 (0.1) | 3,903 (0.2) | 5,470 (0.3) | 29,923 (1.9) |

자료: 경찰청. (2020). 경찰범죄통계.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3_2020.jsp에
서 2022.7.25.인출

□ 보호소년이 소년사법체계로 진입하는 첫 번째 관문은 ‘경찰’임. 또한 경찰은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사법기관이기도 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보호소년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 뿐 아니라 다이버전(Diversion)을 운영하여 소년비행의 비범죄화를 통한 재범 억제에 기여함. 이에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경찰의 선도프로그램 등 다이버전과 위기아동·청소년 발견(발굴) 현황을 간략히 검토함.

○ [청소년선도프로그램 운영]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 목적으로 경찰 자체 운영 선도프로그램 이 외 청소년 단체 및 신경정신과병원과 연계한 선도프로그램도 운영 중임.

- 2020년 기준 경찰의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 1,460명, 즉결심판 1,915명, 가피해 청소년에 대한 생활·의료·법률·상담지원 등 2,641건이 지원됨.
- 다만 현재 경찰단계에서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훈방하는 등 다이버전은

경찰의 「소년업무규칙」을 근거로 하여 법적 근거가 없음. 판례에서 경찰의 ‘훈방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경찰 다이버전 시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김지연 외, 2018).

〈표 6-10〉 경찰의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 처분결정 | | | | 지원결정 | | | | | | | |
|------|-------|-------|-------|-----|-------|-------|-------|-------|-------|-------|----|----|
| | 계 | 훈방 | 즉심 | 입건 | 지원 인원 | | | 지원 건수 | | | | |
| | | | | | 계 | 가해 | 피해 | 계 | 생활 | 상담 | 의료 | 법률 |
| 2018 | 3,401 | 1,474 | 1,830 | 97 | 2,151 | 1,221 | 930 | 2,317 | 915 | 1,277 | 75 | 50 |
| 2019 | 3,526 | 1,611 | 1,796 | 119 | 1,851 | 842 | 1,009 | 2,099 | 902 | 1,120 | 64 | 13 |
| 2020 | 3,501 | 1,460 | 1,915 | 126 | 2,428 | 1,329 | 1,099 | 2,641 | 1,077 | 1,513 | 35 | 16 |

자료: 경찰청. (2021). 경찰백서. 3장, p.169.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6_2021.jsp에서 2022.7.25.인출

〈표 6-11〉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 종류

| 명칭 | 프로그램 내용 | 비고 |
|----------------------------|--|-------------------------------|
| 전문기관 연계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 청소년 기관과 연계, 청소년 상담사 등 전문가가 집단상담, 미술치료 등을 진행 | -2020년 기준 232개 -15,243명 연계 |
| 치유 선도프로그램 (마음나눔교실) | 신경정신과 의사 및 임상 심리사 등 전문가가 진행하는 자기통제, 인간관계 형성 프로그램 | -2020년 기준 43개 -56명 연계 |
| 경찰 선도프로그램 (희망동행교실) | SPO가 경찰시스템 및 관련 매뉴얼을 활용하여 회복적 접근 방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 -2020년 기준 179개 -8,165명 연계 |

자료: 경찰청. (2021). 경찰백서. 3장, p.170.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6_2021.jsp에서 2022.7.25.인출

○ [위기청소년 발견·연계 및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경찰은 매년 ‘학교,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 집중 발굴 기간’ 운영(6월, 11월) 등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을 발굴 지원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근거로 청소년의 일탈, 비행, 조장하는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행위(학대, 폭력 등), 유해매체, 부당노동행위(근로권익보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

- 2020년에는 가정 밖 청소년 1,451명, 학교 밖 청소년 5,393명을 발견하여 연계 지원함. 특히 같은 기간 가출팸 125개를 발견(674명)하여 ‘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경찰청, 2021, 171), 다만 ‘해체’에 그치지 않고 주거지원, 사회안전망 연계 등 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움.

- 2020년에는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음란·폭력매체 등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 유흥주점·비디오방 등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숙박업소의 이성혼숙 묵인 행위 등 총 7,935명의 위반사범을 적발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노력을 전개함(경찰청, 2021, 171).

〈표 6-12〉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발견, 지원현황(2020년 기준)

(단위: 건, 명)

| 발견인원 | 연계조치(건) | | | | | 가출팜 해체 | |
|-------|---------|-------|------|--------|--------|--------|-----|
| | 계 | 가정복귀 | 쉼터연계 | 청소년안전망 | 선도프로그램 | 개 | 명 |
| 1,451 | 1,741 | 1,071 | 286 | 252 | 132 | 125 | 674 |

자료: 경찰청. (2021). 경찰백서. 3장, p.171.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6_2021.jsp에서 2022.7.25.인출

〈표 6-13〉 경찰의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지원현황(2020년 기준)

(단위: 건, 명)

| 발견인원 | 연계조치(건) | | | | |
|-------|---------|------|-------|--------|--------|
| | 계 | 학교복귀 | 지원센터 | 청소년안전망 | 선도프로그램 |
| 5,393 | 5,642 | 182 | 4,590 | 393 | 477 |

자료: 경찰청. (2021). 경찰백서. 3장, p.171.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6_2021.jsp에서 2022.7.25.인출

〈표 6-14〉 경찰의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단속 현황(최근 3년)

(단위: 건, 명)

| 구분 | 계 | 청소년 유해업소 | 청소년 유해약물 | | | | 청소년 유해행위 | 청소년 유해매체 |
|------|-------|----------|----------|-------|-------|----|----------|----------|
| | | | 계 | 술 | 담배 | 기타 | | |
| 2018 | 9,567 | 276 | 8,800 | 7,167 | 1,609 | 24 | 420 | 71 |
| 2019 | 8,399 | 299 | 7,617 | 6,486 | 1,103 | 28 | 463 | 20 |
| 2020 | 7,935 | 229 | 7,093 | 6,003 | 1,107 | 19 | 573 | 40 |

자료: 경찰청. (2021). 경찰백서. 3장, p.172.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6_2021.jsp에서 2022.7.25.인출

- [아동학대]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일환으로 2016년 4월부터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배치함. 112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되는 아동학대 사례도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APO는 아동보호팀(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동행 출동하여 현장조사, 학대 여부 판단, 아동의 보호 및 수사를 진행 등 일련의 역할을 수행함.
- 이와 함께 2016년부터 교육부와 협업하여 초등학교 미입학 아동, 장기결석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시행함. 경찰을 포함하여 만6세 이상 아동에 대한 부처 간 합동 점검은 학교와 지자체가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경찰 수사와 사후관리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표 6-15〉 아동학대 신고 건수(112신고시스템)

(단위: 건)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 소계 | 6세 이하 | 12세 이하 | 15세 이하 | 20세 이하 |
| 아동학대 신고 | 10,830 | 12,619 | 12,853 | 14,484 | 16,149 |

자료: 경찰청. (2021). 경찰백서. 3장, p.144.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6_2021.jsp에서 2022.7.25.인출

- [실종아동] 경찰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찰청 예규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실종아동과 가출인 발견 등의 업무를 수행함. 실종아동의 범위는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최근 2년 간 매년 약 2만 여 명의 실종아동 신고 접수를 처리함.

〈표 6-16〉 법 개정에 따른 ‘아동 등’ 용어 정의 변화

| 제정 시(2005.12.1.) | 1차 개정(2011.8.4.) | 2차 개정(2013.6.4.)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신고당시 14세 미만 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당시 14세 미만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당시 18세 미만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 치매관리법상 치매환자(연령 구분 없음) |

자료: 경찰청. (2021). 경찰백서. 3장, p.147.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6_2021.jsp에서 2022.7.25.인출

〈표 6-17〉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 계 | | 18세 미만 아동 | |
|------|--------|-----|-----------|-----|
| | 접수 | 미발견 | 접수 | 미발견 |
| 2019 | 42,390 | 33 | 21,551 | 9 |
| 2020 | 38,496 | 161 | 19,146 | 105 |

자료: 경찰청. (2021). 경찰백서. 3장, p.148.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6_2021.jsp에서 2022.7.25.인출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하여, 현재 촉법소년의 정확한 규모와 특성에 대한 통계 자체가 부재하므로 소년의 인권 보호와 근거기반의 소년사법정책 수립, 추진을 위해서는 경찰청, 법원행정처 등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통계생산 및 관리부터 선행되어야 함.
- 현재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촉법소년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소년범죄 재범자 비율 증가의 경우 대다수가 초범인 촉법소년 통계가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배제할 수 없고,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경향에 대한 통계도 신뢰할 수 없음.
- 「소년법」을 근거로 한 촉법소년(10~13세)의 비행 통계는 최초 통계원표를 작성하는 경찰청, 촉법소년 통합정보를 관리하는 법원행정처 등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통계관리를 통해 근거기반의 정책 추진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제2차 권고안을 통해 「소년법」 내 촉법소년 규정을 존치하는 한, 발생현황과 처리결과와 관련된 통계 수집이 가능하도록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해당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함(법무부, 2020).

제2절 국외사례: 보호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1. 국제협약과 해외 소년사법체계의 주요 동향

□ 이 부분에서는 소년 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의 실효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과 해외 소년사법체계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보호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³⁵⁾

○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하는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규칙, 1985년) 제4조는 소년의 행사책임 연령 개념을 설정하는 법률과 제도에서 ‘정서적·정신적·지적 성숙에 관한 사실을 고려하여 행사책임 최저 연령의 시작을 너무 낮은 연령대로 정하지 말 것’을 권고함.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12세 이하로 행사책임 연령을 낮춘 국가에 대해 연령을 상향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러한 권고에 따라 영국은 8세에서 10세, 캐나다는 7세에서 12세, 호주는 7세에서 10세로 연령을 상향 조정한 바 있음. 즉, 영국의 경우 행사책임 연령이 10세인데 이는 형사처벌 연령과 상이한 것임.

- 우리나라도 촉법소년 연령 하한이 10세인데 이들은 소년원 송치를 포함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적인 행사책임 연령은 14세가 아닌 10세로 보는 것이 타당함.³⁶⁾

○ 1990년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소년비행의 방지에 관한 유엔지침’ 및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은 공통적으로 ① 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소년사법의 목적이며, ② 소년 사법절차에서 소년의 방어권이 완전히 보호되어야 하고, ③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는 지역사회 내 자원 활용과 다이버전(Diversion) 추진, ④ 처분의

35) 이 부분에서 소개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의 소년사법체계의 동향은 김진태(2021, pp.14~17), 캐나다 사례는 김지연 외(2018), 박선영(2019, pp.81~111)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36) 같은 맥락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우리나라의 실제적 행사책임 연령은 14세가 아닌 10세임을 재확인한 바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 2018, 7), 「소년법」의 연령과 행사책임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혁(2016, pp.35~72)을 참고할 수 있다.

다양화 및 최후 수단으로서의 시설 내 처우(구금), ⑤ 효과적인(효과가 있는) 처분과 소년에 대한 필요한 지원 제공 등을 권고한 바 있음.

- 먼저 미국은 각 주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련의 소년강력범죄를 계기로 처벌을 강화하여 살인, 무장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세 내지 16세 이상의 소년범을 성인과 같은 형사법원으로 이송하고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사이송제도’를 시행함. 그 결과 소년원 출원생에 비해 출소 후 재범까지의 기간이 더 짧아지는 등 효과 분석 결과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처벌이 아닌 교정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김진태, 2021, 14).

- 미국은 엄벌주의의에 따른 재범 억제 효과가 없다는 다수의 결과를 토대로 소년법원의 적용 연령의 범위를 상향하여 대상을 넓히거나 형사법원으로의 이송을 제한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주의를 탈피하는 경향이 나타남.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시설 수용보다 보호관찰을 활용하고 교육과 직업프로그램 활용,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참여 결과를 고려하여 소년에 대한 처분을 판단하는 등 구금이 아닌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년범죄와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고함.
- 판례에서도 엄벌주의를 탈피하는 경향인데, 2005년 연방대법원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사형집행을 위헌으로 선언한 후 미성년자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Juvenile Life Without Parole: JLWOP)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이 이어지는 추세임. 또한 일부 주를 제외하면 소년교정시설을 관리하는 행정부서가 교도소를 관리하는 부서와 분리되어 있고 아동복지 관련 행정부서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영국의 소년사법제도는 「아동법(Child Act, 1908)」을 근간으로 발전하였고 국제협약 기준을 통해 개혁을 거듭하고 있으며, 90년대 소년범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소년사법이 복지에서 엄벌로 바뀐 적도 있으나 2000년 이후 소년범죄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통해 복지모델로 회귀함(김진태, 2011, 15).

- 2015년 구금시설에서 출소한 소년의 67%가 1년 내 재범을 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16년 영국 법무부는 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 및

시설 내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소년사법시스템을 개혁함.

- 소년사법시스템에 진입한 소년의 인종, 계층, 약물남용, 가정문제, 재범률, 학습문제 등에 대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범죄 예방과 조기 개입을 통한 범죄 대처, 수용시설 내 교육 내실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선 및 보건증진 등의 방향을 설정함.
- 최근에는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춘 소년사법정책을 추진하면서 소년범죄 예방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한 효율적인 소년사법 행정 추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절차 및 방식 재정비, 소년사법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한 통계수집 절차와 방식 개선을 병행함.
-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근 10년 간 공공부문 예산 감축에 따라 소년범죄대응팀의 예산도 2010년 대비 2019년에 약 50%가 감소한 1,049억 원으로 축소되어 소년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아시아경제, 2019. 6.28).
- 유럽최초 범죄학연구소인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로레인 겔스트로프 소장은 기사 내 인터뷰에서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인력과 서비스 확대 등 재정 투입 노력으로 이어져야 하고,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은 손쉬운 땀질식 처방일 뿐, 범죄가 일어나는 과정을 제어해 재범을 막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함.

○ 일본은 소년법에 대한 아동복지 우선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1997년 14세 중학생의 아동연쇄살인사건 후 「소년법」 폐지 여론에 따라 소년원 송치 연령 하향, 소년범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형량 상향, 소년사건 중 형사처벌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엄벌화 정책을 시행함.

- 2000년에 「소년법」을 개정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하고, 2007년에는 소년원 송치 연령을 12세에서 11세로 확대, 2014년에는 18세 미만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유기징역 상향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가석방이 가능한 최소 기간도 3년에서 형기의 1/3로 연장하여 징역, 금고 부정기형의 상한과 하산이 각각 10년, 5년에서 15년, 10년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소년법」이 개정됨.

- 2021년 「소년법」 개정 시에는 18세, 19세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절차를 밟도록 하고 강도, 강간 등 1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소년범죄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전과 기록 부여)을 확대함. 그러나 이러한 엄벌 정책 이후 소년범죄가 감소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음(김진태, 2021, 16).
- 프랑스는 2019년 11월 「미성년자의 형사사법 법률편에 관한 신규 법규명령」을 신설하여 「소년범죄에 관한 법률명령」을 대체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기존 법률에 비해 처벌보다 교화 우선,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절차 간소화, 연령에 따른 책임 경감 등을 강조함.
 - 「미성년자의 형사사법 법률편에 관한 신규 법규명령」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통찰능력이 없다고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하여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재판기록을 단축, 미성년자의 유죄선고 시 교육적 보호관찰 우선 실시, 판사의 통제하에 6~9개월 동안 소년보호기관 직원의 보호관찰 이수, 중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인 경우 소년법을 교도소가 아닌 폐쇄형교육센터에 수용하고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함(김진태, 2021, 16).
- 캐나다는 2002년 「소년법」을 개정하여 구금형을 제한하고 회복적 사법을 토대로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 소년 범죄 발생률이 감소하였고,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경찰단계의 회복적 사법을 확대 운영함.
 - 캐나다는 소년법의 높은 구금율과 재범률에 대한 비판에 따라 Juvenile Delinquent Act(1908), Young Offender Act(1984)에 이어 세 번째로 2002년 소년사법법(Youth Criminal Justice Act, YCJA)을 제정하고, 구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
 - 서문에 “소년사법의 목적은 소년의 행동에 깔린 상황들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소년이 공식적인 사법적 절차(judicial proceedings)를 지양하고 경찰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사법외적조치(extrajudicial measures)를 활용함.

- 소년보호관찰(youth probation officer)의 역할을 확대하여 비사법제재의 준수사항을 관리하고 판결 전 조사문 작성, 이수명령 관리, 지역사회 내 관리감독을 강화함. 특히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소년의 경우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반 치료인 집중적인 회복지원 및 수퍼비전(Intensive Rehabilitative Custody and Supervision)을 도입하고, 구금형은 폭력 사범과 상습적인 범죄일 경우만 가능함.
- 12~17세의 소년이 경찰에 입건되면 사법외적조치(extrajudicial measures)로 주의, 경고, 그리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의뢰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를 잘 이수하면 사건이 종결되며 범죄의 정도 등에 따라 사법외적재재(extrajudicial sanctions)도 활용함.

2.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제도와 사례

□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사회는 소년 범죄피해자 및 증인의 권리 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통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14종 이상의 관련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통계 생산 및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고 관련 지원제도가 공급자 관점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보편적 국제규범은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시민권 B 규약), 1985년 유엔피해자인권선언 등이 대표적임.

- 특히 2010년 유엔안전(A/CONF.213/4)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과 범죄’와 관련하여 UNODC와 Unicef는 공동으로 ‘소년 범죄피해자 및 증인을 위한 법률과 해설’을 소개하면서 ① 존엄을 기반으로 대우받을 권리, ②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③ 내용에 대하여 고지 받을 권리, ④ 의견과 우려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⑤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권리, ⑥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⑦ 사법절차에 있어 보호받을 권리, ⑧ 안전에 대한 권리, ⑨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⑩ 특별예방조치에 대한 권리를 권고함

(<https://www.un.org>).

- 영국은 국가통계국(ONS)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1981년부터 범죄 통계 작성 시 국가승인통계인 범죄피해조사(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 CSEW)와 경찰보고 범죄자료(Police Recorded Crime Data)를 작성하며, 여기에는 모든 형태의 범죄피해경험과 신고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 유엔은 각국의 범죄 및 형사사법시스템 상 통계 수집을 위해 ‘UN Survey of Crime Trends & Operations of Crime Justice System)을 매년 실시함. 피해자조사 자료는 국제적 수준에서 범죄 및 범죄피해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초국가적인 범죄 예방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함. 여기에는 성희롱피해자 비율, 피해 신고를 한 폭력범죄 피해자 비율, 19~29세 성인 가운데 18세 이전에 성폭력 피해 경험 비율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공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김지연 외, 2019, 26).
-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일환으로 피해자 신변보호 지원제도, 형사절차상 피해보호 지원제도, 신체·정신·재산상 피해회복 지원제도,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지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을 근거로 범죄피해 소년을 제각각 지원함.
- 전국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 및 소년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총 11,091명의 피해자를 지원하였고, 이 가운데 19세 미만 소년은 1,131명으로 매년 약 10% 이상의 비율을 유지함(김지연 외, 2019, 36).
 - 18세 미만 아동기에 범죄피해를 경험한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경험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지원, 심리적 회복지원에 대한 요구 정도가 가장 높았고, 이 외 의료지원, 신변보호, 주거지원, 사건 정보 제공, 학업지원, 법률지원 등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김지연 외, 2019, 85).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지원과 관련하여 영국, 미국 등은 아동의 연령 상향

조정을 통한 보호 범위 확대, 용어 사용 개선. '온라인 그루밍' 규제를 통한 피해 예방 등 다면적인 정책을 추진함.

- 영국의 성교 동의 연령(age of consent)은 16세이며, 성매매(prostitution)라는 용어가 상호 합의에 의한 것, 즉, 아동·청소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2015년 「중범죄법(Serious Crime Act, 2015)」, 「거리범죄법(Street Offender Act, 1959)」에서 아동 성매매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상업적으로 성착취에 연루되는 18세 미만 아동을 처벌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함.
- 성착취 방법인 그루밍(grooming)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성인이 성적 인 의도를 가지고 아동·청소년에게 한 번이라도 접근할 경우 개입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형사 사법 및 법정에 관한 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을 개정함.
- 영국은 2018년 6월에 란사로테협약에 비준한 이래 아동 성착취, 그루밍, 아동학대물 관련 범죄, 성범죄자 기소를 위한 국가 간 협약을 이행하고 있음.
- 미국은 연방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2000)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의 성매매는 자발적인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인신매매로 정의하여 처벌이 아닌 피해를 지원하도록 함. 이를 근거로 2008년 뉴욕주를 시작으로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 사안이 있어 면책법(Safe Harbor Law)을 적용, 미성년자를 범죄자로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로 규정하여 보호지원함(김지연, 2018, 361).

3. 소년사범 중간처우제도와 사례 : 지자체 연계 보호처분제도 운용³⁷⁾

□ 이 부분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소년법에 대한 '중간처우' 제도와 사례, 관리감독의 현황과 특성, 중간처우에 대한 효과성 연구 결과 검토를 현행 우리나라 보호

37) 이 부분에서 소개한 미국, 영국, 일본의 중간처우제도는 이승현, 박선영(2017, pp.127~169)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처분과 소년법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중간처우'는 출소를 앞두고 개방형인 사회 내 시설에 거주하며 사회복귀의 성공을 돕는 목적의 형태(halfway house out of prion)와 구금형의 대안으로 사회 내 거주시설로서의 중간처우의 형태(halfway house into prion)로 구분되는데 보호처분 6호가 후자의 대표적인 형태임.

- 보호처분 6호는 소년원과 가정의 중간단계로서 9호 처분(소년원 단기 송치, 6개월)과 기간은 동일한데, 소년원이 아닌 시설에서 단체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지역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과 차이가 있음.

- 미국은 1965년 「수형자 교화개선법(Prisoners Rehabilitation Act)」의 제정으로 소년법을 중간처우에 배치하는 제도가 시행되었고, 2008년 「소년사법과 비행소년 예방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1974))」의 개정으로 소년법의 중간처우가 확대됨. 이는 소년법에 대한 구금은 재범을 촉발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며 소년법에 대한 복지지원, 지역사회 교정, 회복적 사법, 다이버전 강화 흐름 속에서 소년 구금시설이 점차 폐지되고 중간처우로서 그룹홈, 위탁가정 배치가 확대됨(이승현 외, 2017, 129).

- 미국은 각 주별 법률을 근거로 상이한 형태의 중간처우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7~10명이 일반 가정집 형태의 거주지에서 위탁부모나 운영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일반 가정과 같은 자유로운 형태의 그룹홈부터 엄중한 경비와 지도감독이 가해지는 보안치료센터(Secure Treatment Center), 소년원을 출원한 16~20세 소년을 위한 특화된 독립생활 프로그램(Specialized Independent Living Program)까지 다양한 형태가 운영 중임. 특히 집중관리 그룹홈(Intensive Supervision Group Homes) 가운데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면서 지능지수가 최소 70 이상에 해당하는(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12~19세의 소년법을 보호하는 형태도 운영함. 중간처우는 판사가 9~18개월 정도 그룹홈 거주를 처분하는데 거주 이후 퇴소를 하거나 거

주 중 21세가 되면 성인교도소로 이송되기도 함(펜실베이니아주 사례).

- 중간처우시설은 법무부 산하 사법복지청(Bureau of Justice Assistance)의 실시를 포함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보호중인 소년범에 대한 대면조사를 통해 가혹행위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됨.
- 1974년에 제정된 「소년사법과 비행소년 예방법」이 2008년 개정되면서 초범 소년에 대한 구금형의 대안으로 중간처우인 그룹홈을 활용하는 조항이 포함됨. 또한 각 주별로 차이는 있으나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공립학교법」 제1306조에 따라 시설에 수용된 소년범에게도 공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우리나라의 '소년원학교'와 유사).
- 소년범에 대한 중간처우의 효과는 1980년 중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룹홈의 재범 억제 효과가 미약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긍정적 친구관계 문화프로그램, 가족교육모델, 다면적인 가정위탁 처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모델을 도입함. 그 결과 90년 이후 그룹홈 보호 소년범의 교육적 성취 개선, 문제행동 감소, 재범억제 효과 등이 보고됨. 특히 소규모 운영으로 개별화된 처우 가능,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접촉과 교류 가능, 전문적 비행행동 교정 프로그램 도입이 재범 감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됨. 반면, 중간처우가 재범 억제에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룹홈 위탁보호 소년의 경우 한 번 이상 위탁가정이 변경되거나 입소 전에 심각한 갈등과 트라우마의 경험이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이 부재한 그룹홈은 위험한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 시설 출원 후 재범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그룹홈이 적합하다는 지적도 존재함(이승현 외, 2017, 139).
- 특히 법무부 산하 사법통계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은 매년 소년 주거시설 조사(Juvenile Residential Facility Census)를 통해 전국 소년범 중간처우시설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 결과를 환류(feed back), 제도개선에 반영함.

○ 영국의 중간처우시설은 보석 상태에 있는 수용자와 사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가 불안정한 가석방 수용자를 보호하는 기관의 의미로 'AP(Approved Premises)'라는 용어를 사용함. 1969년 제정된 「아동·청

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이 17세로 규정함에 따라 AP는 소년범에게 제공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아동보호치료시설(6호 처분), 청소년회복지원시설(1호 처분)과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영국은 소년범에 대한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다른 대안이 없거나, 재범일 때, 대중에게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있을 때 최후 수단으로 구금형을 사용함. 이에 10~17세 소년범은 소년법원(Youth Court) 판사가 지역사회형(community sentence), 구금과 훈련 명령(Detention and Training Order)을 내리는데 구금은 아동보호시설(Secure Children's Home, SCH), 보호훈련소(Secure Training Center, STC), 소년수용시설(Young Offender Institution, YOI)가 대표적임.
- 아동보호시설(SCH)은 재판 전 단계, 구금의 한 형태 등으로 활용되는데 10~18세 소년사범(주로 10~14세 수용)을 보호하며 지역 내 일반 가정집 형태로 존재하고, '요보호아동'으로 규정하여 모든 아동에게 담당 사회복지사가 배정, 교사 1명이 2명의 소년사범을 돌보는 구조, 지방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1호 처분)과 유사한 형태임.
- 즉, 소년법원 판사가 소년사범에 대한 구금형을 판결하면 지방정부가 해당 소년사범에 대한 의뢰서(referral form)를 사회보장심의위원회(National Secure Welfare Commissioning Unit, NSWCU)'에 송부하면 지방정부는 최대 2시간 이내에 소년을 배치할 수 있는 중간처우의 집 현황을 파악해서 통보해야 함. 이 과정에서 적절한 중간처우 집을 구하지 못하면 소년사범위원회(Youth Justice Board)가 임시주거를 연계하기도 하지만, 보호소년에 대한 중간처우 집을 지정하고 배치하는 일련의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기 때문에 최적의 집을 찾아 제공해야 함.
- '의뢰서'에는 의뢰 날짜, 의뢰하는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법원, 보호 일시와 종료일, 소년범에 대한 기본 정보(이름, 성별, 나이, 키, 몸무게, 인종, 종교, 언어, 아동보호대상 등록 여부, 법적인 상태, 13세 이하 여부, 72시간

응급보호 여부), 담당 사회복지사(Key Contacts)의 이름과 연락처, 과거부터 생활했던 시설 보호 현황과 현재의 돌봄 계획 등 배치 경력(Placement History), 가족과 사회관계, 재범 여부 등 소년사범이슈, 폭력·자해·자살·약물남용·성적 행동·가출장애 등 행동 특성, 의료기록을 포함한 건강상태, 의료기록을 포함한 정신건강상태, 현재의 학업 현황과 학업중단 여부 등 교육 특성, 고려해야 할 종교적/문화적 욕구, 이 외 지방정부의 돌봄 계획이나 최근의 사건 등 심화된 정보 등이 기재됨.

- 일련의 절차를 거쳐 소년사범이 중간처우의 집에 배치되면 상담을 통해 본 시설에서 생활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고 담당관(personal officer)의 면담이 이루어짐.
-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inspection)은 교육부, 소년사범위원회, 교육감사기관(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Ofsted), 소년법원 등 다기관이 보호소년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함(그림). 특히 지역 의회 내에 있는 '소년범죄대응팀(Youth Offending Team)'은 경찰, 사회복지사, 보호관찰관, 아동복지팀, 지역사회 내 단체 등이 참여하는데 소년이 법원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경찰단계에서 소년사범에 대한 전문가 참여 지원, 법원에서 소년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보고서 지원, 사회 내 처분 이수 지원, 시설 보호 소년과의 지속적인 접촉, 구금 시설 출원 소년에 대한 관리감독, 지역 소년범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함.

[그림 6-2] 영국의 소년사범 중간처우시설 협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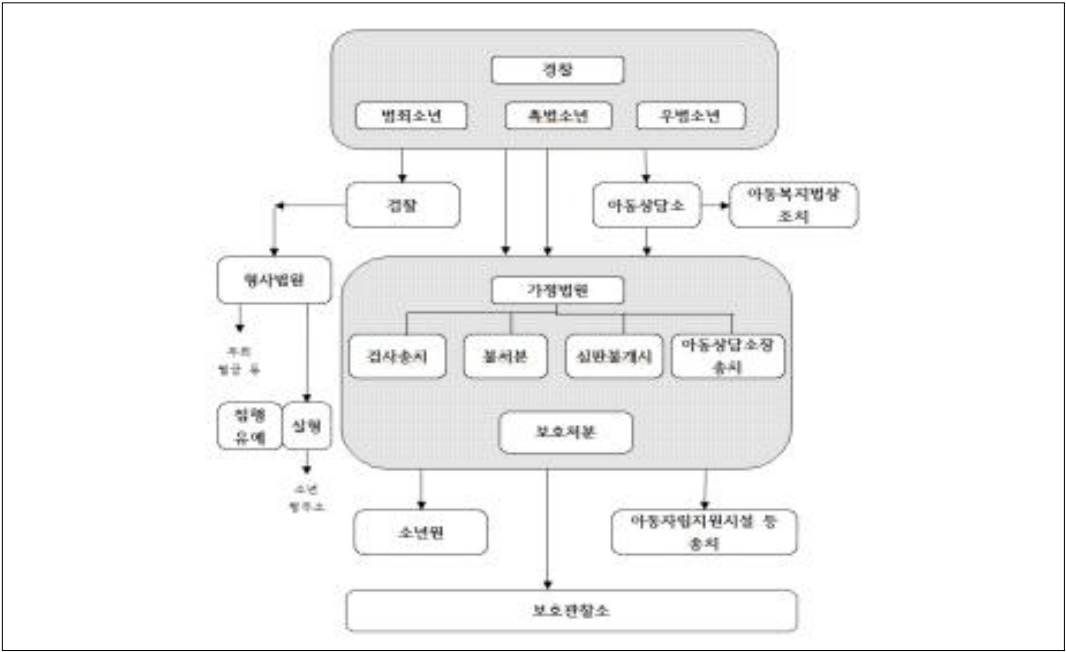
자료: 이승현 외(2021). p.150. 그림 5-2.

○ 일본은 「소년법」 제2조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처분과 소년원 송치 이외 지역사회 내 처우의 일환으로 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아동자립지원시설 또는 아동양호시설 송치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호처분은 기간에 있어 상한이 없고 소년의 비행과 범죄여부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큼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임.

-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양호시설 송치처분은 우리나라의 1호, 6호 보호처분과 유사한데, 이들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둔 복지시설임. 다만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아동자립지원시설에 위탁하는 경우는 연간 300여명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본 시설은 중학생 이하 의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은 14세 이상이므로 가정법원이 본 처분을 활용할 여지가 좁기 때문임(이승현 외, 2017, 165).
- 주목할 부분은 아동자립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소년은 「학교교육법」에서

규정한 보호자의 책무에 준하여 보호 중인 소년을 학교에 취학시킬 의무를 규정하고, 종사자 배치규정에 있어서도 정신과 진료 경험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정신질환문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 6-3] 일본 소년사법절차



자료: 이승현 외(2017). p.44. 그림 3-1.

〈표 6-18〉 일본의 소년 보호처분의 종류

| 구분 | 보호처분의 종류 |
|----|-----------------------|
| 1호 | 보호관찰 |
| 2호 | 아동자립지원시설 또는 아동양호시설 위탁 |
| 3호 | 소년원 송치 |

자료: 이승현. (2017).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 방안. p.159. 표 5-1.

〈표 6-19〉 일본의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유형과 현황

(2018년 10월 기준)

| 시설 유형 및 핵심 기능 | 개소 | 정원 | 현원 |
|---|-----|--------|-------------------------|
| 아동양호시설(아동양육기능) | 578 | 31,144 | 25,722 |
| 유아원(피학대아동 등 전문 양육기능) | 134 | 3,582 | 3,089 |
| 정서장애아 단기치료시설 (심리·정신적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한 치료지원 기능) | 41 | 1,842 | 1,339 |
| 아동자립지원시설 (우리나라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유사하며 비행 등 품행문제가 있는 소년을 보호지원하는 기능) | 55 | 3,597 | 1,329 |
| 모자생활지원시설 (모자가정에 대한 주거지원 기능) | 261 | 5,404 | 3,850세대 아동 6,015명 |
| 자립지원홈 (의무교육을 마친 20세 미만 아동, 아동양호시설 퇴소 후 공동생활을 통해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기능) | 82 | 504 | 310 |
| 아동가정지원센터 (아동상담소에서 위탁받은 아동과 가정에 대한 상담, 지원 등 가족지원 기능) | 87 | - | - |

자료: 이승현. (2017). 소년법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 방안. p.159. 표 5-1.

4. 소년강력범죄 대응 및 다이버전 운영 사례³⁸⁾

□ 이 부분에서는 독일, 미국, 영국, 노르웨이의 소년강력범죄 대응체계와 경찰, 검찰, 법원단계의 다이버전 및 지역사회 내 처우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와의 연계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독일은 범죄소년에 대한 형벌, 보호처분 모두 소년법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소년법원법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과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형사미성년은 14세로 이들은 소년법원법을 근거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큰 차이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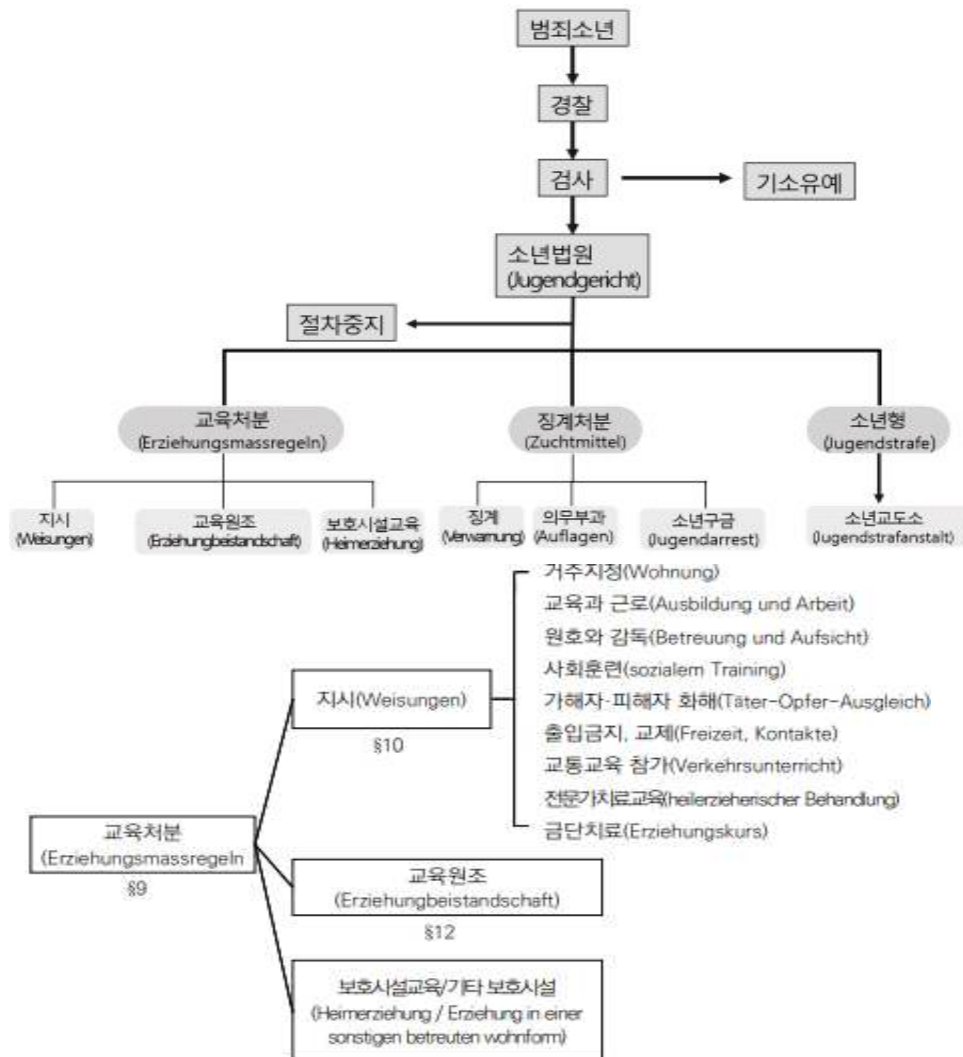
- 독일의 소년보호처분절차는 형사처분절차가 통합되어 있고, 보호의 성격이 강한 교육처분, 보호와 형벌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 징계처분, 앞의 두 처분이 불가할 때 소년교도소에 구금하는 소년형을 보충적으로 활용함(이승현,

38) 이 부분에서 소개한 소년강력범죄 대응 관련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노르웨이 사례는 이승현, 박성훈 (2017, pp.35~138), 다이버전 관련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사례는 김지연 외(2018, pp.102~177)에서 발췌, 요약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2017, 103).

- 독일 소년법원법에 의한 교육처분은 범죄소년의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며 징벌의 의미로 부과할 수 없고 교육지시, 교육원조, 보호시설원조 등 ‘교육’이 핵심임. 교육지시는 2년 이내에서 ‘소년의 생활태도를 고려할 때 이행이 가능’한 거주지 지정(일정한 곳에서 거주), 직업훈련 및 근로, 특정한 사람의 지도받기(1년), 사회훈련 과정 참여(6개월 초과 금지), 피해자와의 화해 노력, 특정한 사람과의 교제, 음식점·유흥장 출입 금지, 교통교육 참여 등을 포함함(동법 제10조). 또한 판사는 교육권자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소년에 대한 전문가 치료교육처우, 금단치료를 명할 수 있음(동법 제11조).

[그림 6-4] 독일 소년사법 절차 및 교육처분 유형



자료: 이승현 외(2017). p.104. 그림 3-13, p.105. 그림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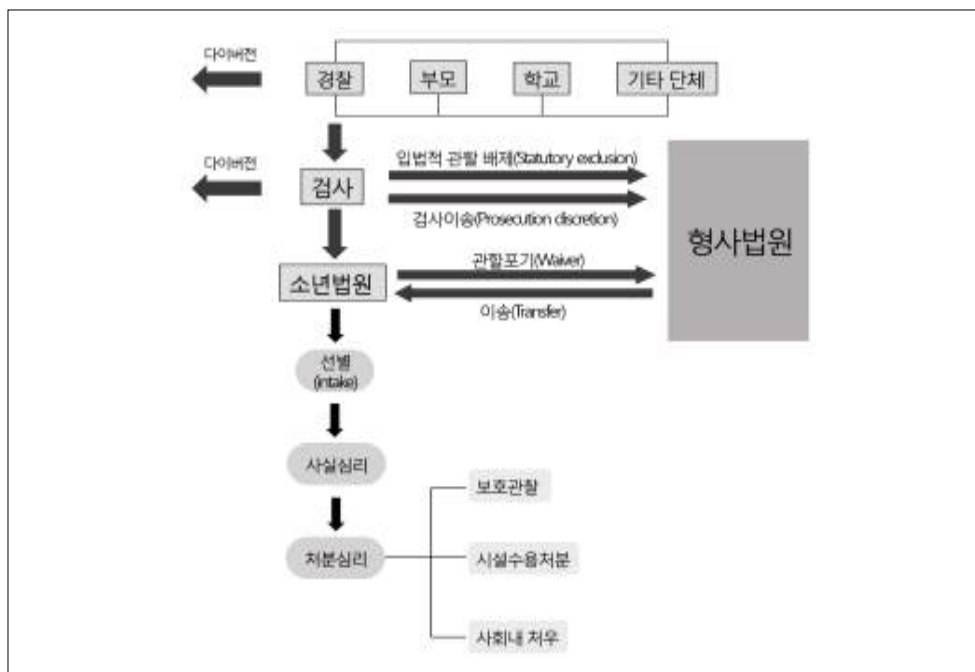
- 교육원조는 「아동·청소년법」 상의 처우가 보호처분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소년이 문제를 극복하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선도가 목적이며, 16세 미만의 소년에게 부과할 수 있고 성년에 도달하면 종료되며 판사의 재량이 아닌 청소년국(Jugendamt)의 동의를 전제로 시행함.
- 징계처분은 교육과 처벌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며 경고, 훈계 등을 포함하고 다른 처분과 병과되는 ‘징계’, 피해배상,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노무 제공 등 소년이 이행할 수 있는 ‘의무부과’, 비형사적 처분으로서 최장 2일의 주

말구금처분, 최장 4일의 단기구금처분, 1주일 이상 4주 미만의 장기구금처분 등 ‘소년구금’으로 구분됨. 현재 입법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며 주요 방향은 구금기간을 단축하고 사회 내 사회훈련 코스로 변경하는 것임.

- 마지막으로 소년형은 소년교도소 구금이며 최저 6개월에서 최고 5년, 예외적으로 10년 장기가 가능한데 소년형도 교육적인 효과에 초점을 둬.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교육적 목적과 책임의 중대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또한 구금형인 소년형이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따라 교육처분의 형태를 더욱 다양화하고 있고 1970년부터 2016년까지 징계처분이 전체의 약 65%, 교육처분이 약 24%, 소년형은 약 10%의 비율을 유지함. 독일의 소년강력범은 상해, 강도 유형이 많고 2년 미만의 단기 자유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이승현, 2017, 111).
 - 특히 2000년대 이후 엄벌화 요구 속에서도 형사미성년 연령은 14세 이하로 유지할 것, 자유박탈처분은 16세 이상에게 허용할 것, 소년범죄 해결을 위해 갈등해결 절차를 우선 적용할 것,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 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원칙을 재확인함. 또한 소년강력범죄의 재발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가진 경우 형벌적인 개입보다 최대한 조기 개입이 강조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집중 교육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 가족프로그램 등이 효과적임을 보고함.
- 미국은 일부 주는 여전히 소년과 성인의 형벌을 결합시키는 판결(blended sentencing)을 내리기도 하나, 소년범을 성인교도소에 수감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엄벌주의의 부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계기로 최근에는 소년강력범죄자의 일부도 소년법원에서 다루는 등 성인범죄자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음(이승현, 2017, 61~83).
- 미국 표준소년법원에 따르면 19세 미만 소년범죄사건은 소년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16세 이상 소년이 중대사건의 경우 소년법원이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고, 몇몇 주는 소년 연령 하향, 성인법정으로 자동송치가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성인교도소에 수용하는 형을 병과하는 등 혼합판결하는 사례도 증가함.

- 반면 뉴욕주는 2015년 성인교도소에서 자살한 소년범 사건을 계기로 16~17세 소년에게 「형법」 적용 시 부작용과 재범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법률을 개정하였고 이후 소년범죄자에 대한 구금규칙도 변경하여 2018년 10월 1일부터 17세 미만 소년범은 주 소속 구치소(country jails)에 수감하지 않고 2019년부터는 18세까지 확대 적용함. 이는 형사책임 연령을 상향 조정한 것을 의미하며, 이후 소년강력범죄(violent felony) 사건 중에서도 ① 피해자의 심각한 신체상해 여부, ② 피고인(소년)의 무기 사용 여부, ③ 형법에 저촉되는 성행위 여부 등 세 가지 사실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소년부(youth part)로 전환할 수 있음.

[그림 6-5] 미국 소년사법절차도



자료: 이승현 외(2017). p.59. 그림 3-4.

- 사건이 소년법원으로 정식 이송되면 보호관찰, 집중지도감독, 자택 구금, 전자감독, 보호소(shelter facility), 대리가정 위탁(foster care), 공동생활 가정(group home), 중간처우시설(halfway house), 소년원(training center), 생존훈련프로그램(survival program), 피해배상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이 의 처분이 가능함.

- 미국은 소년법의 초기심리를 보호관찰관리 맡고 있고 소년의 성장과정과 가정환경을 조사하되 법원,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소년의 처분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소년을 자원봉사자 등 개인에게 위탁하는 대리가정 위탁,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된 소규모 시설인 공동생활가정, 소년원 이송 전 또는 소년원 출원 후 사회적응을 돕는 중간처우시설(주정부가 계약을 통해 민간에게 위탁) 등을 운영하며,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한 해 구금처분인 소년원 송치처분을 하고 소규모의 공립, 사립소년원이 운영 중임.
- 소년강력사건 중 성인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라도 소년법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역이송(reverse waiver) 규정을 둔 주는 24개로, 소년법원과 형사법원 중 사건을 어디에 송치할지 여부는 검사 재량임.
- 미국의 소년범죄 동향에서 10~12세 소년의 범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성범죄, 무기소지, 마약위반 등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고하는 등 소년의 연령대별 범죄율과 양상에 대한 명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구금된 소년법의 수가 프랑스의 4배, 네덜란드의 12배,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의 16배에 달하고, 구금 후 소년법 재범률이 88%에 이르며 괴롭힘, 자해 및 자살 등으로 귀결되는 근거를 바탕으로 소년법 구금을 ‘값 비싼 실패’로 규정함(이승현 외, 2017, 99).

- 영국의 형사책임 연령은 10세이나 이때부터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시설 구금 및 훈련 명령은 12세부터 가능하여 10세, 11세 이하 소년은 시설에 수용하지 않음.
- 영국 소년법원은 18세 미만 소년이 피고인으로서 유죄가 인정될 때 처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관이나 사회복지사에 판결전조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처분은 사회 내 처우, 사회 내 처우의 부가처분, 구금처분(시설) 등 세 가지임.

- 사회 내 처우는 석방(absolute discharge), 조건부석방(conditional discharge), 벌금(fine), 위탁명령(referral order), 피해회복명령(reparation order), 행동계획명령(action plan order), 감독명령(supervision order), 범죄예방센터(갱생센터) 출두명령(attendance center order), 지역사회회복명령(community rehabilitation order), 사회 내 처벌명령(community punishment order) 등임.
 - 사회 내 처우와 병합하여 선고할 수 있는 부가처분은 외출제한명령(curfew order), 배제명령(exclusion order), 약물치료·검사명령(drug treatment and testing order), 배상명령(compensation order), 집중감독감시프로그램(intensive supervision and surveillance program), 집중양육프로그램(intensive fostering program), 보호자교육명령(parenting order) 임.
 - 범죄의 중대성, 범죄경력, 공공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구금처분이 선고되며 구금 및 훈련명령은 15~17세 소년과 법원이 상습범으로 인정한 12~14세 소년에게만 적용 가능함. 구금 기간은 최장 2년으로 1/2은 구금시설에 수용, 나머지 기간은 소년범죄대응팀(Youth Offender Teams)의 감독 하에 사회 내 처분을 받음. 또한 사회봉사명령은 청소년이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에 40~240시간 까지 참여하는 제도로, 보호관찰소 사회서비스팀(probation community service team)이 감독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명령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임.
- 노르웨이를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형사책임 연령은 15세로, 15세 미만 소년은 아동복지체계에서, 15~17세 범죄소년은 아동복지와 형사사법체계에서 관여하는 등 소년사법체계, 아동복지체계, 성인사법체계가 균형을 유지함(이승현, 2017, 121).
- 북유럽 소년사법의 모델은 19세기 후반 노르웨이에서 시작하며, 1999년 노르웨이 정부는 아동가족부 주관 하에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소년 범죄 예방과 적극 대처를 위해 아동·청소년, 부모, 민간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협력과 학교, 경찰, 아동

복지서비스, 교육심리서비스, 보건서비스, 문화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함.

- 15세 이하 소년은 형사책임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아동복지부(child welfare office)에서, 18세 미만 범죄소년에 대해서도 아동복지체계의 개입이 전제됨. 이에 소년에 대한 경찰 수사 전후에 소년의 가정과 아동복지위원회에 고지하고 수사결과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과 유사함.
- 노르웨이는 소년법원이 없어 우리나라와 같이 검사의 기소재량이 큰 편이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가 불기소처분하고 자체적으로 벌금을 부여하거나, 아동복지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형사법원에 기소함. 검사는 사건을 아동보호팀(barnevern)으로 직접 보내기도 하고 판사가 재판 이후 아동보호팀으로 보낼 수 있음. 아동보호팀은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취하는데 이 단계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동보호위원회를 소집하며, 변호사가 소년과 부모를 변호할 수 있음.
- 아동보호위원회는 아동보호에 있어 절대적 권한을 가지는데 논의 핵심은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중과 증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소년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무엇인지이며, 소년에 대한 복지차원의 통제는 18세에 종료되지 않고 아동의 연령과 관계없이 막강한 권한을 가짐.
- 노르웨이의 소년사법체계는 아동복지부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가장 큼. 즉, 판사는 심리 주재, 적법절차 준수, 증거와 적절한 처우에 대한 의견 제시를 담당하며 사건의 방향을 지시하는 역할을 아동복지부가 담당함. 아동복지위원회는 심리 이전에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아동복지부서를 통해 확인하고, 심리 이전에 소년을 위탁보호(youth home) 하거나 정신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모의 권리는 박탈됨.
- 15세 이상 범죄소년은 성인에게 부과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경고, 불기소처분(youth contract 등 조건부 불기소 처분, 계약 이행 후 1년 후 범죄기록을 삭제함), 벌금,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구금, 보호관찰, 개방형 교도소의 단기 구금 등이 포함됨. 교도소 구금 시에도 성인범죄

자와의 교류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짐.

□ 이 부분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에서 비행소년을 공식 절차를 통해 처벌(처분)하는 대신 경찰, 검찰, 법원 등 각 단계에서 비공식적 절차로 처우하는 다이버전(Diversion)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와의 연계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우리나라도 경찰단계에서 ‘훈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판례 등에서 이와 같은 경찰의 ‘훈방권’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경찰은 수사종결권이 없기 때문에 주요국과 달리 경찰단계 다이버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임.

- 경찰 뿐 아니라 검찰단계에서도 「소년법」의 조건부 기소유예의 일환으로 ‘법사랑위원회’에 소속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과의 결연, 민간단체나 보호관찰소의 선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법원단계에서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 심리불개시나 불처분 결정 시 ‘소년에 대한 훈계’와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교육 고지’ 등의 형태로 다이버전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JJDP,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은 미성년자 대상 다이버전의 대상과 경로를 크게 ① 경찰단계의 학교폭력 가해자와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선도, ② 지위비행 위반자에 대한 법원단계의 다이버전, ③ 범법행위를 한 소년사범 대상 법원단계의 다이버전으로 구분함.

- 미 법무부 산하 사법연구원(NIJ)은 다이버전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동시에, 비행소년을 정식 형사사법 절차에서 벗어나게 하는 개입 전략”으로 정의하고, “소년의 재범을 억제하고 형사사법체계의 업무량을 경감시켜 더 중요한 사안에 집중한다”는 운영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함.

- 미국은 낙인이론을 기반으로 1970년대부터 소년사법체계 내 다이버전에 본격 국비를 투입하였고, 소년사법절차 및 형사사법절차를 거친 소년이 비공식적 절차를 거친 소년사범에 비해 높은 재범률을 보인다는 근거(Huizinga, Schumann, Ehret & Elliott, 2003; Klein, 1986; McAra & McVie, 2007; Smith, Goggin & Gendreau, 2002; Tracy & Kempf,

1996)를 토대로, 소년범의 반사회적 행동 교정을 위해 다이버전을 확대 시행함(Bishop & Decker, 2006; McAra & McVie, 2007; Loeb et al., 2015; 김지연, 2018, 127-136 재인용).

- 다이버전을 시행하고 있는 주 가운데 36개 대상 조사 결과(중복)에 따르면 소년범이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것 예방(92%), 재범 감소(83%), 소년과 가족에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연계(81%), 형사사법체계의 업무 부담 경감(78%), 형사사법체계의 효율성 강화 및 소년범죄의 악화를 막기 위한 조기 진단(75%), 비용절감(72%) 등의 목적으로 운영함. 특히 가족개입(family intervention), 가족상담 및 치료(Multi-Systemic Therapy, Functional Family Therapy), 약물오남용 관련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멘토링, 생활기술훈련(life skill training), 학업지원, 일자리 지원, 기타 보호자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 등이 보편적으로 활용됨(Models for Change, 2011; 김지연, 2018, 129-130 재인용).
- 미국의 다이버전의 성과지표는 대표적으로 “재범률”을 사용하는데, 다이버전이 재범률 감소에 효과가 있고(Lipsey, 2009; Maroney, 2012), 비용 효율성이 높으며(Petrosino et al., 2010),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대상자 선별과 진단, 가족의 참여, 소년의 개별 맞춤형 지원, 다기관 협력, 민간기관 참여, 동의서 및 계약서 작성을 통한 자발적 참여가 재범 억제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함(Cocozza, et al., 2005; Niedzwiecki, et al., 2015).

○ 영국의 다이버전은 우리나라의 우범소년과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청권자는 경찰, 부모, 사회복지사, 교사, 검찰, 법원 등으로 다양하며 우리나라의 ‘청소년안전망’과 유사한 각 지역의 ‘소년범죄대응팀(Youth Offending Team)’에서 다이버전의 접수, 진단, 실행을 담당함(<https://www.gov.uk/youth-offending-team>).

- 소년범죄대응팀은 ① 소년사범이 법원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경찰의 심문시 성인 조력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조력, ② 법원에서 소년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보고서 제공, ③ 소년범이 사회 내 처분을 잘 이수하도록 지원, ④ 시설 보호 중인 소년범과 지속적으로 접촉, ⑤ 시설에서 출원하는 소

년범의 사후관리, ⑥ 소년의 배경을 파악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⑦ 다이버전 포함 지역 내 범죄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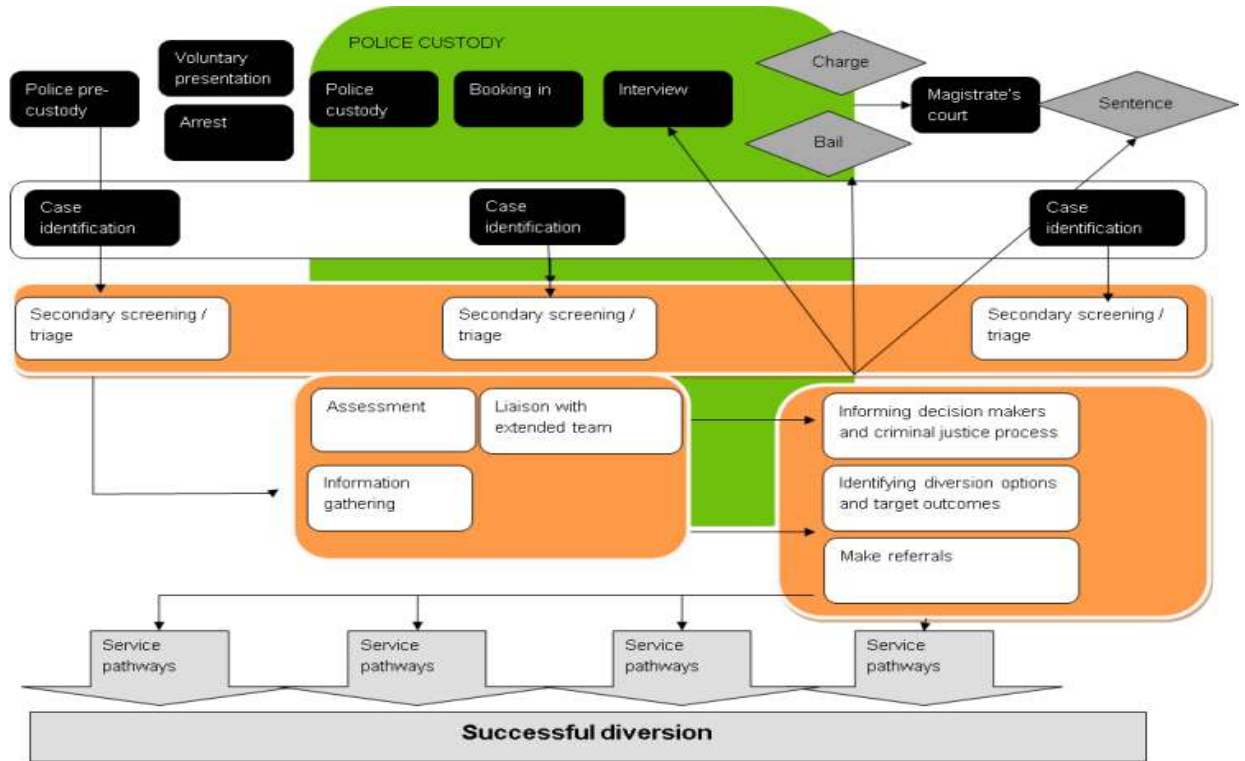
[그림 6-6] 영국 소년사법 다이버전 협업구조



자료: <https://www.england.nhs.uk/commissioning/wp-content/uploads/sites/12/2014/04/ld-op-mod-1314.pdf>에서 2022.7.29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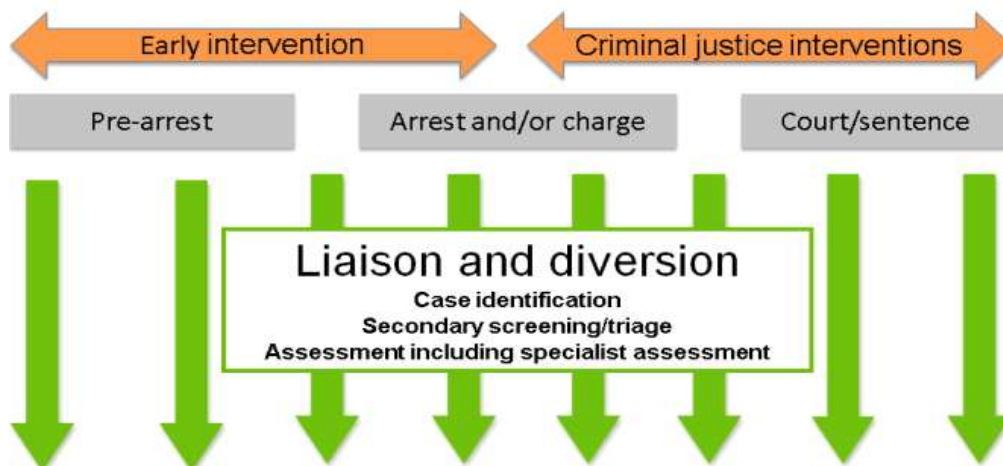
- 특히 정신건강, 학습장애, 약물남용 등 특수한 문제를 동반한 비행소년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다이버전(YJLD, Youth Justice Liasion and Diversion Services)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2014년부터 전국에서 실시함. 즉, 경찰부터 법원의 각 단계별로 진단(Identification), 선별(Screening), 사정(Assessment), 의뢰(Referral) 절차를 기반으로 소년범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통해 재범 억제를 도모함.

[그림 6-7] 영국 소년사법 및 형사절차와 다이버전



자료: <https://www.england.nhs.uk/commissioning/wp-content/uploads/sites/12/2014/04/ld-op-mod-1314.pdf>에서 2022.7.29. 인출

[그림 6-8] 영국 소년사법 다이버전 연계 절차



자료: <https://www.england.nhs.uk/commissioning/wp-content/uploads/sites/12/2014/04/ld-op-mod-1314.pdf>에서 2022.7.29. 인출

○ 일본은 「소년법」 뿐 아니라 경찰 행정규칙인 소년경찰활동규칙과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적극적인 교육적 선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도부현 단위의 경찰에 설치된 ‘소년서포트센터’에 소년보호직원(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등)과 경찰관이 함께 배치되어 비행 및 재범 예방활동을 실시함.

- 소년서포트센터는 비행소년과 가족 상담, 거리아웃리치, 각종 체험활동(학습, 예체능, 농업체험, 야외활동, 봉사활동 등)을 포함한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을 운영하여 소위 우범소년과 경미한 수준의 비행에 가담하는 지역 내 청소년과 가족, 시설, 학교를 지원함. 특히 경찰 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기관,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지원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임.
- 또한 법원에서 처분 결정을 유예하고 조사관에서 소년의 행동 등을 지도감독 하도록 하는 시험관찰제도(소년법 제25조)를 운영하는데, 이는 처분에 해당하는 보호관찰과 달리 소년에게 처분을 내리기 전이라는 심리적 강제효과는 부여하면서 선도와 지원이 가능한 방법임. 조사관이 처우 의견을 첨부하여 시험관찰 결과를 보고하면 판사가 이를 참고하여 최종적인 처분을 결정하는 법원단계의 다이버전임.
- 치바현 이치하라시 청소년지도센터, 시가현 나가하마시 청소년센터 등은 지자체 또는 교육위원회 산하 기관으로서 비행청소년의 재범 예방과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의 사례관리와 자원 연계를 통해 비행행동의 원인을 해결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특징임.

○ 독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법원법에 근거한 교육처분과 징계처분(사회복지시설 위탁교육)의 상당부분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이버전이며 이는 오직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처벌을 목적으로 부과할 수 없음.

- 독일은 「사회법」 제27조부터 제40조에 걸쳐 비행이나 범죄를 포함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상담, 사회적 집단활동, 교육보조, 위탁교육, 개별지원 등을 규정하여 이를 근거로 다이버전이 운영됨. 이는 소년보호절차와 형사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제3절 보호소년에 대한 복지적 지원과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의 확장: 법과 제도개선방안 검토

1. 법률 개정 및 국제협약 가입·비준 : 제도적 추진 기반 마련

□ 「소년법」 개정 : ‘우범소년’ 조항 삭제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강화

○ 「소년법」 상 우범소년은 성인과는 달리 ‘비행(범죄)의 가능성’을 이유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비차별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며, 취지와 달리 소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등의 수단이 사용되므로 우범소년 조항을 폐지하여 소년사법체계가 아닌 지자체 보호체계에서 이들을 통합 지원해야 함.

- 「소년법」 제4조 제1항에서 우범소년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 사유가 있고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이며,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해당 조항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 우범소년 즉, 비행 우려가 있는 소년은 사회복지시설의 장, 학교장 등이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는데, 이들 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 송치를 포함하여 부모(보호)가 없거나 거주지가 불안정할 경우 최대 2년간 소년원 수감에 처해질 수 있고 반복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
- 이로 인해 시설, 학교에서 품행 문제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이 지도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전문적인 개입 대신 형사제재에 해당하는 통고제도를 이용(악용)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고, 이들 소년은 실제 범죄행위를 한 가해소년들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되어 심각한 낙인의 우려가 있음.
- 특히 국가가 해당 소년이 직면한 문제 원인을 적시해 해결하는 대신 제재와 구금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년보호의 철학과 윤리, 통고제도의 역기능과 낮은 비행 예방 효과를 고려할 때 「소년법」 상 우범소년 조항을

삭제해야 함.

-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도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에서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소년복지 차원의 지원방안과 보호 대책으로 대체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 한 바 있음.
- 해당 조항 삭제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을 통해 이들 소년은 소년사범이 아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가 이들의 비행 원인을 제거하고 탈 위기와 자립까지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 투입과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할 것임.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 소년사법제도와 지자체의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연계 강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는 지자체가 비행·일탈, 부적응 등의 어려움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의 주체임을 규정한 바, 소년사법제도와 연계 강화하고 국비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동 제도의 신청권자는 청소년 본인, 보호자, 학교의 장이며, 여기에 ‘경찰서장, 보호관찰소장, 검사, 판사,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소년원 학교장)’을 포함하여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포착된 위기청소년을 지자체 보호체계로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법 제21조(보호지원후견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을 전담하여 지도하는 보호지원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를 구체화하여 보호지원후견인에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사 등을 포함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보호지원후견인에 대하여 직무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또한 현행 법률 상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주체는 자치단체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로 변경하여 국비 투입의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지방비로 추진할 경우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비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단위의 보편적 제도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소년업무규칙」 개정 : ‘선도조건부 훈방’ 법적 근거 마련

○ 「소년법」 상 우범소년은 성인과는 달리 ‘비행(범죄)의 가능성’을 이유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비차별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며, 취지와 달리 소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등의 수단이 사용되므로 우범소년 조항을 폐지하여 소년사법체계가 아닌 지자체 보호체계에서 이들을 통합 지원해야 함.

- 경찰단계의 선도프로그램은 「소년업무규칙」을 근거로 하는데, 동 규칙은 ‘(경찰은)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재비행 방지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를 규정함.
- 그러나 경찰단계의 선도조건부 훈방은 경찰의 업무 규칙일 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보편적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동 규칙 제31조를 개정하여 후술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의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자치단체장)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적 확대 시행을 검토할 수 있음(김지연 외, 2018, 349).
- 즉, 경찰단계의 비행소년 중 처벌이 아닌 선도대상을 지자체에 연계할 경우 입건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는 이들 소년을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탈위기와 자립을 지원하도록 함.

〈표 6-20〉 경찰 「소년업무규칙」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 제31조(선도프로그램의 운영) 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은 비행소년의 재비행 방지를 위해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선도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비행소년의 지배행 방지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31조(선도프로그램의 운영) ① 좌동 ② 좌동 ③ <u>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비행소년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대상으로 통보한 경우 입건을 아니할 수 있다.(신설)</u> |

자료: 「소년업무규칙」, 법제처 홈페이지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41560>에서 2022.7.25. 인출. 개정(안)은 김지연 외, 2018, p.350. 참조

□ 「청소년 보호법」 개정 : 친권자의 책무 이행 근거 마련 및 가족지원 강화

○ 현행 법률에서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처벌하기에 앞서 친권자가 적절한 지도감독과 양육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친권자가 지도하지 않거나 지도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친권자와 지자체가 그 책무를 이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3항에서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자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보를 받은 친권자의 책무를 규정하지 않아 해당 소년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과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해당 소년의 행위를 친권자에게 알리는 정도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책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및 지자체 장의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여 선도·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 이에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에 의하여 친권자가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은 해당 소년의 위기 유형과 정도를 심의하여 동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따라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회복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이와 함께 친권자가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제48조를 개정하여, 소년에 대한 낙인 없이 친권자의 책무 이행을 강제하거나 취약·위기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를 제고해야 함.

- 과태료의 액수는 학교폭력예방법(약칭)에서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약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되 친권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표 6-21〉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좌동 ② 좌동 ③ <u>선도·보호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은 친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도대상 청소년에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고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년의 회복지원에 적합한 물품, 서비스, 금전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u> |

자료: 「청소년 보호법」,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B2%AD%EC%86%8C%EB%85%84%20%EB%B3%B4%ED%98%B8%EB%B2%95#liBgcolor3>에서 2022.7.25. 인출. 개정(안)은 김지연 외, 2018, pp.351~352. 참조

〈표 6-2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0조 제3항 , 제64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자료: 「소년업무규칙」,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B2%AD%EC%86%8C%EB%85%8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에서 2022.7.25. 인출. 개정(안)은 김지연 외, 2018, p.352. 참조

□ 유럽연합(EU)의 「란사로테협약(Lanzarote Convention)」 가입·비준 및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예방과 회복 지원 강화

- 각종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준이라 할 수 있는 란사로테협약에 가입, 비준하여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

방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해야 함.

- 란사로테협약은 유럽연합(EU)이 성착취, 성학대 등 모든 종류의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약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동 대상 각종 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 가해자 처벌, 성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등을 골자로 하며, 국제법 최초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하는 '그루밍'을 가장 위험한 방식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함. 2007년에 채택되었고 2010년 7월에 시행된 국제기준임(Champion, S., 2018, 61-106).
- 우리나라는 2020년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삭제하여 기존의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일부 자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년법」 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아동의 교육, 상담, 치료 등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의 책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바 있음.
-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및 성착취물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2020년에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되는 만13세를 영국 등 주요국과 같이 만16세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됨. 2021년 기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지역단위에 11개소가 운영 중인데 일시적 생활유지를 위한 숙박비, 식비 등 긴급구조지원비(1회 당 5만원) 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어, 지자체와 유관 지원기관간의 연계를 통해 이들이 성착취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강화해야 함.
- 지역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서울)십대여성인권센터, 평화의 샘, (부산)부산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인천)인권희망 강강술래, (광주)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전)여성인권티움, (경기)수원여성의 전화, (강원)춘천길잡이의 집, (충북)충북여성인권상담소, (전북)전북여성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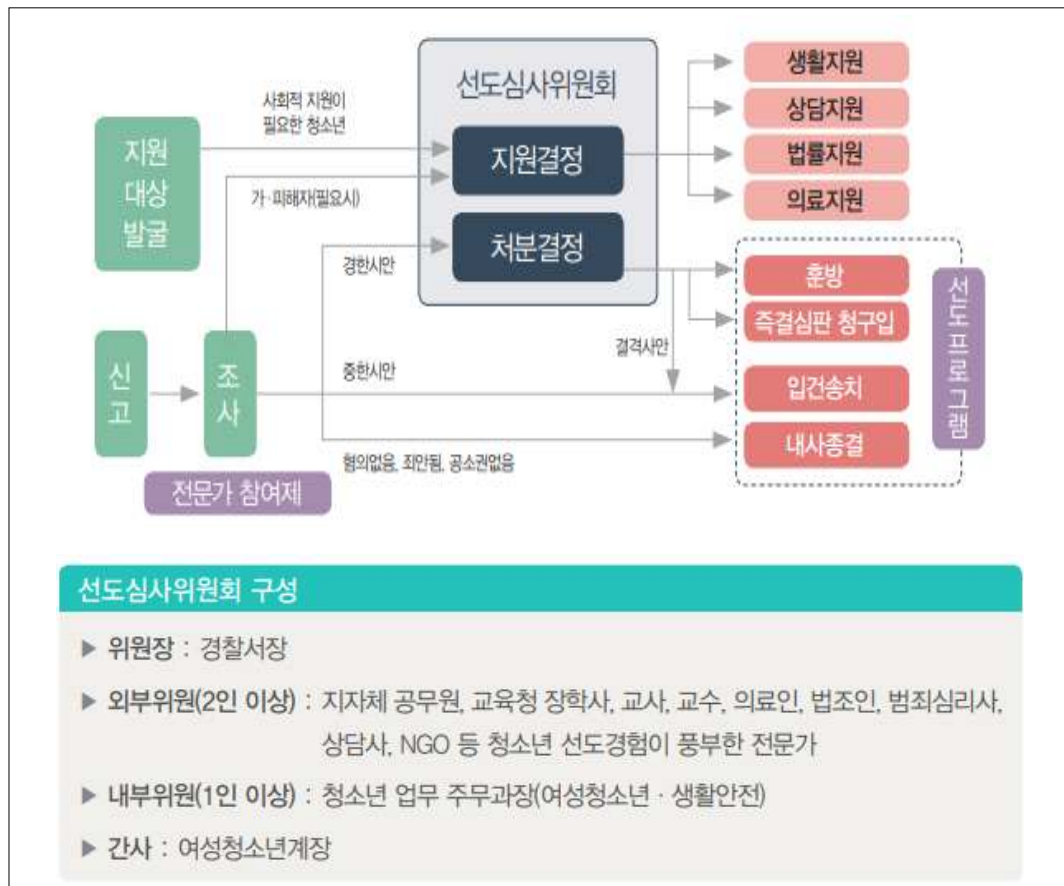
지원센터, (경북)포항여성인권지원센터 등 11개소임.

2. 경찰단계 다이버전(Diversion)의 제도화 운영 :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자원 강화

- 현재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다이버전은 재범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하거나 지자체의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와 제도적인 연계 없이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적, 파편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임.
- 경찰단계에서 포착되는 위기청소년의 위기 유형별 맞춤 지원은 이들 소년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장임과 동시에 건강한 성장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범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 기존의 응보적 사법은 가해자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피해자를 소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에 대한 반성으로 가해자, 피해자, 공동체 간의 대화를 통해 피해회복과 갈등해결을 모색하는 회복적 사법 이념이 대두하여 검찰(형사조정제도), 법원(화해권고제도)에서 적용되고 있으나 보호소년의 소년사법체계 진입 관문인 경찰에서도 이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경찰단계에서 소년범죄의 '비범죄화'를 기반으로 선도프로그램 운영, 회복적 경찰활동,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와의 연계하여 보호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단계에서 위기아동·청소년을 발견하고 가족을 단위로 집중 지원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선도심사위원회 내 지자체 참여 의무화 및 전문가 참여제 운영 활성화] 경찰단계에서 선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죄질이 가벼운) 소년범을 개인 특성에 맞춰 처분 및 지원을 결정하는 기구로, 낙인효과를 제거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에 기여함. 2013년부터 심의대상을 전체 소년범으로 확대하였고, 2014년부터 선도분과, 생활지원분과 등을 설치하여 가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이에 전국적으로 생활지원분과에 지자체 아동보호팀(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청소년안전망팀(전담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등 아동·청소년 전담인력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위기아동·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가 참여제'를 활성화하여 보호소년의 비행 원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범 예방 효과를 제고해야 함.

[그림 6-9] 경미 소년범 처리 절차도



주: 훈방은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처벌 필요성이 없는 초범에 한하며, 즉결심판 청구는 형사 입건 되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감경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짐.

자료: 경찰청. (2021). 경찰백서. 3장, p.168.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6_2021.jsp에서 2022.7.25.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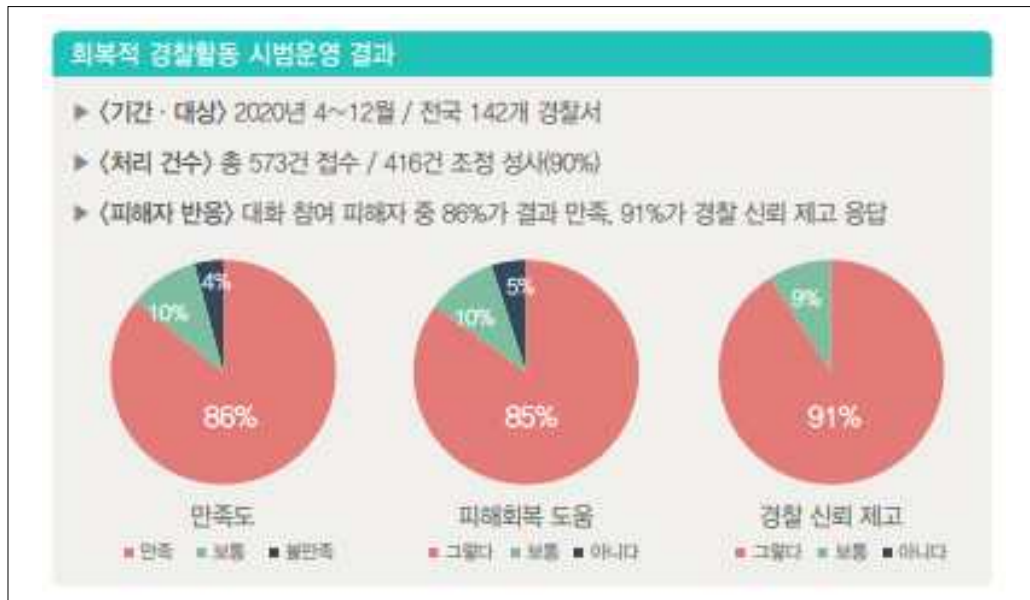
〈표 6-23〉 경찰 선도심사위원회 분과별 구성 및 기능

| 분과 | 기능 및 역할 | 인력풀 구성 예시 |
|--------|--|---|
| 선도분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 소년범의 처분 결정 - 심리·진로상담 - 멘토-멘티 연계 - 인성교육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교육기관 - 학교, Weetpsxj - 청소년기관 및 단체 - 상담기관, 봉사단체 등 |
| 생활지원분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비, 교육비 등 지원 - 취업지원 - 복지서비스 지원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복지, 청소년부터) - 교육청, 교육지원청 - 청소년단체, 장학재단, 봉사단체 등 |
| 의료분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정신적 치료 - 중독치료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보건의료기관 -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등 |
| 법률분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자문 - 학교폭력 및 피해자 지원제도자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교육청 소속 포함), 법무사 - 전, 현직 판·검사, 퇴직경찰 등 |

자료: 경찰청. (2021). 경찰백서. 3장, p.169.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6_2021.jsp에서 2022.7.25.인출

- **[회복적 경찰활동 전국 시행]** 형사조정은 금전 배상에 초점을 맞추고, 화해 권고는 법원 단계에서만 회부가 가능하다 시기적으로 늦으므로, 경찰단계에서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통한 피해회복, 소년비행의 재범방지를 위해 회복적 경찰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에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음. 2020년 기준 회복적 경찰활동을 운영하는 경찰서는 전국 142개서이며 약 90%의 조정을 성사하였고, 참여한 피해자의 96%가 결과에 만족한 것으로 확인됨.

[그림 6-10] 회복적 경찰활동 시범운영 사례



자료: 경찰청. (2021). 경찰백서. 3장, p.177.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6_2021.jsp에서 2022.7.

-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 제도화] 경찰에서 소년범을 조사하는 과정에 범죄심리사를 참여시켜 가정, 학교환경 등 비행 촉발요인과 공격성, 반사회성 등 평가항목을 확인하고 이를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함(재범 우려가 낮은 경우 훈방, 즉결심판 등 감경처분 자료로 활용 함). 2020년 현재 전국 257개 경찰서에서 전체 소년범의 약 15.2%에 해당하는 9,826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보호소년의 인권 보호와 위기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6-24〉 경찰의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현황(최근 5년)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운영관서 | 252개 | 254개 | 254개 | 255개 | 257개 |
| 참여 소년범 | 15,312명 | 11,879명 | 10,501개 | 10,847명 | 9,826명 |
| 전체 소년범 | 76,356명 | 72,752명 | 66,259명 | 66,231명 | 64,584명 |
| 참여 비율 | 20.1% | 16.3% | 15.8% | 16.4% | 15.2% |

자료: 경찰청. (2021). 경찰백서. 3장, p.167.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6_2021.jsp

1.jsp에서 2022.7.25.인출

3. 소년사법체계와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연계 강화 :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내실화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 경찰, 검찰, 법원단계 처분과 제도적 연계 강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는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한 바 있으며, 본 제도는 소년 비행 및 재범 예방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주관의 지원이므로 소년사법제도 내에 진입한 소년의 ‘비범죄화’ 기반의 재범 예방 전문 사업으로 제도화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률 상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대상은 비행, 일탈을 저지른 청소년으로, 현행 「소년법」 상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과 가정, 학교 등 부적응 문제로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임. 신청권자는 본인, 보호자, 학교의 장이며 경찰과 검찰단계 등에서 포착되는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소년이 지자체의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핵심대상이 될 수 있음.
- 단, 대상 소년의 연령 범위는 「아동복지법」 상 18세 미만 또는 「청소년 보호법」 상 19세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에 따른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 「소년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부가처분에 의한 특별교육 대상 청소년
 - 「소년법」 제4조에 따른 통고 대상 청소년,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종결되어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수강명령 대상 청소년
 - 「소년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청소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대상 청소년 및 보호자
 - 「소년업무규칙」 제31조에 따른 선도프로그램의 대상 청소년

〈표 6-25〉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대상과 보호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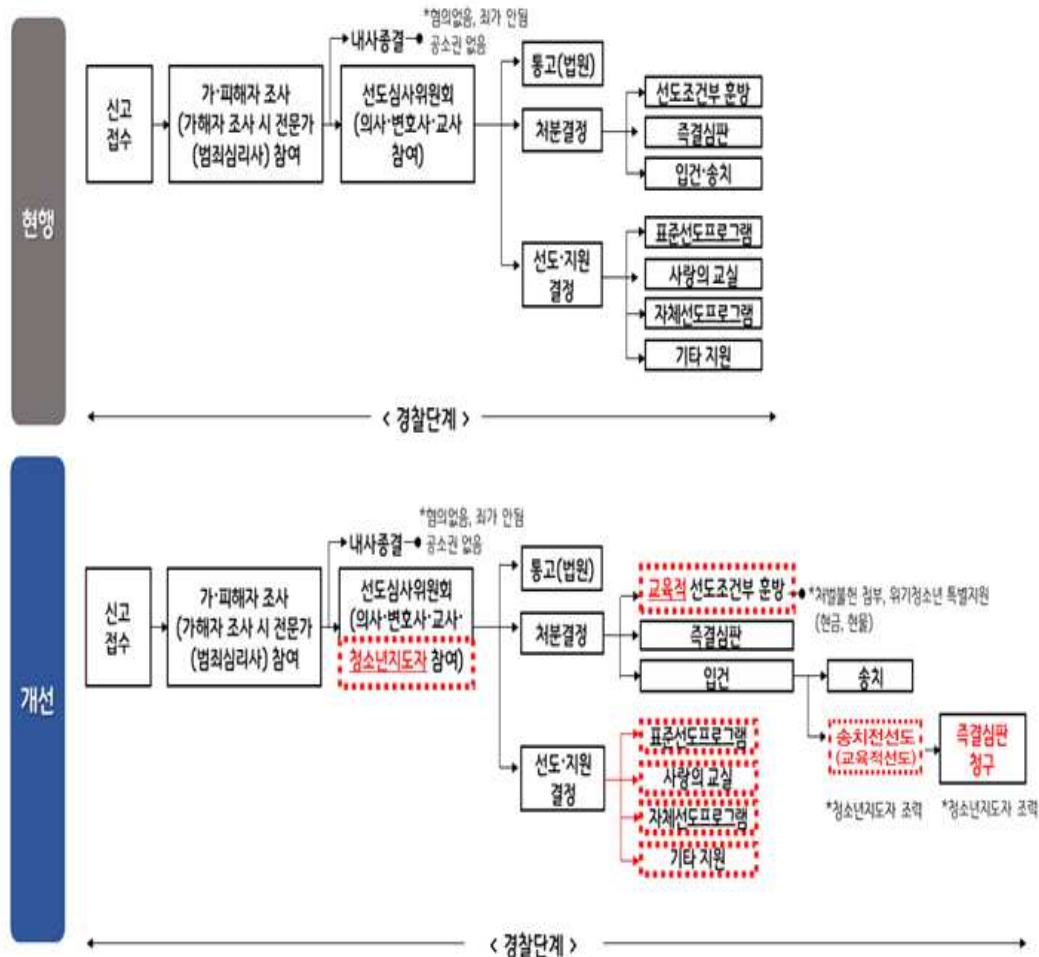
| 구분 | 보호처분의 종류 |
|------|--|
| 대상 | 비행, 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
| |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
| 보호지원 | 해당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학교·사회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상담, 교육, 자원봉사, 수련, 체육, 단체활동 등 제공 (보호지원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청소년 본인 동의를 받아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자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subMenuId=15#searchId1>에서 2022.7.27. 인출

○ 소년사법체계와 지자체의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제도의 연계는 크게 경찰과 검찰 및 법원단계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음.

- 먼저 경찰단계에서 제도 간 연계가 가능한 부분은 ① ‘교육적 선도(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조건부 훈계’의 제도화 운영, ② 경찰의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선도·지원이 결정된 사례를 지자체 이관(아동보호팀 또는 청소년안전망팀), ③ 경찰에서 입건을 결정한 후 ‘송치 전 선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별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찰 송치 전 그 결과를 제출하여 기소 결정 시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는 방안임.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전문가(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

[그림 6-11] 경찰단계의 다이버전과 지자체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연계(안)



주: 1) 위 그림에서 “교육적 선도”는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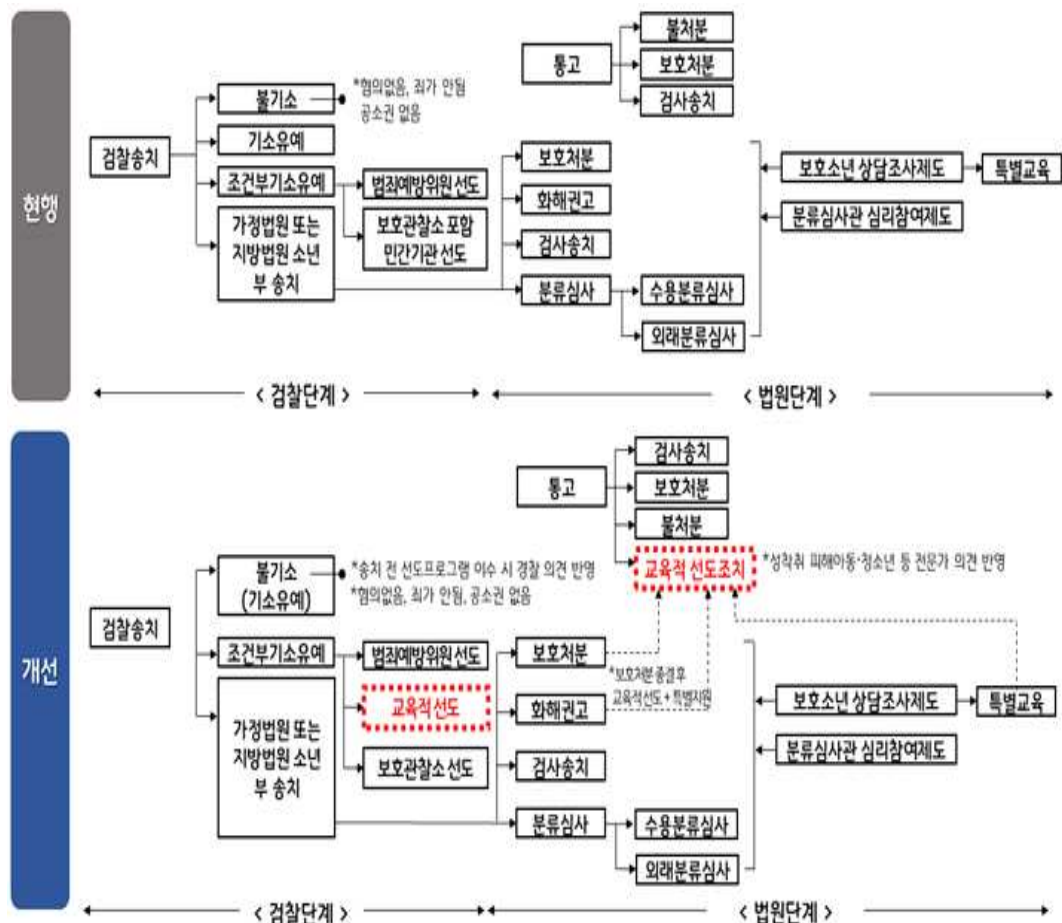
2) 위기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력인은 청소년지도사 이 외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을 포함할 수 있음.
 자료: 김지연 외(2018). p.371, 그림 5-12.

- 다음으로 검찰단계의 조치와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은 ① 조건부 기소유예로, 현재와 같이 범죄예방위원과 보호관찰소의 선도 뿐 아니라 대상 소년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연계하여 재범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임.
- 법원단계의 처분 조치와 연계하는 방안은 ② 현행 통고제도를 예방적·회복

적 보호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와 연계하거나 대체 운영하는 방안임.

- 이와 함께 현행 「소년법」 상 화해권고제도, 보호처분의 부가처분인 특별교육과 연계하여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제공하는 (민·관)기관을 ‘화해권고기관’으로 지정하고, 소년과 피해자와의 화해 과정을 조력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소년에 대한 불처분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등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그림 6-12] 검찰 및 법원단계의 다이버전과 지자체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연계(안)



주: 1) 위 그림에서 “교육적 선도”는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을 의미함.

2) 위기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력인은 청소년지도사 이 외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을 포함할 수 있음.
 자료: 김지연 외(2018). p.372, 그림 5-13.

○ 특히 보호처분이 종료된 소년의 경우 건강한 성장과 자립, 재범 예방을 위해 소년사법체계와 지자체의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제도 간 핵심 연계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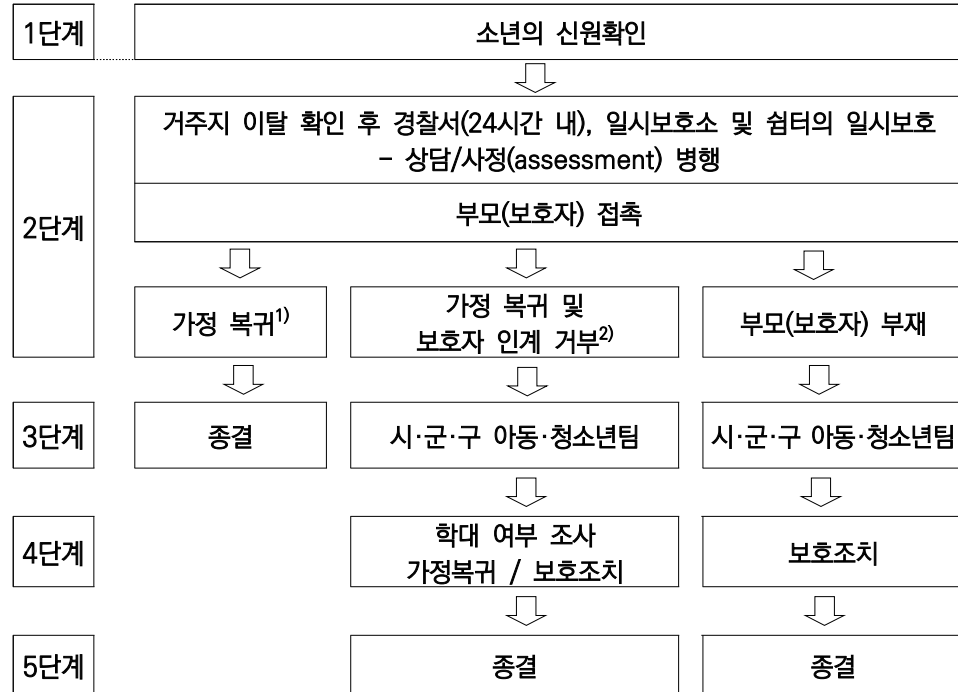
- 소년법의 동종, 이종 범죄의 재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비행의 원인에 대한 해결이 병행되지 않는 ‘엄벌주의’는 소년 비행의 예방 및 억제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함.
- 이에 보호처분이 종료된 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예방적, 회복지원’을 제도화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 등의 적응과 복귀, 자립을 지원해야 함. 이를 위해 소년원 출원생 중 23세 이하 무연고 소년에 대한 숙식 및 자립을 지원하는 하는 전국 8개 청소년자립생활관(현재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협회가 관리)을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정신건강 전문 인력 연계 및 자립지원 예산을 지원할 것을 제안함.
- 현재 법무부 산하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인건비 외 생활관 1개소 당 연간 약 4~5천 정도의 사업비만 지원되며,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동종 유사시설과 같은 시설 및 대상자 지원에서 일체 배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도 전혀 없어 소년원 출원생의 자립생활지원에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소년보호협회 산하 전국 8개 청소년자립생활관의 법적 근거도 부재하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회복지원시설로 추가 지정하거나, 하위 법령을 근거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즉, 소년원 출원생은 23세 이하의 청소년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기의 학대피해 등으로 원 가정을 이탈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거나, 학업중단으로 기초학력이 미달하여 자립과 정착에 한계가 있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의 핵심지원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1호 처분)은 여성가족부와 지방법원, 「아동복지법」상 아동치료시설(6호 처분)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관리의 책임이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투입이 없고 관

리감독 책무도 부재하므로 보호소년의 인권 보호와 재범 예방 차원에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근간으로, 보호소년에 대한 복지지원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경찰은 실종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가출팜 포함) 등을 일선에서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는 체계이므로 이 단계에서 지자체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와의 긴밀한 연계 체계 구축이 요구됨.

- 이를 위해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를 근거로 「실종아동법(약칭)」 제2조의 실종아동에 대한 신원을 확인한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되, 이 단계에서 보호자 인계가 불가한 경우 시·군·구 아동·청소년보호팀(아동보호팀 또는 청소년안전망팀)에 연계하도록 해야 함.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실종아동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사례라 하더라도 해당 소년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 등의 사유로 가출하여 가정이나 보호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거부할 경우 경찰이 청소년쉼터 등 시설에 인계하고 있음. 그러나 이 단계에서 지자체가 개입하여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피해 여부 확인을 포함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이 요구됨.
- 핀란드의 경우 경찰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이름, 생년월일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 시 우리나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그 근거를 마련하되, 다만 본 규정은 경찰의 공권력 강화 측면이라기보다 위기 상황의 소년의 적극적 구조의 일환이며 지자체가 보호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소년을 인계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림 6-13]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개입 절차(안)



주: 1) 위 그림에서 “교육적 선도”는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을 의미함.

2) 위기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력인은 청소년지도사 이 외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을 포함할 수 있음.
자료: 김지연 외(2018). p.168, 그림 3-3.을 일부 수정함.

제4절 소결

- 보호소년을 포괄하는 통합적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해 소년사법 제도를 넘나드는 보호소년에게 ‘낙인’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소년에 대한 정확한 국가 통계를 생산, 축적하여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정책 추진이 요구됨.
- 보호소년에 대한 낙인, 처벌과 같은 응보주의는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년법」은 우범소년 조항을 계속 유지하여 해당 소년에게 낙인을 포함한 소년원 구금 등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삭제를 권고하는 바, 해당 조항의 취지를 차치하더라도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감안할 때 삭제가 요구됨.
 - 우범소년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지자체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비행의 원인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접근을 강화할 경우 아동 권리 보장과 재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함.

- 특히 최근 10년 간 소년범죄의 발생 추이와 범죄 유형, 연령대별 소년범죄 발생 현황 등을 종합할 때 ‘촉법소년’과 관련한 국가 통계가 부실하여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의 근거를 찾기 어렵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의 급증 경향과 소년사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동향을 감안할 때 소년법에 대한 처벌과 낙인보다 처우와 지원을 강화할 때 재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촉법소년(10~13세)의 비행 통계는 경찰, 법원 단계에서 우범소년과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2018년부터 대검찰청 「범죄분석」부터 촉법소년 통계는 집계조차 하지 않음. 따라서 「소년법」상 촉법소년 규정을 존치할 경우 촉법소년의 현황과 추이, 범죄 유형과 양상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해 국가 통계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 추진이 요구됨.
- 또한 2019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세 미만 범죄피해자(94,371명) 가운데 12세 미만 아동이 약 1만 4천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국가 및 지자체는 가해 소년 뿐 아니라 범죄피해 소년에 대한 통계 생산과 회복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2010년 유엔안전(A/CONF.213/4)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과 범죄’와 관련하여 UNODC와 Unicef는 ‘소년 범죄피해자 및 증인을 위한 법률과 해설’에서 범죄피해 소년의 ① 존엄을 기반으로 대우받을 권리, ②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③ 대용에 대하여 고지 받을 권리, ④ 의견과 우려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⑤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권리, ⑥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⑦ 사법절차에 있어 보호받을 권리, ⑧ 안전에 대한 권리, ⑨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⑩ 특별예방조치에 대한 권리를 강조함.
- 현재 범죄피해 소년을 위한 법률이 미흡하므로 범죄피해자 관련 법률에 보호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거나, 이들의 적극적 권리구제와 현행 지원기관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범죄피해소년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의 신규 제정을 검토할 경우 이하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표 6-26〉 범죄피해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주요 내용

| 항목 | 주요 내용 |
|------------------------------|--|
| 범죄피해소년 상담기관의 설치·운영 | - 소년범죄의 신고접수 및 상담서비스,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기관(기능)의 설치 또는 지정 |
| 범죄피해소년 보호시설 설치 운영 및 지원 | - 피해자 상담, 치료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보호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 - 보호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를 위한 개별 지원(생계비, 의료비, 교육훈련비 등) |
| 범죄피해소년에 대한 지원 | - 범죄피해소년의 비밀보장 등 인권보호 조치 - 19세 미만 범죄피해소년에 대한 피해회복 지원 -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에 준하여 주소지 이 외 지역의 학교에 대한 취학을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등 학업지원 |

자료: 김지연 외(2018), pp.353~354. 표5-7을 수정함.

□ 보호소년에 대한 낙인을 최소화하는 등 국가적인 철학과 신념을 명확히 하고,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관련 내용을 준수하되 지역사회 내 처분에 있어 지자체의 실질적인 참여와 책무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당사국으로, 협약 내용을 준수할 책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대표적 국제협약인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규칙, 1985년)을 준용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을 강화해야 함.

- 1990년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소년비행의 방지에 관한 유엔지침’ 및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은 ① 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소년사법의 목적이며, 소년사법절차에서 소년의 방어권이 완전히 보호되어야 하고, ③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는 지역사회 내 자원 활용과 다이버전(Diversion) 추진, ④ 처분의 다양화 및 최후 수단으로서의 시설 내 처우(구금), ⑤ 효과적인(효과가 있는) 처분과 소년에 대한 필요한 지원 제공 등을 권고함.
- 소년강력법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을 보면, 엄벌주의의 낮은 재범 억제 효과에 대한 비판에 따라 소년과 성인을 차별적으로 대하면서 사회 내 처우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독일의 보호처분은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를 목

적으로 ‘징벌’이 아닌 ‘교육’이 목적임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의 동의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한 처분을 부과함.

- 특히 노르웨이는 15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사법체계가 아닌 아동복지부(child welfare office)에서 전적으로 담당하여 지자체 아동보호위원회는 보호소년에 있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며, 소년에 대한 처우와 통계는 18세에 종료되지 않고 소년의 연령과 관계없이 막강한 권한을 가짐. 15세 이상 범죄소년은 아동복지체계와 형사사법체계가 동시에 관여할 수 있는데, 성인에게 부과되는 형벌을 부여할 수 있으나 조건부 불기소와 같이 계약 사항을 이행한 경우 1년 후 범죄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의 불기소처분 등을 통해 낙인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확고한 관점과 철학을 기반으로 함.

□ 경찰단계에서 포착된 보호소년을 지자체로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중간처우시설 등의 보호소년 인권 보장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되, 지자체와 경찰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관이 협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경찰이 위기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자체에 연계하도록 하고, 경찰단계의 다이버전을 지자체와 제도적으로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경찰은 18세 미만의 실종아동(가정 밖 청소년 포함), 학교 밖 청소년 등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체계이자, 소년사법체계로 진입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이므로 경찰과 지자체의 연계를 제도화하여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보완해야 함.
-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년보호규칙」 내에 위기청소년을 지자체에 제도적으로 인계(연계)하도록 해당 규정을 마련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9조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과 연계하여 ① ‘교육적 선도(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조건부 훈계’의 제도화, ② 경찰의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선도·지원 결정 사례는 지자체 이관(아동보호팀 또는 청소년안전망팀), ③ 검찰 송치 전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 결과에 따라 즉별심판 청구 또는 검찰 송치 전 그 결과를 제출하여 기소 결정 시 참고하도록 할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소년법에 대한 구금을 강화했을 때 높은 재범률을 기록한 이후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다기관 협력체계라 할 수 있는 ‘소년범죄대응팀’이 소년의 보호처분 이행 여부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함.

- ‘중간처우시설’은 구금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 내 처우로 활용되며 소년 보호체계와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간의 연계가 가장 필요한 부분임. 우리나라 보호처분 6호(아동치료시설)가 대표적인 중간처우시설에 해당하는데, 영국 등 주요국과 달리 지자체의 관리감독과 지원 책무가 매우 미흡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일본의 보호처분에도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양호시설 위탁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호소년의 취학 의무와 정신과 진료 경험이 있는 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와 해당 시설이 보호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함.

□ 「소년법」 상 보호처분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의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연계하여 지자체(청소년안전망팀)가 검찰, 법원, 보호조치 이후 단계별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의 주체로서 책무 이행 강화 필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의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내실화하여 소년 사법제도의 일부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보호처분이 종료된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소년의 적응과 자립을 포함한 회복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소년원을 출원한 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소년보호협회 산하 전국 8개 청소년자립생활관을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기관으로 지정하여 정신건강 관련 전문 인력 연계과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또는 시·군·구 청소년안전망 사무)의 핵심 지원 대상 및 위기 유형에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 대상을 반드시 포함하고 소년사법체계와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간의 제도적 연계를 강화할 경우 소년사법제도 개선 및 비행소년의 탈 위기와 재범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 청소년회복지원시설(1호, 청소년복지시설), 아동치료시설(6호, 아동복지시설), 소년의료보호시설(7호, 소년보호시설), 소년원(8~10호, 소년보호

시설) 출원 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에서 위기 사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연계 여부 결정, 주거지원 및 자립지원 등 사후관리를 제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행 인프라 여건 진단 및 확충 필요

- ※ 소년보호 7호 처분은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과 같이 의학적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6개월 범위에서(1회 연장 가능) 위탁하는 처분이며, 이들은 처분 종료 후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나 관련 제도나 지원 서비스가 부재함.
- ※ 7호 처분 시 감호 비용을 낼 수 있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①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③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의 모 또는 부, ⑤ 그 밖에 감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경우 감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위탁 처분
- 특히 소년원 처분 전에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적이 있거나 소년원 출원 후 연고가 없어 법무부 산하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은 지자체(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주거지원 등 ‘자립준비청년’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 개선 필요(현재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지원하는 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지방비)은 전혀 없음).
- 검찰단계에서도 ① 조건부 기소유예 시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② 현행 「소년법」 상 통고제도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및 동법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로 대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우범조항 삭제). 또한 「소년법」 상 화해 권고제도, 보호처분의 부가처분인 특별교육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연계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년에 대한 불처분결정, 심리불개시 등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현재 청소년회복지원시설(1호 처분), 아동치료시설(6호 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및 관리감독 책무를 강화하고 보호소년의 인권 보호와 재범 방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요구됨.



제7장

위기청소년과 위기청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

제1절 위기청소년과 위기청년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 현황

제2절 위기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의 국외사례
분석

제3절 위기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원칙과 방향

제4절 소결

제 7 장

위기청소년과 위기청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

제1절 위기청소년과 위기청년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 현황

1. 청소년과 청년 연령 정의에 따른 사각지대

-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과 청년 연령 정의는 각각 개별법에 따라 정의되고, 각 법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 또한 다름.
-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며, 여성가족부 담당임. 청년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뜻하며, 국무조정실에서 법의 집행을 담당함.
 - 19세~24세의 초기 청년 연령 범위가 중첩되는데, 이들에 대한 담당부처는 명확하지 않음. 한편, 9세~17세의 청소년 연령은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되는 아동의 연령과 중첩되며,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사업 대상이 중복되고 있음.
 - 각 법상 대상 연령의 중복은 아동·청소년·청년이 보호나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중복 체계 중 어떤 체계에서도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호 및 지원의 책임 주체의 모호성을 유발하며 연령에 따른 서비스 분절의 요인이 되기도 함.

[그림 7-1]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자료: 저자 작성.

- 가령, 13세의 학대피해 아동은 「아동복지법」 또는 「청소년 기본법」 체계 내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학대피해아동의 게이트웨이가 시군구의 아동보호팀(보건복지부 관할)으로 일원화된 가운데, 지역의 자원 상황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은 청소년쉼터로 분리보호 조치되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음(류정희 외, 2021).
 - 그러나 청소년쉼터는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보호 조치 후의 아동보호팀의 사후관리에 있어 사각지대로 남게 되며, 보호서비스에 있어서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과 차이가 발생함(류정희 외, 2021).
 -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19세의 청소년부모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년기본법」 대상에 모두 속함.
 - 그러나 위기 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지자체 단위의 공적 전달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³⁹⁾, 공식적 지원체계 내에서 보호 또는 위기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채, 일부 민간기관을 통해 지원받아 왔음.
 -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의 공적 전달체계인 아동보호팀은 「아동복지법」 상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19세의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유기, 학대, 방임하여 그 자녀가 보호대상아동이 되지 않는 한 아동보호팀의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위기 아동·청소년·청년은 연령에 따라 적용받는 법, 규정과 지원체계가 달라지는 상황으로 개인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분절적·파편적으로 제공되며 그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함.
- 대표적으로 위기취약가구 아동 대상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임(류

39)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전담공무원과 사례관리사로 구성된 '청소년안전망팀'이 시군구 단위로 2021년도부터 구축되고 있으나, 2022년 2월 기준, 20개소(신규 6개소 포함)에 불과하며, 지자체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 모델에 차이가 있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065>(2022년 7월 25일 인출).

정희 외, 2021).

- 13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 여성가족부 사업인 청소년안전망(CYS-Net)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처간 정보 공유 및 연계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음(류정희 외, 2021, 재인용).
- 또한, 위기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적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으로 아동·청소년의 위기가 25세 이상의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도 지원할 방안이 거의 없음. 보건복지부의 성인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인 희망복지지원단(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위기 청년은 해당 사업의 주대상자가 아니며⁴⁰⁾, 역시 체계간·부처간 칸막이로 여성가족부 사업 대상이 보건복지부 사업 대상으로 연계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즉, 개인의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위기를 연령에 따라 정책대상자를 구분하고, 그로 인해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의 사업 대상으로 변화되면서 지원을 위한 근거법과 체계가 달라짐. 이러한 과정에서 서비스는 더욱더 파편화, 분절화되어 제공될 수 밖에 없음. 더욱이 대부분의 서비스가 신청주의 기반이기 때문에 대상자 누락, 서비스 공백 등 복지 사각지대는 쉽게 발생할 수 있음. 청소년의 위기가 학교, 소년보호체계 등에 연관될 경우 교육부, 경찰/법무부 지원 대상자로서 될 수 있음.

2. 분절적 사업대상 선정에 따른 지원의 사각지대

□ 법상 정책대상의 연령 구분, 주무 부처의 구분은 예산과 전달체계 등 부처별 여건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업별로 그 대상을 규정, 제한함으로써 동일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40) 주 대상자는 독거노인·노인부부가구(42.2%), 한부모가구(16.9%), 청장년 1인가구(17.9%) 등임(한은희, 박규범, 전연진, 전영호, 2017).

○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소)년, 가정위탁보호 청(소)년,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소년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영케어러, 청소년부모, 빈곤 청(소)년 등은 모두가 최소 한 개이상의 상황적·환경적 위기와 함께 '자립'이라는 발달 과업을 이행해야 하는 위기 청(소)년임.

- 그러나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을 관할 부처에 따라 분절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같은 사업이지만 동일 욕구를 가진 모든 위기 청년·청소년에게 제공되지 않음.

- 가정 밖의 시설보호 청소년은 부모 또는 원가족과의 관계 단절, 심리정서적·사회적, 경제적 지지체계의 부재로 인해 성인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자립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책대상임.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9년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에서 자립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음. 자립수당⁴¹⁾은 양육시설, 그룹홈과 같은 아동복지시설로부터 보호종료한 청년에게 5년간 매월 30만원씩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서비스임.
- 그러나 여성가족부 관할의 청소년쉼터, 법무부 관할의 청소년자립생활관 퇴소 청년은 해당 사업의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음. 우선, 보건복지부 관할의 아동보호치료시설과 법무부 관할의 청소년자립생활관은 모두 소년보호처분 6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청소년자립생활관 퇴소 청년은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자립수당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을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가정 밖 청소년 개인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등을 표류하는 경우가 많고, 아동복지시설이 부족하여 청소년쉼터로 분리보호조치 되는 사례도 많으나(류정희 외, 2021), 자립수당의 2년 연속 보호 기간 요건 산정시,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한 청소년쉼터 등은 포함되지 않음⁴²⁾.

41)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고,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후 퇴소 시 지급.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09&PAGE=9&topTitle=\(2022년 7월 26일 인출\)](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09&PAGE=9&topTitle=(2022년 7월 26일 인출))

- 청소년자립생활관과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 관할의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또한 당초에는 사업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6조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자립지원수당을 퇴소 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음⁴³⁾. 한편,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에 비해 지원 기간과 2년이나 짧고 지원대상자도 매우 제한적임. 2021년 기준, 사업비가 자립수당의 0.46%에 불과하였으며, 사업이 도입된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상자 2,418명 중 40(1.6%)명에게만 지원됨⁴⁴⁾.

〈표 7-1〉 자립수당·자립지원수당 개요

| 구분 | 자립수당 | 자립지원수당 |
|---------------|--|--|
| 근거법 | 아동복지법 제 38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6조 |
| 관할부처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 예산 (2021년) | 27,239,000천원 | 126,000천원 |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만 18세 이후 만기/연장 보호종료된자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 |
| 지원내용 | 월 30만원 | 월 30만원 |
| 지원기간 | 5년 ⁴⁵⁾ | 3년 |
| 이용자 | 8,035명 ⁴⁶⁾ (2019.4~2022.7) | 40명 (2021.5~2022.3) |

자료: 저자 작성

출처: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조사업 검색.

○ 자녀를 양육하는 빈곤 청소년·청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룬 시

42) https://www.129.go.kr/faq/faq03_view.jsp?n=3286

43)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91556&pkgId=49500733>(2022년 7월 27일 인출).

44) <https://idsn.co.kr/news/view/106557924910252449500733>(2022년 7월 27일 인출).

45) 2021년 8월부터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08&difSer=cf8f50b9-8aba-45ef-b86a-5f309546c825&temp=2022&temp2=HALF001>(2022년 7월 27일 인출).

46)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지급대상이 5년으로 확대되기 전 이용자 수임).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08&difSer=cf8f50b9-8aba-45ef-b86a-5f309546c825&temp=2022&temp2=HALF001>(2022년 7월 27일 인출).

기에 자녀의 출산과 양육, 돌봄을 수행함과 동시에, 성인으로서 스스로의 자립을 위한 학업, 취업과 같은 발달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진 정책 대상임.

- 이들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근거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청년과 청소년부모에게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음⁴⁷⁾. 한편, 지원금액은 부모의 소득과 연령, 아동의 연령을 구분하여 세분화 되어 있음.
-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임. 한편, 부모의 연령이 청년(만 25세~34세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자녀가 만 5세 이하이면 월 10만원을 추가하여 30만원이 제공되고 자녀가 만 6세 이상일 경우에는 월 5만원이 추가되어 총 25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로 청소년에 해당하면, 가구 소득 기준은 60% 이하, 지급액도 35만원으로 기준이 조정·적용됨. 이밖에 학업·취업 등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어 총 45만원의 현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한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가 한부모가족지원체계에 편입되어 있어 청소년 특성을 가진 청소년한부모 지원에 대한 한계점이 있으며, 청소년부모(부부) 가구가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였음을 밝히며 청소년부모(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22년 7월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청소년부모(부부)가구는 기준 소득이 60% 이하이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47)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9094>(2022년 7월 27일 인출).

〈표 7-2〉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자녀 1인, 월 지급액 기준)

| 구분 | 근거법 | 부모 연령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 아동 연령 | 추가금액 | 총지원금액 |
|------------------------------------|------------|------------------|--|--------------------|---------------------------|-------|
|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 청년 한부모 | 한부모 가족 지원법 | 만 25 ~34세 52% 이하 | 만 5세 이하 | 10만원 | 30만원 |
| | | |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 5만원 | 25만원 |
| |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 가족 지원법 | 만 24세 이하 60% 이하 | 만 18세 미만 | 15만원 | 35만원 |
| | | | | | 10만원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시 | 45만원 |
|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 청소년 부모 | 청소년 복지 지원법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사실혼 인정 60% 이하 | 만 18세 미만 | - | 20만원 |

자료: 저자 작성.

출처: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II)

한부모가족을 위한 든든한 정책 4가지.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9094>(2022년 7월 29일 인출).

여성가족부.(2022). 보도자료: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2022년 7월 30일 인출).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8612

- 즉, 여성가족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가구의 유형과 소득, 부모의 연령과 특성,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원의 근거법이 다르고, 동일 사업내에서 지원금액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신청주의 기반에 더하여 세밀하고 복잡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보의 부족과 서비스 접근성 문제로 인한 지원의 사각지대가 상시 발생할 수 있음. 무엇보다 사례관리 등의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현금성 지원의 강화는 청소년·청년 부모의 자립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따르기도 함(배보은, 2022).

- 한편, 이러한 세분화된 대상자 규정은 아동양육비지원사업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유인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청년한부모와 청소년한부모, 청소년부모(부부)를 각각 규정하여 지원함으로 인해 청소년·청년부모(부부) 가구와 청년부모가구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됨. 즉, 부모가 청소년·청년 연령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가구라도 부모 중 한 사람만 25세 이상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020년 기준, 아동이 있는 청소년·청년부모 또는 청년부모 가구는 전체 111, 076가구로 이중 97%(108,614가구)는 소득이 낮아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표 7-3〉참조). 또한, 청소년부모(부부)가구 지원에 있어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지만, 동일 기준에서 한부모가구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사실혼을 밝혀 청소년부모(부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이유가 없으며, 비혼 동거 상태로 남게 하는 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배보은, 2022).

〈표 7-3〉 청소년·청년부모 가구 규모

(단위: 가구)

| 부모 모두 19세 미만인 가구 | 부 또는 모가 19세 미만인 가구 |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가구 | 부모 모두 34세 이하인 가구 |
|------------------------|--------------------------|------------------------|--------------------------|---------------------|
| 38 | 126 | 2,298 | 7,361 | 111,076 |

주: 2020년 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부모 가구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 가구(가로줄무늬) 음영 표시.

자료: 이상정, 하태정, 류정희, 변수정. (발간중). 청소년부모 정책 소외 실태 및 정책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처: 통계청(2020).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분석.

제2절 위기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의 국외사례 분석

1. 일본⁴⁸⁾

가. 연령 정의

□ 일본은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 연령이 명확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과 함께 포괄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청년’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일본 단어, ‘와카모노(若者)’는 ‘젊은이’를 의미하며, 청소년과 혼용되어 사용됨.

- 1970년에 제정된 「청소년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축약하여 「와카모노 고용촉진법」으로 통칭함. 한편, 해당법에서는 청소년을 3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와카모노(若者)’, 즉 ‘청년(혹은 청소년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이 법령에 정식 명칭으로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고도모·와카모노 육성지원추진법」이 제정된 2009년도 부터임.

- ‘고도모’는 아동을, ‘와카모노’는 청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동·청년 육성지원추진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해당 법령에서도 청년의 연령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음⁴⁹⁾.

•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⁵⁰⁾, 「청소년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아카모노 고용촉진법)」에서는 청소년(청년)을 3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0세~35세 미만’을 지원하는 근거법이라고 볼 수 있음.

48) “정세정 외.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23-152”에 기초하여 작성함.

49)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와카모노를 20세~34세로 제시하고 있으며, 와카모노 관련 사업은 보통 35세 미만으로 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나(정세정 외, 2020, 재인용, pp.123-124), 법적 규정은 아님.

50)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구분한 「민법」은 2022년 4월 1일 이후 18세 미만인 자로 「아동복지법」의 아동 연령과 동일하게 변경됨.

나. 위기 청소년·청년 지원제도와 정책

□ 「아동·청년 육성지원추진법」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청소년정책의 결과로서 제정되어, 아동·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위기 유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

○ 일본은 2003년 내각총리대신이 책임자인 청소년육성추진본부를 설치하고, 2003년과 2008년에 「청소년 육성시책 대강」을 발표함.

- 그러나 니트(NEET)나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등 청년의 자립과 관련된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2009년 「청소년종합대책추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아동·청년 육성지원추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2010년 4월 1일에 제정됨

- 「아동·청년 육성지원추진법」에 따라 정부(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을 마련해야 함. 정책을 추진하는 본부장은 총리이며, 관할 부처는 내각부임.
-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은 5년 단위로 발표되며, 2016년에 발표된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은 “모든 아동·청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며”라는 부제와 함께, 5대 중점과제와 과제별 기본적인 시책을 포함하고 있음.
-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은 모든 아동·청년의 성장과 발달,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아동빈곤, 니트(NEET),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장애, 비행과 범죄 등과 같은 복합적 위기에 대한 중층적 지원과, 위기 아동·청년의 가족 지원까지 포괄하고 있음.

〈표 7-4〉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

| 5가지 중점과제 | 기본적인 시책 |
|-------------------------------|---|
| 1. 모든 아동·청년의 건전한 육성 | (1) 자기형성 지원 (2) 아동·청년의 건강과 안심안전 확보·증진 등 (3) 청년의 직업적 자립, 취업 등 지원 (4) 사회형성 참가지원 |
| 2. 아동·청년 성장을 위한 사회환경 정비 | (1) 아동·청년이 경험하는 복합적·복잡성이 반영된 중층적 지원 충실 (2) 어려운 상황 별 대응 - 니트, 히키코모리, 부등교 - 장애 - 비행, 범죄 - 아동 빈곤문제 대응 등 (3) 아동·청년의 피해방지 및 보호 |
| 3.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년이나 그 가족 지원 | (1) 가정, 학교 및 지역의 상호 관계의 재구축 (2) 보육지원 등 충실 (3) 아동·청년 주변 유해환경 등에 대한 대응 (3) 워크 라이프 밸런스 추진 |
| 4. 아동·청년 성장을 지원하는 담당자의 육성 | (1) 지역의 다양한 양성 (2) 전문성 높은 인재 양성·확보 |
| 5. 창조적 미래를 개척해 갈 아동·청년의 지원 | (1) 글로벌 사회에서 활약하는 인재 육성 (2) 이노베이션을 담당할 과학기술인재 등 육성 (3) 정보통신기술 진화에 적응, 활용할 수 있는 인재육성 (4) 지역만들기에서 활약하는 청년 지원 (5) 국제적 활약하는 차세대경기자, 신진예술가 등 육성 (6)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자료: 정세정 외.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28.

원자료: :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決定. (2016.2. 9.). 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taikou.pdf> 에서 2020. 9. 15.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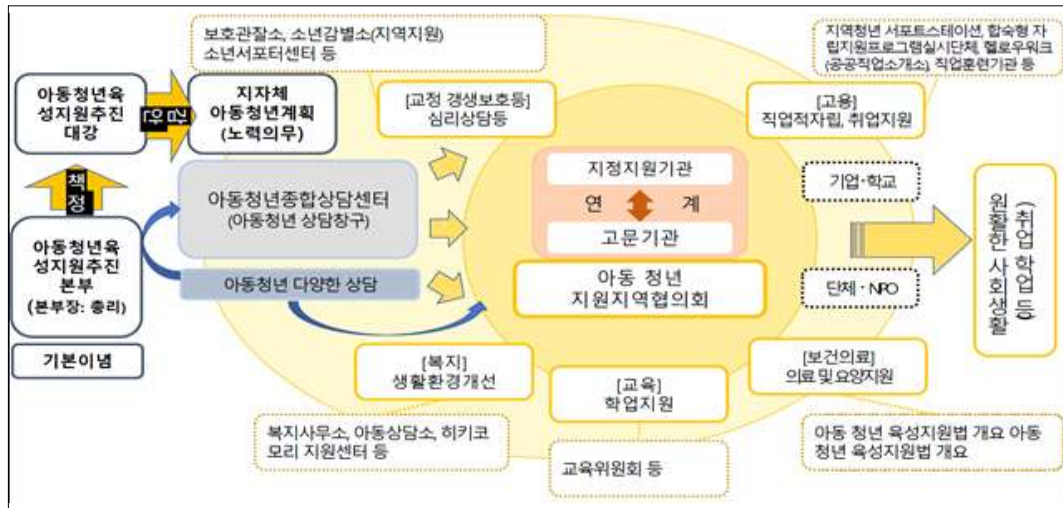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에 기초하여 「아동·청년 기본계획」을 수립, 실시할 노력 의무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상의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년을 지원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아동·청년 지역지원협의회”와 아동·청년육성지원에 관한 상담,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거점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 아동·청년 지역지원협의회는 아동·청년의 사회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복지, 보건, 의료, 교정, 갱생, 보호 등의 관련 분야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기능을 함.
-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는 상담이 필요한 아동·청년이 다른 창구로 다시

연계되지 않도록 윈스톱 상담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서비스 기관 소개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그림 7-2]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 개요도



자료: 정세정 외.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29.

원자료: 厚生労働省. (2010. 4. 1.).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について.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s_gaiyo.pdf에서 2020. 9. 15. 인출.

다. 위기 청소년·청년 통합적 정책 사례: 도쿄도

□ 일본 중앙정부의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에 기초하여 「아동·청년 기본계획」을 수립,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 사례를 도쿄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쿄도에서 아동·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는 도민안전추진본부며, 2020년 기준 제2기 「도쿄도 아동·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함.

-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 맥을 함께 하고 있으며, 아동·청년의 욕구 반영과 개별 맞춤형 지원(관점 1), 생애주기적 관점의 연속적 지원(관점2), 당사자를 돕기 위한 가족 지원 포괄(관점2), 통합적 지원(관점3) 등을 계획의 포인트로 제시하고 있음.

〈표 7-5〉 도쿄도 아동·청년계획 개요

| 대항목 | 소항목 | 내용 |
|------------|---|--|
| I. 계획의 개요 | 이념 | 모든 아동·청년이 청년기에 사회적 자립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 성장을 사회전체가 응원한다. |
| | 계획의 성격 |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에 근거한 계획 |
| | 시기 |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5년간) |
| | 책정의 검토 경위 | 도쿄도청소년문제협의회 및 청년지원부회에서 심의 |
| II. 계획 포인트 | [관점1] 한 명 한 명의 아동·청년의 최선의 이익을 존중한다는 관점 → 지원 시 당사자인 아동·청년의 관점에서 의견을 존중하여 지원에 반영하는 자세가 중요 | |
| | [관점2] 아동·청년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한다는 관점 → 아동·청년 라이프 스테이지를 내다볼 수 있는 끊임없는 지원과, 본인 뿐 아니라 가족도 포함한 지원이 필요 | |
| | [관점3] 아동·청년 지원에 사회전체가 중층적으로 참여한다는 관점 → 복합적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 연계를 촉진하고 사회전체가 아동·청년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 | |
| | | |

자료: 정세정 외.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33.

원자료: : 都民安全推進本部, 2020, 東京都子供・若者計画(第2期)の概要. <https://www.metro.tokyo.lg.jp/tosei/hodohappyo/press/2020/04/30/documents/05.pdf>. 에서 2020. 9. 15. 인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아동·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자립 지원을 기초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왕따, 학업중단, 장애, 니트(NEET), 은둔형 외톨이, 비행·범죄, 빈곤, 한부모, 빈곤 등의 상황적 위기에 있는 아동·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특히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의 양육 능력 및 교육 능력 향상과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의 내용도 포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지원에 있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역할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음.

〈표 7-6〉 도쿄도 아동·청년계획 주요 내용

| 도쿄도 아동·청년계획 주요 기재 사항 | |
|---|--|
| 기본항목. 모든 아동·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자립을 지원 | |
| 1. 사회적 자립을 향한 '기초'의 형성 | |
| 2. 사회형성, 사회참가할 수 있는 힘의 육성 | |
| 3. 사회적·직업적 자립을 지원 | |
| 4. 배움의 기회 확보 | |
| 기본항목 II. 사회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년이나 그 가족에 대한 지원 | |
| 1. 어려움의 상황별 대응 | |
| (1) 이지메 (2) 부등교·중도퇴학 (3) 장애있는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 |
| (4) 청년 무업자(니트), 비정규고용 대책 (5) 히키코모리 관련 지원 | |
| (6) 비행·범죄에 빠진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7) 아동 빈곤 | |
| (8)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 (9) 자살대책 | |
| (10) 특히 배려가 필요한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 |
| 2. 피해방지와 보호 | |
| (1) 아동학대방지대책 (2) 사회적 양호체제의 충실 | |
| (3) 아동·청년 복지를 위협하는 범죄대책 | |
| 기본항목 III. 아동·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사회전체가 지원하기 위한 환경정비 | |
| 1. 가정의 양육 능력·교육 능력 향상 | |
| 2. 학교·가정·지역이 일체가 된 아동·청년 육성 | |
| 3. 아동·청년 육성환경 정비 | |

자료: 정세정 외,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34.

원자료: : 都民安全推進本部, 2020, 東京都子供・若者計画(第2期)の概要. <https://www.metro.tokyo.lg.jp/tos-ei/hodohappyo/press/2020/04/30/documents/05.pdf>. 에서 2020. 9. 15. 인출.

○ 도쿄도의 아동·청년지원협의회는 2014년에 설립되어 민관 영역의 총 2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 교육, 보건·의료·복지, 고용, 아동, 청소년, 청년, 장애인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교정, 갱생, 보호 기관도 포함하고 있음.

• 참가단체는 참석자가 지정되어 있고, 추천단체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협의회의 참석자가 되며, 연 1회 정기적 회의와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 연락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표 7-7〉 도쿄도 아동·청년지원협의회 구성단체

| 번호 | 분야 | 참가단체 | 번호 | 분야 | 추천단체 |
|----|----------------|-----------------------|----|---------------------|-------------------------|
| 1 | 교육 | 도쿄도 교육청 지도부장 | 12 | 보건 의료 복지 | 도쿄도 보건소장회 |
| 2 | | 도쿄도 교육청 지역교육지원부장 | 13 | | 특별구보건소장회 |
| 3 | | 도쿄도 교육상담센터장 | 14 | | 도쿄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4 | | 도쿄도 복지보건국 보건정책부장 | 15 | | 도쿄도 민생아동위원연락회 |
| 5 | 보건 의료 복지 | 도쿄도 복지보건국 소자사회대책부장 | 16 | 교정 갱생 보호 등 | 도쿄보건관찰소 |
| 6 | | 도쿄도 복지보건국 장애인시책추진본부장 | 17 | | 도쿄소년감별소 |
| 7 | | 도쿄도 아동상담센터 차장 | 18 | | 다마 소년원 |
| 8 | | 도쿄도립 하기야마 실무학교* 교장 | 19 | | 경찰청 생활안전부 소년육성과 |
| 9 | 고용 청소년 | 도쿄도립 중부종합정신보건복지센터장 | 20 | 고용 | 도쿄도 보호사회 연락회 |
| 10 | | 도쿄도 사업노동국 고용취업부장 | 21 | | 후생노동성 도쿄노동국 |
| 11 | | 도쿄도 도민안전추진본부 청년지원담당부장 | 22 | | 공익재난법인 도쿄 시고또** 재단 |
| | | | 23 | 민간 지원 단체 등 |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청소년 자립지원센터 |
| | | | 24 | |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일본아동 소셜워크 협회 |
| | | | 25 | |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도쿄도 취로지원사업자기구 |
| | | | 26 | 구 시 | 특별구 구장회 |
| | | | 27 | | 도쿄도 시장회 |
| | | | 28 | 아동청년 | 도쿄도청년종합센터 |

주* : 환경상 이유로 생활지도 등이 필요한 아동 대상 학교

주** : 일(노동)이라는 뜻

자료: 정세정 외.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35.

원자료: : 東京都. (2019). 「子供・若者支援協議会設置要綱」. https://www.tomin-anzen.metro.tokyo.lg.jp/jakunenshien/singi/kowakasyenkyougikai/01_2kowakasyougikaiyoukou.pdf 에서 2020. 9. 15. 인출

○ 법적 노력의무인 지자체의 아동·청년계획 수립, 아동·청년지역협의회 구성, 아동·청년 종합상담센터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도쿄도는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의 1/2, 200만엔까지 지원하고 있음.

- 그 중 도쿄도 내 조후시는 2015년 10월부터 아동청년종합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조후시 아동청년종합지원사업은 진학과 생활 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크게 학습지원, 상담지원, 쉼터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며 각 사업 아동학대방지센터, 모·부자 자립지원기관,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마음

건강센터 등의 거점 기관을 통해 시행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종합지원사업은 아동·청년지원네트워크로 불리는 아동·청년종합지원지역협의회에서 계획과 집행을 담당함. 협의회에는 공공기관, 청년서포터스테이션, 복지부문, 아동생활부문, 교육기관, 복지단체지원기관, 사회복지협의회, NPO 법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음.

2. 독일⁵¹⁾

가. 연령 정의

□ 독일에서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사회법전」 제 8권을 구성하고 있으며, 부모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리와 의미, 국가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은 아동·청소년복지에 대한 기본법으로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걸쳐 성인기까지 일관된 체계에서 양육과 성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법률상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Kind),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Jugend), 만 18세 이상 만 27세 미만 성인(Volljähriger), 만 27세 미만 젊은 사람(Junger Mensch: 이하 청년)으로 구분함(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⁵²⁾. 즉, 젊은이(Junge Menschen)는 미성년의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성년에 이른 청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됨.

- 즉, 독일은 「사회법전(SGB)」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법」에 근거하여 만 0세~ 만 27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청년을 포괄적·연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51) “김영미. (2018).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법제와 시사점”에 기초하여 작성함.

52) 사회법(SGB) - 8권(VIII) - 아동 및 청소년 복지

file:///C:/Users/kihasa/Downloads/%EB%8F%85%EC%9D%BC_%EC%82%AC%ED%9A%8C%EB%B2%95%20%EC%A0%9C%8%EA%B6%8C(%EC%95%84%EB%8F%99%C2%B7%EC%B2%AD%EC%86%8C%EB%85%84%EC%A7%80%EC%9B%90%EB%B2%95)_%EC%9B%90%EB%AC%B8%EB%B3%B8(2020.10.09.%EA%B0%9C%EC%A0%95).pdf(2022년 7월 23일 인출).

- 특히, 「사회법전」 제7권 41조에는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도달하여 아동·청소년복지지원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존 복지지원의 유지를 보장하는 초기 성년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나. 위기 청소년·청년 지원제도와 정책

□ 독일은 위기 유형에 따른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근거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사회법전」 제 8권의 「아동·청소년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은 지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그 대상으로 포함하여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아동·청소년복지는 가족을 중심으로 맞춤형 체계로 운영됨.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을 통해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한부모 가정 또는 장애인 가정은 특별지원을 제공함.

- 「사회법전」 제 8권의 조문을 살펴보면(표<7-5> 참조), 보편적 가족지원을 포함하여, 시설보호아동, 정신적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초기 성년과 같은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포괄하여 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7-8〉 사회법전 제8권 조문

| 장·절 | | 제목 |
|-----|-----|--|
| 제1장 | | 일반적인 규정 |
| 제2장 | | 청소년 복지급여 |
| | 제1절 | 청소년활동, 청소년 사회활동,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적 보호 |
| | 제2절 | 가족의 양육지원 |
| | 제3절 | 보육시설에서의 아동지원 |
| 제3장 | 제4절 | 정신적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양육과 적응지원, 성년 초기지원 |
| | | 기타 지원조치 |
| | 제1절 | 아동 및 청소년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
| | 제2절 | 가족돌봄과 시설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
| | 제3절 | 소송절차의 협력 |
| | 제4절 | 아동 및 청소년의 원조, 돌봄 및 후견, 돌봄의사 불표시에 관한 통지 |
| 제4장 | 제5절 | 공증, 집행력 있는 증서 |
| | | 사회데이터의 보호 |

| | | |
|------|-----|------------------------|
| 제5장 | | 청소년복지의 시행기관, 협력, 총괄책임 |
| | 제1절 | 청소년복지의 시행기관 |
| | 제2절 | 청소년복지의 민간협력, 명예직 활동 |
| | 제3절 | 급부제공, 임금 및 품질향상에 관한 협약 |
| | 제4절 | 총괄책임, 청소년복지계획 |
| 제6장 | | 핵심 과제 |
| 제7장 | | 관할, 비용 상황 |
| 제8장 | | 비용부담 |
| 제9장 | | 아동 및 청소년복지통계 |
| 제10장 | | 형벌 및 과태로 규정 |
| 제11장 | | 기본권의 제한 |

자료: 김영미. (2018).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법제와 시사점. 사회복지법제연구. 9(1), p.46. 수정.

○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1조~15조는 아동·청소년복지 급여의 범위로 청소년 활동, 청소년 사회활동,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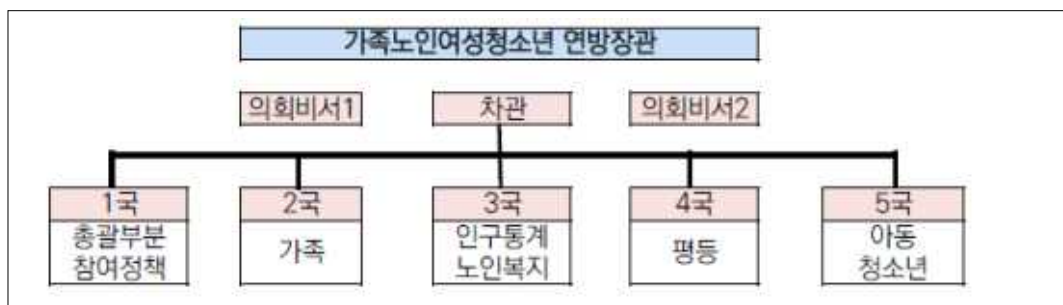
- 청소년 활동은 학교 밖에서의 교육활동, 스포츠, 놀이 등의 일반적·보편적 지원, 청소년 사회활동은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회 교육적 지원은 학교 교육, 직업교육, 노동시장으로의 편입, 사회적 통합 지원, 교육적 아동·청소년 보호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포착하여 예방하는 지원임.
- 부모나 양육자는 가족의 상황에 단계별 차등적(가족지원·보충·대체) 가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아동·청소년의 보호 또는 양육문제를 우선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국가는 보충적이고 최종적으로 개입함(김유휘, 최미진, 홍문기, 류진아, 2019).

○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나타나는 아동·청소년사업 및 사회사업은 복지사업을 포괄하고 있음. 보충적 교육 영역에 속하는 아동·청소년사업은 원칙적으로 모든 아동과 만 27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문제를 아동이나 청소년 그룹으로 제한하지 않음.

- 한편, 아동·청소년 사회사업은 학교, 훈련 및 직업 세계와 관련하여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며,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완화시키고 참여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제도적 지원임.
- 즉,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심리적 문제, 이민자 자녀와 같이 취약·위기 아동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정책추진은 연방정부 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지역단위의 청소년청이 담당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공적 담당자가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고 있음
-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5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아동·청소년국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음(류정희 외, 2018).

[그림 7-3] 독일 만 27세 미만 아동·청소년·청년 복지정책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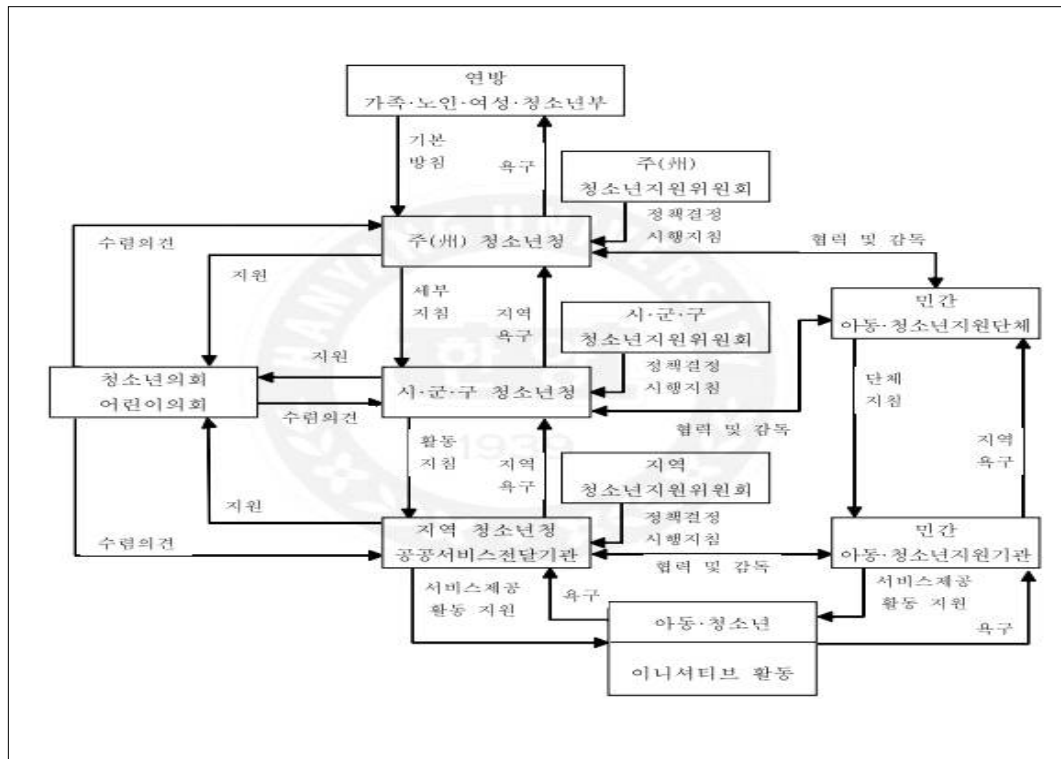


자료: 류정희 외. (2018). 사회보장제도: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전달체계 심층분석 핵심평가. p.223. 재인용.

- 「아동·청소년지원법」 제 69조에 의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청을 설치하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청은 만 27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청년 대상 실제적인 지원과 상담의 기능을 수행함(김유희 외, 2019).
- 청소년청은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청년 복지 업무를 비롯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위기의 예방, 조정, 개입 업무를 수행하는데 빈곤, 부모의 이혼, 학대, 장애, 심리적 문제, 다문화 등의 상황적 위기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청년기로 이행과정 중에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 청소년청은 권리로 보장된 보육시설 및 부모에 의한 돌봄 및 양육을 지원함
 - 가정법원을 통해 부모의 이혼사실과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통지 받으면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복지 급여 관한 교육을 시행함.
 - 한부모 가정에서 생계비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 상담과 지원을 제공함.

- 장애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제한이 있을 경우, 긴급지원, 보육시설 및 기타 시설 입소 지원, 요양보호사에 의한 주거 등을 지원함.
-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긴급 또는 위급 상황에서 임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가 위협되는 경우 부모에 대한 국가적, 제도적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⁵³⁾. 가령, 미혼 부모가 후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아동이 출생한 때부터 청소년청이 후견이 되고, 부모가 아동을 혼자 양육하는 경우 상담이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음⁵⁴⁾.

[그림 7-4] 독일 만 27세 미만 아동·청소년·청년 복지정책 전달체계



자료: 김동민. (2017). 복지선진국의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전달체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p.76.
http://hanyang.dcollection.net/public_resource/pdf/200000431351_20220723115131.pdf(2022년 7월 23일 인출)

53) 「민법전(BGB)」 제1791조의c(김영미, 2018, 재인용)

54) 사회법전 제8권 제52 조의a(김영미, 2018, 재인용)

다. 위기 청소년·청년 통합적 지원 사례: 10대 미혼모⁵⁵⁾

- 독일에서 미혼모는 혼인 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혼자 아동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을 의미함. 즉, 미혼, 별거, 이혼, 사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이 부양해야 할 아동과 함께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독신모(Alleinerziehende Mutter: 혼자 자녀 양육을 하는 여성)로 지칭되며,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됨.
- 독일 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 대상으로서의 독신모를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취약성은 다음과 같음: 취약한 경제적 자립기반, 주거문제, 혼자 아동양육을 담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심리적·육체적 부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 취업과 가사 병행 부담.
 - 특히, 10대의 미성년 독신모의 경우 「사회법전」 8권,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며, 국적에 제한 없이 지원이 이루어짐.
- 일반적인 독신모 지원은 생계보장, 취업활동 지원, 아동수당, 사회부조와 주거수당 등이 있음.
 - 우선 생계보장 측면에서 임신·출산 여성은 임신기간과 출산 후 일하지 않을 법적 권리를 보장 받고, 의료보험조합 가입자로서 질병수당 수급 자격이 있을 경우 모성보호수당도 받을 수 있음, 또한, 임신·출산 여성이, 특히 독신모가 취업 활동을 계속하고자 할 때 정규직 근무를 시간제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이는 당사자의 연령, 혼인상 지위 여부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됨.
 - 독일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부모는 자녀가 출생한 달부터 만 18세까지 사회부조로 정액의 아동수당을 받음. 2021년 7월 기준, 아동수당 월 지급액은 첫째와 둘째 자녀가 각각 219유로, 셋째 자녀가 225유로, 넷째 자녀

55) 정재훈. (n.d.). 10대 미혼모 교육권 보장: 독일 사례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nGumSP3_9Z0J:www.kwdi.re.kr/inc/download.do%3Fut%3DA%26upIdx%3D113081%26no%3D2+&cd=1&hl=ko&ct=clnk&gl=kr(2022년 7월 24일 인출).

부터는 250유로임(이상정 외, 2021, 재인용). 이외에 아동추가수당은 저소득 부모 대상 사회부조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으로 편부모 월 600유로 이상, 양부모 900유로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그 대상이 됨(이상정 외, 2021, 재인용).

- 독신부모로서 사회부조 수급 자격을 부여 받을 경우, 세대주 기본급여(Regelsatz für Haushaltsvorstand)에 더하여 독신부모 기본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음. 또한 사회부조 수급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주거수당 수급 자격이 발생함.

□ 10대 독신모 지원에 있어 일반적 원리를 제시하는 조항은 「아동·청소년지원법」 1조 3절로 아동·청소년은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성장하기 위한 도움과 어려운 삶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즉, 10대 독신모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자신의 성장을 위한 지원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동법에 의해 독일에서 아동은 적절한 보육시설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독신부 또는 모가 교육과정에 있거나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따라서 10대 독신모는 다른 부모들보다 우선하여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권리가 있음.

○ 또한, 동법 8장 27조에 의해 아동·청소년 복지가 위협받는 환경에 처할 경우, 보호자는 양육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 지원의 종류와 수준은 동법 36조에 근거하여 결정함.

- 사회교육적 개별보호는 사회법전 8권 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움의 형태로 10대 독신모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 프로그램에 따른 보호를 받음.
- 사회적 개별보호의 대상 연령대는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이며, 해당 청소년은 사회통합과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개별적이면서도 집중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됨.

- 개별보호는 장기적으로 개별적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데, 기간과 보호의 구체적 내용은 보호자, 당사자, 담당 사회복지사, 청소년청의 공무원이 합의하여 구성하고, 문서로 작성함.

○ 10대 독신모가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지원법」 27, 34, 35a, 41조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받음.

- 10대 독신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는 개별 상황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계획은 청소년청에서 검토함.
- 청소년청은 지원 계획에 교육적 욕구가 반영되었는지를 필수적으로 판단함. 개입의 목적, 서비스 내용과 과제가 정해지면 필요한 시간의 규모를 서비스 제공기관과 청소년청이 협상한 후, 담당 공무원은 서비스 제공 전문가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이와 같은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사례는 기록으로 정리, 분석되어 주 혹은 격주 단위로 서비스 제공 담당 전문가와 공무원 간 공유되며, 서비스제공 담당자는 10대 독신모의 학교 교사와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 최소 월 1회의 슈퍼비전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 지침이 지켜지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기관은 청소년청에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제3절 위기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원칙과 방향

□ 모든 사람은 생애과정에 있어 주기별 과업이 있고,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한 개인적·사회적 요구가 발생하며, 이 가운데 생애주기 간의 중요한 생애사건(life events)은 연령 단계별로 수직적 선으로 연결됨⁵⁶⁾.

○ 청소년기의 해결되지 못한 위기와 문제는 청년기에 연결되며, 이는 비단 청소년

56) 장애인과 생애주기적 접근 개념.

[https://psb2709.tistory.com/entry/%EC%9E%A5%EC%95%A0%EC%9D%B8%EA%B3%BC-%EC%83%9D%EC%95%A0%EC%A3%BC%EA%B8%B0%EC%A0%81-%EC%A0%91%EA%B7%BC-%EA%B0%9C%EB%85%90\(2022년 7월 30일\).](https://psb2709.tistory.com/entry/%EC%9E%A5%EC%95%A0%EC%9D%B8%EA%B3%BC-%EC%83%9D%EC%95%A0%EC%A3%BC%EA%B8%B0%EC%A0%81-%EC%A0%91%EA%B7%BC-%EA%B0%9C%EB%85%90(2022년 7월 30일).)

년·청년기의 문제가 아님.

- 아동기에 경험한 생애사건은 청소년·청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해결되지 못한 위기와 문제가 개인의 생애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함⁵⁷⁾.
- 가정외 보호아동은 원가정 내에서의 학대·폭력, 분리와 같은 부정적 인생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충격과 외상, 타인과의 애착관계 형성의 문제, 사회 적응 문제 등을 흔히 경험하며, 청소년기의 높은 가출률,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을 나타냄(이상정 외, 2017, 재인용).
- 아동기의 학대·폭력 경험이 성인기의 중복적 학대·폭력 경험, 신체·정서적 건강과 연관성이 있으며 부모의 아동기 학대·폭력 경험은 자녀의 학대경 및 문제행동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류정희 외, 2018).
- 청소년(한)부모는 원가정의 학대, 방임, 가족해체 등으로 부모역할을 제대로 학습·교육받지 못했고,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임신·출산으로 부모가 됨으로써 본인의 자녀를 방임, 학대 등의 위기에 노출시키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음⁵⁸⁾.

□ 따라서 위기 청소년·청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원칙은 아동·청소년·청년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0세~34세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그 가족을 포괄하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음.

1. 위기 청소년·청년 지원 근거법 일원화 기반 통합적 지원계획 수립

□ 우선, 현재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각각 정의하고 있는 법과 위기 청소년·

57) 장애인과 생애주기적 접근 개념.

<https://psb2709.tistory.com/entry/%EC%9E%A5%EC%95%A0%EC%9D%B8%EA%B3%BC-%EC%83%9D%EC%95%A0%EC%A3%BC%EA%B8%B0%EC%A0%81-%EC%A0%91%EA%B7%BC-%EA%B0%9C%EB%85%90>(2022년 7월 30일).

58) 배보은.(2022). 우리나라 청소년부모의 정책 소외 실태와 정책적 개선방안(콜로키움 발표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 지원을 위해 각각 분절적으로 마련된 근거법을 통합 또는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일본은 2009년도에 「아동·청년 육성지원추진법」을 제정함으로써 0세~35세의 위기 아동·청소년·청년을 연령과 위기 유형에 상관없이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여, 연령과 위기유형, 아동·청소년·청년과 가족 지원을 통합, 포괄하는 정책 계획,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음.
- 독일은 「사회법전(SGB)」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법」에 근거하여 만 0세~ 만 27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초기 청년을 포괄적·연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이 성년에 도달하여 이전의 아동·청소년복지지원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립을 연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동법 제7권 41조에 초기 성년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청년기본법」으로 정책 대상과 정책추진체계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기본계획 또한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대상과 계획의 중복성을 나타내고 있음⁵⁹⁾.
 -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위기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근거는 위기 유형별, 사업별, 연령별로 서로 다른 근거법(예;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을 적용함으로써 정책 지원체계 및 대상의

5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관련, 보호종료청년, 청소년한부모, 학교 밖 청소년, 발달장애인, 빈곤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계획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지원 대상과 사업이 중첩됨.

제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file:///C:/Users/kihasa/Downloads/%EC%A0%9C1%EC%B0%A8_%EC%B2%AD%EB%85%84%EC%A0%95%EC%B1%85_%EA%B8%B0%EB%B3%B8%EA%B3%84%ED%9A%8D_(1)%20(4).pdf(2022년 7월 31일 인출).

제 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

file:///C:/Users/kihasa/Downloads/%EC%A0%9C2%EC%B0%A8+%EC%95%84%EB%8F%99%EC%A0%95%EC%B1%85+%EA%B8%B0%EB%B3%B8%EA%B3%84%ED%9A%8D(%EC%95%88)('20_'24).pdf(2022년 7월 31일 인출).

제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18~'22)

file:///C:/Users/kihasa/Downloads/%EC%A0%9C6%EC%B0%A8%20%EC%B2%AD%EC%86%8C%EB%85%84%EC%A0%95%EC%B1%85%EA%B8%B0%EB%B3%B8%EA%B3%84%ED%9A%8D(2018-2022).pdf('20_'24).pdf(2022년 7월 31일 인출).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일본, 독일과 같이 0세~34세의 아동·청소년·청년을 연속적·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분절된 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야 함. 독일과 같이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해 배타적이면서도 연속적으로 차등적 연령 기준을 제시하고(김영미, 2018), 이를 바탕으로 아동 → 청소년 → 청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예방, 복지, 보호·지원의 차원에서 체계화하여 일본의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과 같은 연령과 위기유형, 정책대상을 통합, 포괄하는 정책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2. 위기 청소년·청년 지원체계 일원화

□ 다음으로 공공, 민간으로 분절되어 부처별·사업별로 분절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위기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일본의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는 총리가 본부장이며, 관할 부처는 내각 부로(정세정 외, 2020), 아동·청소년·지원 통합지원계획인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을 5년 단위로 발표하고 아동·청소년·청년 통합정책을 추진하는 중앙 차원의 일원화된 체계임.

- 이러한 단일 체계 아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교육, 보건·의료·복지, 고용, 아동, 청소년, 청년, 장애인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교정, 갱생, 보호 등 다양한 영역의 기관과 유기적 연계를 위한 '아동·청년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원스탑 상담 창구로서 '아동·청년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아동·청년이 다른 창구로 또다시 연계되지 않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책대상으로는 성장과 발달, 자립 지원 대상인 일반 아동·청년을 비롯하여 빈곤아동, 니트(NEET) 청년,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장애 아동·청년, 비행/범죄 아동·청년, 한부모가정 아동, 자살 위험군, 학대피해아동 등과 같은 복합적·고위기 아동·청년, 그리고 그 가족까지 포괄하고 있음.

○ 지역 위원회 중심인 일본과 달리, 독일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공적 담당

자가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주체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역시 일원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독일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아동·청소년국에서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정부와 시군구 모두 「아동·청소년지원법」 제 69조 상 규정된 청소년청에서 아동·청소년·청년 대상 실제적인 지원과 상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청소년청은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청년복지 업무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위기 예방, 조정, 개입 업무도 수행하기 때문에, 청소년청의 지원 범위는 일반적·보편적 아동·가족 지원에 기초하여 부모의 이혼, 빈곤, 학대, 장애, 심리적 문제, 다문화 등 중·저·고 위기 아동·청소년·청년과 가족에 대한 특별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별, 위기 유형별로 지원체계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음.

- 우선 중앙부처 차원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보건복지부, 가출, (한)부모 등 위기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빈곤 등으로 인해 주거, 고용, 취업 지원이 필요한 청년은 국무총리실이 주무부처이고, 이밖에도 보호소년은 경찰과 법무, 심리정서행동 등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교육부(교육청)가 주무부처임.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도 빈곤 가구는 주로 보건복지부, 한부모·미혼부모 가구는 여성가족부, 청년가구는 국무총리실 등으로 분절되어 있음.
- 지역 단위에서는 보건복지부 관할의 학대 등 보호가 필요한 위기 아동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팀과 저소득 아동가구 대상 공공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만이 전국에 모두 구축되어 있음. 한편, 아동보호팀과 드림스타트의 연계 체계 구축 여부와 정도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청소년과 청년지원체계는 부분 또는 전부 공백인 상황으로 민간 영역에서 부분적·파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위기 아동·청소년이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위기 아동·청소년·청년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 단위의 주무부처를 일원화하고, 일원화된 부처 산하에서 지자체 단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청년 및 가족 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단일 부처에서 관장하도록 함. 기능통합의 경우 정부조직체계, 예산과 대상자 규모, 지원체계 구축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하여 대상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3.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중심 통합적 서비스 제공·관리

-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족 중심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독일의 ‘청소년청’과 같은 지원체계의 운영이 전제되어야 함.
-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는 기본적으로 아동이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체계가 보편화되어 있음.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을 통해 가족의 부담 경감, 가족의 상황에 맞게 단계별 차등적 가족서비스 우선 제공, 특수 욕구에 대한 특별지원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10대 청소년부모가 위기청소년이 아닌, 자립지원이 필요한 ‘독신모’로서 아동 보육·양육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고, 취업활동, 아동수당, 사회부조와 주거수당을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장 받음. 이에 더하여 소득이 있을 경우 아동추가수당을 지급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대상자로서 청소년청의 관리·감독 아래 개별적 욕구에 맞는 통합적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함. 무엇보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10대 청소년부모 또는 한부모 가구로서 아동·청소년청이 주축이 되어 부모와 아동을 통합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중심의 서비스 통합 제공·관리 개념과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동일 사업, 동일 욕구에 대해서 주무부처와 지원

내용이 다르거나, 단일 사업내에서도 근거법과 대상자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지원 내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무엇보다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 및 제공 주체가 부재한 채 아동이 있는 위기취약가구(청소년부모, 한부모 가구, 저소득 청년부모가구 등)에 신청주의 기반, 현금지원만이 제공됨으로써 서비스의 사각지대와 자립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아동이 있는 가구 중심으로 예방, 복지, 보호·지원의 차원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및 관련 서비스의 체계화가 필요하고, 보육·돌봄, 사회부조, 취업·교육 등의 사회서비스가 아동이 있는 가구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제공, 관리되어야 함.

제4절 소결

- 우리나라 위기 아동·청소년·청년은 연령에 따라 적용받는 법, 규정과 지원체계가 달라지는 상황으로 개인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분절적·파편적으로 제공되며 그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위기를 연령에 따라 정책대상자를 구분하여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의 사업 대상자로 변화되면서 지원을 위한 근거법과 체계가 달라짐. 청소년의 위기가 학교, 소년보호체계 등에 연관될 경우 교육부, 경찰/법무부 지원 대상자로서 될 수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신청주의 기반 서비스는 더욱더 파편화, 분절화되어 제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상자 누락, 서비스 공백 등 복지 사각지대는 쉽게 발생할 수 있음.
- 법상 정책대상의 연령 구분, 주무 부처의 구분은 예산과 전달체계 등 부처별 여건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업별로 그 대상을 규정, 제한함으로써 동일 욕구를 가진 위기 청소년·청년이 차별적 지원을 받거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에게는 5년간 지급되는 반면, 여성가족부 관할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은 3년동안만 제공되며, 이마저도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임.
 - 무엇보다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자립수당의 2년 연속 보호 기간 요건 산정 시,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한 청소년쉼터 등에서의 거주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여성가족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가구의 유형과 소득, 부모의 연령과 특성,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원의 근거법이 다르고, 동일 사업내에서 지원금액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신청주의 기반 사업으로 세밀하고 복잡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보의 부족과 서비스 접근성 문제로 인한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사례관리 등의 지원체계 부재로 인한 현금 지원서비스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청년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0세~34세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고, 그 가족을 포괄하여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재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각각 정의하고 있는 법과 위기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해 각각 분절적으로 마련된 근거법을 통합 또는 일원화하여야 함.
 - 일본, 독일의 사례와 같이 0세~34세의 아동·청소년·청년을 연속적·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분절된 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야 함.
 - 독일과 같이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해 배타적이면서도 연속적으로 차등적 연령 기준을 제시하고(김영미, 2018), 이를 바탕으로 아동 → 청소년 → 청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예방, 복지, 보호·지원의 차원에서 체계화하여 일본의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과 같은 연령과 위기 유형, 정책대상을 통합, 포괄하는 정책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공공, 민간으로 분절되어 부처별·사업별로 분절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아

동·청소년·청년 지원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일본의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는 총리가 본부장이며, 관할 부처는 내각부로(정세정 외, 2020), 아동·청소년·청년 통합정책을 추진하는 중앙 차원의 일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아동·청년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원스탑 상담 창구로서 '아동·청년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독일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아동·청소년국에서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청이 아동·청소년·청년 대상 실제적인 지원과 상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중앙 단위의 주무 부처를 일원화하고, 단일 부처 산하에서 지자체 단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청년 및 가족 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단일 부처에서 관장하도록 해야 함. 현재 예산과 대상자 규모, 지원체계 구축 현황을 고려했을 때 보건복지부 중심 기능 통합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독일의 청소년청과 같이 대상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족 중심 지원 체계 기반,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는 기본적으로 아동이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체계가 보편화되어 있음.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을 통해 가족의 부담 경감, 가족의 상황에 맞게 단계별 차등적 가족서비스 우선 제공, 특수 욕구에 대한 추가적 특별지원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중심으로 예방, 복지, 보호·지원의 차원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및 관련 서비스의 체계화가 필요하고, 보육·돌봄, 사회부조, 취업·교육 등의 사회서비스가 아동이 있는 가구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제공, 관리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청소년청'과 같은 아동·가족 통합지원체계의 운영이 전제되어야 함.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8 장

결론 및 제언

제 8 장 결론 및 제언

- 본 장에서는 아동청소년 지원체계의 분절성과 파편성에 대한 쟁점 중심의 종합 논의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 통합적인 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부처별 아동청소년의 연령구분의 분절성 문제

▶ 아동청소년 연령규정의 단순화를 위한 법개정 필요

- 아동청소년 연령구분의 난맥상
 - 연령구분의 혼란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령별 분절성은 지원 및 보호서비스 공급주체 및 부처별 적용기준의 임의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된 민법상의 성년규정은 이러한 혼란의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어 왔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18세를 기준으로 성년을 정하고 있는 반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이 19세로 아동복지법과의 불일치 문제 야기
 -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연령 중복 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 10대 후반과 20대 초반까지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상의 중복 문제 확대됨.
 -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에서 34세로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9~24세)과 19세에서 24세까지 중복
 - 아동복지법상 아동과 청소년이 9세에서 18세 미만까지 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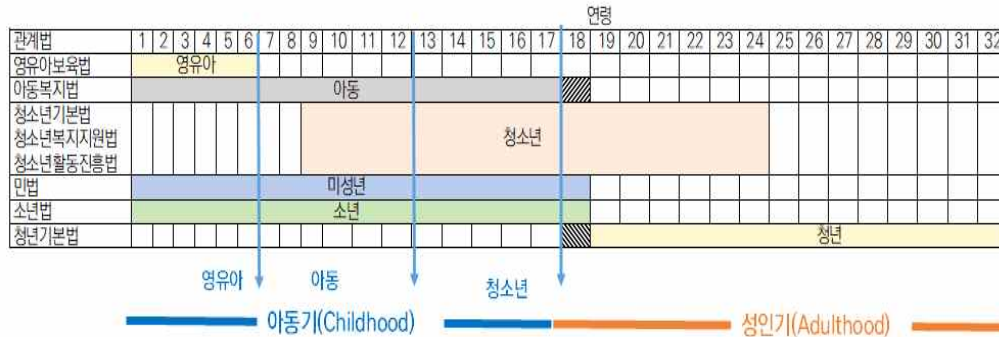
〈표 8-1〉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별 분절성

| 용어 | 연령범위 | 근거법률 | 주관부처 |
|-------|--------------|--|-------|
| 아동 | 만 18세 미만 |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양특례법 등 | 보건복지부 |
| 미성년 | 만 19세 미만 | 민법 | 법무부 |
| 아동청소년 | 만 19세 미만 |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보호법 | 여성가족부 |
| 청소년 | 만 9세~ 만 24세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 여성가족부 |
| 소년 | 만 19세 미만 | 소년법 | 법무부 |
| 청년 | 만 19세~ 만 34세 | 청년기본법 | 국무조정실 |

□ 민법상의 미성년 연령을 만 18세이상으로 조정 필요

- 만 18세 청소년은 미성년이나 아동이 아닌 청소년으로, 아동복지법상의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이러한 근본적인 법제도적인 불일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미성년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미성년 연령규정의 변화를 기초로 아동기와 성년기의 대구분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법적인 개념정의의 통합을 검토
 - (생애 전반기는 아동기, 아동기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으로 구분) 만 18세 미만의 생애전반기를 아동기로, 이후를 성인기로 구분
 - 아동기는 영유아(~만6세), 아동(~만12세), 청소년(만13세~17세의 후기아동기)로 구분
 - 성년기는 초기 성인기를 청년(~34세)으로 구분하고 이후 장년, 노년으로 구분

[그림 8-1] 미성년 연령규정 개선방안에 따른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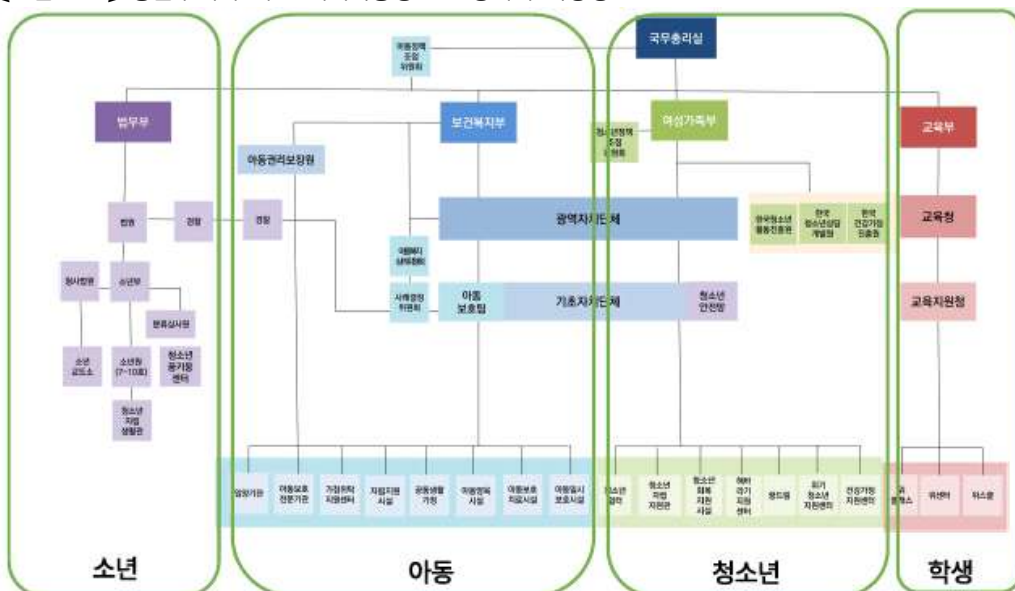
2. 위기아동청소년 개념정의의 혼란

▶ 아동청소년 중심의 명확한 재정립 필요

□ 공급주체에 따른 위기아동청소년 정의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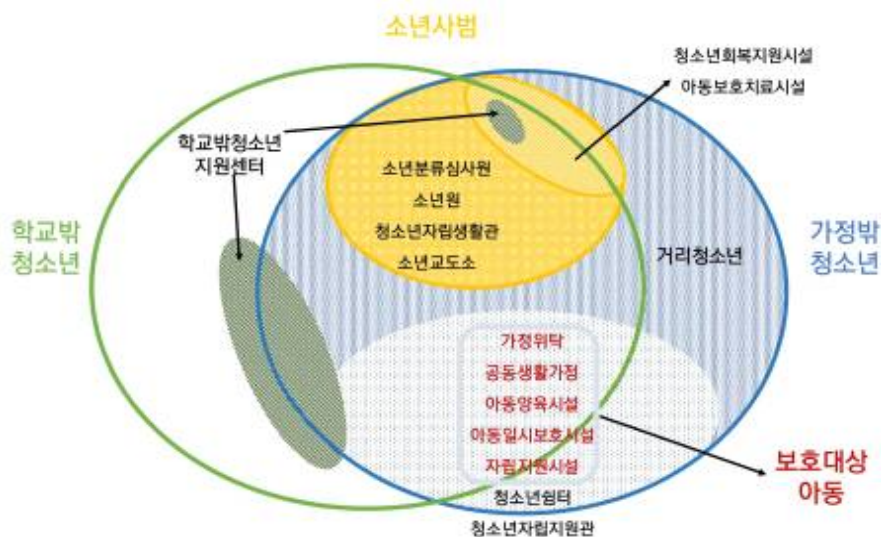
- **현행 위기아동청소년의 정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밖청소년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소년법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이는 위
기 아동청소년 대상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 공
급자 중심의 대상규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짐.**

[그림 8-2] 공급주체에 따른 위기아동청소년 정의의 다양성



- (공급자중심의 행정편의적 접근) 위기아동청소년의 범주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적 접근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원서비스의 수요자인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서비스이용의 통합성과 연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위기아동청소년 개념 재정립, 범주 및 개념 간의 관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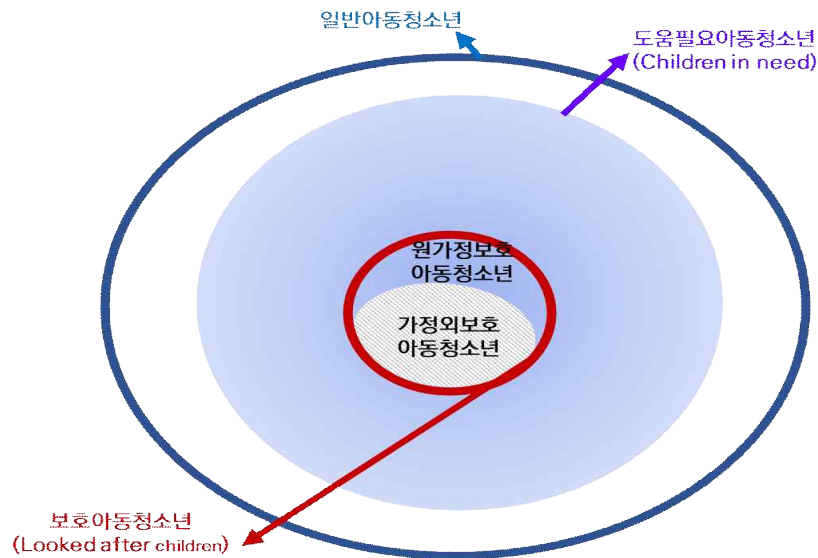
[그림 8-3] 위기아동청소년의 범주



□ 위기 아동청소년의 개념정의의 명확한 재정립 필요

- 모든 아동청소년은 보호와 지원의 잠재적 대상으로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 중심의 접근 및 개념 재정의 필요
 -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도움필요아동청소년”으로 규정
 - 학대, 폭력피해, 가정외 일시돌봄 및 보호를 받고 있는 위기상황의 아동청소년은 “보호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를 원가정내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과 가정외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구분
- 지원의 필요와 욕구를 가진 아동청소년과 보호체계의 지원을 실제로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구분은 도움을 필요로 하나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의 존재 및 이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과 근거를 제공

[그림 8-4] 위기아동청소년 개념정의 재정립에 따른 구조도



□ 아동청소년 대상 관련 법률의 이원성을 넘어 통합적인 법체계 마련 필요성 검토

○ 아동기본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2023년 아동기본법 제정 가능성. 「아동기본법」의 제정은 그동안 보호의 대상으로 객체화되었던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바로 세우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아동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아동기본법」의 도입과정에서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과의 연계 및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

〈표 8-2〉 아동청소년 대상 관련 법률

| 청소년정책 (여가부) | 아동정책 (복지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지자체 등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기본법(제정 추진 중) • 아동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보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

| 청소년정책 (여가부) | 아동정책 (복지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복지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시설 운영, 위기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 관련 사항 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 및 청소년의 유해한 업소출입 규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 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 마련 | |

3. 정확한 위기아동청소년 규모추계는 근거기반 정책추진의 기초

□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추계의 필요성

-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수준의 적절성, 예산 및 인력지원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위기 아동·청소년의 정확한 규모추계 필요
- 우리나라의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규모 추계는 범주별 중복율 등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저위기와 고위기 유형 등 위기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박세경 외, 2014; 김지연 외, 2015).

□ 본 연구의 추계결과

- 현재 사회적 지원 및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Looked after children)

의 규모 추계 결과 가정외보호 아동은 시설생활아동청소년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 66,871명으로 추산,

- 원가정보호 아동은 아동청소년보호지원서비스이용아동을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 244,924명으로 2020년 기준 사회적 지원 및 보호를 받은 적이 있는 보호아동청소년은 전체 아동청소년 수 대비 2.6%

○ 위기아동청소년의 욕구와 필요를 중심으로 사회적 지원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도움필요아동청소년)의 규모추계

- 아동의 위기유형별 지원욕구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규모추정 결과 전체 아동청소년의 16%-19.2%가 도움 필요

□ 위기아동청소년 규모추계의 시사점

- 제공기관별 위기아동청소년 정보취합의 파편성으로 인한 중복과 누락 발생
- 학교밖청소년과가정밖청소년의 중복경험 파악 불가
-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 규모와 실태에 대한 파악 미비

4. 위기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 현황과 개선방향

□ 아동청소년 지원체계의 기능과 역할

- 아동·청소년보호체계는 아동발달의 단계에서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편적인 아동청소년안전망을 의미함

□ 아동청소년 지원과 보호의 분절성과 이에 따른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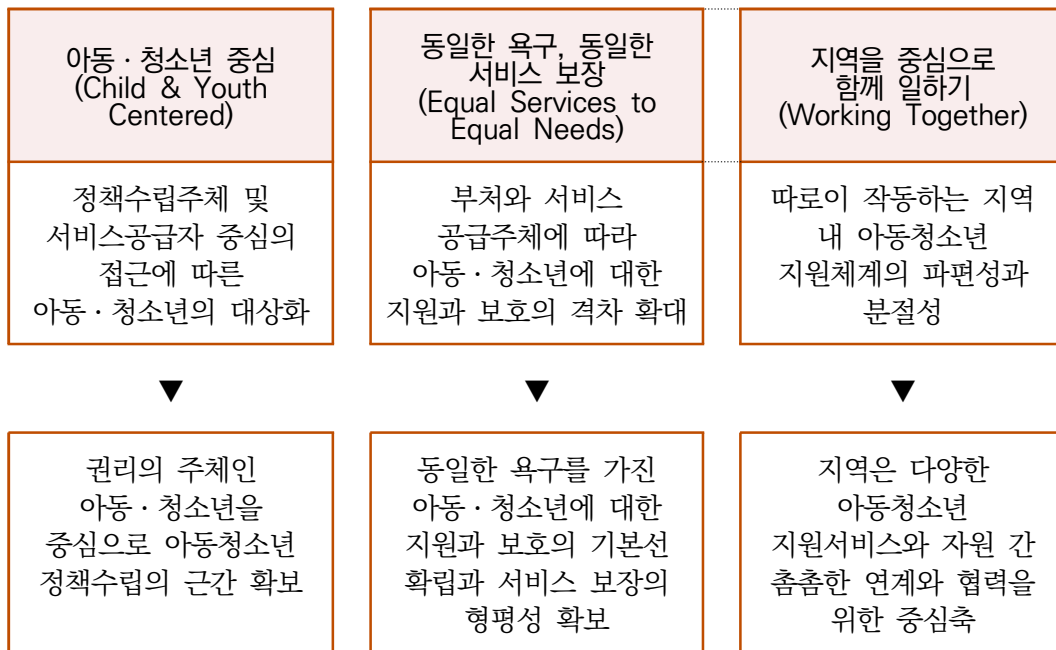
- 동일한 사회적 보호의 욕구가 있는 위기아동·청소년들은 그 주무부처에 따라서 달리 정의되며 접근되고 있음
- 보호대상 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 간의 보호서비스 전반의 격차가 존재
 - 아동보호체계의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을 포

합하는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로 규정되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는 보장시설의 보호대상 아동은 맞춤형 급여체계에 의한 기초생활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의 청소년복지시설은 보장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음.
- 자립준비 청년(구, 보호종료아동, 가정밖청소년)들 사이의 부처별 불균등지원의 문제 심각

□ 통합적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성

[그림 8-5] 아동청소년 정책 및 전달체계 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성



-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보호서비스의 연속성, 통합성 강화

-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보호서비스 제공의 표준화된 기본선 수립
-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적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통합 및 연계추진
 - (통합의 기준) 통합의 기준은 기능의 유사성에 두어져야 하며, 영유아의 보육돌봄기능, 아동청소년의 돌봄기능, 아동청소년의 보호기능 등 유사기관 간 통합을 고려
 - (특화된 전문적인 서비스영역의 필요) 아동복지전달체계 또는 청소년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특화된 서비스의 경우 대상의 확대
 - 아동중심의 아동청소년 서비스제공기관의 통합 및 연계강화는 아동청소년이 경험해왔던 서비스의 누락, 중복, 격차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

[그림 8-6] 아동청소년 서비스제공기관의 영역별 구분

| 유사기능 서비스제공기관 | | | |
|---|---|---|----------------------------|
| 영유아보육 | 돌봄 | 보호 | 중앙지원기관 |
| 공동육아나눔터(여) 보육서비스(복) 아이돌봄지원사업(여) 공동육아나눔터(여) | 초등돌봄교실(교) 다함께돌봄센터(복) 지역아동센터(복) 드림스타트(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 | 아동보호팀(복) 청소년안전망(여) 아동보호전문기관(복) 학대피해아동쉼터(복) | 중장기쉼터(여), 아동양육시설,그룹홈(복) |

□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쟁점은 다음과 같음:

- 위기아동청소년의 통합적인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 위기아동청소년 지원과 보호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체계의 구축
- 보호소년과 위기청소년 보호체계의 구축

- 위기청소년과 위기청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

1) 위기 아동·청소년의 통합적인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 국내의 위기 아동·청소년 통계생산 및 관리현황과 분절성

-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2020.4~2022.12)
- 분산된 아동관련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연계하여 아동중심 정보관리 위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중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제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 통합아동정보 시스템 구축

□ 위기청소년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위기청소년 지원이 사업별, 부처별로 운영, 정보 및 서비스의 연계 부족
 - 통합구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여가부소관기관)
 - 연계구축: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복지부), 학업중단청소년(교육부), 경찰청(선도프로그램이수자) 등

□ 아동통합DB와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의 연계 통합을 위한 방안

- 위기청소년 통합정보DB의 위기청소년 ID 매칭율의 제고 필요성
-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에 대한 검토
 - 아동의 안전을 목적으로 아동의 복지 및 보호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 및 공유 관련 구체적인 법규정 마련 필요
 - 영국의 경우, 관련 기관/조직에서는 정보 공유 방법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 업무 수행(performance of a task in the public interest)’이나 ‘공권력 행사(exercise of official authority)’ 등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복지 보호 및 증

진을 위한 별도의 정보 공유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음.

□ 위리아동청소년 정보연계체계 구축의 기본원칙과 방향

-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의 연속성과 통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출발은 아동청소년 중심의 통계생산 및 관리 체계의 구축 필수
- 위리아동청소년 개념 관련 서비스대상 중심의 개념을 하나의 통합된 범주로 개념화할 필요
- 아동청소년의 생활공간, 위기유형 등에 따라 부처 간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 아동청소년 규모에 대한 통합적인 파악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
- 위리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부처간 협의 및 조정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필수
- 아동통합DB(복지부)와 위기청소년통합DB(여가부)의 연계
 - 위기청소년통합DB구축을 위해서 위기청소년의 주민등록ID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시급
- 학교의 나이스시스템과 위리아동청소년통합DB의 연계, 법원, 경찰의 위리아동청소년정보와 위리아동청소년통합DB의 연계
 - 위기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파악은 통합적 정보체계 구축의 핵심이며,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 마련 사례에 대한 검토 필요

영국의 2018년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아동청소년 안전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 업무 수행(performance of a task in the public interest)’이나 ‘공권력 행사(exercise of official authority)’ 등의 ‘법적 근거’가있는 경우 아동의 복지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별도의 정보 공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

2) 위기아동청소년 지원과 보호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체계의 구축

□ 학교와 지역사회 간 분절의 문제는 돌봄, 정신건강서비스, 취약아동청소년 지원 서비스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돌봄 분절 현황과 해결방안

- 현재 돌봄은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학교돌봄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마을돌봄으로 나뉘며, 각 부처별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 기관이 있음.
- 학교돌봄과 마을돌봄간의 분절 해결을 위한 연계 현황
 - 각 부처별 돌봄 서비스 분절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온종일돌봄체계, 학교돌봄터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 분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선별적인 대상자 선정 및 기관 서비스별 대상자 중복의 문제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함.
 - 각 부처별 돌봄 서비스 신청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및 서비스간의 연계성 강화하고 돌봄기관 양적 확대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완화 필요

○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분절 현황과 해결방안

- 학교 단위에서는 위기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로 연결된 다중 안전망을 통해 상담과 교육 및 연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Wee)프로젝트, 지역단위에서는 청소년안전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의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음.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존의 다른 사업과 차별성이 없으며, 특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특화된 시설이 적어서 전문 시설 확보가 시급함.
- 학생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학교에서의 정신건강 관리가 지역사회와 소통 부재로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 정신건강 지원 분절의 해결방안

- 각 부처별 분절된 기관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위기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학교의 역할) 사전적·예방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가 주도적으로 위기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분절 현황과 해결방안

- 교육복지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의 문제점
 - 각 센터는 서비스 이용 대상자, 서비스 유사성이 있음. 다만, 서로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주무 부처도 상이함. 각기 다른 사업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되어 서비스 분절의 문제 발생함.
- 위기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적 지지체계 연계가 부족함.
- 위기 아동·청소년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의 사각지대 발생함.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역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단순 정보전달의 단편적 관리가 아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야 함. 이와 함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가 절실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전문인력 발굴 및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함.

○ 학교 역할 및 기관 연계 강화가 필요함.

- 학교 폐쇄성 완화를 위한 학교 내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지원이 요구되며, 시대에 맞춘 학교 역할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임.

3) 보호소년과 위기청소년 보호체계의 구축

□ 법률 개정 및 국제협약 가입·비준 : 제도적 추진 기반 마련

- 「소년법」 개정 : ‘우범소년’ 조항 삭제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강화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 소년사법제도와 지자체의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연계 강화

- 「소년업무규칙」 개정 : '선도조건부 훈방' 법적 근거 마련
- 「청소년 보호법」 개정 : 친권자의 책무 이행 근거 마련 및 가족지원 강화
 - 현행 법률에서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처벌하기에 앞서 친권자가 적절한 지도감독과 양육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친권자가 지도하지 않거나 지도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친권자와 지자체가 그 책무를 이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EU)의 「란사로테협약(Lanzarote Convention)」 가입·비준 및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예방과 회복 지원 강화
- 경찰단계 다이버전(Diversion)의 제도화 운영 :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지원 강화
 - 현재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다이버전은 재범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하거나 지자체의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와 제도적인 연계 없이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적, 파편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임.
 - 경찰단계에서 포착되는 위기청소년의 위기 유형별 맞춤 지원은 이들 소년·소녀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장임과 동시에 건강한 성장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범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 선도심사위원회 내 지자체 참여 의무화 및 전문가 참여제 운영 활성화
 - 회복적 경찰활동 전국 시행
 -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 제도화
- 소년사법체계와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연계 강화 :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내실화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 경찰, 검찰, 법원단계 처분과 제도적 연계 강화
 - 소년사법체계와 지자체의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체계의 연계는 크게 경찰과 검찰 및 법원단계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음.
 - 특히 보호처분이 종료된 소년의 경우 건강한 성장과 자립, 재범 예방을 위

해 소년사법체계와 지자체의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제도 간 핵심 연계대상임.

- 경찰은 실종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가출팜 포함) 등을 일선에서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는 체계이므로 이 단계에서 지자체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와의 긴밀한 연계 체계 구축이 요구됨.

□ 4) 위기청소년과 위기청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

○ 법상 정책대상의 연령 구분, 주무 부처의 구분은 예산과 전달체계 등 부처별 여건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업별로 그 대상을 규정, 제한함으로써 동일 욕구를 가진 위기 청소년·청년이 차별적 지원을 받거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청년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0세~34세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고, 그 가족을 포괄하여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재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각각 정의하고 있는 법과 위기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해 각각 분절적으로 마련된 근거법을 통합 또는 일원화 하여야 함.
 - 일본, 독일의 사례와 같이 0세~34세의 아동·청소년·청년을 연속적·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분절된 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야 함.
- 둘째, 공공, 민간으로 분절되어 부처별·사업별로 분절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도 중앙 단위의 주무 부처를 일원화하고, 단일 부처 산하에서 지자체 단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청년 및 가족 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단일 부처에서 관장하도록 해야 함. 현재 예산과 대상자 규모, 지원체계 구축 현황을 고려했을 때 보건복지부 중심 기능 통합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독일의 청소년청과 같이 대상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족 중심 지원 체계 기반,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강지원(2020). 2020~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아젠다 발굴 세미나 발표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강지원·최혜진·김성아·이지혜·노현주·조동훈·유해미·이길재·이희현(2021). 보육·돌봄 체계 증강기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경찰청(2019). 경찰범죄통계.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3_2020.jsp
- 경찰청(2021). 경찰백서.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6_2021.jsp
- 경찰청. (2020). 「2020년 경찰청범죄통계」.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3_2020.jsp에서 2022.07.04. 인출.
- 관계부처 합동. (2021.09.08.).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
- 관계부처합동(2018).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 관계부처합동(2021).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 관계부처합동.
- 관계부처합동(2022.2.14.). 가족 돌봄 청년 (영 케어러) 지원 대책 수립 방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교육부 홈페이지(2022a). ‘22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실시 안내’ 공지사항. Retrieved from <https://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33&boardSeq=8899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501&opType=N>.
- 교육부 홈페이지(2022b)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방과후학교 정책소개, 방과후학교 중앙지원센터 소개. Retrieved from <https://www.afterschool.go.kr/intro/care/careInfo1.do>.
- 교육부(2016). 2016년 초등 돌봄교실 운영방안. 교육부.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세종: 질병관리본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각년도). 「교육통계연보」, 전국 초(초4 이상)·중·고등학생 현황, 학년 및 연령별 학생수, 졸업 후 상황, 학생 변동 상황.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1&publSeq=2&menuSeq=3894&itemCode=02&language=en>에서 2022.07.04. 인출.

- 교육부. (2021).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894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2.06.23. 인출.
- 교육플러스(2022.02.14.). 돌봄 원하는 학부모 48%,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터 77% 희망...대선후보 돌봄정책 '유사'. Retrived from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5>.
- 국가인권위원회(2018).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등에 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 권성철(2018). 서울시 성동구 교육복지센터의 역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6(3), 47-58.
- 권해수·류진아(2007). 학교상담: 학교 기반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모형 개발. 상담학연구, 8(3), 1205-1221.
- 김근진·박은정·김희수(2019). 수요예측을 통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온종일 돌봄 공백 해소 방안: 취학 전·후를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동민. (2017). 복지선진국의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전달체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김동훈(2017). 문재인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현황.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리사(2020).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과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제158호, pp.1~4.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김미정·김동옥(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돌봄정책 점검 및 향후 과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김민희·박소영·이지혜·이희현(2020). 지자체-학교 간 협업을 통한 돌봄모델 발굴 및 확산.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선숙·김진숙(2020). Covid 19 상황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기대: 아동복지종사자 인식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52), 203-229.
- 김선숙·김진숙·최웅(202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50, 151-172.
- 김성아, 노현주, 김문길, 박윤경, 임덕영, 신영규, 함선유, 송치호. (2022).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송이·황선영(2021). 코로나 시기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돌봄의 역할과 과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8(2), 225-258.

- 김영미. (2018).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법제와 시사점. 사회복지법제연구. 9(1), 41-69.
- 김예린(2018).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네트워크의 효과성 영향요인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15(1), 101-135.
- 김용득(2015). 지역사회 사례관리체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이대로 괜찮은가?: 경직된 실천과 파편적 제도.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1), 241-266.
- 김유휘, 최미진, 홍문기, 류진아. (2019).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정·오신휘·이휘현·이혜숙(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체계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정·장수정·정영모·오신휘(2019).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지, 김동식, 최인희, 선보영, 황경란. (202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보고서, 1-167.
- 김재원(2021). 청소년 교육복지 다각화 및 활성화 방안. 복지경영학연구, 10, 16-39.
- 김주리·최혜진·강지현(2021). 초등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유형이 돌봄 공백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사회연구, 41(2), 178-197.
- 김지연(2021).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핵심 추진 과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96), 37-47.
- 김지연, 김승경, 백혜정, 황여정, 최수정. (2020).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지연, 김희진(2018).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방안 :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 이유진, 정소연, 박선영(2018).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 정소연, 김혁, 이경상(2019). 소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및 제고방안. 서울: 검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 좌동훈, 박세경, 한미경. (2015).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이혜은·고홍월·함은혜·최지현(2020). 위(Wee)센터 상담자의 위기개입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자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1(1), 23-48.
- 김진태(2021).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현안분석 제220호(2021).

11. 10).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김학수(20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한국연구개발원.

김혁(2016).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형사정책, vol.28, no.3, 통권 50호, pp.35~72. 한국 형사정책학회.

김현숙·서운(2013). 빈곤아동·청소년 지원기관의 통합서비스 영향요인 연구: 네트워크 특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 26, 71-98.

김현진, 김지연, 이승현, 류지웅. (2018).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방안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호경·신동희(2015).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ICT 융합 국내외 사례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5), 592-606.

김효선·배희분·장덕호(2019).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연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9(13), 499-520.

김희진·백혜정(2020).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희진·서고은·김은정(202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난민인권센터. (2019). 국내 난민 현황.

남북하나재단. (2021).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대검찰청(각 년도).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

대검찰청. (2009~2020). 각년도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데일리굿뉴스(2022.05.03.). 가족 생계 책임지는 '어린 가장' 통계를 제외...저임금·성범죄 노출 '우려'.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933> 에서 2022. 08. 15. 인출.

란사로테협약 <https://www.coe.int/en/web/children/lanzarote-convention>에서 2022. 7.25. 인출

류원정. (2020). 근거기반실천을 위한 사회과학 및 의학의 학제간 융합적 검증방안 연구: 북한 이탈가정의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37(2), 409-435.

류정희(2018).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 아동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59), 7-24.

류정희, (2018). 사회보장제도: :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전달체계 심층분석 핵심평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김지연. (2019) 위기아동청소년 통합적 보호체계 개선방안. 사회관계장관회의 이슈페

- 이퍼.
- 류정희, 이상정, 김지연, 김지민. (2021).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정희, 이상정, 이주연, 권지성, 김진석, 이현주. (2021). 보호대상아동 발생경로와 원가정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정희, 함영진, 이상정, 김지연, 김가희, 김지민, 권영지. (2018). 사회보장제도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전달체계 심층분석」 핵심평가.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정희·전진아·임성은·김성식·김지경·신나라·정선영·정선영·정익중·최영·정희선·허은영(2019).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정희·함영진·이상정·김지연·김가희·김지민·권영지(2018). 사회보장제도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전달체계 심층분석」 핵심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모아라이소현(2021). 초등돌봄서비스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다함께돌봄 정책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코칭연구, 14(5), 205-224.
- 문성호·김혜리(2012).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사업의 현황 및 향후 과제. 청소년학연구, 19(10), 143-166.
- 문아람·이윤환(2018).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교육복지정책 발전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16(3), 333-344.
- 미국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사례 <https://sharedhope.org/about-us/our-mission-and-values/>에서 2022.7.25. 인출
- 민경준·이일용(20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제·개정내용 및 법적 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29(1), 31-66.
- 박선영(2009). 21세기 교육복지와 영국의 아동·청소년 사업 고찰. 미래청소년학회지, 6(4), 119-138.
- 박선영(2019). 캐나다 소년사법 현황과 다양한 처우. 소년보호연구 제32권 제2호, pp.81~111.
- 박성원·안은선(2021). Wee Class 상담교사의 정신질환 청소년 상담에 대한 경험 연구: Giorgi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교류분석상담연구, 11(2), 79-95.
- 박세경, 강혜규, 류정희, 이주연, 노충래, 이상균, ... 황옥경. (2014). 아동보호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승곤·김수정(2017).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종사자의 경험 분석. 청소년학연구, 24(4), 233-257.

- 박옥남(2017). 중·고등학교 교사의 정신건강 관심군 학생 지도 경험.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0(3), 211-223.
- 박진우·허민숙(2021).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 배보은. (2022). 우리나라 청소년부모의 정책 소외 실태와 정책적 개선방안(콜로키움 발표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배보은. (2022). 청소년부모 정책소외 실태와 개선방안. 청소년부모지원 캠페이너.
- 배보은. (2022). 청소년부모 정책소외 실태와 개선방안. 청소년부모지원 캠페이너.
- 배수현·성희자(2020). 중학생의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해의 심각성을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8(2), 122-148.
- 백혜정·송미경·신정민(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백혜정·임희진·송미경·김양희(2020).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 위기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2022).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청소년정책 제안.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 법무부 보도자료(2020. 9. 14.).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권고 - 법무 · 검찰 개혁위원회 제23차 권고 발표 -.
-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cppb.go.kr/cppb/578/subview.do>에서 2022. 8. 15. 인출.
- 법무부(2020). 보도자료(2020.8.12.). 「촉법·우범소년 비행통계 개선 권고」
- 법무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0.3.27.)
- 법무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0.5.14.)
- 법무부. (2021). 「2021 교정통계연보」. 과천: 법무부 교정본부.
- 법무부. (2021. 04.). 2020년 이용자(입소자) 현황. 법무부 내부자료.
- 법무부. (2021. 04.). 2020년 이용자(입소자) 현황. 법무부 내부자료.
- 법제처(20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22a). 드림스타트센터. Retrieved from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07&PAGE=7&topTitle=.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22b). 정책-건강-정신건강정책. Retrieved from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304.
-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전국 드림스타트 현황.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21a). 2021년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21b). 학교돌봄터 사업 공고문 최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21c).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 다함께돌봄.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1).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아동보호치료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시설 유형별).
- 보건복지부. (2021).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 보건복지부. (2021).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 보건복지부. (2021).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아동공동생활가정 수 및 보호아동 현황
- 보건복지부. (2021).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아동양육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
- 보건복지부. (2021).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아동일시보호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
- 보건복지부. (2021).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아동자립지원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
- 보건복지부. (2021).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위탁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현황.
- 보건복지부. (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1). 「2020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https://icarinform.go.kr/info/research/researchList.do>에서 2022.06.23. 인출.
- 보건복지부. (2021). 2021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2021.12.22.). 제14회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유공자 포상 및 사업 보고대회 개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와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915>에서 2022.07.04. 인출.
- 보건복지부. (2022.02.07.).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소년소녀가정세대현황-성 및 연령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_N004에서 2022.07.04. 인출.
- 보건복지부. (2022.04.25.). 「장애인현황」, 전국 연령별, 장애유형별, 성별 등록장애인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3에서 2022.07.04. 인출.
- 보건복지부. (2022.05.16.).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국내 입양아 수 및 입양비율. https://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08에서 2022.07.04. 인출.
- 복지로. 복지통계. 「장애아동수당 장애유형별 성별 수급자수」. <https://www.bokjiro.go.kr/sis-teu/twatga/sociGuaStat/SociGuaStatDetailIframe.do?datsNo=36&datsClNo=1045&datsClCrit=WS>에서 2022.07.04. 인출.
- 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현황 - 가족유형

- 별' 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52&tblId=DT_452001_C015&conn_path=I2에서 2022.07.04. 인출.
-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2022). 초등돌봄교실. Retrieved from https://icare.seoul.go.kr/icare/user/fcltyInfoManage/BD_selectCareCenterContactList.do?q_tap=1.
- 서울시교육청, (2021). 2021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매뉴얼. http://sbedu.seoul.go.kr/CMS/admininfo/admininfo01/admininfo0104/1314615_1368.html에서 2022.07.04. 인출.
- 서울특별시교육청(2022a). 2022학년도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운영 매뉴얼. 서울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2022b).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2022c). 2022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서울특별시교육청.
- 성기선(2019). 신체 및 정서 관련 건강교육의 국외사례 비교 분석: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소년법」 법제처 홈페이지.
- 소년법 제 4조. <https://law.go.kr/%EB%B2%95%EB%A0%B9/%EC%86%8C%EB%85%84%EB%B2%95>에서 2022.8.15. 인출.
- 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 <https://www.kjpa.or.kr/53>
- 신연희, 강정은, 박선영, 여연심, 이경림, 최경옥, 이진아, 최명지, 최초록. (2017.11).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신연희. (2016). 부모 수용 후 자녀들의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10(1), 129-158.
- 심서연·박시하·이미현·이명수(2015). 학교기반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연구: 사회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6권.
- 심정미·채현탁(2015).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협력에 관한 쟁점 고찰. 한국자치행정학보, 29(2), 313-329.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2022). 다함께돌봄사업-다함께돌봄센터 현황. Retrieved from <https://www.dadol.or.kr/board/center>.
- 아시아경제(2019.6.29.). 범죄 이전에 소년을 보라... 法, 울타리를 만드는 일.
-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2022.03.08.). 2021년 상반기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실적.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351에서 2022.07.04. 인출.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2022.04.). 2021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

- 704367에서 2022.07.04. 인출.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2021.04.). 2020년 이용자(입소자) 현황.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2021.04.). 2020년 이용자(입소자) 현황; 황여정 외(2022)에서 재인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22a). 아이돌봄 서비스-아이돌봄 사업소개-사업 현황. Retrieved from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H_MENU_CD=0201&L_MENU_CD=020101&MENU_SITE_ID=FRONT&SEQ=15.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22b).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Retrieved from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opt031.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22c). 정책정보: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운영. Retrieved from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6.do.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22d).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사업소개. Retrieved from <https://www.youth.go.kr/yaca/about/about.do>.
- 여성가족부(2020). 2020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안내. 세종: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21). 2022학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세종: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22). 2021 청소년백서.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810에서 2022. 8. 15. 인출.
- 여성가족부(2022.05.09.). 초등 돌봄 특화형 공동육아나눔터 ‘꿈도담터’ 30곳 추가 설치. Retrieved from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1421>.
- 여성가족부(2022a).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세종: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22b).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세종: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9.03.).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0.08.25.).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초등4학년 가장 크게 증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620>에서 2022.07.04. 인출.
- 여성가족부. (2022). 「2022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http://www.mogef.go.kr/io/ind/io_ind_s005d.do?mid=old919&bbtSn=15에서 2022.07.04. 인출.
- 여성가족부. (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II)
- 영국 소년범죄대응팀 홈페이지 <https://www.gov.uk/youth-offending-team>에서 2022.7.

27. 인출

영국 소년사법 및 형사절차 내 다이버전 현황

오현정·황원경. (2019).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서울: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위(Wee)센터 홈페이지(2022a). 위(Wee)센터 기관현황. Retrieved from 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cntnts_sn=22.

위(Wee)센터 홈페이지(2022b). 위센터 추진체계. Retrieved from 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cntnts_sn=23.

유해숙·이현숙(2014). 드림스타트사업의 효과성과 활성화 방안. 벤처창업연구, 9(2), 175-186.

육혜련. (2017). 가출청소년의 성매매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9(1), 109-136.

윤종우. (2020.10.26.). 한국 소년교도소의 발전 방향. 교정복지연구, 68: 27-67.

윤철경, 서보람. (2020).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제도적 지원의 정립.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 방안 발표자료(2020.8.25.).

윤철경·서정아·유성렬·이동훈(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은주희, 임고운. (2019).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아름다운재단,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이미정, 문미경, 이미화, 김은지, 주유선, 유순도, 황민숙, 김은애. (2011).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다기능화에 따른 운영모델 재정립 등 연구, 여성가족부.

이상정(2021).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 지원 격차와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이상정, 류정희, 변수정, 하태정.(2022). 청소년부모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 개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선우(2019).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 보건복지포럼.

이승현, 박선영(2017).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6호처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정민·남아영(2019). 학교부적응 청소년이 경험한 ‘관계 맺기’ 양상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가정형 위(Wee)센터 입소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5), 687-710.

이정민·박현지(2019). 초등학교 위(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가 인식한 담임교사와의 협력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교사교육연구, 58(4), 651-668.

이혜숙·이영주(2021).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사업의 서울시 운영전략. 서울연구원

이희현·김효정·최형주·김은경·손호성(2021).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의 성과 및 과제. 한국교육개

발원.

- 임선빈(2015). 학교역할에 관한 구성원의 인식: 폐교위기 극복과정에서 살펴본 학교역할. *교육행정학연구*, 33(4), 53-79.
- 임성은, 황주희, 이민경, 강지원, 조영림, 김형모, 안동현, 정선영, 손병덕. (2019).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을 위한 운영 모델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은미(2014). 학교상담에서의 연계과정에 대한 상담자의 경험. *아시아교육연구*, 15(1), 217-246.
- 장명림(2019).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방안 (CP2019-06). 한국교육개발원.
- 장명림·박성철·정연아·이지마·김보미·김진아(2020).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확산을 위한 지역 돌봄 운영 지원 방안: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업무매뉴얼개발을 중심으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전구훈·김희찬·이수만·이문수·윤여진(2021).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n.d.). 절차안내. 소년보호. 소년보호재판의 개요, https://help.scourt.go.kr/nm/min_19/min_19_1/index.html에서 2022.07.04. 인출.;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n.d.). 절차안내. 소년보호.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https://help.scourt.go.kr/nm/min_19/min_19_2/index.html에서 2022.07.04. 인출.
- 정선영·송미령·조유리(2015). 드림스타트 참여가 방과후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방과후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량을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33(3), 1-14.
- 정세정, 임덕영, 김문길, 임완섭, 이상림, 류진아, 가예은, 김보미, 기현주, 박이대승, 신영규.(2020).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여원·김인홍·박영희(2021).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 상담 및 사례관리의 어려움: 지역사회 요인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32(1), 1-11.
- 정익중(2012). 전환기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학교간 연계 및 협력 방안-방과후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pp.1381-1399).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정익중(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그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재훈. (n.d.). 10대 미혼모 교육권 보장: 독일 사례.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nGumSP3_9Z0J:www.kwdi.re.kr/inc/download.do%3Fut%3DA%26upIdx%3D113081%26no%3D2+&cd=1&hl=ko&ct=clnk&gl=kr(2022년 7월 24일 인출).

- 정춘현·원동윤·강근모(202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소진극복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8(4), 49-72.
- 정현우(2017).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학교체육의 방향 및 역할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2(3), 1-16.
- 조아미·임정아(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혜정·홍다영(2017).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8(2), 35-61.
- 좌동훈, 이민영, 지소연. (2016).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주정현(2017).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빈곤아동 복지서비스 방안. 한국복지실천학회지, 8(1), 107-129.
- 중앙일보. (2014. 07. 09.). 소년 전담 법원 신설 ... 맞춤형 교화 프로그램 만들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15200917>에서 2022. 08. 15. 인출.
- 진영란·강미경·이윤정(2018). 학생정신건강사업 현황 및 관련 교육 요구도: 초중고 보건교사와 상담교사 대상.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2), 117-126.
-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제처 홈페이지.
- 청소년사이버상담복지센터(2021).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분기 온라인상담 경향분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2022a). 꿈드림이란. Retrieved from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1/sub010101.asp>.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2022b). 서비스 대상. Retrieved from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1/sub010201.asp>.
- 최윤정, 김이선, 선보영, 동제연, 정해숙, 양계민, 이은아, 황정미. (2019). 2018년 전국다문화 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은진·김미숙·김지은·박정연(201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현임·손가현(2021). 아동권리적 초등돌봄서비스 발전방안 탐색: 다함께돌봄정책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761-770.
- 통계청 KOSIS 홈페이지. 「청소년통계」.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9790&pageNo=&rowNum=10&amSeq=&sT

- arget=&sTxt에서 2022년 6월 22일 인출.
- 통계청 인구동향과(2009~2020). 국제인구이동통계: 내외국인/성/연령별 국제이동(월간, 연간)
- 통계청(2021). 홈페이지. 2021 청소년통계.
- 통계청. (2021.12.09.). 「장래인구추계」,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 등).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3에서 2022.07.04. 인출.
- 하경희(2017). 학생정신건강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사업 참여자 인식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54(3), 64-91.
- 하봉운·김성기·김용련·이현·임광국·장덕호(2021). 서울형 통합 초등 돌봄체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2019). 온종일돌봄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사례집.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2020). 2020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2020.8.27.일자 보도자료.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8.12.). 2018년 청소년도박문제 실태조사. 서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2022a). 주요사업-청소년안전망운영사업. Retrieved from https://www.kyci.or.kr/userSite/sub02_1.asp.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2022b).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Retrieved from <https://www.kyci.or.kr/userSite/dreamLocalManagement/list.asp?basicNum=1>.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2019 게임 과몰입 종합실태조사. 나주: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은희, 박규범, 전연진, 전영호. (201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자료를 이요한 통합사례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사회보장정보원.
- 행정안전부. (2009~2020년 각년도).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4에서 2022.06.23. 인출.
- 행정안전부. (2020.12.31.) 주민등록 인구 통계: 연령별 인구 현황.
- 허난설·이지향·하규영·고혜연·나고은·이상민(2020). 위(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의 직무패턴 유형 분석. 상담학연구, 21(3), 1-21.
- 허민숙(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황순길, 김동민, 강태훈, 손재환, 김화연, 김지혜. (2016).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황여정, 이정민. (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여정·이정민(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옥경·정선욱·김진석·김형모·신혜령·양순옥·이은주·한유미(2013).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보건복지부.
- 황진구·김지연(2020).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llnatt, G., Elliott, M., Scourfield, J., Lee, A., Griffiths, L.J., Use of Linked Administrative Children's Social Care Data for Research: A Scoping Review of Existing UK Studi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022;, bcac049, <https://doi.org/10.1093/bjsw/bcac049>
- Bailey, R. (2006).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in school: A review of benefits and outcomes. *Journal of school health*, 76(8), 397-401.
- Batty, D. (2005. 5. 18). Timeline: a history of child protection.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05/may/18/childrensservices2>
- Bishop, D. M., & Decker, S. H. (2006). "Punishment and Control: Juvenile Justice Reform in the USA." In J. Junger-Tas and S. H. Decker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Juvenile Justice* (3-35). New York: Springer.
- Champion, S. (2018). Lanzarote Convention. <https://www.sarahchampionmp.com/news/2018/6/12/sarah-champion-mp-secures-commitment-to-ratify-the-lanzarote-convention>에서 2022.7.25. 인출
- Children Act 2004, c. 31
- Cocozza, J.J., Veysey, B. M., Deborah, A., Chapin, R. D., Wansley, W., & Sylvia, F. (2005). Diversion from the Juvenile Justice System: The Miami-Dade Juvenile Assessment Center Post-Arrest Diversion Program. *Substance Use and Misuse*, 40(7), 935-51.
- CPPSE(2013). Committee of Physical Activity and Physical Education in the School Environment Educating the Student Body: Taking Physical Activity and Physical Education to School.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0.10.a). Children in need census 2021 to 2022: Guide for local authorities - version 1.0.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ildren-in-need-census-2021-to-2022-guide>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0.10.b). Children looked after by local authorities in England - Technical specification to the 2020 to 2021 data collection - vers

- ion 1.1.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ildren-looked-after-return-2020-to-2021-technical-specifications>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1.03.). Children looked-after by local authorities in England - Guide to the SSDA903 collection 1 April 2020 to 31 March 2021 - Version 1.3.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ildren-looked-after-return-2020-to-2021-guide>
- Department for Education. COLLECT Guide 2019 : COLLECT guide for local authorities. Retrieved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21206/Collect_guide_for_LAs_July-2019.pdf
- Emmott, EH., Jay, MA., Woodman, J., Cohort profile: Children in Need Census (CIN) records of children referred for social care support in England. *BMJ Open* 2019;9:e023771. doi: 10.1136/bmjopen-2018-023771. Retrieved from. <https://bmjopen.bmj.com/content/9/2/e023771#DC1>
- Evans, J. (2015). Locked out: Children's experiences of visiting a parent in prison.
- Foster, H., & Hagan, J. (2009). The mass incarceration of parents in America: Issues of race/ethnicity, collateral damage to children, and prisoner reentr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23(1), 179-194.
- G Allnatt, M Elliott, J Scourfield, A Lee, L J Griffiths, Use of Linked Administrative Children's Social Care Data for Research: A Scoping Review of Existing UK Studi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022;, bcac049, <https://doi.org/10.1093/bjsw/bcac049>
- GOV.UK homepage. (2021.10.07.). Children looked after return: guide to submitting data.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uidance/children-looked-after-return-guide-to-submitting-data>
- GOV.UK homepage. (2021.10.28.a).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need. Retrieved from <https://explore-education-statistics.service.gov.uk/find-statistics/characteristics-of-children-in-need/2021>
- GOV.UK homepage. (2021.10.28.b).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need -Data guidance. Retrieved from <https://explore-education-statistics.service.gov.uk/find-statistics/characteristics-of-children-in-need/data-guidance>

- GOV.UK homepage. (2021.10.28.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need -Methodology. Retrieved from <https://explore-education-statistics.service.gov.uk/methodology/characteristics-of-children-in-need-methodology>
- GOV.UK homepage. (2021.11.18.). Children looked after in England including adoptions - Data guidance. Retrieved from <https://explore-education-statistics.service.gov.uk/find-statistics/children-looked-after-in-england-including-adoptions/data-guidance>
- GOV.UK homepage. (2022.03.29.). Children looked after in England including adoptions - Methodology. Retrieved from <https://explore-education-statistics.service.gov.uk/methodology/children-looked-after-in-england-including-adoptions-methodology>
- GOV.UK homepage. (2022.04.05.). Children looked after in England including adoptions. Retrieved from <https://explore-education-statistics.service.gov.uk/find-statistics/children-looked-after-in-england-including-adoptions>
- GOV.UK homepage. (2022.05.12.a). Outcomes for children in need, including children looked after by local authorities in England. Retrieved from <https://explore-education-statistics.service.gov.uk/find-statistics/outcomes-for-children-in-need-including-children-looked-after-by-local-authorities-in-england>
- GOV.UK homepage. (2022.05.12.b). Outcomes for children in need, including children looked after by local authorities in England - Methodology. Retrieved from <https://explore-education-statistics.service.gov.uk/methodology/outcomes-for-children-in-need-including-children-looked-after-by-local-authorities-in-england-methodology>
- GOV.UK homepage. (n.d.). Explore education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ducation/about/statistics#current-releases>
- HM Government, (2006).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 HM Government, (2018. 7.).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9790&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
-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62811304626587>에서 2022.7.26. 인출
- <https://www.england.nhs.uk/commissioning/wp-content/uploads/sites/12/2014/0>

- [4/ld-op-mod-1314.pdf](#)에서 2022.7.29. 인출
-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subMenuId=15#searchId1>에서 2022.7.27. 인출
-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subMenuId=15#undefined>에서 2022.7.27. 인출
- <https://www.un.org/en/conf/crimecongress2010/documents.shtml>에서 2022.7.25. 인출
- Huizinga, D., Schumann, K., Ehret, B., & Elliott A. (2003). *The effect of juvenile justice system processing on subsequent delinquent and criminal behavior: A cross-national study*. Washington: Final Report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20.06.05.). The Children In Need (CIN) census and Children Looked After (CLA) census. Retrieved from <https://ifs.org.uk/publications/14871>
- James Mahon. (2008). Towards the New Children in Need Census.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 Jay, M.A., Woodman, J., Broadhurst, K., Gilbert, R. (2017) Who cares for children? Population data for family justice research. Available at: <http://wp.lancs.ac.uk/observatory-scopingstudy/>
- Klein, M. W. (1986). "Labeling Theory and Delinquency Policy: An Experimental Test."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3(1). 47-49.
- Leu, A., Berger, F. M. P., Heino, M., Nap, H. H., Untas, A., Boccaletti, L., ... & Becker, S. (2022). The 2021 cross-national and comparative classification of in-country awareness and policy responses to 'young carers'. *Journal of Youth Studies*, 1-18.
- Lipsey, M.W. (2009). The Primary Factors that Characterize Effective Interventions With Juvenile Offenders: A Meta-Analytic Review. *Victims & Offenders*, 4(4), 124-147.
- Loeb, R. C., Marie W., & Megan, S. (2015). Individual and Familial Variables for Predicting Successful Completion of a Juvenile Justice Diversion Program. *Journal*

- of Offender Rehabilitation*, 54(3), 212-237.
- Manchester Safeguarding Partnership. (n.d.). Child Protection Information Sharing (CP-IS) – resources for practitioners. Retrieved from <https://www.manchester-safeguardingpartnership.co.uk/resource/child-protection-information-sharing-cp-resources-practitioners/>
- Maroney, T. T., (2012). Recidivism Measurement And Sanction Effectiveness In Youth Diversion Programs. *Electronic Theses and Dissertations*. 2476. Retrieved May 13, 2018, from <http://stars.library.ucf.edu/etd/2476>.
- Mc Grath-Lone L, Harron K, Dearden L, Nasim B, Gilbert R. Data Resource Profile: Children Looked After Return (CLA). *Int J Epidemiol*. 2016 Jun;45(3):716-717 f. doi: 10.1093/ije/dyw117. Epub 2016 Jul 13. PMID: 27413104; PMCID: PMC5005948.
- McAra, L., & McVie, S. (2007). “Youth Justice? The Impact of System Contact on Patterns of Desistance from Offending.”.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4, 315-345.
- Models for Change. (2011). Juvenile diversion guidebook. Retrieved May 13, 2018, from <http://www.modelsforchange.net/publications/301>.
- Murphy, L. T. (2016). *Labor and sex trafficking among homeless youth*. New Orleans, LA: Loyola University Modern Slavery Research Project.
- NHS Digital Homepage. (n.d). Child Protection -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etrieved from <https://digital.nhs.uk/services/child-protection-information-sharing-service>
- O’Dea, J. A.(2005). Prevention of child obesity: ‘first, do no harm’. *Health Education Research theory Practice*, 30(2), 259-265.
- OECD. (2007). Education policies for students at risk and those with disabilities in South Eastern Europe. EDU/EDPC(2007)21. <http://www.oecd.org/education/school/38613229.pdf>.
- Petrosino, A., Turpin-Petrosino, C., & Guckenburg, S. (2010). Formal System Processing of Juveniles: Effects on Delinquency. No. 9 of Crime Prevention Research Review.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Retrieved May 13, 2018, from <http://www.ric-zai-inc.com>

- /Publications/cops-w0692-pub.pdf.
- Smith, P., Goggin, C., & Gendreau, P. (2002). *The effects of prison sentences and intermediate sanctions on recidivism: General effects and individual differences* (Solicitor General Canada User Report No. 2002-01). Ottawa, ON: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 Stamatopoulos, V. (2018). The young carer penalty: Exploring the costs of caregiving among a sample of Canadian youth. *Child & Youth Services*, 39(2-3), 180-205.
- Tracy, P., & Kempf, L. K. (1996).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criminal careers*. New York: Plenum Press.
- UNESCO(2014). World-wide survey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UNESCO.
- Vilsack, S. T., Pritzker, S. P., Carter, S. A., Duncan, S. A., Moniz, S. E., Burwell, S. S. M., ... & Rogers, E. D. M. (2015). *Opening Doors federal strategic plan to prevent and end homelessness*. United States 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 Washington. D. C.
- Virtual College. (2013.11.10.). A summary of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2013) inc changes to guidance. <https://www.virtual-college.co.uk/resources/a-summary-of-working-together-2013>
- Virtual College. (2018.10.15.).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2018: The Updates. <https://www.virtual-college.co.uk/resources/working-together-to-safeguard-children-2018-the-updates>
- Wirral Children's Services Procedures Manual 홈페이지. (n.d.). Children in Need Procedure. Retrieved from https://wirralchildcare.proceduresonline.com/p_cin_plans_rev.html#-3.1-step-down-process-on-liquidlogic